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1.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기획조정실	1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7
(2) 건물대여료	10
(3) 기타재산수입	12
(4) 과징금	15
(5) 기타경상이전수입	17
II. 세 출	21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24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32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44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60
2. 무역위원회	69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72
3. 국가기술표준원	83
<일반회계>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87
(2)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100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117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3731-304)	132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152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175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185
(8)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203
(9)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3731-319)	220
(10)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3731-325)	226
(11)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05)	237
(12)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3731-318)	271
(13)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3731-323)	285
(14)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3731-320)	297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306
(16)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329
(17)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344
(18)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357
(19)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367
(20)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406
(21)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3736-304)	420
(22)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440
(23) 기술표준정책 (7134-302)	447

<전력기금>

(24)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R&D) (5704-317)	453
---	-----

기획조정실

세 입

수입예산 총괄표(운영지원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43,760	217,299	217,299	156,086	209,234	△ 8,065	3.7
51 관유물대여료	20,577	21,710	21,710	19,910	22,100	390	1.8
토지대여료 (51-511)	13,820	17,148	17,148	16,577	16,722	△ 426	△ 2.5
건물대여료 (51-512)	3,381	4,562	4,562	3,333	5,378	816	17.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050	38,593	38,593	15,347	20,891	△ 17,702	45.9
기타재산수입 (54-545)	17,050	38,593	38,593	15,347	20,891	△ 17,702	45.9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752	1,851	1,851	817	1,851	0	0
과태료 (56-563)	326	600	600	282	600	0	0
징계부가금 (56-564)	0	0	0	0	0	0	0
과징금 (56-565)	426	1,251	1,251	535	1,251	0	0
58 가산금	29	14	14	18	18	4	28.6
가산금 (58-581)	29	14	14	18	18	4	28.6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104,666	154,190	154,190	119,229	163,595	9,405	6.1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104,666	154,190	154,190	119,229	163,595	9,405	6.1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69 잡수입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46	45	45	32	45	0	0
기타잡수입 (69-691)	45	45	45	32	45	0	0
기타영업외잡 수익 (69-697)	1	0	0	0	0	0	0
69 잡수입 (수입대체 경비수입)	860	896	896	733	734	△162	18.1
기타잡수입 (69-691)	860	896	896	733	734	△162	18.1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 대	3,155	0	0	0	0	0	0
토지매각대 (72-721)	3,155	0	0	0	0	0	0

(1)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13,820	17,148	17,148	16,577	16,722	△426	△2.5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권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1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0예산	17,148,000	○ 외국인투자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8,968,556.5\text{m}^2 \times 1038.1\text{원} = 9,310\text{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7,838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617,827\text{m}^2 \times 7,020\text{원} = 4,337\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87,884\text{m}^2 \times 1,202\text{원} = 1,067\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873,022.6\text{m}^2 \times 915.7\text{원} = 799\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96,088.56\text{m}^2 \times 738\text{원} = 70\text{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촌자유무역지역 : $178,911.2\text{m}^2 \times 1,334\text{원} = 239\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371,084.4\text{m}^2 \times 765\text{원} = 284\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488,937\text{m}^2 \times 2,131\text{원} = 1,042\text{백만원}$
2021 예산안	16,7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 예상임대면적 $\times$ 예상단가 - $6,939,355.15\text{m}^2 \times 1154.2\text{원} = 8,009\text{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 $\times$ 예상단가 = 8,713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618,069.26\text{m}^2 \times 7,355\text{원} = 4,546\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87,884\text{m}^2 \times 1,224\text{원} = 1,087\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875,289.2\text{m}^2 \times 1,008\text{원} = 864\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01,502\text{m}^2 \times 965\text{원} = 98\text{백만원}$ - 울촌자유무역지역 : $191,452.9\text{m}^2 \times 1,320\text{원} = 253\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414,017.7\text{m}^2 \times 891\text{원} = 369\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488,937\text{m}^2 \times 3,060\text{원} = 1,496\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10,524	10,524	10,524	15,012	14,506	137.8	96.6	506	-
'18	13,483	13,483	13,483	18,092	17,221	127.7	95.2	871	-
'19	13,742	13,742	13,742	15,050	132,80	101	92	1,230	-
'20	17,148	17,148	17,148	5,249	3,777	22.0	72.0	1472	-
'21(안)	16,722	-	-	-	-	-	-	-	-

※ '20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7월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건물대여료	3,381	4,562	4,562	3,333	5,378	816	17.9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다. 2021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0예산	4,562,000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자유무역지역 : $153,298.18\text{m}^2 \times 17,198\text{원} = 2,636\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71,507\text{m}^2 \times 9,122\text{원} = 652\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52,977\text{m}^2 \times 9,632\text{원} = 510\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34,862\text{m}^2 \times 6,617\text{원} = 231\text{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8,068\text{m}^2 \times 8,743\text{원} = 71\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0,210\text{m}^2 \times 7,905\text{원} = 160\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38,664\text{m}^2 \times 7,811\text{원} = 302\text{백만원}$
2021 예산안	5,37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입대면적 $\times$ 예상단가 - 마산자유무역지역 : $156,186.7\text{m}^2 \times 16,704\text{원} = 2,609\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71,507\text{m}^2 \times 11,327\text{원} = 810\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60,563.5\text{m}^2 \times 11,987\text{원} = 726\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34,862\text{m}^2 \times 9,122\text{원} = 318\text{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12,359.12\text{m}^2 \times 13,836\text{원} = 171\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5,884\text{m}^2 \times 9,774\text{원} = 253\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38,664\text{m}^2 \times 12,699\text{원} = 491\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5,188	5,188	5,188	3,584	2,909	56.1	81.2	675	-
'18	3,807	3,807	3,807	4,025	3,356	88.2	83.4	669	-
'19	3,147	3,147	3,147	3,908	3,381	107	86.5	527	-
'20	4,562	4,562	4,562	2,289	1,909	41.8	83.4	380	-
'21(안)	3,333	3,333	-	-	-	-	-	-	-

※ '20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7월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044-203-5080		김종성 044-203-5086

(3)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수입	17,050	38,593	38,593	15,347	20,891	△17,702	△45.9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1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0예산	38,593,000	○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tr><td>사업비</td><td>2,325,674</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r><tr><td>이 자 수 입액</td><td>39,325</td><td>23,518</td><td>19,249</td><td>11,631</td><td>14,574</td><td>-</td></tr><tr><td>이 자 수 입률</td><td>1.36%</td><td>1%</td><td>0.78%</td><td>0.4%</td><td>0.52%</td><td>-</td></tr></table>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325,674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이 자 수 입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	이 자 수 입률	1.36%	1%	0.78%	0.4%	0.52%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325,674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이 자 수 입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																						
이 자 수 입률	1.36%	1%	0.78%	0.4%	0.52%	-																								
○ '19년 사업비 × 예상 이자수입율(최근 이자수입율 가중평균등) = 3,449,139백만원 × 0.01118 = 38,593백만원																														
2021예산안	20,891,000	○ 최근 6개년 기타재산수입 결산액 산술 평균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tr><td>결산액</td><td>39,325</td><td>23,518</td><td>19,249</td><td>11,631</td><td>14,574</td><td>17,050</td></tr></table>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17,05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17,050																								
○ (39,325+23,518+19,249+11,631+14,574+17,050)/6 = 20,891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36,775	36,775	36,775	12,029	11,631	31.6	96.6	398	-
'18	38,593	38,593	38,593	14,588	14,574	37.8	99.9	14	-
'19	16,779	16,779	16,779	17,134	17,050	101.6	99.5	84	-
'20	38,593	38,593	38,593	9,196	9,066	23.5	98.6	130	-
'21(안)	15,347	-	-	-	-	-	-	-	-

※ '20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7월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김종성
		044-203-5080		044-203-5086

(4) 과징금
56 - 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과징금	427	1251	1251	535	1,251	0	0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다. 2021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0예산	1,251,000	○ '15~'18년 수납액 가중평균 × 수납액 증가율 = 695백만원 × 1.8 = 1,251백만원
2021예산안	1,251,000	○ '15~'18년 수납액 가중평균 × 수납액 증가율 = 695백만원 × 1.8 = 1,251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600	600	600	7,010	261	43.5	3.7	6,749	-
'18	1,251	1,251	1,251	7,722	1,062	84.9	13.8	6,659	-
'19	455	455	455	7,949	426	93.6	5.6	7,159	-
'20	1,251	1,251	1,251	7,970	88	7.1	1.1	7,882	
'21(안)	1,251	1,251	-	-	-	-	-	-	

※ '20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7월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김종성
		044-203-5080		044-203-5086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04,666	154,190	154,190	119,229	163,595	9,405	6.1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21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0예산	154,190,000	○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tr><td>사업비</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r><tr><td>반환액</td><td>87,437</td><td>127,708</td><td>142,263</td><td>127,522*</td><td>-</td></tr><tr><td>반환률</td><td>3.74%</td><td>5.17%</td><td>4.84%</td><td>4.55%</td><td>-</td></tr></table>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반환액	87,437	127,708	142,263	127,522*	-	반환률	3.74%	5.17%	4.84%	4.55%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반환액	87,437	127,708	142,263	127,522*	-																			
반환률	3.74%	5.17%	4.84%	4.55%	-																					
* 순기조정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수납 증가액(215억원) 제외																										
○ '19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반환율 가중평균) = 3,449,139백만원 × 0.0447 = 154,190백만원																										
2021예산안	163,595,000	○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r><tr><td>사업비</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d>3,613,227*</td></tr><tr><td>반환액</td><td>127,708</td><td>142,263</td><td>127,522</td><td>104,666</td><td>-</td></tr><tr><td>반환률</td><td>5.17%</td><td>4.84%</td><td>4.55%</td><td>3.74%</td><td>-</td></tr></table>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반환액	127,708	142,263	127,522	104,666	-	반환률	5.17%	4.84%	4.55%	3.74%	-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반환액	127,708	142,263	127,522	104,666	-																			
반환률	5.17%	4.84%	4.55%	3.74%	-																					
* 총사업비에 추정금액(266,07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																										
○ '20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4개년 반환율 평균) = 3,613,227백만원 × 0.04527 = 163,595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134,652	134,652	134,652	143,703	142,263	105.6	98.9	1,440	-
'18	137,062	137,062	137,062	150,207	149,070	108.8	99.2	1,137	-
'19	124,919	124,919	124,919	105,655	104,666	83.7	99	989	-
'20	154,190	154,190	154,190	55,390	53,288	34.6	96.2	2,101	-
'21(안)	163,595	163,595	-	-	-	-	-	-	-

※ '20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 7월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김종성
		044-203-5080		044-203-5086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정책기획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총 계	11447.82	12779	12779	14671	13809		
<일반회계>	6528.41	7284	7284	8190	7759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7133-301)	1,415	1,304	1,304	1,865	1,865	561	43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정보화) (7131-501)	2,812	3,554	3,554	3,492	3,220	△334	△9.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692.41	637	637	1124	965	328	51.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1,609	1,789	1,789	1,709	1,709	△80	△4.5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 부	운영지원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범식 팀장	-	정재경
		044-203-5080	-	044-203-50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415	1,304	1,304	1,865	1,865	561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08	1,481	1,415	13	52	1,304	1,304	1,317	1,317	0	0	1,865
· 무기계약직 보수 등	34	34	30	0	4	32	32	32	32	0	0	32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591	591	590	0	1	583	583	583	583	0	0	1,108
· 차량·통신·시설지원 등	127	127	107	0	20	126	126	126	126	0	0	126
·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7	287	286	0	1	295	295	295	295	0	0	330
· 연구용역	72	263	234	13	16	72	72	85	85	0	0	72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4	24	22	0	2	24	24	24	24	0	0	24
· 업무협의 여비	160	141	134	.0	7	160	160	160	160	0	0	160
· 산업통상자원정 책 지원 간담회	13	13	13	0	0	12	12	12	12	0	0	12
○ 비목별 분류(합계)	1,308	1,481	1,415	13	52	1,304	1,304	1,317	1,317	0	0	1,865
· 상용임금(110-03)	29	29	27	0	2	27	27	27	27	0	0	27
· 일반수용비(210-01)	291	296	296	0	0	308	308	308	308	0	0	607
· 임차료(210-07)	304	304	304	0	0	353	353	353	353	0	0	388
· 유류비(210-08)	44	44	30	0	14	44	44	44	44	0	0	4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	19	18	0	1	24	24	24	24	0	0	24
·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0	0.4	0.4	0.4	0.4	0	0	0.4
· 국내여비(220-01)	114	104	97	0	7	114	114	114	114	0	0	114
· 해외업무여비(220-02)	46	37	37	0	0	46	46	46	46	0	0	46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0	0	12	12	12	12	0	0	12
· 일반연구비(260-01)	372	563	528	13	22	346	346	359	359	0	0	571
· 포상금등(310-03)	24	24	22	0	2	24	24	24	24	0	0	24
· 고용부담금(320-09)	4	4	2	0	2	5	5	5	5	0	0	5
· 국제부담금(340-02)	41	41	40	0	1	0	0	0	0	0	0	0
· 시설비(420-03)	1	1	1	0	0	0.6	0.6	0.6	0.6	0	0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아울러,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서울 출장 등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유지
- 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대비 약 1억원 삭감
- 14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2.3억원 삭감
- 15~18 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4회계연도 대비 비슷한 수준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 ('20) 32백만원→ ('21요구) 32백만원

- 산출내역

- (상용임금 110-03)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25백만원 = 27백만원
- (복리후생비 210-12)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 (고용부담금 320-09) 퇴직금 1명 × 5백만원 = 5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대응, 주요 시책 홍보 지원 등

: ('20) 583백만원→ ('21요구) 1,108백만원

- (요구) 소부장·신산업 육성, 포스트코로나 대응(GVC 재편 대응, 디지털 산업 육성) 등 주요 시책 홍보 강화 위해 20년 대비 525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39백만원
-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500백만원 = 500백만원 (일반연구비, 20년 대비 22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선스 등 1건 × 25백만원 = 25백만원
-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5건 × 55백만원 = 275백만원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 ('20) 126백만원→ ('21요구)126백만원

- 산출내역

-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 관용차량 유류지원 14대 × 3.1백만원 = 44백만원
- 차량유지보수 14대 × 1백만원 = 14백만원
-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0백만원

- TF조직 등 긴급소요 칸막이 공사비 등 0.6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 ('20)295백만원 → ('21요구)330백만원

- (요구) 해외 파견관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산업·에너지·통상분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년대비 35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6명 × 평균 55백만원 = 330백만원

⑤ 연구용역비 : ('20)72백만원 → ('21요구)72백만원

- 산출내역
 -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6백만원 = 72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 ('20) 24백만원 → ('21요구)24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부서 포상 10회 × 2.4백만원 = 24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20) 172백만원 → ('21요구)172백만원

- 산출내역
 - 근무지내 여비 7명 × 12개월 × 0.1백만원 = 8.4백만원
 - 근무지외 여비 22명 × 12개월 × 0.4백만원 = 105.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5회 × 9.2백만원 = 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0회 × 1.2백만원 = 1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국가방호실태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비전자문서 관련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재무결산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규제사무 정비방안 용역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308	1,304	1,304	1,304	1,304	
20~ 24		1,304	1,304	1,304	1,3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571	1,571	46	-	-	-	1,616	1,406	89.5	87.0	136	74
2018	1,414	1,414	136	-	24	-	1,574	1,343	94.9	85.3	-	39
2019	1,308	1,308	192	△19	-	-	1,481	1,415	108.1	95.5	13	52
2020	1,304	1,304	13	-	-	-	1,317	567	43	43	0	0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 2020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19백만원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없음 - 불용 사유 :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관리담당관	신 우 찬	정민구	최민지
		044-203-5550	044-203-5552	044-203-555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 행정 정보시스템구축	2,812	3,554	3,554	3,492	3,220	△ 334	△ 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55	2,855	2,812	-	43	3,554	-	3,554	3,540	-	-	3,220
· 정보시스템고도화	993	993	985	-	8	1,380	-	1,380	1,376	-	-	81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64	1264	1,233	-	31	1,255	-	1,255	1,245	-	-	1,380
· 정보보호체계구축	598	598	594	-	4	919	-	919	919	-	-	790
· 자유무역지역 통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240
○ 비목별 분류(합계)	2,855	2,855	2,812	-	43	3,554	-	3,554	3,540	-	-	3,220
· 관리용역비(210-01)	1,324	1,324	1,289	-	35	1323.5	-	1323.5	1,321	-	-	1,425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7.5	-	7.5	7.5	-	-	7
· 일반연구비(260-01)	690	690	682	-	8	840	-	840	838	-	-	484
· 자산취득비(430-01)	833	833	833	-	-	1,383	-	1,383	1,374	-	-	1,3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책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정보보호체계구축)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를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년도)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정보시스템 고도화 : ('21)810백만원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803백만원(구축비(추가))

가. 업무포털 시스템 개선 : 170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시스템/장비 노후화(서버 '12년 도입, '15년 고도화), 정보의 혼재 및 중복으로 시스템 사용상 직관성 저하, 내부정보의 대표홈페이지 연계 부족으로 이중 작업 및 정보누락 발생
- (추진내용) 노후장비 교체, 사용자 경험 및 업무처리 기반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선, 공지사항/채용정보 등 홈페이지 연계 게시판 추가, 설문조사 기능 개선, 게시판 웹 에디터 교체

• 시스템 고도화: 100백만원(구축비(추가),260-01/일반연구비)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89	519,203	1.28	1.12	1.05	1.13	1.06	83,316.075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100,812.450

• 노후장비 구매: 30백만원(구축비(추가),430-01/자산취득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Web/WAS	4대	5,000,000	20,000,000
DB	2대	5,000,000	10,000,000
합 계			30,000,000

• 웹 에디터 구매: 40백만원(구축비(추가),430-01/자산취득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HTML5 기반 Web Editor	2,000 User	20,000	40,000,000
합 계			40,000,000

나. 업무연락방 협업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 65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국가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기업업무지속계획(BCP)'가동 시 부내 및 40개 산하기관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추진내용)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 자료 및 일정 공유, 재택근무 등 외부근무 시 자료취합 기능, 프로젝트별 작업방 생성 및 업무단위 별 협업체계 구축, 인터넷망-업무망간 데이터 실시간 연계 기능 및 인터넷망 로그인 보안 강화 등 기능 및 보안취약점 강화

• 시스템 개발: 65백만원(구축비(추가),260-01/일반연구비)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7	519,203	1.28	1.12	1.05	1.13	1.06	53,359,733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65,565,277

다. 백본스위치 및 TPS실 스위치 교체: 453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운영 중인 백본 스위치의 단종(EoL:End of Life)으로 인한 기술 지원종료에 따른 장애 시 대처 불가, 통신단절 현상(Ping Loss) 개선, 네트워크 속도 개선
 - * 장비도입 시기(백본스위치 '12년, 증간스위치 '13년 도입)
 - *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네트워크 스위치 : 6년)가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 (추진내용) 노후 장비(1차 백본 스위치) 교체, 네트워크 속도개선을 위해 10G 광지원 장비로 교체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백본 (N9K-C9508)	3	71,700,000	215,100,000	업무망,인터넷망 이중화 구성	1차
백본스위치모듈 (N9K-X9464PX)	12	19,788,000	237,456,000	백본스위치1대 당(4개 탑재)	
증간스위치 (C3650-24D)	170	5,529,000	939,930,000	TPS실당 5대 소요36 개소(5대*36개소)	2~3 차
광모듈 (SFP-10G-SR)	340	860,000	292,400,000	증간스위치(2개) 170대*2개	
합 계			1,684,886,000		

- * 3년 연속 집행계획 : 1차년도 452,556,000원(백본스위치 교체),
2차년도 616,165,000(증간스위치1차), 3차 년도 616,165,000(증간스위치2차)

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반 구축 : 115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데이터의 수집·입력·비교 등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비용·시간을 대폭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 혁신 추진(2020 정부혁신 실행계획 포함)

→ 단순 반복업무의 비중을 줄여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

- (추진내용)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모듈화된 로봇 엔진을 도입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파이럿 프로젝트* 개발

* (예시) ① 통상 관련 지역별(미국, 중남미, EU, 영국, 독일, 프랑스) 및 국내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 개발, ② 일일 산업지표 및 경제지표 획득 및 홈페이지 자동 게시 프로그램

• **로봇엔진 구매: 36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PA	3USER	12,000,000	36,000,000
합 계			40,000,000

• **Pilot Project (2개): 79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단위: 원)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업무분석가	IT기획자	IT컨설턴트
투입인력		1	3	2.4
노임단가		10,472,778	8,424,393	9,152,103
인건비		10,472,778	25,273,179	21,965,047
제경비	직접인건비×15%	1,570,917	3,790,977	3,294,75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204,370	2,906,416	2,525,98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324,806	3,197,057	2,778,578
합 계		80,304,862		

② **정보화 협의체 운영: 7.2백만원(240-01/업무추진비)**

- (필요성)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전자정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고 산업·무역·에너지 등 경제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 발굴,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스템 통합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부 정보시스템(16개 소속기관 포함) 및 41개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0.3백만원×20회),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정보화책임관 간담회(0.6백만원×2회)

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21)1,380백만원

① H/W 유지보수: 153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152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단위 : 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720,576,000	7.3%	52,602,000
3등급	1,505,456,000	6.7%	100,866,000
합계	2,226,032,000		153,468,000

②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8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단위 : 원)

구분	총간스위치(160대)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105,600,000	7.3%	7,708,800

③ 상용 S/W 유지보수: 255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237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5백만원

(단위 : 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2,311,159,000	10.8%	249,605,000
3등급	61,000,000	9.3%	5,673,000
합계	2,372,159,000		255,278,000

④ 개발 S/W 유지보수: 773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554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6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48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18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1종) : 15백만원

(단위 : 원)

구분	HW		
	구축비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7,730,000,000	10%	773,000,000

⑤ 위탁운영비 : 121백만원(위탁운영, 210-15/관리용역비)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64백만원

-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지원, RPA SW 지원 등(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단위: 원)

업무 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		12
노임단가		3,840,221
인건비		46,082,652
제경비	직접인건비×15%	6,912,39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5,299,50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829,456
합 계		64,124,011

※ SW기술자 평균임금(2020년 적용)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57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118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17년 온라인 민원발급건수가 58,511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⑥ 기타 운영비 (1종): 70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70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③ 정보보호체계구축 : ('21) 790백만원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401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바이러스 감염 위협대응 및 운영체제 최신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추세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내용)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매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백신	2,000	29,096	58,192,000
내PC지키미	2,000	23,570	47,14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8,484	58,968,000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500	219,000	109,500,000
APT탐지 및 분석장비*	3	35,000,000	105,000,000
홈페이지개인정보 탐지	1	23,100,000	23,100,000
합 계			401,900,000

* Windows 10 환경에서 운용 시 오류 발생 및 호환성 미흡

② 보안나라시스템 구축: 344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따른 보안나라시스템 내 국가용 암호장비 64Bit 체계 전환 필수이며 관련 상용 S/W 업그레이드 필요('21년까지 32Bit 체계 지원 예정으로 64Bit 체계로 전환 필수)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SBC 가상화 서버 엔진	6	10,000,000	60,000,000
SBC 가상화 유저 라이선스	100	500,000	50,000,000
DRM 서버 모듈	2	60,000,000	120,000,000
DRM 클라이언트 모듈	4	10,000,000	40,000,000
문서 변환 솔루션	1	74,800,000	74,800,000
합 계			344,800,000

③ 정보보안 수준강화: 45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필요성)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시도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 웹사이트 점검 및 부내 전 직원 맞춤형 보안교육 실시 필요
- (공공 웹사이트 점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173식) 보안강화를 위해 비표준 기술 제거, 유해 게시물 등록 차단, UI/UX 최적화 등 주기적 점검 진행
- (보안교육) 부내 쏘직원 보안의식 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맞춤형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해킹침해 실전훈련 등 실시
- (추진내용) 공공웹사이트 점검,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실시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공공 웹사이트 점검	1식	40,000,000	40,000,000
전직원 보안의식 활성화 교육 (소속기관 포함)	10회	500,000	5,000,000
합 계			45,000,000

④ 자유무역지역 통합홈페이지 구축 : ('21) 240백만원

① 통합 홈페이지 구축: 240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89	519,203	1.28	1.12	1.05	1.13	1.06	83,316.075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100.812.4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장애처리율 (단위:%)	목표	86.0	88.58	91	91	-	최근 3년간 실적을 비탕으로 상향조정 하여 설정	{장애등급별 허용시 간 내 장애처리건수 (A) / 전체 장애발 생건수(B)} x 100	정보시스템 SLA 실적
	실적	87.5	90.6	91	-	-			
	달성도	101.7	102.3	100	-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단위:점)	목표	81.58	81.64	73.35	73.35	-	최근 3년간 실적 추이 및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등락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국정원)	보고서/국정원
	실적	78.36	73.21	74.74	-	-			
	달성도	96.1	89.7	101.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855	3,554	2,885	2,855	2,855	
20~ 24		3,554	3,492	4,201	3,954	3,9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17년도	일반	보통	
2018년도	일반	보통	
2019년도	일반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방화벽 등 노후 H/W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3,005	3,005	-	-	-	-	3,005	2,896	96.4	96.4	69	40
2018	2,646	2,646	69	-	-	-	2,715	2,690	101.7	99.1	-	25
2019	2,855	2,855	-	-	-	-	2,855	2,812	98.5	98.5	-	43
2020	3,554	3,554	-	-	-	-	3,554	1,464	41.2	41.2	-	-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40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이월(69백만원):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40백만원) 및 원자재상시경보 시스템(29백만원) 발주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2018	- 불용(2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9	- 불용(43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20	

사 업 명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이규봉	김다은	박수민
		044-203-5530	044-203-5537	044-203-556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692.41	637	637	1124	965	328	5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750	827	692.41	129.95	8.54	637	637	766.95	716.86	27.8	22.29	965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24	124	127.71	-	-	115	115	115	89.2	7.8	18	122
· 유관기관 역량강화	20	20	19.8	-	0.2	-	-	-	-	-	-	-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지원	128	205	192.9	4.05	8.05	96	96	96	94.45	-	1.55	117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40	40	39.9	-	0.1	40	40	40	40	-	-	40
· 정책지원 연구	438	438	312.1	125.9	-	386	386	515.95	493.21	20	2.74	38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	-	-	-	-	-	-	-	-	-	230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	-	-	-	-	-	-	-	-	-	70
○ 비목별 분류(합계)	750	830.9	692.41	129.95	8.54	637	637	766.95	716.86	27.8	22.29	965
· 일반수용비(210-01)	99	79	79	-	-	68.6	68.6	68.6	68.6	-	-	160.8
· 임차료(210-07)	4	7.9	7.9	-	-	4	4	4	4	-	-	4
· 일반용역비(210-14)	56	76	75.9	-	0.1	86	86	86	78.2	7.8	-	86
· 국내여비(220-01)	5	5	4.87	-	0.13	4	4	4	-	-	4	4
· 국외여비(220-02)	14	14	13.94	-	0.06	14	14	14	-	-	14	14
·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	9.4	9.4	9.4	9.28	-	0.12	9.4
· 일반연구비(260-01)	543*	620	481.8	129.95	8.25	440	440	569.95	545.18	20	4.16	670
· 포상금(310-03)	12	12	12	-	-	11	11	11	11	-	-	1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조직문화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부내 직원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산업 및 에너지 등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을 수행
- (정책지원 연구) 재정, 정책홍보, 조직관리 등 정책 지원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부내 자체평가 업무수행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04. 9. 14 국무회의시 교육 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
- 2)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은 기업인과의 신년 간담회 대통령 말씀 중 주요내용으로 포함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중)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부는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②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말씀 >

▶ (VIP 말씀)

- 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18.1.16)
- ② 독도·동해 표기오류 엄중경고(‘19.9.16)

▶ (국무총리 말씀)

- ① “공공데이터의 공개 확대, 정확도 제고, 표준화 필요”(‘18.2.21),
- ②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18.2.26),
-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18.3.12)
- ④ 웹사이트 일제점검 지시(‘19.9.27)

- 이에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웹사이트 및 홍보콘텐츠 관리 개선방안 (‘19.11.22)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의 자체 수행방안 마련 요구

4)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대통령 말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통령 말씀(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말씀 >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20.2.10)
-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대통령, 국무회의, '20.3.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총액 965백만원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22백만원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44백만원
 -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백만원
 - * 똑똑똑 MoTie 아카데미 위탁운영 16백만원 = 1.6백만원×10회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 28백만원
 - * 정책역량 증진을 위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12백만원 = 0.6백만원×20회
 - * 정부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16백만원 = 1.6백만원×10회
-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46.2백만원
 - 부내·외 크로스미팅 및 직급별 협의체 운영 : 6백만원

* 크로스미팅·직급별 협의체 0.2백만원 x 30팀 = 6백만원

▪ 공공기관·업종별 협단체 회의 및 정책자문위 운영 등 : 10.2백만원

* 회의장 임차료 및 회의준비(다과) 등 : 1.02백만원 x 10회

▪ 정책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 30백만원

* 실·국별 정책현장 방문 지원 : 3백만원 x 10팀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31.8백만원**

▪ 분기별·올해의 우수부서 : 11백만원

* 포상금 : 11백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2백만원)x 4회 + 올해의 우수부서(3백만원)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2.8백만원

* 포상금 : 1.5백만원 = 0.75백만원 x 2명

* 상패제작 : 1.3백만원 = 0.65백만원 x 2명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18백만원

* 국내연수 : 0.4백만원 x 10명 = 4백만원

* 해외연수 : 1.4백만원 x 10명 = 14백만원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117백만원**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56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 53백만원

* (회의) 17명x20회x0.15백만원= 51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백만원x10회 = 2백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3백만원

* (대면회의) 10명x2회x1.25백만원 = 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5백만원x2회 = 0.5백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3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법안 전체교육 : 1백만원

* 강사료 0.5백만원 x 2회 = 1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2백만원

* 1백만원(강사료, 도시락) x 2회 = 2백만원

○ 규제개혁, 정부성과 등 대표사례 홍보물 제작 : **4백만원**

* 상하반기 2회x 2백만원 =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 54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27백만원

* 15건x 건당 1.8백만원 = 27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 연구 : 27백만원

* 조직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2개 분야 x 13.5백만원 = 27백만원

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40백만원

○ 공공데이터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정책방향·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 20백만원

* 협의회 구성·운영 16백만원 + 임차료, 강의로, 인쇄비 등 4백만원 = 20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백만원

* 공모전 홈페이지 운영, 홍보, 시상식 개최 등 20백만원

④ 정책지원 연구 : 386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등 7건 x 약 55.14백만원 = 386백만원

⑤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230백만원

○ 자체평가 위탁운영 용역 및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 자체평가 용역 12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10백만원

⑥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70백만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 57백만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수당) 8명x15만원x6회 = 7.2백만원

* (회의준비 및 대여) 1.2백만원x6회 = 7.2백만원

*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1.8백만원x2회 = 3.6백만원

*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19.5백만원x2회 = 39백만원

○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 10백만원

*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1백만원x5회 = 5백만원

* (소송지원) 2.5백만원x2회 = 5백만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3백만원

*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25만원x3명x4회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단위: 명)	목표	850	850	-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18년 성과관리 대상 제외	변 화 마 일 리 지 획득한 직원 수	변화관리시스템상 에서 마일리지 현황 조회
	실적	662	851	-	-	-			
	달성도	75.2%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450명
2018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700명
2019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10명
2020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310명

※ 시작연도는 사업 특상에 맞추어 조정

※ 사업 실적은 계량적으로 기술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41	234	229	227	230	
20~ 24		965	965	965	965	9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1) 국회(예정처) 지적

- 변화관리 능력개발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조정 필요(2018)
- 연례적인 국외여비 조정 집행을 개선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외여비로 조정하지 않고 국내여비를 국내교육훈련에만 집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자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의 형성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 객관적인 평가기반 구축, 평가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문화 정착화 및 관련 지원 활성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극복 도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353	353	-	-	-	-	353	325	92.1	92.1	11	17
2018	254	254	11	±21.5	-	-	265	172.5	67.9	65	77	15.5
2019	750	750	77	±20	-	-	827	692.4	92.3	83.7	129.9	8.54
2020	637	637	129.9	-	-	-	767	716.86	112.5	93.5	-	-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 2020년은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018										
2019										
2020. 6월기준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11백만원,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전용 : 9백만원, 공공기관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77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진을 위해 이월 - 조정 : 15백만원, 변화관리 강연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6.5백만원, 국내 및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조정 - 불용 : 15.5백만원, 용역 규모 축소 시행과 국내여비 예산 절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20백만원, 정책현장방문 프로그램 용역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전용 : 3.9백만원, 국내 및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타 사업 임차료 전용
2020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자체평가 용역지원

□ 현황

- 매년 산업정책과 정책연구용역예산(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을 지원받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자체평가 용역 수행

< '17년 ~ '19년 평가 용역예산 현황 >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7년 : 약 0.9억원 / '18년 : 약 1.09억원 / '19년 : 1억원 / '20년 1억원

▶ 자체평가 수행 용역

'17년 : 약 1.27억원 / '18년 : 약 1.23억원 / '19년 : 1.3억원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 위탁 용역임을 고려, 집행 효율성을 위해 소관 예산*으로 이관 필요

*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예산에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일반연구비(260-01) 예산으로 이관

□ 지원 필요성

①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1.1억원)

- '13.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② 자체평가 수행 용역(1.2억원)

- 우리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 운영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필요

-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모니터링 및 정책토론회, 정책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현황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예산 비목 중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는 규제 입증책임제,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 중

<연도별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규제개혁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	규제 연구용역	교육 및 홍보물
'18년	22.55	2.1	9.9	18.65
'19년	36.2(+14.2*)	2.5	151.15(77백만원 이월)	5.05
'20년	31.1(-14.2)	1.0	74(예정)	0.3

* 14.2백만원은 19년 회의경비이나 19년 예산 부족으로 20년 초 집행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의, 규제 비용·편익분석 연구, 부내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등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 증액 필요성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실시('19.1)에 따라 건의과제,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입증 심사 필요 등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수요 증가

*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 입증 못할 경우 규제는 자동 폐지

- '18년도 대비 '19년도 규개위 개최 횟수는 2배, 예산집행 13.7백만원 증가

* '17년 10회 → '18년 10회 → '19년 20회 → '20년 7월 현재 9회

- '20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국조실)에 따라 실시하는 법령정비 (9개 분야 2,500여개 규제사무)를 위한 연구 필요

* 행정규칙('19) 10백만원 → 3개분야 법령('20) 30백만원 → 4개 분야 예정('21)

- 국민 규제입증요청제 도입('20)으로 규제심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에 따른 규제심사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운영예산 증액 필요

□ 추진배경

- (현황) 현 정권 출범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실시 중*('19.3~)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19.3~) → '19년 산업부 적극행정 실시 계획 수립('19.7.) → '20년 산업부 적극행정 실시계획 수립(~'20.5.)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 ❖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람('19.2.12. 국무회의, 대통령)
- ❖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더 중요, 각 장관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것('19.7.30. 국무회의, 국무총리)

- (문제점)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실행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반영이 미비한 편

* '19년 적극행정 예산 : 0원 → '20년 적극행정 예산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예산 내 용역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실시 중이나 제한적(약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 ▶ 제7조 ①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 제13조 :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전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근거 :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152(20.5.4.))」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성화) 격월 개최 원칙으로 강화, 위원정수 확대(15명 이내→30명 이내)

※ 지원근거 : 「2020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요청(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1721(20.4.20.))」

▶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

▶ 구성 및 운영 : 일반국민 등 8인, 격월 단위 대면/서면 회의개최

▶ 역할 : 국민의 여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적극행정 홍보활동 참여, 국민체감도 설문 응답 등

▶ 필요예산 : 모니터링단 활동 수당·경비(8*150,000*6=720만원) 등

②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 우리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 운영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필요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기획조정실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류동희 044-203-5590		김진영 044-203-559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609	1,789	1,789	1,709	1,709	△80	△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94	2,253	2,168 [2,168]	-	85	1,789	1,789	1,789	1,769 [1,769]	-	20	1,709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129	1,129	1,047 [1,047]	-	82	1,159	1,159	1,159	1,144 [1,144]	-	15	1,240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565	1,124	1,121 [1,121]	-	3	630	630	630	625 [625]	-	5	469
○ 비목별 분류(합계)	1,694	2,253	2,168 [2,168]	-	85	1,789	1,789	1,789	1,769 [1,769]	-	20	1,709
· 일반수용비(210-01)	-	-	-	-	-	10	10	10	9 [9]	-	1	1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50	350	350 [350]	-	-	380	380	380	380 [380]	-	-	400
· 관리용역비(210-15)	779	779	697 [697]	-	82	769	769	769	755 [755]	-	14	830
· 자산취득비(430-01)	565	1,124	1,121 [1,121]	-	3	630	630	630	625 [625]	-	5	4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또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사이버공격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보안솔루션 개발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산업부 훈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산업부 훈령 제154호) 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6.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07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10.01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2.02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08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9.06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54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53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 1,24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830백만원 (시스템(HW+SW) 14종 416식 유지·보수)
- 전용회선 임차 400백만원 (센터↔회원기관간 전용회선 임차)
-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10백만원
②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 469백만원 (노후 시스템 교체)
- 대용량저장장치 270백만원, 패치관리시스템 20백만원, 대용량이벤트 수집·분석서버 135백만원, 관제용PC 12백만원, 위협관리시스템(DB서버) 32백만원 교체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안관계 정탐율 (단위: %)	목표	97.6	98.0	98.1	98.2	98.3	최근 3개년간 평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이버공격 정탐건수/ 총사이버공격 탐지통보건수)* 10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시스템 (SCMS)
	실적	97.8	98.1	98.15	-	-			
	달성도	100.2	100.1	100.1	-	-			
사이버안전시스템 안정가동율 (단위: %)	목표	99.0	99.3	99.4	99.5	99.5	최근 3개년간 가장 높은 목표치로 설정 (정보시스템은 내·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으로 100% 가동율은 불가 99.5%의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속 관리할 예정)	(가동계획시간- 시스템별장애 시간)/(가동계 획시간)*100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보수(SLA) 보고서
	실적	99.2	99.4	99.58	-	-			
	달성도	100.2	100.1	10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3,025건 ○ 회원기관 대상 정보보호 교육 : 17개 과정, 22회, 949명 수료 ○ 을지연습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 : 25개 기관 ○ 제5회 정부합동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 : 31개 기관, 30개 팀 참가 ○ 제9회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582건 ○ 회원기관 대상 정보보호 교육 : 21개 과정, 29회, 1,081명 수료 ○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27개 기관 ○ 제6회 정부합동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 : 27개 기관, 31개 팀 참가 ○ 사이버안전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488건 ○ 회원기관 대상 정보보호 교육 : 25개 과정, 28회, 743명 수료 ○ 침해사고대응 국제협의체(FIRST) 가입 및 활동 ○ 2019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27개 기관 ○ 제7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 : 17개 기관, 31개 팀 참가 ○ 제11회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893건('20.12.22일 기준) ○ 회원기관 정보보호 교육 : 9개 과정, 22회, 398명 수료 ○ 제8회 온라인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 : 17개 기관, 27개 팀 참가 ○ 제12회 온라인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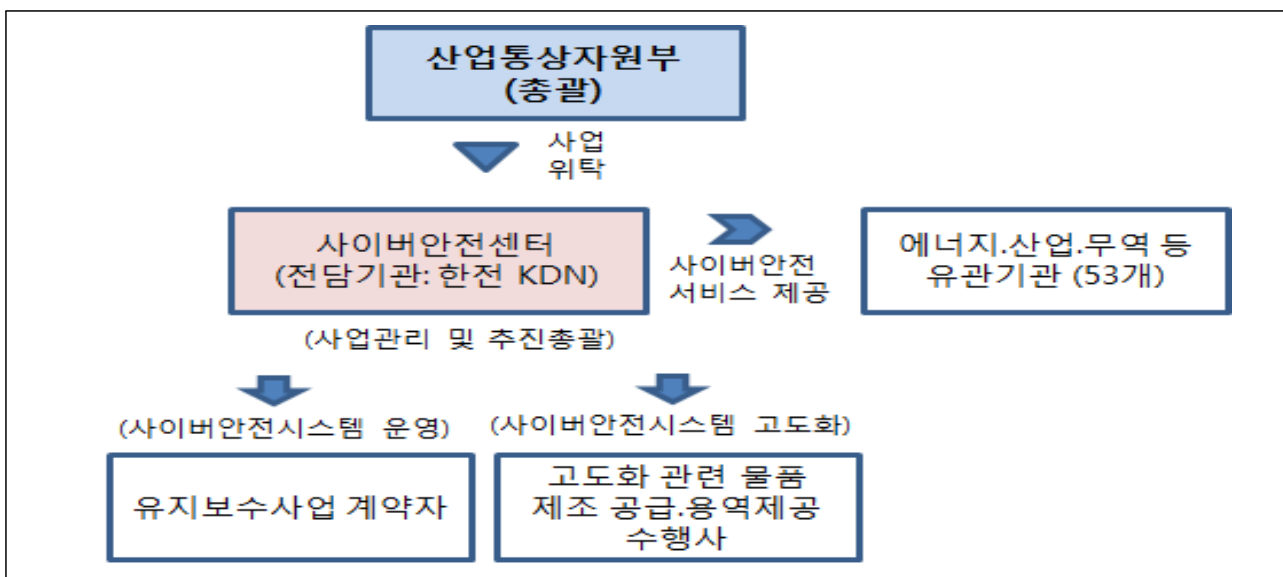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이버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언택트시대의 지능화·고도화되는 新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 및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1,694	1,694	2,500	2,500	2,500	
'20~'24		1,789	1,700	1,649	1,617	1,60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에너지·산업·무역 등 실물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531	531	-	-	-	-	531	527	99.2	99.2	-	4
2018	565	565	-	-	-	-	565	0	0	0	559	6
2019	1,694	1,694	559	-	-	-	2,253	2,168	128	96.2	-	85
2020	1,789	1,789	-	-	-	-	1,789	1,769	98.9	98.9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사유 : 낙찰차액(4백만원)
2018	- 불용사유 : 낙찰차액(6백만원)
2019	- 불용사유 : (고도화) 낙찰차액(3백만원),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계약체결 지연 등(82백만원)
2020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등(2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참고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

- (설립목적) 고도화 되는 전자적 침해(해킹, 악성코드 등)에 대비,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근거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훈령) 등에 근거하여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운영

<센터 주요 연혁>

- ('06. 5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의결(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 ('07.12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전담기관으로 한전KDN 지정)
- ('08. 7월) 사이버안전센터 개소(회원기관 28개기관)

- (조직) 사무국(정보보호담당관실), 전담기관(한전KDN), 53개 회원기관



- (주요업무) ①사이버 침해 대비 선제적 예방 활동(24시간 관제, 모의해킹, 해킹메일 훈련 등), ②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③보안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대상기관 : 총 53개(공공기관 40, 非공공기관 13)

분야	기 관 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기술 ^(민간)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기공사협회 ^(민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재단	27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민간)		4
산업 ·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민간) , 한국광기술원 ^(민간) , 한국다이텍연구원 ^(민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민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민간)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간)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강원랜드 한국생산성본부 ^(민간) , 전자부품연구원 ^(민간)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민간) ,	20
기타	한일병원 ^(민간)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
계				53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조사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731	1,657	1,657	1,707	1,633	△ 24	△ 1.5
무역구제지원	1,731	1,657	1,657	1,707	1,633	△ 24	△ 1.5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731	1,657	1,657	1,707	1,633	△ 24	△ 1.5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업 명</div> <div style="margin-top: 10px;">(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김종주	위민이	-
		010-8768-2363	010-2281-276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구제지원사업	1,731	1,657	1,657	1,707	1,633	△ 24	△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34	1,734	1,731 [1,731]	-	3	1,657	1,657	1,657	1,342 [1,342]	-	315	1,633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450	450	449	-	1	483	483	483	439 [439]	-	44	548
· 무역구제 진흥	207	207	205.5	-	1.5	249	249	249	248 [248]	-	1	249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730	730	729.5	-	0.5	535	535	535	535 [535]	-	-	450
·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347	347	347	-	-	390	390	390	120 [120]	-	270	386
○ 비목별 분류(합계)	1,734	1,734	1,731	-	-	1,657	1,657	1,657	1,342 [1,342]	-	315	1,633
· 일반수용비(210-01)	674	674	672	-	2	743.4	743.4	743.4	742.4 [742.4]	-	1	838
· 일반용역비(210-14)	190	190	190	-	-	240	240	240	- [-]	-	240	216
· 국내여비(220-01)	21	21	21	-	-	27	27	27	27 [27]	-	-	27
· 국외여비(220-02)	107	107	107	-	-	100.3	100.3	100.3	26.3 [26.3]	-	74	90.7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1.4	-	0.6	11.3	11.3	11.3	11.3 [11.3]	-	-	11.3
· 일반연구비(260-01)	730	730	729.5	-	0.5	535	535	535	535 [535]	-	-	450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포럼 및 국외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고, 해외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

□ 사업내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를 위해 국내외 현지조사 활동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자문료, 무역위원회 운영 등
- (무역구제진흥)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 학술세미나, 대학(원)생 대상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개최,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조사제도 홍보 등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산업피해 사전 예방 및 국내 기업의 반덤핑 신청 지원을 위해 수입동향 모니터링, 산업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구제 제도/현안 연구 등
-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무역구제 정보교류 및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 對韓 수입규제 주요국과 협력채널 구축, WTO·RCEP 등 무역구제분야 협상참여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등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등

② 추진경위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 가방 및 핸드백 원산지 위반·상표권 침해 조사 (1987.7.31. 최초 사건)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덤핑·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이관)
- '00년 제1회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및 제1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01년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실시
 -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 및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 '20년 관세법령,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피해 조사·구제를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진흥·연구용역·국제협력 등 추진 사업비 1,633백만원 반영 (('20) 1,657백만원 → ('21) 1,633백만원, △24백만원*)

* 국제회의 행사 예산 삭감에 따른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 예산 10% 감액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무역구제조사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예산은 증액하고, 연구용역 예산은 감액하는 등 내역사업간 사업비 조정

○ 산출내역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0) 483백만원 → ('21) 548백만원

- 반덤핑, 지재권 침해 등 조사수요 증가추세를 반영, '20년 대비 13.5% 증액

* 조사활동 : ('20) 293백만원(3명×4.1백만원×10회) → ('21) 367백만원(3명×4.1백만원×13회)

** 무역위원회 운영 : ('20) 90백만원(5백만원×18회) → ('21) 100백만원(5백만원×20회)

*** 보고서 등 인쇄 : ('20) 100백만원(27백만원×2백만원×18회) → ('21) 81백만원(22백만원×2백만원×18회)

▪ 무역구제진흥 : ('20) 249백만원 → ('21) 249백만원

-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업 및 일반인 대상 진흥사업 추진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연 2회) 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71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50백만원, 조사제도 홍보 102백만원

▪ 산업경쟁력 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 ('20) 535백만원 → ('21) 450백만원

- 산업경쟁력조사/제도연구 비중 축소, '20년 대비 15.9% 감액

* 연구과제 : ('20) 385백만원(43백만원×9개) → ('21) 330백만원(41.3백만원×8개)

** 수입동향시스템 운영/활용 : ('20) 150백만원 → ('21) 120백만원

▪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20) 390백만원 → ('21) 386백만원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비 감액하는 한편, 양자 협력채널 예산은 증액, '20년 대비 1% 감액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20) 240백만원 → ('21) 216백만원

**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20) 150백만원(8회×3명×6.5백만원) → ('21) 170백만원(10×3명×6.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단위:%)	목표	71	72	72.2	72.5	72.8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0.9	72.1	72.3	-	-			
	달성도	99.9	100.1	100.1	-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단위:%)	목표	75	75.4	75.7	76.0	76.2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5.1	75.5	75.8	-	-			
	달성도	100.1	100.1	100.1	-	-			
무역구제지원건수 (단위: 건)	목표	44	46	47	48	49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업체 지원 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44	46	47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등 반덤핑 조사개시 7건, 중국산 오프셋인쇄판,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등 반덤핑 최종판정 5건 - 지재권 침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9건, 최종판정 5건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확대 (('16)13개 → ('17) 16개) - 로봇, 전기차, OLED 제조장비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성공적 개최 · 미국, 중국, EU 등 13개국 330여명 참석, 주요 수출국(9개)과 양자면담 추진(對韓 수입규제조치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 (양자)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7월), 한-베 FTA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12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 및 FTA 이행위(12월) · (다자) WTO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11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대만산 초산에틸 등 반덤핑 조사개시 6건,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등 반덤핑 최종판정 7건 - 특허권, 원산지 위반 등 조사개시 8건, 최종판정 11건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2개 추가지정(전자산업진흥회, 저작권보호원) -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제도홍보 등 무역구제 저변확산 · 지역별,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세관 실무자 대상 설명회 등 총 30여회 개최,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대회(11월) 및 경연대회(12월), 심포지엄(11월) 개최 · 무역구제지 발간(3회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6월, 11월) 등 - 탄소섬유, 감압밸브 등 2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성공적 개최(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미국, 중국 등 20개국 무역구제기관대표 참석, 양자면담(13개국),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해외 주요 무역구제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3월, 9월),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개최 · WTO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중국산 글라신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반덤핑 조사개시 6건,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등 반덤핑 최종판정 7건(덤핑관세 부과 5건) -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7건, 최종판정 10건 -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제도홍보 등 무역구제 저변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역간담회(3회), 업종별 간담회(3회) 개최, 우리부·협단체 행사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제도 홍보(15회) 등 총 26회 홍보 ·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대회(11월), 경연대회(11월), 무역구제지 발간(4회 발간, 500여개 기업 등 관련기관 배포), 학술세미나 개최(5월, 11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12월) 등 - 철강, 정밀화학, 이차전지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및 「수입동향 분석시스템」 구축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5월, WTO-중국EU-캐나다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미국인도 등 7개국의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 300여명 참석) - 해외 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WTO, EU 무역구제기관장 면담(2월, 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5월),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6월, 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8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12월) · (다자) WTO 규범정례회의(4월, 11월), RCEP 무역구제분과 협상 참여(5월, 6월) 등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조사판정) 반덤핑 7건, 불공정무역행위 7건 등 총 14건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① 베트남산 합판, ② 중국산 합판, ③ 중국산 침엽수합판, ④ 말레이시아산 합판, 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⑥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⑦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 (불공정무역행위) ① 전기 프라이팬, ② 양말 편직기계, ③ 휴대폰 곡면커버 보호필름, ④ 피부용 의료기기 (이상 특허권), ⑤ 과자, ⑥ 신발 (이상 상표권), ⑦ 펠트시간표(저작권) - (무역구제 조사개시) 반덤핑 5건, 불공정무역행위 5건 등 총 10건 신규 조사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①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② 중국산 H형강, ③ 중국산 읍셋인쇄판, ④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제품, ⑤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산 PET필름 ** (불공정무역행위) ① 휴대폰 곡면커버 보호필름, ② 페럼구균 단백질접합백신, ③ 천연가스 압축기, ④ 제트밸브(이상 특허권), ⑤ 손목시계(상표권) - (법적 기반 강화) 무역구제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령 일제 정비 -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SNS 홍보 및 무역구제 사례집 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대회(11월), UCC경연대회(11월), 무역구제지 발간(4회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7월, 11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12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조사/제도연구) 스테인리스스틸 열연강판·냉연강판, 폴리에틸렌(pet필름 포함) 등 2개 품목 산업경쟁력 조사(6~12월) 등 총 12개 용역과제 추진 - (수입동향시스템 운영) 「수입동향 분석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보완 - (국제협력) 해외 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10월), EU 무역구제작업반 회의(11월),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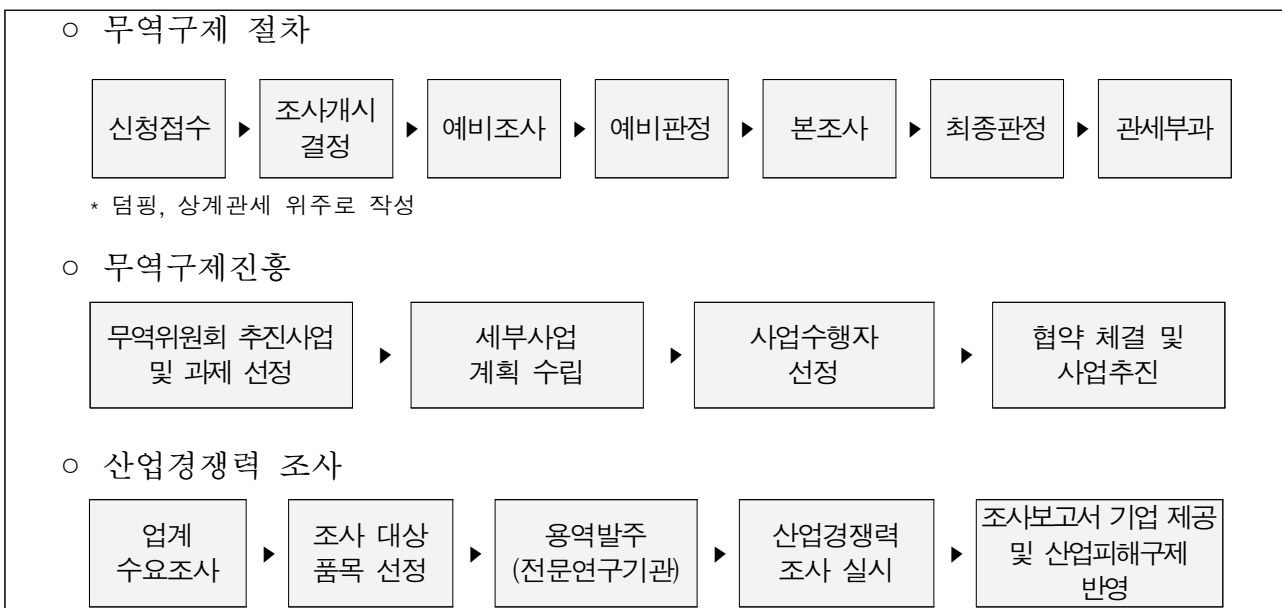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덤핑수입, 지재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및 실효적인 무역구제조치로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및 국내산업 보호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 활용촉진 활동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734	1,789	1,789	1,789	1,789	
20~ 24		1,657	1,740	1,792	1,845	1,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무역구제 조사는 WTO협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수행하되, 판정 및 조치는 국내산업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진행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 활용촉진 활동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 추진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른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234	1,234	-	-	-	-	1,234	1,207	97.8	97.8	-	27
2018	1,314	1,314	-	-	-	-	1,314	1,303	99.2	99.2	-	11
2019	1,734	1,734	-	-	-	-	1,734	1,731	99.8	99.8	-	3
2020	1,657	1,657					1,657	963.5	58.1	58.1	-	315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2020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8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9	-	-	-	-	-	-	-	-	-	-
2020. 6월기준	-	-	-	-	-	-	-	-	-	-

* '19년부터 보조금사업 폐지

2) 주요 결산사항

2017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7백만원 불용
2018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2019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2020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포럼 및 국외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315백만원 불용(예상)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본 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84,056	115,317	115,837	142,007	142,007	26,170	22.6
3731 국가표준혁신및 국제협력	63,505	80,495	82,215	103,880	103,880	21,585	26.3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225	2,614	2,614	3,010	3,010	396	15.1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2,093	1,915	1,835	2,050	2,050	135	7.4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3731-303)	1,020	1,559	1,559	1,453	1,453	△106	△6.8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3731-304)	1,504	2,039	2,039	1,832	1,832	△207	△10.2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3731-306)	2,538	3,088	3,088	4,134	4,134	1,046	33.9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3731-307)	1,044	1,024	1,024	922	922	△102	△10.0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3731-308)	1,174	1,103	1,103	1,400	1,400	297	26.9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4,028	6,229	6,229	6,042	6,042	△187	△3.0
신산업단체표준화 촉진(3731-319)	0	0	0	817	817	817	순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증기반구축지원 (3731-325)	0	0	0	4,850	4,850	4,850	순증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3731-305)	47,879	56,664	58,464	62,235	62,235	3,771	6.5
규제샌드박스융합 산업기술개발 (R&D)(3731-318)	0	4,260	4,260	6,348	6,348	2,088	49.0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 (R&D)(3731-323)	0	0	0	2,961	2,961	2,961	순증

구분	2019결산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본 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기술지원 (R&D)(3731-320)	0	0	0	5,826	5,826	5,826	순증
3732 제품안전관리 기반조성	11,220	10,476	10,476	10,682	10,682	206	2.0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3732-303)	5,858	6,872	6,872	7,171	7,171	299	4.4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3,521	1,794	1,794	1,579	1,579	△ 215	△ 12.0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852	820	820	862	862	42	5.1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989	990	990	1,070	1,070	80	8.1
3736 무역기술장벽 대응기반강화	6,154	7,028	7,028	8,992	8,992	1,964	27.9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3736-301)	4,257	4,942	4,942	6,970	6,970	2,028	41.0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190	1,127	1,127	1,127	1,127	0	0.0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정보화)(3736-304)	707	959	959	895	895	△ 64	△ 6.7
7134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수립운영	3,177	2,368	2,368	2,303	2,303	△ 65	△ 2.7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7134-301)	1,611	1,644	1,644	1,592	1,592	△ 52	△ 3.2
기술표준정책 (7134-302)	1,566	724	724	711	711	△ 13	△ 1.8
5806 기반구축(기금)	0	14,950	13,750	16,150	16,150	2,400	17.5
야차전자화재안전성 검증센터구축 (5704-317)	0	14,950	13,750	16,150	16,150	2,400	17.5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2,225	2,614	2,614	3,010	3,010	396	15.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27	2,227	2,225 [2,225]	-	2	2,614	2,614	2,614	2,612 [2,612]	-	2	3,010
· 신기술인증 등 지원	1,669	1,669	1,667 [1,667]	-	2	2,082	2,082	2,082	2,080 [2,080]	-	2	2,394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328	328	328 [328]	-	-	302	302	302	302 [302]	-	-	302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84
○ 비목별 분류(합계)	2,227	2,227	2,227 [2,227]	-	2	2,614	2,614	2,614	2,612 [2,612]	-	2	3,010
· 일반수용비(210-01)	34	34	34 [34]	-	-	34.1	34.1	34.1	34.1 [34.1]	-	-	84.29
· 시험연구비(210-13)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	1.9	1.9	1.9	1.9 [1.9]	-	-	1.71
· 일반연구비(260-01)	25	25	23 [23]	-	2	25	25	25	23 [23]	-	2	25
· 민간경상보조(320-01)	2,136	2,136	2,136 [2,136]	-	-	2,523	2,523	2,523	2,523 [2,523]	-	-	2,8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인증 등 지원) 국내 개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설명회, 구매 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 판로개척 추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인증 취득 당시의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 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적시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②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 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NEP)인증및구매 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제37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5, 제57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36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00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9조의2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394백만원

- (주요내용) NEP, NET, GR 인증 평가위탁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및 제도운영 예산
- (산출근거)

① NEP, NET, GR 인증 : 1,990백만원

- ('20) 정기인증 1,050건 × 3.85백만원 × 0.5 → ('21) 정기인증 1,034건 × 3.85백만원^{주1)} × 0.5^{주2)}

주1) 1건당 평가비용(단가) : {1차평가(서류·대면) 10명 + 2차심사(현장) 4명 + 3차심사(종합) 4명(20명/5건)} × 0.20백만원(수당) + 0.25백만원(출장비 등) = 3.85백만원

주2) 예산 부족으로 1개의 위원회 당 2건 심사 진행

② NET·NEP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293백만원

- ('21) 품목발굴(조사·분석) 100백만원, 상시인증 50건 × 3.85백만원 = 193백만원

< NET·NEP 100대 전략품목 발굴 >

□ (목적) 공공시장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Top-Down식 전략적 수요 발굴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혁신조달 품목 Pool 확대에 기여

□ (추진방안) NET·NEP 100대 전략품목 선정·공고하고 해당 품목은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신산업 품목 인증 취득 유도

* 심사 시 가점 부여, 상시인증 허용(현행 : 연간 3회 공고에 따라 신청 및 평가)

③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관련부처·기관 회의 등) : 1.71백만원

- ('20) 1.9백만원 → ('21) 1.71백만원

④ 연구용역비 : 25백만원

- ('20) 1건 × 25백만원 → ('21) 1건 × 25백만원

⑤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84.29백만원

- ('20) 34.1백만원 → ('21) 84.29백만원

* 인증탈락 기업의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현실화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02백만원

- (주요내용) NEP 인증제품의 판로개척 추진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이행을 제고를 위해 제도 설명회, 구매 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 추진

- (산출근거)

①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조사 : 68백만원

- ('20) 1식 × 68백만원 → ('21) 1식 × 68백만원

②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 현장방문 상담회 등 : 234백만원

· ('20) 1식 × 234백만원 → ('21) 1식 × 234백만원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30백만원

- (주요내용) 인증제품의 품질 유지 여부 확인(시판품 조사)을 통한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 (산출근거) ('20) 22품목 × 1.35백만원 → ('21) 22품목 × 1.35백만원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284백만원

- (주요내용)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인증 조사·분석 등

- (산출근거)

①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분석 : 264백만원

· ('20) 인증평가 6건 × 3백만원, 조사·분석 6건 × 27백만원

→ ('21) 인증평가 16건 × 3백만원, 조사·분석 8건 × 27백만원

②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20) 1식 × 20백만원 → ('21) 1식 ×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9.0	70.5	71.0	71.5	71.7	인증제품 관련 수요자중심 정보 채널 다각화, 인증 제품의 신뢰성 유 지·제고를 위한 노 력을 지속하여 목 표치 상향 설정	공공기관 의무구 매 담당자 대상으 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A / B (A: 공공구매 만족도 B: 공공구매 만족도 조사 총점) × 100점	외부 전문 기관의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70.2	70.4	71.4	-	-			
	달성도	101.7%	99.9%	10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p>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295건/인증 41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41건/인증 83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1건/인증 85건) <p>② 인증제품 판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0회 <p>③ 인증제품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 61건 , GR : 46건)
2018	<p>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4건/인증 39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65건/인증 54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9건/인증 77건) <p>② 인증제품 판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5회 <p>③ 인증제품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GR : 76건)
2019	<p>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95건/인증 46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25건/인증 5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3건/인증 67건) <p>② 인증제품 판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22회 <p>③ 인증제품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39건, GR : 79건)
2020	<p>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62건/인증 50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99건/인증 86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8건/인증 96건) <p>② 인증제품 판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9회 <p>③ 인증제품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35건, GR : 78건)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019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총액은 2,570억원, 한 개 제품 당 평균 구매액은 21.1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3년 NEP 의무구매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17년	'18년	증감률	'19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214	2,098	△5.2	2,570	22.5
품목당 구매액*	16.2	16.7	3.1	21.1	26.3

* 유효인증품목 수 : '16년(131품목) → '17년(137품목) → '18년(126품목) → '19년(122품목)

-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이 ①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취득을 위해,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실시기업(%) / 고용규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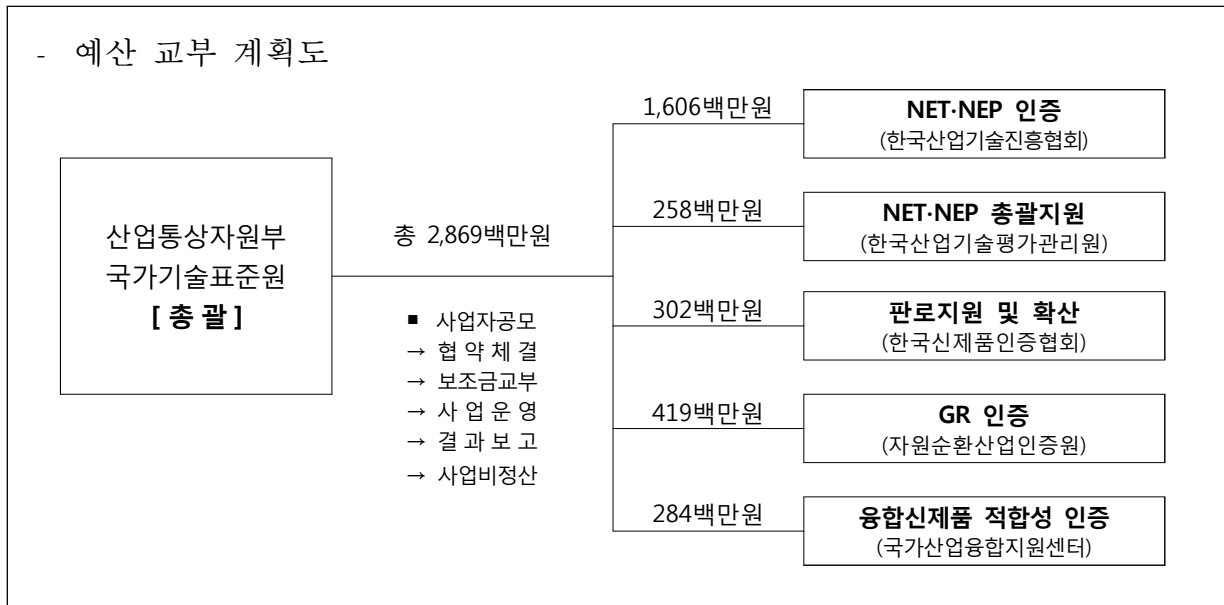
구 분		① 인증 취득 전 [인증 취득을 위한 고용]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한 고용]
중소기업	신기술(NET) 인증	48.8% / 4.0명	52.4% / 4.3명
	신제품(NEP) 인증	60.6% / 2.9명	48.5% / 2.6명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 중소기업 175개사 / '18.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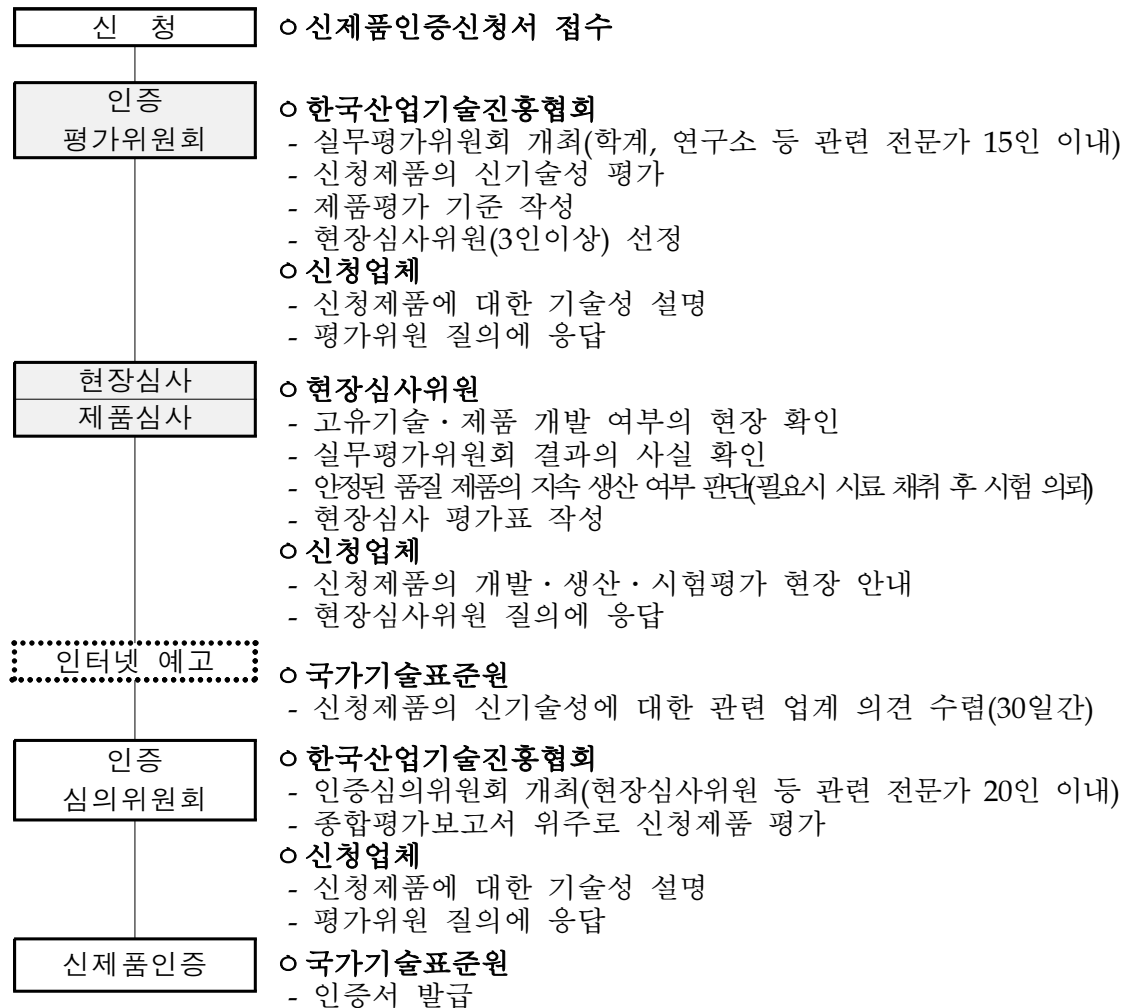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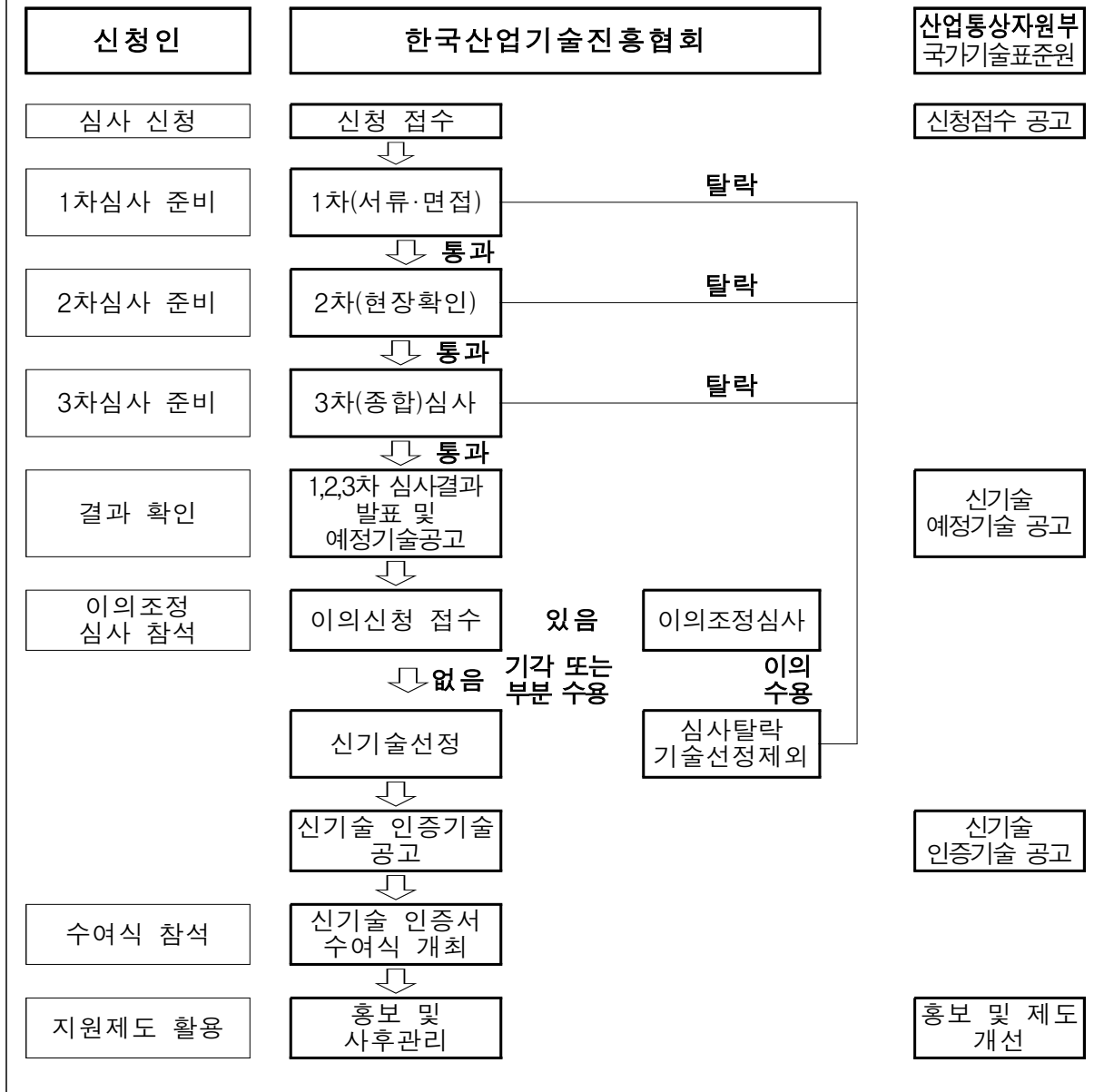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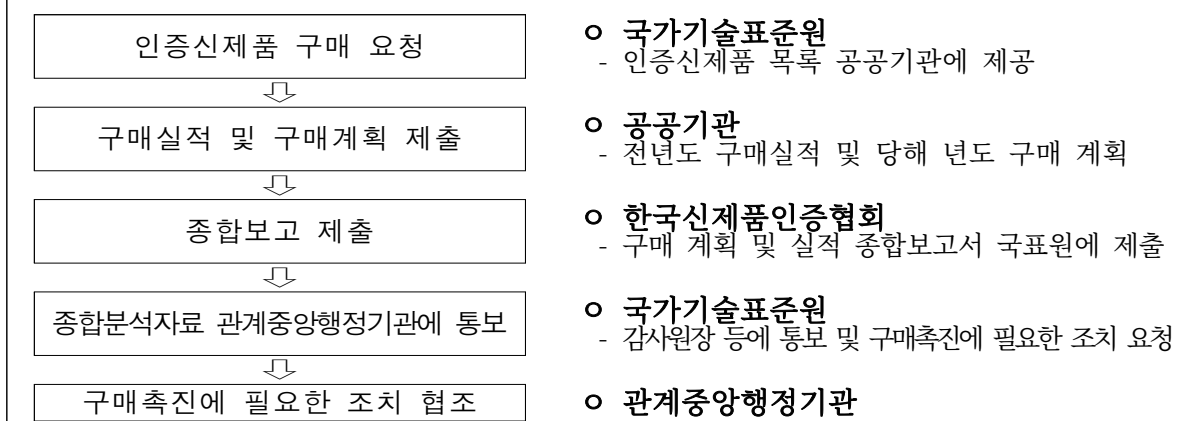
①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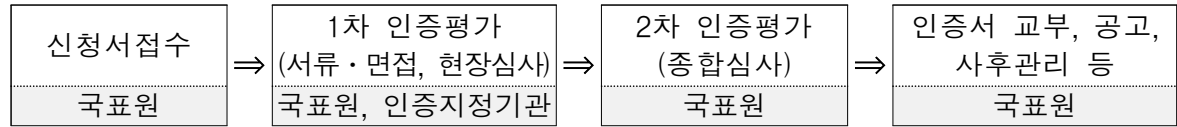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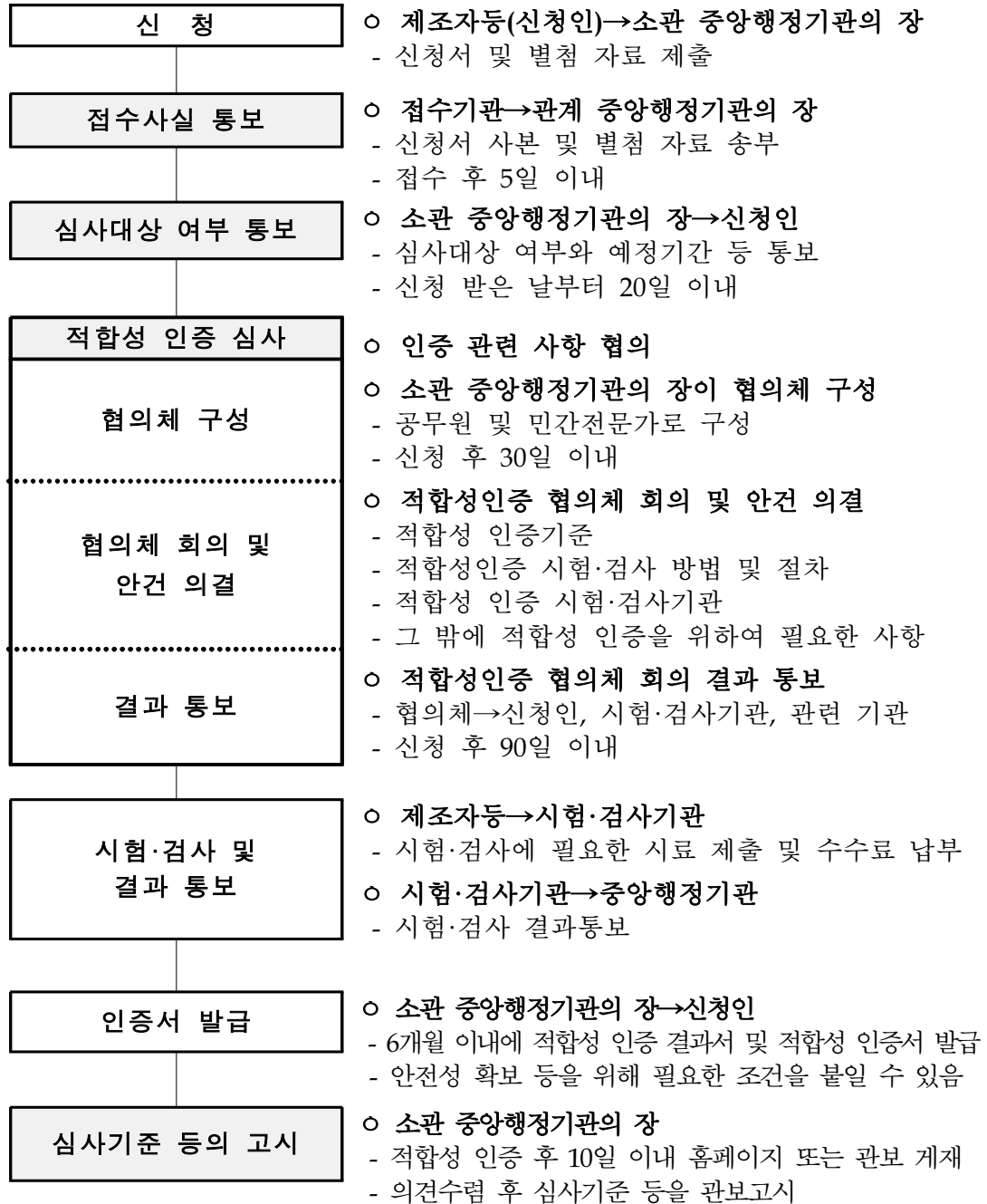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⑤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6개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227	2,614	2,536	2,485	2,460	
20~ 24		2,614	2,745	2,882	3,026	3,1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 산중위 결산 검토보고서 ('18년 결산)
 - (지적) NET 인증 심사수수료 내역을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포함할 것
 - (조치) NET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수수료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 조치 완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도모
- 신산업 분야의 NET·NEP 인증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 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19년)
 - 우수, 84.6점 (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 2) 보조사업 연장평가('18년)
 - 다수의 내역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단, 현 국정 기조에 따라 사업 방식 변경 필요
 - NET인증과 NEP인증의 경우 최근 3년 또는 5년의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합성인증 예산의 확대가 필요

12) 부처 전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223	2,223	-	-	-	-	2,223	2,223	100	100	-	-
2018	2,066	2,066	-	-	-	-	2,066	2,066	100	100	-	-
2019	2,227	2,227	-	-	-	-	2,227	2,225	99.9	99.9	-	2
2020	2,614	2,614	-	-	-	-	2,614	2,612	99.9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104	2,104	2,104	2,104	-	2,104	2,104	-	-	100
2018	1,947	1,947	1,947	1,947	-	1,947	1,947	-	-	100
2019	2,136	2,136	2,136	2,136	-	2,136	2,136	-	-	100
2020. 12월기준	2,523	2,523	2,523	2,523		2,523	2,52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8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9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집행 잔액)
2020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집행 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한상미	이행무	-
		043-870-5350	043-870-5354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2,093	1,915	1,835	2,050	2,050	215	1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05	2,105	2,093 (2,093)	-	12	1,915	1,835	1,835	887 (729)	-	948	2,050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705	655	653	-	2	515	515	515	274	-	241	640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400	450	449	-	1	400	320	320	22	-	298	41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1	-	9	100	100	100	91	-	9	10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900	900	900 (900)	-	-	900	900	900	500 (342)	-	400	900
○ 비목별 분류(합계)	2,105	2,105	2,093 (2,093)	-	12	1,915	1,835	1,835	887 (729)	-	948	2,050
· 일반수용비(210-01)	126	126	126	-	-	100	100	100	69	-	31	126
· 임차료(210-07)	503	453	453	-	-	357	357	357	147	-	210	462
· 국외업무여비(220-02)	400	450	449	-	1	400	320	320	22	-	298	410
·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	-	53	53	53	53	-	0	47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1	-	9	100	100	100	91	-	9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900	900	900 (900)	-	-	900	900	900	500 (342)	-	400	90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18	-	2	5	5	5	5	-	0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등의 국제표준 선점을 주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대응 및 산하 기술위원회(TC/SC/WG) 회의 참가 등 국내 민간전문가 및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지원)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ISO/IEC 기술위원회 총회 등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개최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지원) 국제표준 제안, 기술위원회 임원수입, ISO/IEC 국제표준화 정책 및 기술논의 참여, 양자/다자간 표준화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학연 민간전문가 및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회의 등 참가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방안 도출 등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화 협력 조사 연구
-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국제임원(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수입자에 대한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영향력 제고 및 표준외교 역량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WTO/TBT 협정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02년부터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 각국 전문가가 참여와 논의를 거치는 장기간(3~5년)이 소요되어 국제표준의 제안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협력도 중요
- 현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인증혁신

-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 '20.6월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등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640백만원

- 임차료 : 17회×약 21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357백만원 ('20년도)
→ 22회×약 21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462백만원** ('21년도)
- 통역비, 자료인쇄 등 운영 : 17회×약 3.5백만원 = 59백만원 ('20년도)
→ : 22회×약 3.5백만원 = **77백만원** ('21년도)
-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
41백만원 ('20년도) → **49백만원** ('21년도)
-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 :
1식(노트북 등)×5백만원 = **5백만원** (전년동일)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시 업무협력비 : 53백만원 ('20년도)
→ **47백만원** ('21년도)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41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86명×약 3.5백만원 = 302백만원 ('20년도)
→ 88명×약 3.5백만원 = **308백만원** ('21년도)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28명×약 3.5백만원 = 98백만원 ('20년도)
→ 29명×약 3.5백만원 = **102백만원** ('21년도)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전년동일)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90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96명×약 4.2백만원×100% = **822백만원**
(전년동일)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2명×12월×100% = **60백만원** (전년동일)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 9백만원×2회×100% = **18백만원** (전년동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 건)	목표	160	120	128	105	131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212	126	145	-	-			
	달성도	132.5	105.0	13.3	-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건수 (단위 : 건)	목표	20	17	28	21	26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26	18	32	-	-			
	달성도	130	105.9	14.3	-	-			

* 국제표준화 회의참가 지표는 '20년 3차 추경 감액(80백만원)으로 목표 조정(128명 →105명)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5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7%(559개), IEC 68.1%(139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88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2%(558개), IEC 69.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5,615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5개('19.12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5.0%(565개), IEC 68.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183건('19.12월)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68개('20.11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6.1%(570개), IEC 71.9%(151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278건('20.11월)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등에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가위상 강화
-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진출 및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제안 확대로 표준강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 증대

* '20년 11월 기준 국제임원(220명) : 국제의장(20명), 간사(27명), 컨비너(173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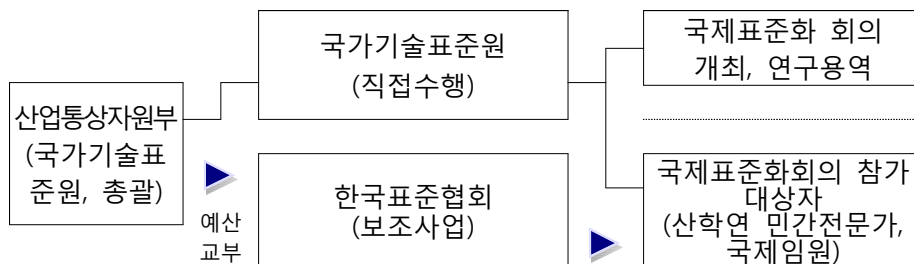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표준담당과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보조금 수행】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105	1,915	2,011	1,821	1,803	
20~ 24		1,915	2,914	2,914	2,914	2,9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상임위 지적사항 : 없음

2) 자체평가 등

○ 재정사업 자율평가 : '20년 "우수" ('18년 우수, 19년 우수)

○ 보조사업운용평가 : '18년도 연장평가(3년 단위) "정상추진"

- 대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려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필요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2015년 「ISO서울총회」, 20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다만,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임원 진출도 저조하여 국제표준화 주도에 한계

○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대기업을 포함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기업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에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 활동은 물론 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산업부는 제조 4강국 및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향후 ISO 이사국,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105	2,105	-	-	-	-	2,105	2,063	98.0	98.0	-	42
2018	4,458	4,458	-	-	-	-	4,458	4,448	99.8	99.8	-	10
2019	2,105	2,105	-	-	-	-	2,105	2,093	99.4	99.4	-	12
2020	1,915	1,835	-	-	-	△80	1,835	887	48.3	48.3	-	948

※ '20년도 3차 추경으로 국외여비(80백만원) 감액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18	3,590	3,590	3,590	3,590	-	3,590	3,590	-	-	100
2019	900	900	900	900	-	900	900	-	-	100
2020. 12월	900	900	500	500	-	500	342	-	-	38.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액 4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38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일괄 절감액(5% 3백만원) 등
2018	○ 불용액 10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4백만원) 등
2019	○ 불용액 1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9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잔액(2백만원) 등
2020	○ 세출조정 : 80백만원('20년 3차 추경 감액) - 코로나로 인한 국제회의 참가 취소로 국외업무여비(220-02) 감액 (80백만원) ○ 불용액 949백만원(집행잔액) - 코로나로 인한 국제회의 개최, 참가 취소 등으로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298백만원), 일반수용비(210-01) 잔액(32백만원), 임차비(210-07) 잔액(210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9백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잔액(400백만원) 등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붙임 2>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정책 수립 현황

<붙임 3>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196년 말 기준)

<붙임 4>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붙임 5>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참고 1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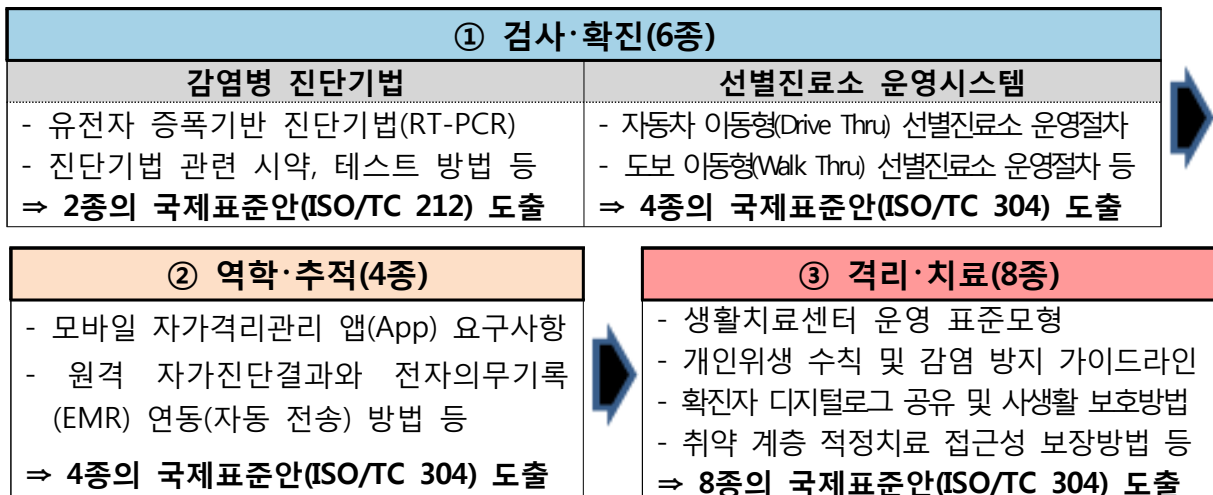
-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성이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 대응과정에서 검사진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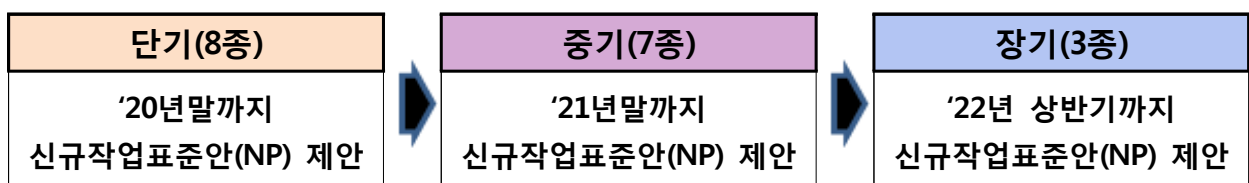
- K-방역모델인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③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절차와 기법을 국제표준 추진 발표(4.26 비상경제중대본)
- 민·관합동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5월)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특허청, 대한감염학회, 진단키트·장비업체 등
-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6.11 비상경제중대본)

□ 국제표준화 로드맵 요약

- 'K-방역 3T(Test-Trace-Treat)' 분야 18종을 '22년까지 순차적으로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 연도별 추진 목표



참고 2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현황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19.4.3,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17 발표)과 연계하여 세계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 마련

* '18.9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100여명)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 연구·분석 등 실시

- (추진목표) '30년까지 ①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 제안, ② 충전소부품, 연료전지 제품 등 30건을 KS인증 품목지정
- (추진전략) 국제표준, 국가표준, 표준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구축

구분	국제 표준	국가표준	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건설 기계 등) 제안 • 에너지(연료전지, 수소공급 등)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소부품, 연료 전지 KS인증 지정 • '25년까지 수소충전기 법정 계량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전문가 참가·육성 • 업계 주도의 표준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국제표준포럼 개최('19.6) • 수소기술 ISO 총회('20) 등 협력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19.6.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초연결, 신산업 스케일업, 신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추진
- (추진목표) '23년까지 ① 신성장 동력 중점분야의 국제표준 300종 개발, ②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진출

▷ 전기·자율차, 에너지(수소 등),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해양구조물, 스마트시티·홈,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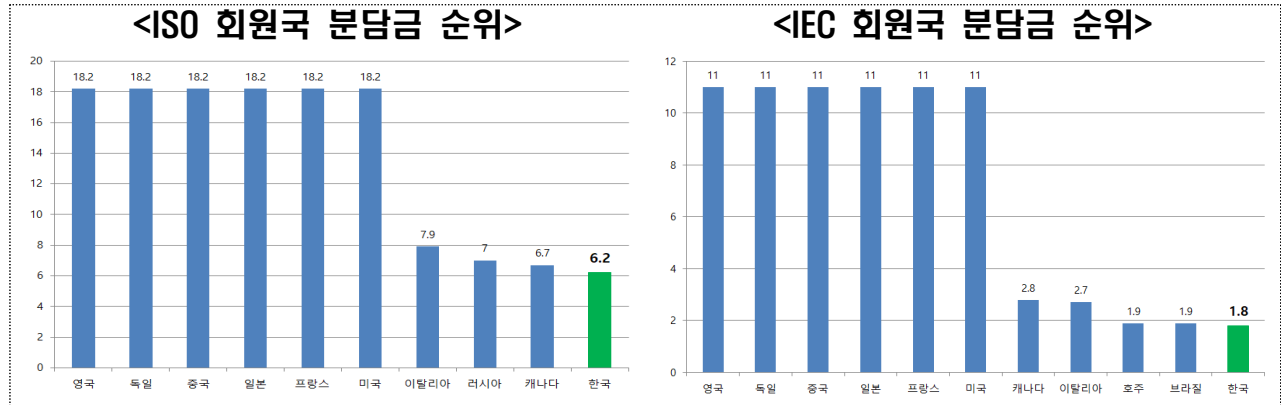
- (추진전략) 국제표준, 국가표준, 표준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구축

구분	국제 표준 개발	추진체계재구축	표준연계 강화	혁신기반 조성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및 서비스 표준 개발 • 데이터 및 5G 활용 표준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예산 및 표준정책 사전심의 • 표준기본계획 등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표준인프라 확산 • 다수인증품목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연계, 시험 장비산업 육성 • 기업대상 표준인력 양성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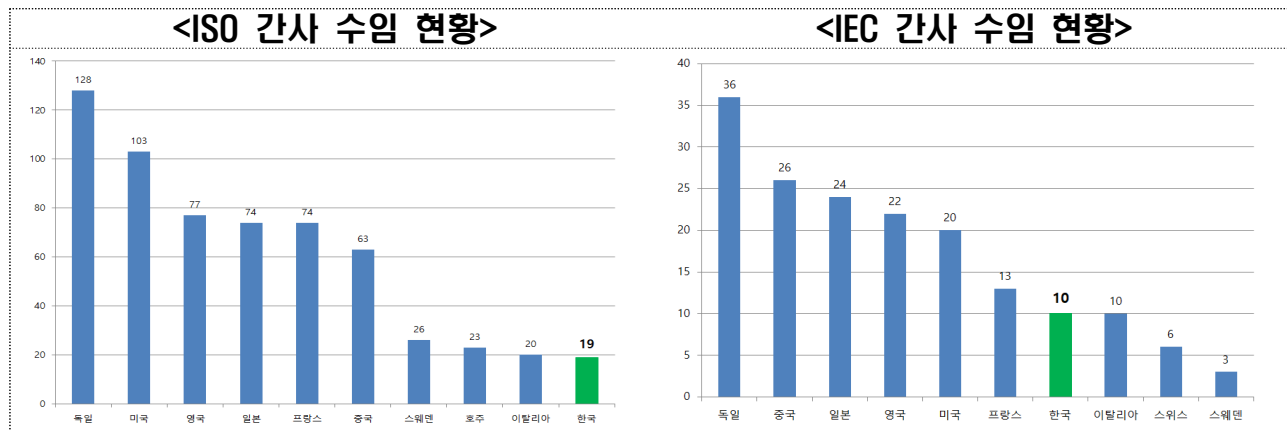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19년 말 기준)

□ (국가 순위)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평가에서 **ISO 8위, IEC 11위**
('19년 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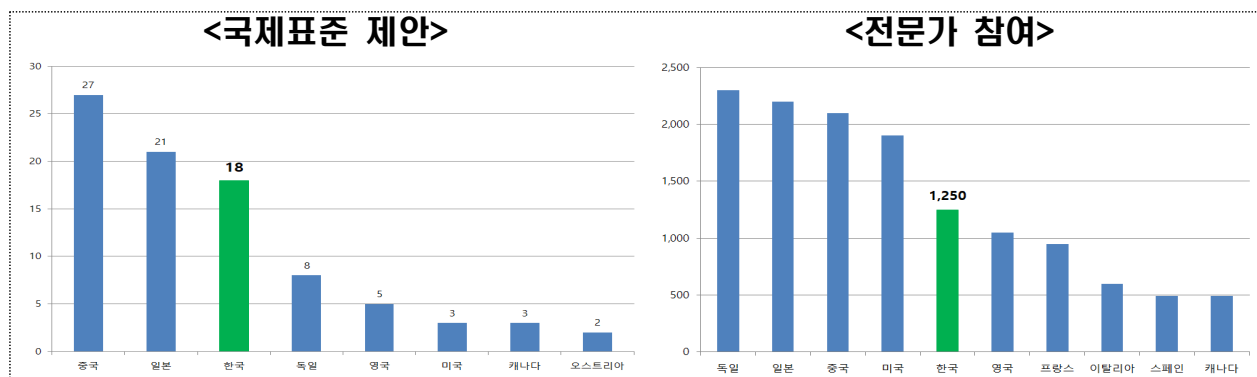


* <평가기준> (ISO) 분담금(60%)+간사수입(20%)+정회원률(20%) = 최종평가지수
(IEC) 인구, 국민총소득(GNI), 전력소비량으로 산출 = 분담금

□ (간사국 수입) 실질적 국제표준화 활동 지표인 우리나라 국제 간사국 수입은 **ISO 10위, IEC 7위** ('19년 기준)



□ (IEC 표준 제안 및 전문가 활동 참여) 최근 1년간('18.7~'19.6) NP(신규표준)제안 국가 3위, 전문가 참여 5위



참고 4

국제표준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 (사업경위 및 목적) WTO 체제 출범('95) 이후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02년 동 지원사업 추진

* WTO TBT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표준을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K-방역모델을 비롯한 수소경제,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국제 표준화 대응을 통해 우리 산업의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이를 통해 우리 기술과 제품의 수출경쟁력 기반확보, 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

- (예산 현황)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 및 대응, 임원수입 활동 및 국제표준화 협력 등을 위한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20년 예산 1,915백만원 ⇒ '21년 예산반영액 2,050백만원(전년비 7.0%)

구 분 (백만원)	'18년	'19년	'20년	'21년	
				요구액	반영액
□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4,458 (111.8)	2,105 (△52.8)	1,915 (△9.0)	2,115 (10.4)	2,050 (7.0)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368	705	515	615	640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지원	400	400	400	500	41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	750	900	900	900	9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100	100	100
· 2018 IEC부산 총회 개최	2,840	-	-	-	-

- (그간의 성과)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세계 8위, IEC 세계 11위 달성

- ISO·IEC 산하 기술위원회(TC/SC) 960개 중 707개(73.6%)에 정회원 가입
- 임원수입 현황 ('19년말 누계) : 216명 (국제의장 20명, 간사 29명, 컨비너 167명)
- 국제표준제안 ('19년말 누계) : 991건 * '19년 78건(ISO 56건, IEC 22건)
- ISO·IEC 등록 국내 전문가 : 5,200여명 (ISO 4,000여명, IEC 1,200여명)

참고 5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기구별 현황

기구명	ISO (국제표준화기구)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62개국 (정회원 120, 통신회원 39, 구독회원 3)	171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 개도국회원 8)	193개 회원국 (약 8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100여명)
표준 수	21,991종	10,100종	5,707종
위원회 수	TC: 243개 SC: 505개 WG: 2,682개	TC: 104개 SC: 100개 WG: 568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국제표준화 필요성

세계시장 선점

무역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GDP 대비 무역비율 104.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WTO/TBT 협정 제2조4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은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기술의 표준 선점 실패 시 수출경쟁력 저하 불가피

환경규제 대응

우리나라 무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은 각종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우리 산업에 큰 부담,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 필요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간사·컨비너 역할

TC (기술위원회)

SC (분과위원회)

WG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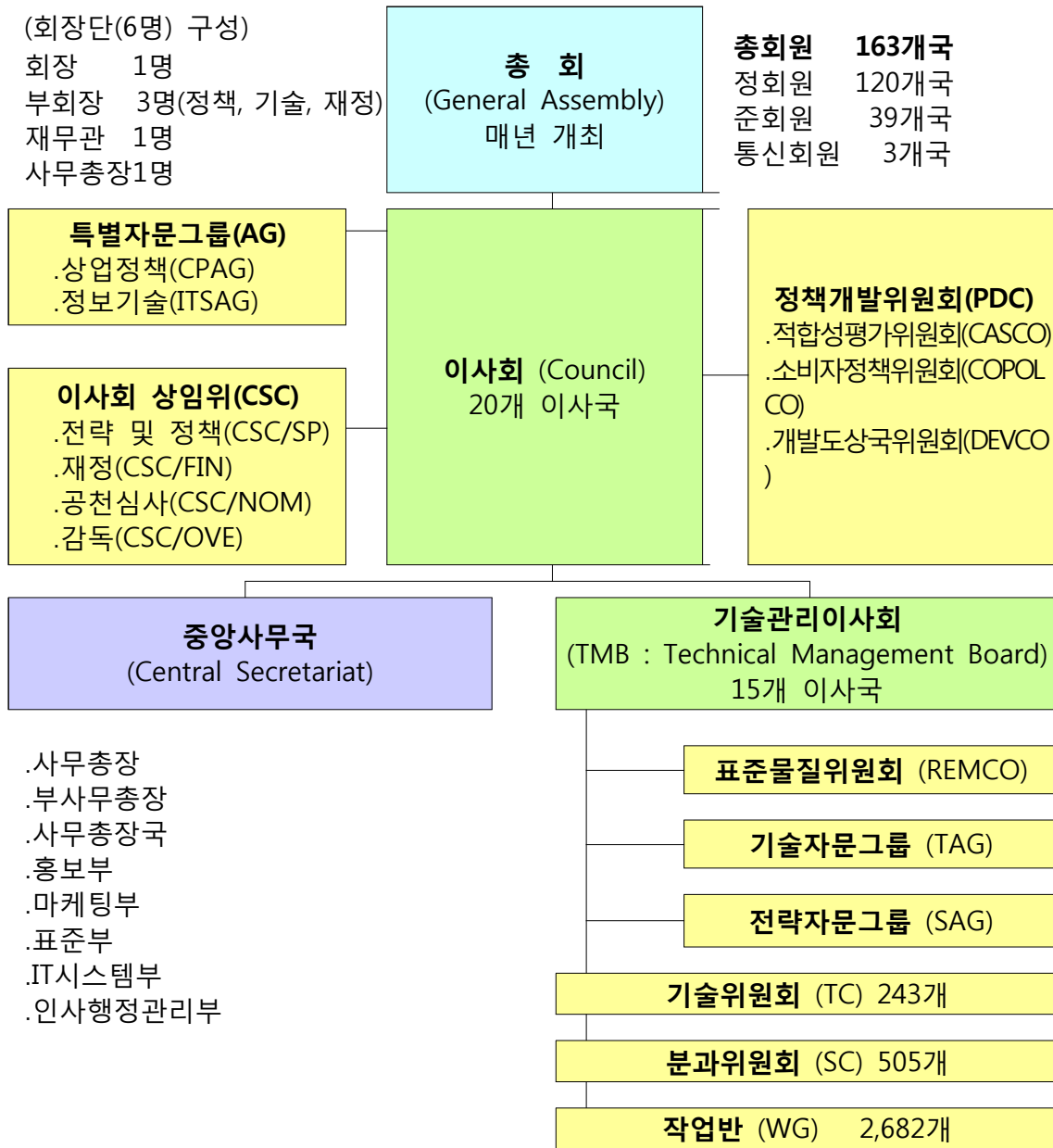
STRUCTURE

ISO/IEC는 기술 분야별로 TC를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TC는 기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수의 SC를 둘 수 있으며 표준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여, 다수의 WG 운영 가능

OFFICERS

의장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개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간사는 위원회 내 개발하는 모든 표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 컨비너는 WG의 장으로서, 국제표준제안 및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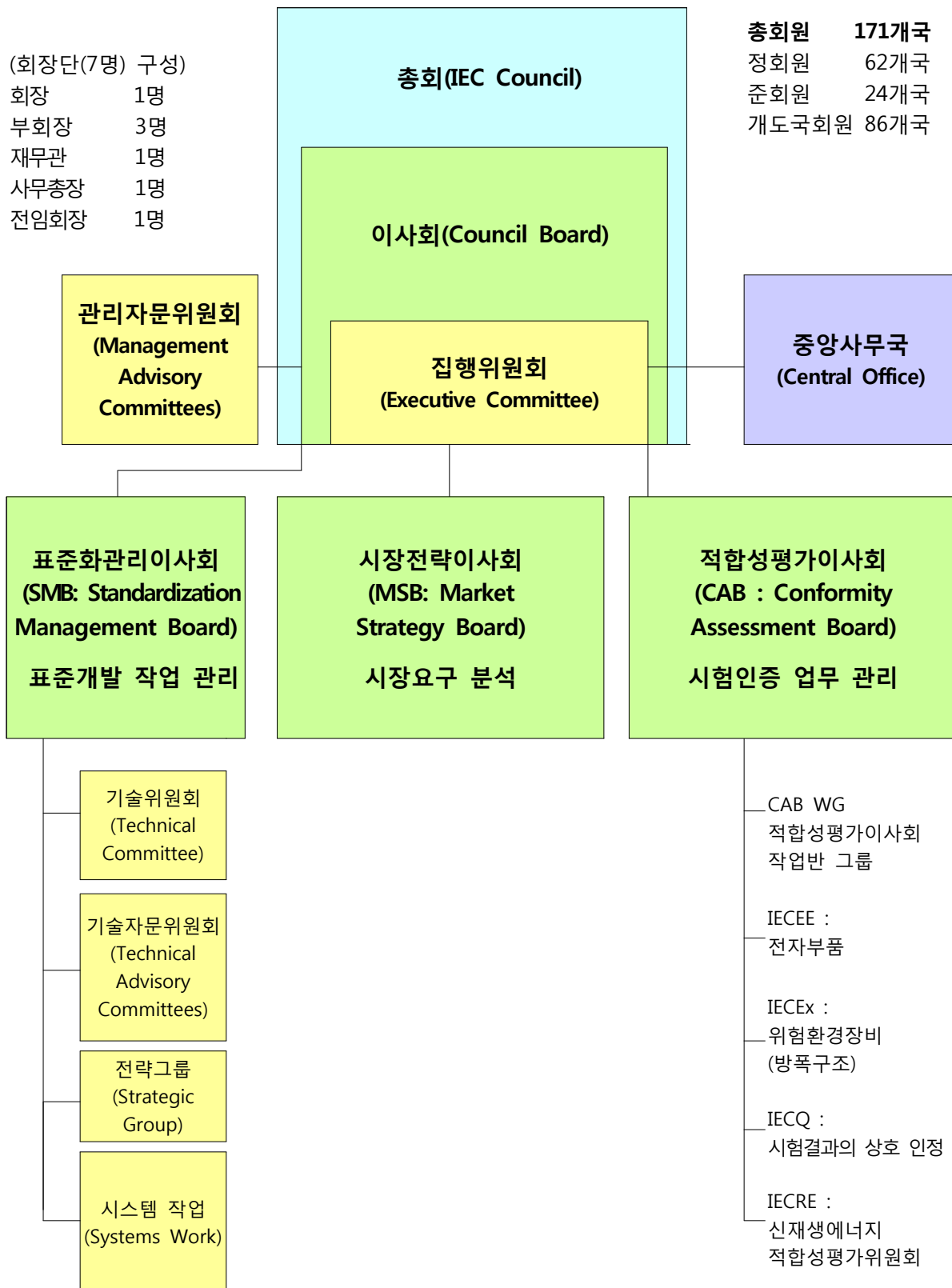
□ ISO 조직도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REMCO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표준물질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 국제 표준화기구 : 19개국 138명(10개 파트 26개 팀 정직원 138명)
- 사무국
 - 표준화 기술정책(7)
 - 적합성평가/소비자(3)
 - 개도국(1)
 - 교육/연구(1)
 - 재정/서비스(4)
 - 판매/통신/정보(4)
 - 전략계획/운영(1)
 - 인사(1)
 - 정보기술/전자서비스(1)

□ IEC 조직도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수열	이종민
		043-870-5560	043-870-5568	043-870-556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개도국표준체계보 급지원(ODA)	1,020	1,559	1,559	1,453	1,453	△106	△6.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20	1,020	1,020 [1,020]	-	-	1,559	1,559	1,559	1,559 [1,290]	-	-	1,453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 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	-	-	-	809	809	809	809 [540]	-	-	505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 재료 시험센터 설립	-	-	-	-	-	-	-	-	-	-	-	258
· 표준체계전수협력	650	650	650 [650]	-	-	550	550	550	550 [550]	-	-	570
· 협력타당성조사	150	150	150 [150]	-	-	200	200	200	200 [200]	-	-	120
· 표준체계보급지원강화	220	220	220 [22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20	1,020	1,020 [1,020]	-	-	1,559	1,559	1,559	1,559 [1,290]	-	-	1,453
· 민간경상보조(320-01)	1,020	1,020	1,020 [1,020]	-	-	1,559	1,559	1,559	1,559 [1,290]	-	-	1,4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동 내역사업은 국내 섬유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미얀마의 섬유산업 발전과 현지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을 지원

o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동 내역사업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함으로써 현지 건설 안전 확보와 함께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

o (표준체계 전수협력)

- 동 내역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o (협력타당성조사)

- 동 내역사업은 국내산업의 개도국 진출 수요와 수원국의 수요를 함께 만족시키는 무상원조사업의 발굴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 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7년부터 국정과제 34번(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신규내역사업 공모 예정)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505백만원

- 국내 섬유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얀마에 현지 섬유산업 발전 및 섬유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2차년도)
- * 국제공인시험능력구축(역량강화) : ('20년) 188백만원 → ('21요구) 108백만원
- * 시험장비 구축 : ('20년) 464백만원 → ('21요구) 176백만원
-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 ('20년) 24백만원 → ('21요구) 87.4백만원
- * 사업운영비 : ('20년) 133백만원 → ('21요구) 133.6백만원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258백만원

- 급속한 도시화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미얀마에 건설 재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센터 및 관련 제도 구축(1차년도)
- * 국제공인시험능력 및 제도 구축 : 144백만원 (표준·제도 개발, 전문가 파견 및 초청)
- * 사업운영비 : 114백만원 (인건비, 기타 운영비)

○ 표준체계 전수협력 : 570백만원

내내역사업	'20년 예산 (백만원)	'21년 예산 (백만원)	산출내역(백만원)
미얀마의 국가표준인증 제도 선진화 지원	150	71	표준 및 제도 개발(10.6) + 정책홍보 세미나(12.8) + 초청연수(10.7) + 비대면 콘텐츠 개발(21) + 사업운영비(15.9)
키르기스스탄의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	100	184	제품안전제도 구축(45.6) + 시장조사 시뮬레이션(16.4) + 시험역량강화(30) + 비대면 콘텐츠 개발(34) + 사업운영비(58)
에티오피아 섬유·가죽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	150	185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55) + 제품안전제도 전수(41) + 비대면 콘텐츠 개발(35) + 사업운영비(54)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	130	양국제도 조사 및 자료 개발(40) + 법정계량 역량강화(30) + 비대면 콘텐츠 개발(30) + 사업운영비(30)

○ 협력타당성 조사 : 120백만원

- 개도국의 협력 수요와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사업 기획과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신규 프로젝트 설계 : 50백만원 (수원국 표준체계 현황 조사, 수원국 협의)

* 타당성조사 : 70백만원 (현지조사 및 상세설계)

* 3건 × 66.7백만원(2020년) → 2건 × 60백만원(2021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6	7	7	7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 계획에 따른 협력 사업 수를 감안하 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 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6	7	7	-	-			
	달성도	100	100	100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	-	11	11	11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1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	-	11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만족도 조사('17.10-12)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 ▶ 개도국 표준·인증 발전 성숙도 지표(표준화, 인정/인증, 계량, 기술규제 분야) 개발 ▶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제1회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정식 개최('17. 11. 8,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명 참석) ▶ (동남아 3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3국 주 협력기관 실무 공무원 초청('17.9.20-9.27, 6명) ▶ (라오스) 라오스 표준인증체계 및 한국의 국가표준제도, 제품안전제도, 계량 측정제도 정보 공유를 위한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17. 8. 28, 표준계량국 부국장 등 12명) ▶ (베트남) 조작방지 주유기 이론(제도, 기술) 교육을 위한 현지 세미나 실시
------	--

	<p>(‘17.7.27, 11.7, 표준품질총국 공무원 등 담당자 8명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건설) 한국의 건설자재 분야 표준체계 및 시험인증체계 소개를 위한 미얀마 건설부 소속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실시(‘17.9.18-22, 3명 참석) ▶ (미얀마-섬유) 섬유 분야 품질관리 제도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업부, 차관보, 국장 등 55명 참석, ‘17.7.25), 섬유제품 검사관련 실무급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동시험소 총괄 책임자 등 49명 참석, ‘17.11.22) ▶ (캄보디아-섬유) 섬유제품 품질 표시제도 및 관련 시험법 현지 세미나 개최(캄보디아 표준원 및 산업시험센터 실무급 공무원 65명 참석, ‘17.11.29), 섬유제품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17.11.28) ▶ (키르기스스탄) 제품안전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표원-경제부 간 MOU 체결(‘17.1.10, 경제부 차관 등 18명),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등 43명 참석, ‘17.8.9),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초청교육 개최(표준계량센터 센터장 공무원 8명 참석, ‘17.7.10-7.15) ▶ (ARSO) 아프리카지역의 국가표준인프라 수준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ARSO와의 공동연구 추진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17.11.28, ARSO 사무총장 등 10여명)를 통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아프리카 협력 재개를 위한 가나, 르완다, 잠비아, 카메룬 ARSO 회원 4개국(‘17.10.21-10.28, 6명 참석)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건설) 건설재료 표준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공동로드맵 구성(단기 1건, 중장기 1건), 미얀마 맞춤형 표준 제정 지원(기술자문회의 7회, 미얀마표준 제정을 위한 건설부 회의 4회, KS 제품표준 8종 및 인용표준 39종 현지화 지원), 표준 및 제도 전수를 위한 초청교육 실시) ▶ (키르기스스탄-섬유)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기업인 등 36명 참석, ‘18.6.27) ▶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사업 증진 및 향후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표원-표준계량품질총국 간 MOU 갱신 및 ‘18년 Action Plan 합의(‘18.5.23, 표준계량품질총국 원장 등 4명), 계량기 정기검사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교육(‘18.6.13-6.19, STAMEQ 및 VMI 공무원 5명 참석) ▶ (에티오피아-섬유) 한국의 표준화·시험인증 및 계량측정 분야 전수를 위한 표준원 공무원 초청교육(‘18.3.3-3.8, 9명 참석) ▶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한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 등 분석, 페루 시험·인증기관 방문 및 한국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소개 ▶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개최(‘18. 10. 23,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여명 참석)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라오스의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 2회 실시(한국, 5.28-6.4 / 라오스, 6.29-7.6) ▶ (미얀마-섬유) 미얀마 공업부 직원 대상 이화학 시험 및 섬유 완제품 검사 등 섬유분야 실무교육 1회 실시(미얀마, 4.1-4.5, 11명) ▶ (미얀마-건설자재) 레미콘 공장인증 제도 전수 및 기초 전자재 국제표준화 교육 1회 실시(미얀마, 6.24-6.29, 50여명)

	<p>▶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해 제품별 에너지효율 및 소음에 대한 규격 등 전문가교육 2회 실시(페루, 4.4-4.11 / 8.12-8.16)</p> <p>▶ (베트남-LED) 베트남 시험기관 대상 LED제품 신규 규제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 및 분석 방법 교육 1회 실시(베트남, 6.16-6.18)</p>
2020	<p>▶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한국의 비대면 교육 및 관련 표준화 경험 공유, 국제표준문서 작성법 교육, 냉장고 에너지효율 시험규격에 따른 시험방법 교육 - (키르기스스탄) 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 상황을 비교 소개, EAEU의 공통 기술규정에 따른 섬유제품 시험방법 교육 - (에티오피아) 국제기준(ISO)에 따른 섬유, 가죽제품의 시험방법 교육 - (미얀마) 미얀마 섬유표준 도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기반한 국가표준 활용사례 및 표준 제정 배경 등 교육,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 제품안전 관리의 필요성 인식 제고 교육 <p>▶ (협력타당성조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p>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 미얀마 섬유 국제공인 시험센터 기대효과
 - 현지 한국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섬유류 비중이 44%
 - * 시험성적서 인증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한국 시험인증기관의 미얀마 진출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섬유 및 의류 시험인증시장 규모 735.4억원
- ▶ 미얀마 건설재료 국제공인 시험센터 및 국가표준 구축 기대효과
 - 국가표준 부재로 다양한 외국표준이 혼재되어 사용되며(특히 일본표준이 선점), 이는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 → 미얀마 국가표준 구축을 통해 걸림돌 제거
 - * 미얀마 건설시장: ('15년) 4조원에서 연간 10%대의 성장세 유지, ('25년) 17조원 전망
-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동남아, 중남미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초청교육과정 운영
 -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거버넌스 강화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확대 등을 통해, 표준강국으로 도약을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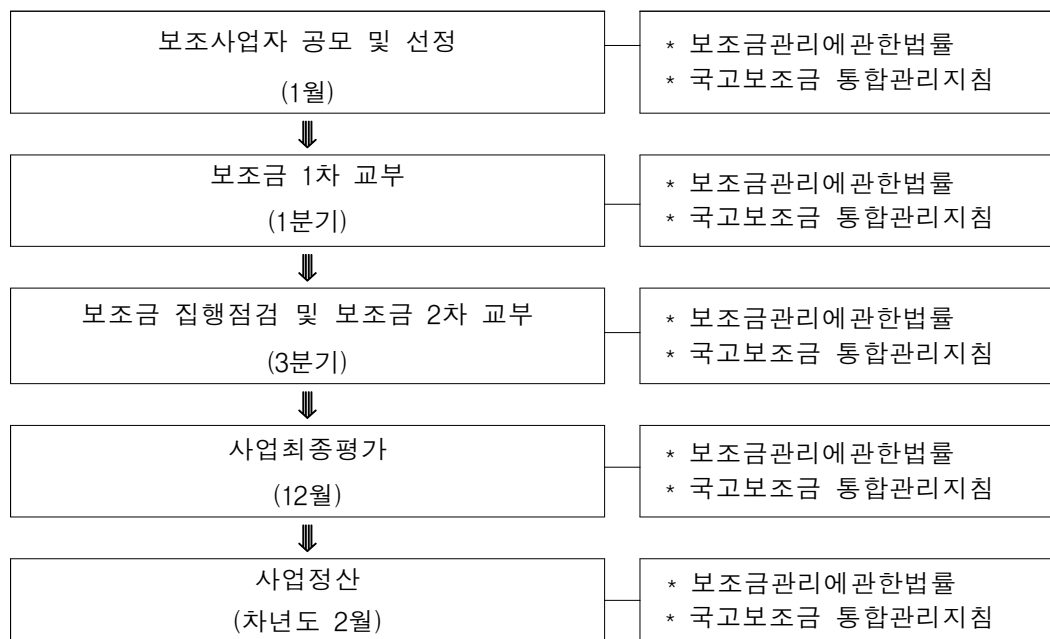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ISO 이사국, ISO/TMB* 이사국, IEC 이사국, IEC/SMB* 이사국에 진출 추진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IEC/SMB(Standard Management Board)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및 기술위원회 의장국·간사국 수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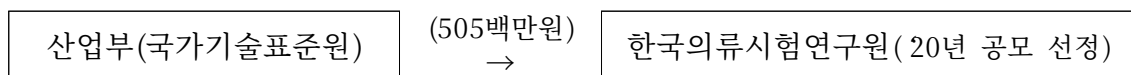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1년 내역사업별 보조금 예상 흐름도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공모 예정)
- 표준체계 보급지원(공모 예정)
- 협력타당성 조사(공모 예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020	1,559	1,637	1,482	1,467	
20~ 24		1,559	2,311	3,850	5,050	5,0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2017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성과지표 보완필요)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계량화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후속조치) 「ODA 평가등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수원국 만족도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한 최종 종합점수를 '19년 사업 성과지표에 추가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 지역별 표준화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협력 개도국이 속한 지역기구로 표준체계 협력을 확산(ARSO, ASEAN, Mercosur 등)
 - (1단계) 초청교육을 통해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 동 사업에서는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을 확대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예산감축 20% 편성 및 사업방식 변경
- 대책 : 1) '19년 예산 계획에 반영 (완료)
- 2) '19년 사업에 협력대상국 공무원 초청운영과정을 표준체계 전수협력 사업으로 축소·통합 (완료)
- 3) '20년 사업에 직접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내역사업 추진 (완료)

13)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증액 필요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초청교육, 방문컨설팅, 시험센터 구축 등)은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동 사업의 초청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무역기술장벽(TBT)관련 대응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4개국을 포함하여 우리 전략시장 수출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또한, 동 사업은 아세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에서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
- 한국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FT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 시 양국 간 TBT협정에 명시되는 기술규제 협력사항 등 실무이행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200	1,200	-	-	-	-	1,200	1200	100	100	-	-
2018	1,275	1,275	-	-	-	-	1,275	1,275	100	100	-	-
2019	1,020	1,020	-	-	-	-	1,020	1,020	100	100	-	-
2020	1,559	1,559	-	-	-	-	1,559	1,091	70	7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	100
2018	1,275	1,275	1,275	1,275	-	1,275	1,275	-	-	100
2019	1,020	1,020	1,020	1,020	-	1,020	1,020	-	-	100
2020. 12월기준	1,559	1,559	1,559	1,559	-	1,559	1,290	-	-	82.7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신규 내역사업 설명자료(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신규 내역사업 설명자료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규모) 4,400백만원 · (시기) '21년 ~ '24년 · (사업지역) 미얀마 양곤지역
- (주요내용) ① 건설분야 표준·품질관리 개발 및 제도 구축 지원
 ② 건설분야 표준·품질관리 HW 인프라(시험연구원, 시험기자재) 구축 지원
 ③ 시험연구원 국제공인 추진(운영시스템 개발, 관련 인력 양성 등)
 ④ 표준·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시험연구원 건물 신축 예산(약 6.4억 원)과 부지는 미얀마 측 부담

□ 추진배경

- (배경) 미얀마의 경제도약과 함께 사회인프라 구축과 도시화가 급속진행되며 건설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건설자재의 표준·품질관리 제도 미흡으로 미얀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에도 애로 요소로 작용

* 미얀마 건설시장은 '12년 이후 연평균 10~11%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25년 17조원 규모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최근 미얀마 건물 및 현수교 붕괴('18.01~04), 출처:미얀마 타임즈>

- (필요성) 한국형 건설자재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미얀마 건설안전의 확보 및 우리 기업의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필요

* 건설자재 품질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검증 안된 저질 수입 건자재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도입,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건설자재의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

- **(1차년도)** 건설자재 표준 및 제도 수립 지원 및 시험연구원 건물 설계와 시험기자재 설계와 품질관리 전문인력 교육
 - (표준 및 제도 수립) 건설자재 표준 개발·제정 지원, 건설자재 품질관리 제도 및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 (전문인력 교육) 품질관리 제도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2차년도)** 시험연구원 건물 시공과 시험기자재 제작·검수, 건설자재 품질관리 제도 개발과 품질관리 전문인력 교육
 - (시험연구원) 시험연구원 건물 공사 완료
 - (시험기자재제작) 전년도의 시험기자재 설계를 바탕으로 장비 제작·검수
 - (제도 개발) 건설자재 품질관리제도 수립 지원, 제품 시험 표준개발, 공장인증 제도개발 착수와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시범적용
 - (전문인력 교육) 공장심사자·시험실무자 초청 등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3차년도)** 시험연구원 완공과 시험소내 시험기자재 설치 등을 바탕으로 시험연구원 국제공인 추진 본격 시작 및 표준·제도개발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계속 추진
 - (시험연구원, 시험기자재) 건물 완공 및 시험소 내 시험기자재 설치
 - (시험연구원 국제공인) 건물 및 장비 구비와 함께 시험연구원의 국제공인을 위한 절차 시작
 - (표준·제도 개발) 제품 시험 표준개발, 공장인증·품질관리 제도 개발과 공장인증 제도 개선
 - (전문인력 교육) 공장심사자·시험실무자 초청 및 현지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 **(4차년도)** 시험연구원 국제공인 추진 및 공동시험소 시범운영 시작과 이를 위한 교육 실행
 - (시험연구원 국제공인) 시험연구원의 국제공인을 위한 절차 진행
 - (연구원 시범운영) 연구원 내 건설시험센터, 품질검사인증센터 시범운영, 시험기자재 시험 운영

- (전문인력 교육) 시험기자재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 건설인력교육센터 현지 시범교육
- (제도개발) 공장인증 제도개선 지원

□ 기대성과

- (수원국) 건설자재 표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가·저품질 건설자재의 무분별한 공사현장 투입을 방지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자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
- (한국) 한국과 미얀마의 건설분야 Code Share를 통해 TBT를 해소하고, 경쟁국의 저가·저품질 건설자재의 미얀마 진입을 방지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 확대 기여
- (한국) 국산 시험기자재 도입을 계기로 한국산 시험평가 장비의 ASEAN 지역 진출 촉진 및 건설분야 ASEAN 시험인증 시장 진출 확대 계기

사 업 명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김숙래	이용현	이진구
		043-870-5390	043-870-5391	043-870-539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1,504	2,039	2,039	1,832	1,832	△ 207	△ 1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44	1,544	1,504 (1,504)	-	40	2,039	2,039	2,039	1,658.5 (1,658.5)	355.5	25	1,832
· 인체치수측정사업	300	300	276.8 (276.8)	-	23.2	1,234	1,234	1,234	874.4 (874.4)	355.5	4.1	1,047
· 인체정보보급사업	424	424	415.9 (415.9)	-	8.1	300	300	300	294.9 (294.9)		5.1	300
· 인간빅데이터구축	820	820	811.3 (811.3)	-	8.7	505	505	505	489.2 (489.2)		15.8	485
○ 비목별 분류(합계)	1,544	1,544	1,504 (1,504)	-	40	2,039	2,039	2,039	1,658.5 (1,658.5)	355.5	25	1,832
· 시험연구비(210-13)	46	46	41.9 (41.9)	-	4.1	46.2	46.2	46.2	42.1 (42.1)		4.1	46.48
· 업무추진비(240-01)	3	3	3 (3)	-	0	2.8	2.8	2.8	2.8 (2.8)	-	-	2.52
· 일반연구비(260-01)	1,205	1,205	1,174.6 (1,174.6)	-	30.4	1,650	1,650	1,650	1,278.7 (1,278.7)	355.5	15.8	1,463
· 민간위탁사업(320-02)	210	210	205 (205)	-	5	300	300	300	294.9 (294.9)	-	5.1	300
· 자산취득비(430-01)	80	80	79.5 (79.5)	-	0.5	40	40	40	40 (4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체치수측정사업, 인체정보보급사업)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 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21세기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표준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 표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 (인간빅데이터구축) 3차원 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통해 새로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글로벌시장 선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 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sizekorea.kats.go.kr) 및 인체 표준정보실 개설과 관련 측정 정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②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동시에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8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 범위를 측정하였고, 인체치수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11종-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을 개발·보급. 또한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전시회 및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18.10.29, 국회의원 등 약 500명 참석)
*계층별 : 어린이(7~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39세), 중장년층(40~69세), 고령자(70~85세)
- '19년~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20년)을 대비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하였고, 인간 중심제품의 시각설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개발함. 또한 인체정보를 활용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보급하였고(다리제품, 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3차원 디지털인체정보(장갑,안경,가발)를 활용한 시범전시회를 개최함('19.11.29). 20년에는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제1차 조사를 '20.6월부터 '21.2월까지 진행(남녀 3,200명, 20세~44세)중이고,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공군과 MOU체결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의류, 가구, IT서비스,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체관련제품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인체치수 측정사업>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 1,047백만원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20년~'21년)을 통해 산·학·연에 최신 인체정보 보급 필요
 - * 한국인의 인체치수변화를 5년 주기별로 대규모 조사·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307개 항목 조사('20년 20~44세, 3176명, '21년 45~69세, 3200명)
 - 측정연구원 등 인건비 : 20명×8개월×3백만원=480백만원
 - 측정경비 : 측정장비대여(106백만원), 전산장비대여(98백만원), 측정장소임차(43백만원), 측정자교육비(34백만원), 재료비(10백만원), 여비(10백만원), 회의비(10백만원)=311백만원
 - 피측정자사례비 : 3,200명×80,000원=256백만원

◆ 한국인의 인체치수변화를 5년 주기별로 대규모 조사·보급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그간의 전국민 체형변화 등을 조사하여 산·학·연에 최신 인체정보를 보급할 필요
 - * ('10) 6차조사→('15) 7차조사→('20) 8차 조사('20년~'21년)중
- 전국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자료*
 - * 최초승인년도 : 2005년, 승인번호 115019, 계속통계
 - 통계법 제7조 등

※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2010년)

- 한국인의 인체치수 133개 항목 조사(키, 앉은키, 가슴둘레 등)
 - 조사기간 : 2015.5~2015.10
 - 전국 5개 권역 : ①서울, ②경기·인천·강원, ③영남, ④호남, ⑤충청
 - 측정표본수 : 16~69세 남녀 6,413명(남 3,192명, 여 3,221명)
 - 조사결과 활용 : ①인체치수 활용 KS표준 제·개정, ②인간공학적 제품설계 기초자료, ③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체치수 자료제공 등
 - 용역기관 : 서울대 산학협력단, 동서울대 산학협력단, 대구예술대 산학협력단

<인체정보 보급사업>

- 사이즈코리아 센터 운영·관리 : 300백만원
 - 한국인 인체정보를 사이즈코리아센터 및 사이즈코리아 포털* 등을 통해 보급 활성화하여 산업계 지원
 - * 중소기업 인체치수 컨설팅 지원, 사이즈코리아 홍보·교육·세미나, 외국 인체정보 조사 및 정보교환, 인체측정 및 데이터 가공 제공, 측정장비 무상대여, 체험존 운영
 - 사이즈코리아센터 방문 : ('14)74건 → ('16)10건 → ('18)518건

- 운영인력 등 인건비 : 4명×9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운영경비 : 사이즈코리아센터포털 및 전산장비유지관리비(80백만원), 컨설팅비(30백만원), 회의비(30백만원), 소모품비(10백만원), 장비대여비(6백만원)=156백만원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485백만원

-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3D 인체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개발인건비 : 6명×7개월×4백만원=168백만원
- 개발경비 : 스캐닝존 구축120백만원(3D스캐너구입20, 운영환경·분석서비스 등 100), 체험존구축95백만원(운영환경·체험기기40, 헬스케어·패션 등55), 서비스용 클라우드82백만원, 홍보·회의비20백만원=317백만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시간 개인 인체정보측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주문생산, 상품 추천 등)를 제공하는 산업별 비즈니스체계* 구축 필요

◆ 두상, 발의 인체정보활용 맞춤형 비즈니스 구축 : 가발, 신발

- 개발내용 : 고객맞춤형 주문제작 서비스 모델
 - 3D측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개인데이터생성, 가상서비스 연계
 - 주문 제작을 위한 치수 데이터 생성, 제조 연계(시범 운영) 추천(스타일, 사양 등)
 - H/W(스캐너, 노트북 등), S/W(데이터관리, I/F)
 - 3차원 입체형상의 표준 데이터 플랫폼 개발 : 추천시스템 연동
- 개발형식 : 가발·신발 제조사, S/W전문사

◆ 부처협업사업

- (국방부 협업) 국방부 신병검사에 적용하여 맞춤형 군수품 지급에 활용
- (복지부 협업) 국민 정기검진시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인체데이터 수집

(단위: 백만원)

구 분	'20예산	'21요구	증감	주요 변동내역
총 계	2,039	1,832	△207	
① 인체치수측정사업	1,234	1,047	△187	
① 인체치수 측정사업	1,234	1,047	△187	○ 제8차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2개년('20~'21)에 걸쳐 조사
② 인체정보보급사업	300	300	-	
① 인체정보보급·확산	300	300	-	
③ 인간빅데이터구축	505	485	△20	
① 휴먼빅데이터구축	505	485	△20	○ 휴먼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 위해 예산 지속배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20년, 12.8기준)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4950	5700	8,500	8,600	8,6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5677	8,411	6,826	7,193	-			
	달성도	114%	147%	80%	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고령자(377명) 동적측정 사업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몸체분야, 기능성 배개, 안마기) 개발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앱 개발
2018	·초고령사회(2026년) 대비 고령자 인체근력 80개 항목 측정(406명)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손, 퍼스널모빌리티, 욕실공간) ·디지털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11종-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결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배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전시회 및 포럼개최 (국회의원회관, '18.10.29~30, 국회 정성호·박장김태년 의원 등 관람객 약500명 참석)
2019	·인간중심 시각 제품설계를 위해 '한국인 시각기능 측정 조사' 개발·보급 ·2020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전국민 체형조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완료(2010년 6차조사 → 2015년 7차조사 → 2020년 8차 조사) ·인체정보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다리대상 제품) ·실시간 개인 인체정보측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시범전시 운영(가발, 안경, 장갑 등, '19.11.29)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시연(분당서울대병원)
2020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2개년에 걸쳐 조사중 * (20년) 20세~44세, 3200명 ('21년) 45세~69세, 3200명 ·휴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가발 및 공군 신병 인체데이터 수집을 위한 SW 구축 중이며, 공군과 휴먼빅데이터 MOU체결('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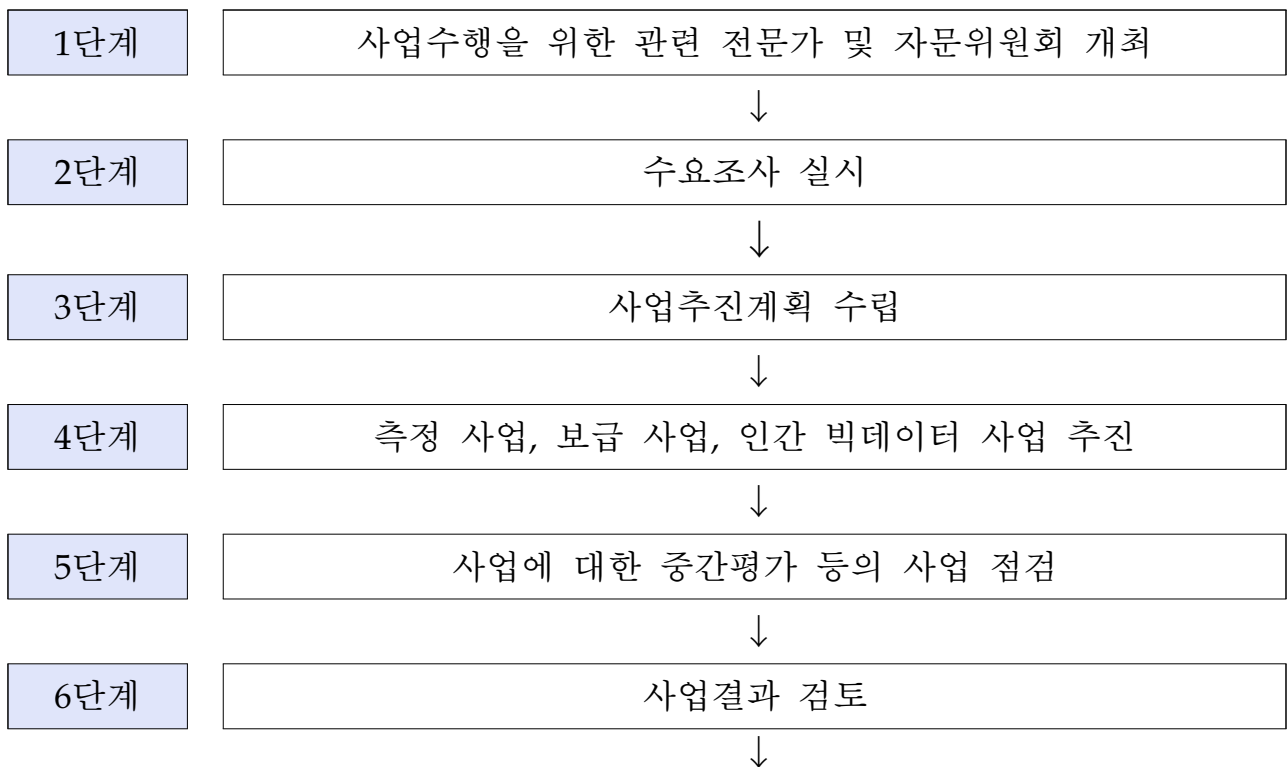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한국인 인체측정정보를 KS표준 제·개정에 이용하여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 3D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각종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산업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7단계	측정결과 통계분석 및 DB구축 작업 실시
↓	
8단계	측정결과 발표 및 보급 사업 지속 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544	2,039	1,832	1,868	1,868	
20~ 24		2,039	2,344	2,344	2,344	2,3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측정사업

-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2020년 5년 주기 제8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을 2개년에 걸쳐 대규모 조사(6,400여명, 측정항목 307개)*하여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
-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보급사업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휴먼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84.6)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에 한국인 인체치수를 보급·활성화하여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 설계, 공간설계에 공헌
--------------------------	---

13) 부처 건의사항

- 휴먼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010	1,010	-	-	-	-	1,010	1,003	99.3	99.3	-	7
2018	889	889	-	-	-	-	889	873	98.2	98.2	-	16
2019	1,544	1,544	-	-	-	-	1,544	1,504	97.4	97.4	-	40
2020	2,039	2,039	-	-	-	-	2,039	1,320	64.7	64.7	-	-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20년은 6월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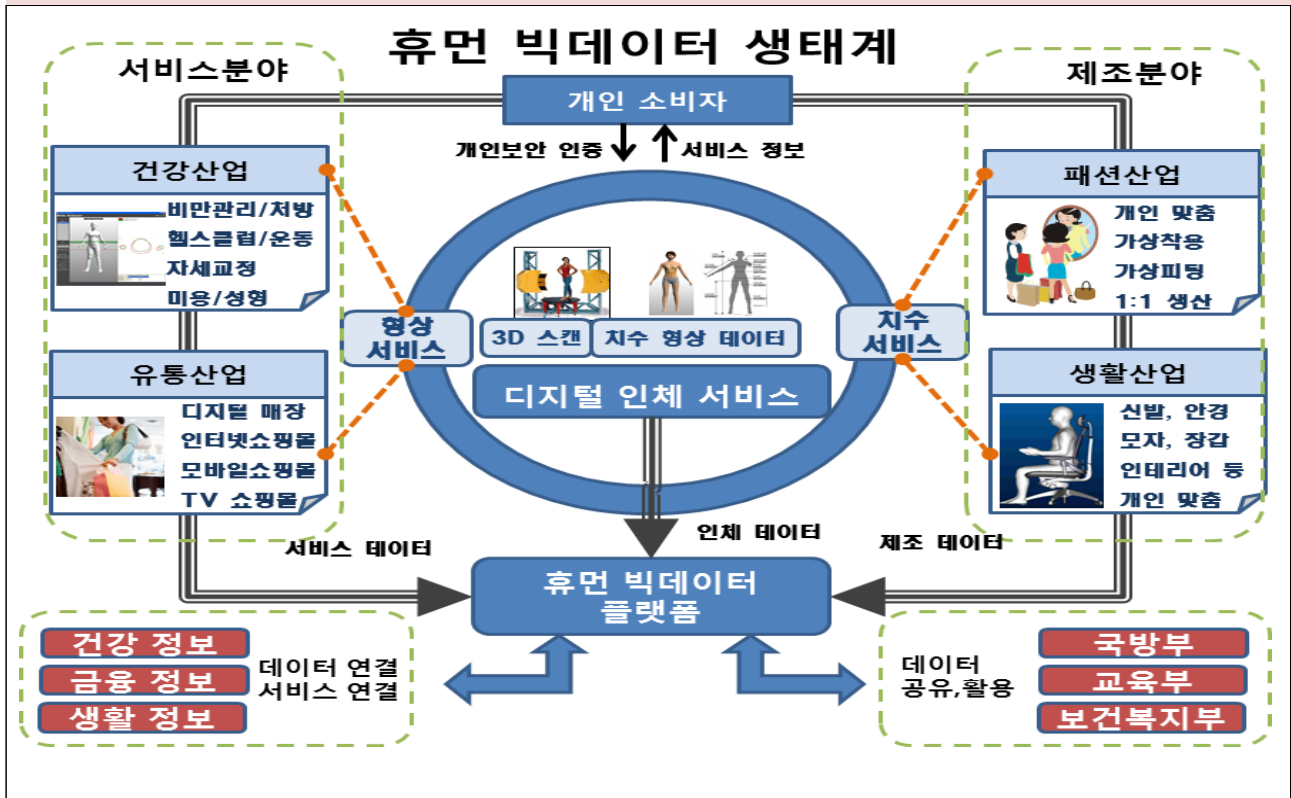
2017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20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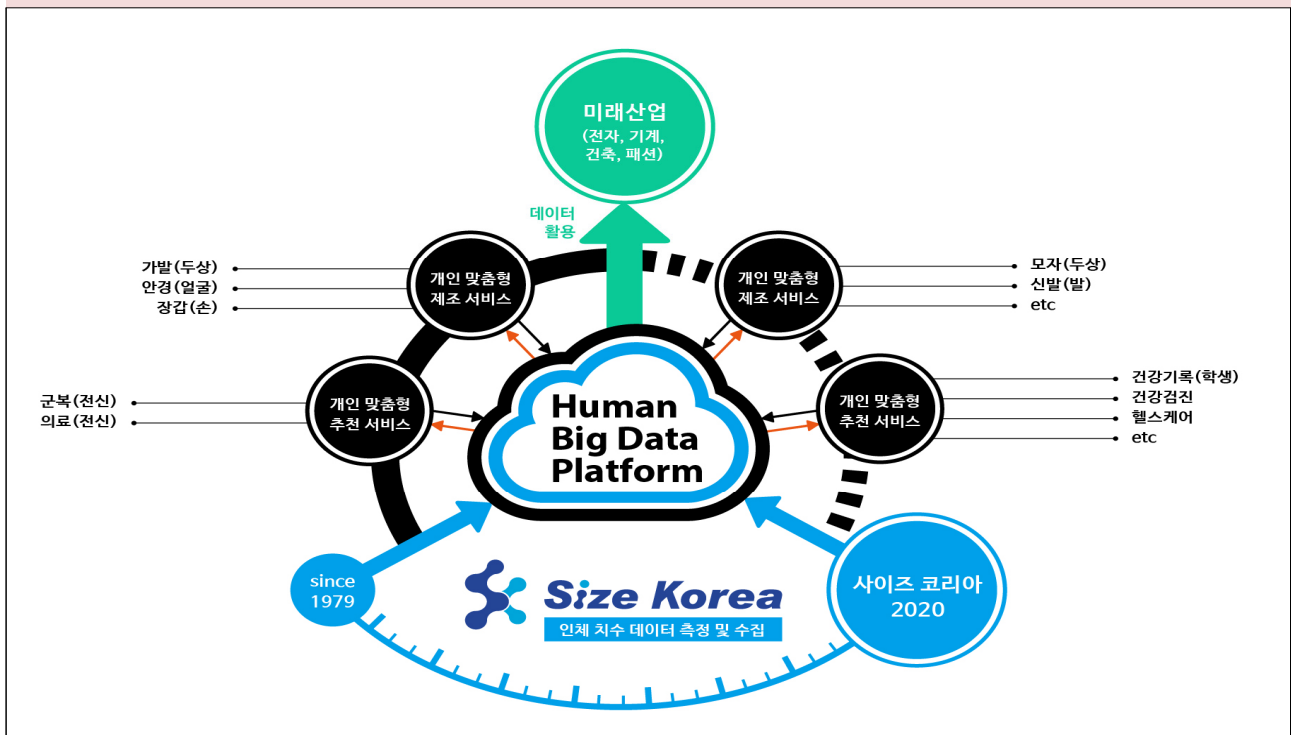
참고 1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개념도

① 휴먼빅데이터 생태계 개념



② 한국인인체치수보급사업 현황



참고 2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현황

- ('79~'02년) '79년 정부주도로 "제1차 국민체위조사" 명칭으로 시작하여 5~6년 주기로 7차례 실시
 - * 측정데이터는 의류 · 신발 · 책상 · 의자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활용
- ('03~'09년) '03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으로 명칭 변경하여 제5차 사업 실시
 - * 국가승인통계자료 : 통계법 제7조 등 '05년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115019)
 - * 직접치수측정 이외 3차원 인체형상측정 등 과학적 측정기법 도입
 -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인체치수 및 3D인체형상 DB 구축
- ('10~'15년) 제6차(2010년) 및 제7차(2015년)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과 계층별 3D인체형상 및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실시
- ('16년~) 장애인에 대한 동적 범위측정하여 장애인 제품 및 시설설계 등 활용과 보행측정을 통한 패턴 분석으로 동일인 검증에 활용

사업연도	표본수	연령층	측정항목
제1차 (1979)	16,000명	0-50세	117개
제2차 (1986)	21,000명	6-51세	80개
제3차 (1992)	9,000명	6-50세	84개
제4차 (1997)	13,000명	0-70세	120개
제5차 (2003)	14,200명	0-70세	125개
제6차 (2010)	14,016명	7-69세	139개
제7차 (2015)	6,413명	16-69세	133개
제8차 (2020)	6,376명	20-69세	307개

- * 계층별(5개) 3D인체형상 측정 및 표준형상 제작보급 : 성인(20~39세: '11년), 어린이(7-13세: '12년), 중장년층(40~69세: '13년), 청소년(14~19세: '14년), 고령자(69-85세: '15년)

<의료절감효과> 인체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국민의 근골격계 질환 진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1,525억원(4,550,890백만원×0.67×0.05) 추정 [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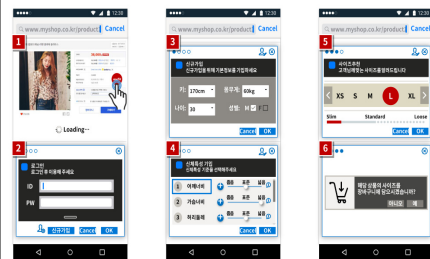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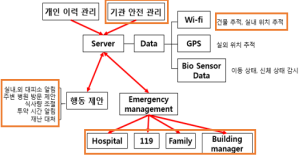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지출규모(2011) : 4,550,890백만원
- 인간공학적 설계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미국의 작업안전위생국 자료(OSHA)] : 67%
- 인체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관련전문가 추정치) : 5%

<산업적 효과> 인체치수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할 경우[2011년 (주)날리지웍스]

- 생산유발효과 : 158.3억, 부가가치 창출 : 108.7억원, 고용창출 : 36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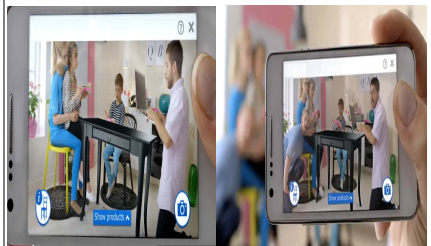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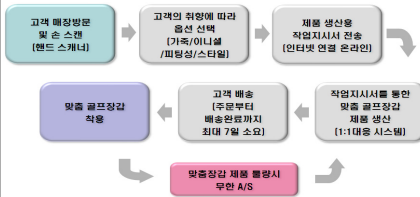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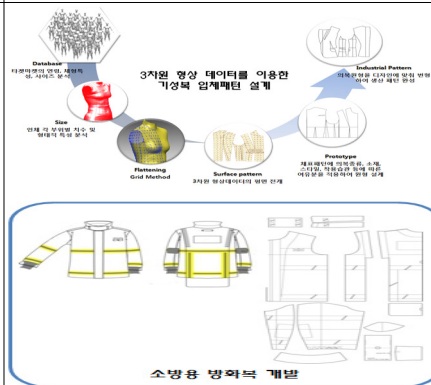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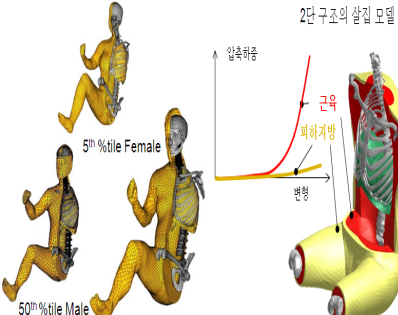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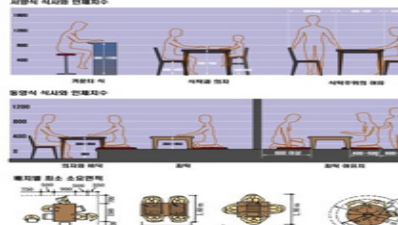
한국인 인체치수데이터의 사업화 등의 활용사례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한국형 수동식 인공호흡기 개발	한국인 인체치수(안면부, 손과 손가락 치수)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수동식 인공 호흡기 개발	
한국인 체형 자전거	국민 자전거를 지향하는 뉴패러다임 자전거(한국인 체형과 색채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코디앱 개발	개인 맞춤형 뷰티 코디네이터(인체치수 체형을 고려한 운동 추천, 맞춤형 코디)	
인체치수 기반 의류사이즈 코디	my Fit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한 의류 사이즈 추천 솔루션)	
인체치수 기반 체형관리	Shape Trainer(인체치수 분포도를 고려한 운동 목표 제안 및 관리 솔루션)	
인체치수 기반 헬스케어	1:1 Health Mate(인체치수를 고려한 운동 파트너 매칭을 통한 건강관리)	
인체치수 매칭 위험상황 알림	e-call 웨어러블 시스템 및 서비스(인체치수 분포, 웨어러블 기기와 위치 연계를 통한 위험상황 알림)	<p>-세부 시스템 구조</p>  <p>기관 안전관리: 국가적 자원의 전쟁, 재난, 재해, 질병 정보 전파 목적 위치정보: 공공 WiFi, 건물 별 발달 WiFi 들의 IP주소 관리로부터 사용자 위치 예측 행동 제한: 사용자 주변 병원,派出所, 안내, 길 찾기, 개인 이력으로부터의 스케줄링 응급 상황 대비: 병원, 119, 경찰, 건물 관리자, 응급출동 서비스사 등에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요청</p>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냉장고 활용사례	사용자들(어린이, 성인, 노인 등)의 근력을 고려하여 “이지도어”기능을 적용하고, 눈높이에 맞게 수납공간 배치	
자동차 운전자 팔의 이동범위 활용사례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위치를 선정하고, 최적의 조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드 리치 존(Hand Reach Zone)을 고려하여 스위치 설계	
세탁기 인체치수 활용사례	주부들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높이 설계	
휴대폰 손가락의 범위 활용사례	엄지손가락의 구조적 치수와 기능적 치수(3차원 동작범위)를 고려하여 한손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아이폰 UI 설계	<p>엄지손가락 도달 범위 비교</p> 
국민근로 복지공단 고령자제품 치수적용	<p>국민건강보험 복지용품 설계 및 제조 시 요구 인체측정항목</p> <p>- (적용품목) 자세변환용구, 침대, 휠체어, 간이변기, 배회감지기, 대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p> <p>*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발 인체측정자료 사용 복지용품 설계 활용사례</p>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자동배변기 치수적용	자동배변기 제조에 요구되는 인체 치수 항목을 제시하여 설계에 활용	
안경 개발	안경분야는 한국인인체치수를 적용한 청소년용 안경 2종 개발 및 출시 [* 2015년 11월 출시 후 6개월 간 약 1억원 매출(약1만개 판매)]	
스마트 글라스 시제품 개발	스마트글라스의 경우 한국인 인체 치수를 이용한 인체공학적 실험을 통한 적정 무게 도출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 디자인 개발하여 제품 출시 * 스마트글라스 제품출시(CHEMI-ON)	
가구전문 업체의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예측하는 시스템	가상공간을 이용한 가구제품과 인체형상과의 조화 등에 대한 예측 시스템 활용	
손스캔을 이용한 맞춤형 장갑제작	맞춤형 장갑 제작을 위한 인체 측정·제작·배송의 일원화 시스템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기성복 입체패턴 설계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평면전개하여 2차원적 체표패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인체를 분석.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의복 패턴에 적용하여 동작시의 인체 변화를 반영한 의복 패턴 설계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의류용 더미 개발	3D 인체형상을 이용한 의류용 더미 개발	 <p>3D 인체형상 data</p> <p>의복생산물 더미 개발</p> <p>한국인 표준인체형상 데이터(2010년)</p> <p>한국인 20대 남·여 신체측량 데이터(2010년)</p> <p>의복생산물 더미 개발을 위한 3D 인체형상 데이터 활용</p> <p>의복생산물 더미 개발을 위한 3D 인체형상 데이터 활용</p> <p>의복생산물 더미 개발을 위한 3D 인체형상 데이터 활용</p>
인터넷 쇼핑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터넷 매장을 활용한 쇼핑사례 (모바일 폰으로 자신의 디지털아바타가 인터넷, 잡비 등의 의류등을 착용하여 구매)	
디지털 인체 모델을 활용한 시트 컴포트 적용	자동차 시트에 착좌 시 발생하는 기계적인응력 변형 등을 분석/피부, 피하지방, 골격근 등을 상세하게 모델링하여 높은 정밀도의 체압 분포 해석이 가능	 <p>2단 구조의 살집 모델</p> <p>입축하중</p> <p>근육</p> <p>피하지방</p> <p>변형</p> <p>50th %tile Male</p> <p>95th %tile Male</p>
동작특성을 반영한 건축설계	동작 특성을 반영한 생활공간의 효율적 구성 및 편의성 향상 가능 ※ 특히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시설에 필요	 <p>인체 치수</p> <p>생활공간</p>
인체치수를 활용한 가구설계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가구 설계	 <p>인체 치수</p> <p>가구 설계</p>

참고 4

외국 및 민간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GERMANY(독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SizeGERMANY - Die deutsche Reihenmessung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7.1.~2008.10.31. / 독일 전역(North Germany, South Germany, New Federal) / 12,331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GERMANY에서 결과물 관리(iSize 포털에서 제공) - 인체측정치 전체 자료 구매를 위해서는 15,600€가 소요되며, 3차원 형상 열람을 위해서는 3,200€가 추가 소요 - 보고서(SizeGERMANY, Human Solutions, Hohenstein Institute)는 라이선스 계약 후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음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ESAR project(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project(CAESAR)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998.4.~2000.9. / Ames(IA), Atlanta(GA), Ottawa(Ontario, 캐나다) 등 12개 도시 / 2,375명 - (네덜란드) 1999.여름~2000.9. / Soesterberg 등 1개 도시 / 1,255명 - (이탈리아) 2001.2.~2001.9. / Genova 등 1개 도시 / 796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ESAR 결과물의 독점판매권은 Shape Analysis Ltd에 있음 - '미국 측정치 및 3차원 영상'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 및 3차원 영상'에 대한 구입비용은 각각 10,000USD이며, 3차원 형상을 제외한 인체측정치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정치'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가 각각 3,500USD임 - SAE(미국자동차공학회) 사이트에서 보고서 제공(http://books.sae.org/r-017cd/)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JPN(일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人間特性基盤整備事業(인간특성기반정비사업, Size-JPN2004-06)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0.~2006.10. / 도쿄, 오사카, 고베, 모리구치 / 6,707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생활공학연구센터(HQL) 웹사이트에서 결과물 관리 및 판매 (https://www.hql.jp/database/size2004-purchase/) - 전체 자료를 묶은 세트는 판매하지 않으며, 측정 항목별 및 분석 항목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됨(2D : 200~20,000엔, 3D :

	<p>10,000~60,000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게는 결과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과의 결과물 교환은 가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미성년인체측정사업, 중국성인인체치수에대한예비조사, 제2차중국성인인체치수조사항목(중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중국미성년인체측정사업, 중국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중국성인인체치수조사항목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미성년인체측정사업) 2006년~2007년 / 중국 전역 (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19,829명 - (중국성인인체치수에대한예비조사) 2009년 / 시안, 톈진, 상하이, 북경 / 3,100명 - (제2차중국성인인체치수조사항목) 2014.12.1.~2018.1.30.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약 24,000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수행기관인 CNIS(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에서 결과물을 관리 - '중국미성년인체측정사업'의 결과는 GB/T 26158-2010(Human dimensions of Chinese minors)에 공개 - '제2차중국성인인체치수조사항목'은 성인 치수와 관련된 5~8개 중국국가표준을 개정할 예정

사 업 명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이재만	조춘강 연구관	김선규 주무관
		043-870-5490	043-870-5478	043-870-547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2538.42	3,088	3,088	4,134	4,134	1,046	3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51	2,551	2,538.42 [2538.42]	-	12.58	3,088	3,088	3,088	2951.92 [2951.92]	49	87.08	4,134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02	802	790.04 [790.04]	-	11.96	762	762	762	762 [762]	-	-	762	
· 국제동등성유지, 국제 상호인정기반구축	542	542	549.22 [549.22]	-	0.58	792	792	792	676.22 [676.22]	49	66.78	884.4	
·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534	534	526.16 [526.16]	-	0.04	397	397	397	397 [397]	-	-	585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673	673	673 [673]	-	-	1,137	1,137	1,137	1,116.7 [1,116.7]	-	20.3	1,902.6	
○ 비목별 분류(합계)	2,551	2,551	2,538.42 [2538.42]	-	12.58	3,088	3,088	3,088	2951.92 [2951.92]	49	87.08	4,134	
· 일반수용비(210-01)	193	193	202.52 [202.52]	-	0.48	326.9	326.9	326.9	277.9 [277.9]	49	-	327	
· 임차료(210-07)	20	20	10 [10]	-	-	42	42	42	6.22 [6.22]	-	35.78	42	
· 재료비(210-11)	15	15	15 [15]	-	-	14	14	14	14 [14]	-	-	14	
· 국내여비(220-01)	8	8	7.96 [7.96]	-	0.04	8	8	8	8 [8]	-	-	7.6	
· 국외여비(220-02)	38	38	37.9 [37.9]	-	0.1	79	79	79	48 [48]	-	31	71	
· 사업추진비(240-01)	16	16	15.96 [15.96]	-	0.04	14.1	14.1	14.1	14.1 [14.1]	-	-	12.5	
· 일반연구비(260-01)	1,193	1,193	1,181.08 [1,181.08]	-	11.92	1,091	1,091	1,091	1070.7 [1,070.7]	-	20.3	1,193	
· 민간경상보조(320-01)	418	418	418 [418]	-	-	397	397	397	397 [397]	-	-	585	
· 사업출연금(350-02)	650	650	650 [650]	-	-	1,116	1,116	1,116	1,116 [1,116]	-	-	1,787	
·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360-06)	-	-	-	-	-	-	-	-	-	-	-	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국내 공인기관(시험, 교정 및 메디컬시험 기관)의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시험측정능력 확보를 위해 기관의 시험 측정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숙련도 시험) : 시험기관 간 비교로 시험기관 참가자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국제 동등성 유지·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

** 국제상호인정협정(MRA)유지를 위해 지역기구로부터 4년 주기로 국제 동등성 평가 실시

-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 국가인정체계 지원 및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신산업 시험인증분야 발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험 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4년 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 획득
 - '94년 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축.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 수행
 - '97.0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위탁(한국인정원, KAB)
 - '00.0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0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완전 이양(한국인정원)
 - '02.0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0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0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0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0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0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의 “인증현황보고” 제도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 고시
 - '10.04. : 국민권익위원회,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권고
 - '12.05.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0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 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0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0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 : '14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및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자동차/철도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기업지원 서비스, ②무선충전 시험인증 서비스 등
 - '15. : '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및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스마트 에코 빌딩 구현을 위한 건축용 고성능 단열재 시험인증 서비스, ②철도부품 중소기업의 신뢰성 지원 서비스 등
 - '16 : '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및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웨어러블 스마트 밴드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인증서비스, ②전자상거래(O2O)기반 포장 화물의 안전운송 시험인증서비스 등

- '17. : '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및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산업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 수립 및 기업 컨설팅, ②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인체 유해성 및 성능 평가 서비스 등
- '18. : '18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 ①모바일 무선충전 제품의 효율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구축, ②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③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등
- '19. : '19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 ①석면 안정화제 성능 표준 마련 및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②해상안전통신기기 융복합 시험인증, ③ 직류 전압 500v이하 직류 전류 1 600 A 이하의 대전력을 위한 전력량계 시험방법 개발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 수행), (재)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계량측정협회(민간경상보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금) 등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KAS(제품인증제도), ISO 인증 활용기업·소비자·정부·공공기관·연구소 등 제품성적서·기업인증서를 활용, 수출하는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인정지원센터 / 한국계량측정협회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0) 762→ ('21요구) 762백만원, +0.0%
- (요구) 시험·교정기관의 시험능력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예산 유지
 - (산출) '20년과 동일
- ② 국제동등성유지·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20) 792→ ('21요구) 884.8백만원, +11.7%
- (요구) '20년 진행중인 동등성 평가의 후속조치*, '22년 제품분야 국제평가 수검 준비 및 신규 MRA 추가 등을 위한 예산 요구, '20년 대비 12.9% 증액 요구
 - * (수검일정) 문서심사('20.5) → 현장평가('20.下) → 평가보고서 수령('20.下) → 시정조치(~'20.12) → 국제기구 review(~'21.上) → 회원국 투표 실시(~'21.上) → 자격유지 최종결정('21.6)
 - ** KOLAS 인정분야 6개 (시험, 교정, 메디컬, 숙련도, 검사, 표준물질생산기관) 분야 중 시험, 교정, 메디컬 분야만 MRA 협정이 체결 → 추가 확대 시급
 - (산출) 100백만원(일반연구비) = (30백만원)* x 2 + (20백만원)* x 2
 - * 국제동등성 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 ('20년) 12건 → ('21년) 16건
-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20) 397→ ('21요구) 585백만원, +47.4%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 (요구)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19.4월)으로 부정행위 조사 대상 기관이 ISO경영 체제인증기관(150개)에서 전체 시험인증기관(3,900개)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 '20년 대비 +167.9% 증액(112백만원 → 300백만원) 요구 및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기존 예산 유지(285백만원)
 - (산출) 300백만원 × 1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285백만원 × 1개(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20) 1,137→ ('21요구) 1,902.6백만원, +67.3%
- <유망 시험서비스 발굴 : ('20) 831→ ('21요구) 1,475백만원>
- (요구) 기존 과제 경쟁률(10.3:1),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강화 필요성 증대 등을 감안, '20년 대비 +77.5% 증액 요구
 - (산출) 156.2백만원 × 13개 과제
 - * 사업확대 : ('20년) 5개 과제 → ('21요구) 13개 과제
- <현황 파악 및 기초인력확보 : ('20) 285→ ('21요구) 312백만원>
- (요구)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의 품질 제고 등을 감안, '20년 대비 +9.5% 증액 요구
 - (산출) 6.24백만원 × 50명
-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 ('20) - → ('21요구) 9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40	40	40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 /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 및 학술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3	43	47	-	-			
	달성도	107	107	118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95	78	79	79	79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기 관수)×100	·숙련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및 KOLAS 시스템 자료
	실적	76	87	80	-	-			
	달성도	80	111	101	-	-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메디컬분야(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운영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중 보존제(벤조산) 함량 시험 등 25건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메디컬분야(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운영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KAS 운영요령 문서 5종 개정('18.2월, 12월)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완료('18.5월)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준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단열재의 열전도율 숙련도시험 등 25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22건 운영 ·新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4회)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KOLAS) 2020년 APLAC-MR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 (KAS)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 및 시정조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추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슬라임의 유해화학물질 분석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4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위해우려제품 중 MIT/CMIT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21건 운영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APLAC-MRA,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 및 시정조치를 위한 KOLAS/K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 시작연도는 사업 특상에 맞추어 조정

※ 사업 실적은 계량적으로 기술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시험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 선정 및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안전, 단열재 및 안전 등의 분야에 시험측정 능력 확인을 위해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25건 추진
- 국제동등성평가 대응 및 신규 MRA 추가 검토
 - '20년 진행 중인 국제동등성평가의 후속조치*, '22년 제품분야 국제평가 수검준비 및 신규 MRA 체결**을 위한 검토 추진
 - * (수검일정) 문서심사('20.5) → 현장평가('20, 下) → 평가보고서 수령('20, 下) → 시정조치 (~'20.12) → 국제기구 review(~'21, 上) → 회원국 투표 실시('21, 上) → 자격유지 최종결정('21.6)
 - * KOLAS 인정분야 6개(시험, 교정, 메디컬, 숙련도, 검사, 표준물질생산기관) 분야 중 시험, 교정, 메디컬 분야만 MRA 협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추가 확대 시급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사범위 확대
 -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19.4.)으로 부정행위 조사 대상 기관이 ISO 경영체제인증 기관(150개)에서 전체 시험인증기관(3,900개)으로 확대
 - * ('20년) 150개 인증기관 → ('21년 요구) 3,900개 시험인증기관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강화 지원
 - 유망 시험서비스 지원 과제 경쟁률(10.3:1), 실태조사·기초인력양성 품질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시험인증서비스 지원 확대
 - * 유망 시험서비스 발굴 : (20년) 5개 과제 → (21년) 13개 과제
 - * 실태조사 : 조사문항 및 조사대상 확대
 - * 기초인력양성 : 교육과목 확대(교정, 측정 실습 추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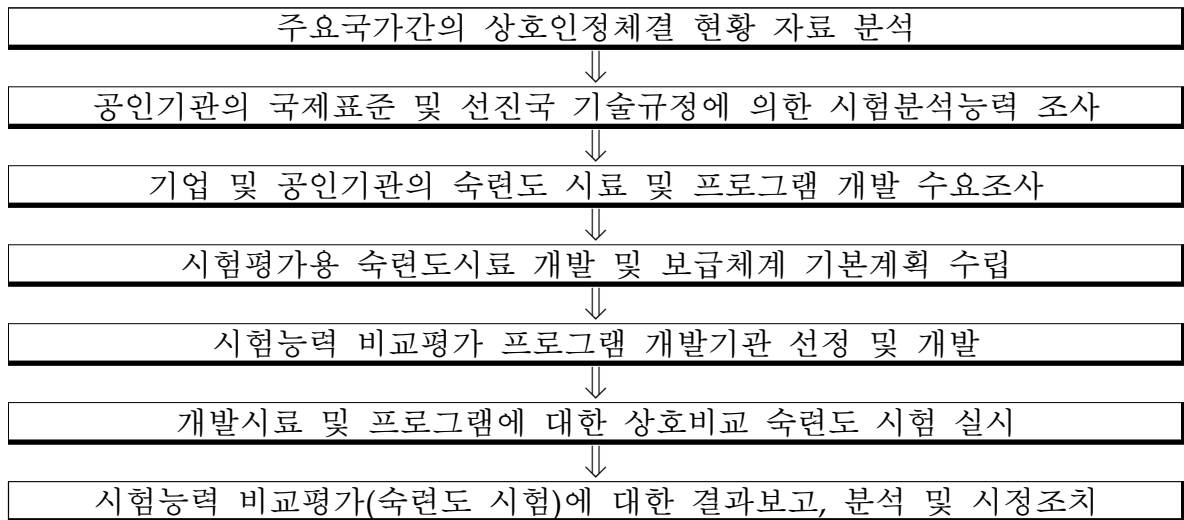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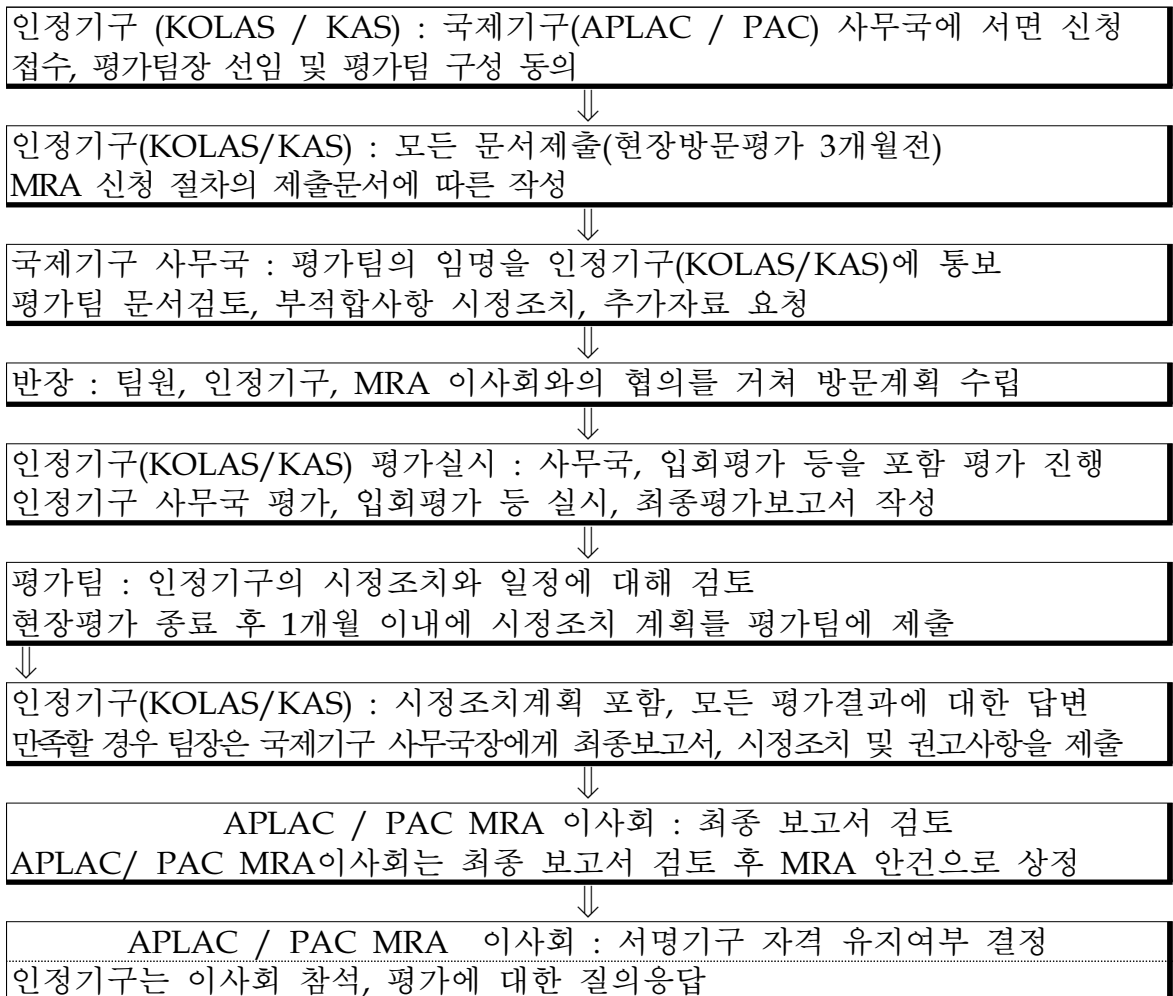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세스 >



< 국제동등성 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 : 국제동등성 평가수검(KOLAS, KAS)절차>



<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신고 등 시험인증기관의 부정행위 인지	- 시험인증기관 현황 등 조사
↓	
시험인증기관에 자료 요구	- 부정행위 관련 시험인증 자료 조사 - 시험인증기준 분석
↓	
현장 조사(시험인증기관)	-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소명자료 요청 및 확인 (시험인증기관)	- 조사 결과,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시험 인증기관에 소명 요청
↓	
부정행위 처분요청 (경찰, 인정기구)	-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조사 및 인정기구에 처분 요청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당해 연도 및 중기계획 등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일간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등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및 발표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551	3088	2990	2935	2906	
20~ 24		3088	4134	3442	3642	38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예결위 부대의견, '19.)

- (지적) 집체교육이 1회 실시되고, 그 교육기간이 길어 교육 효과성 의문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3) 자체평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예결위 부대의견, '19.)

- (조치) 집체교육 일부일정(자격획득과정)을 별도로 나누어 집체교육을 2회 실시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기구(ILAC)의 상호인정협정(MRA) 분야에 숙련도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영국, 독일 등 13개국(135개의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MRA 체결
- 향후,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시험분야의 MRA 체결을 위해 국내 운영 프로그램 확대 및 정교화 필요
- KOLAS 공인기관의 부실성적서 방지 등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특별사후관리 운영
- 최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KOLAS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글로벌 新수요 확대 및 글로벌 시험인증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시험인증 분야의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20.05.)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84.6)
- (결과 요약)
 - 외부지적에 대한 충실한조치 및 집행률 제고 노력 인정
 - 성과목표의 적극성 인정
 - 세계표준화기구 수상 실적이 인정되어 사업목표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둠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311	2,311	-	-	-	-	2,311	2,301	99.6	99.6	-	10
2018	2,309	2,309	-	-	-	-	2,309	2,302.4	99.7	99.7	-	6.6
2019	2,551	2,551	-	-	-	-	2,551	2,538.4	99.5	99.5	-	12.6
2020	3,088	3,088	-	-	-	-	3,088	2,951.92	95.6	95.6	49	87.08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 2020년은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8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9	1,068	1,068	1,068	1,068	-	1,068	1,068	-	-	100
2020. 12월기준	1,513	1,513	1,513	1,513	-	1,513	1,51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 집행잔액 10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8	- (불용) 집행잔액 6.6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9	- (불용) 집행잔액 12.6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20	- (불용) 집행잔액 87.08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 (이월) 집행잔액 49백만원(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동등성평가 통역비 및 운영비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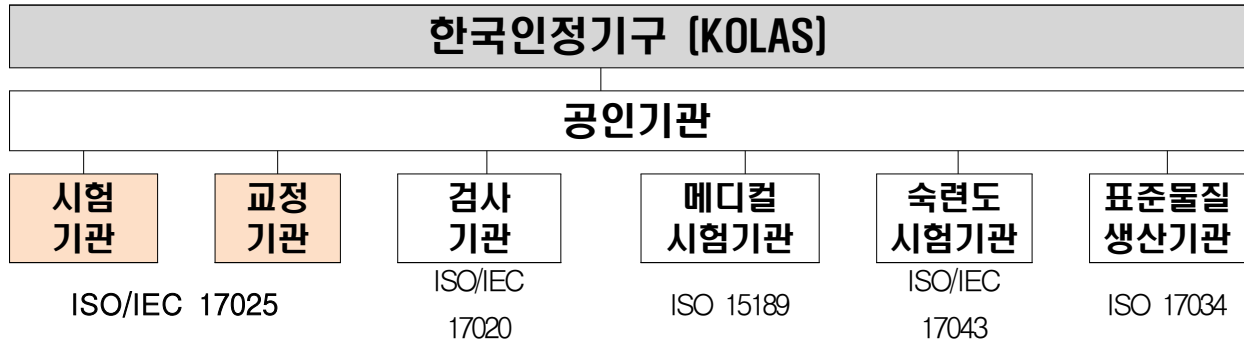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KOLAS 인정제도」 개요

- (한국인정기구, KOLAS) '92년 설립되어 약 900여개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96년부터 ILAC 內 한국 대표기관으로 활동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인정 대상에 따라 3개의 인정기구가 운영 중이며, 각 인정기구별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체결로 상호동등성 유지

◆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자격 유지

⇒ 우리나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재시험 없이 해외에서 인정 가능('18년 235만건)

- 한국인정기구(KOLAS) : 시험·교정·검사·숙련도시험 등 기관 인정
- 한국제품인정기구(KAS) :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품 인증기관 인정
- 한국인정지원센터(KAB) : 품질·환경 등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

구분	KOLAS	KAS	KAB
인정마크			
설립년도	'92.12월	'01.7월	'95.9월
인정대상	시험기관, 교정기관 등	제품인증기관	경영체제인증기관
수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수	870개 기관	19개 기관	QMS : 52개 / EMS : 46개
국제기구	ILAC/APLAC	IAF/PAC	IAF/PAC

*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제품인정기구,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 한국인정지원센터

붙임

對 브라질 가전 수출규제 대응 KOLAS 지원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기업(삼성, LG 등)의 냉장고를 브라질로 수출시 현지 시험소에서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만 수출 가능
 - *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 규정에 따라 브라질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INMETRO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허가
- 해외소재 시험기관의 경우, INMETRO의 현장평가 통과후 브라질 시험소와 MOU 체결한 기관만 해외에서 시험 대행 가능
 - 이 경우에도 ILAC MRA에 기반한 공인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에 국한
 - * KOLAS(시험)는 ILAC MRA 협정 체결을 통해 ILAC 가입국에서 성적서 호환 가능

□ 추진경과 (KTC 사례)

'16.8	KOLAS 공인 시험기관 자격 획득 * 냉장고의 안전(IEC 62552) 및 에너지효율(IEC 60335-2-24) 분야
'17.1	INMETRO/LABELO(현지 시험기관) 현장평가 수검
'17.7	브라질 현지 시험소(LABELO)와의 MOU 체결
'17.11	국내에서 브라질 수출을 위한 냉장고 안전/에너지 효율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

□ 파급효과

- KOLAS 지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수출 가능 → 수출준비 비용 및 시간부담 경감, 기술유출방지
 - * 수출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KTC 추산)

구분	브라질 현지 기관	국내기관(KTL 등)
시험성적서 비용	약 300만원 / 모델 + 샘플 운송비(500만 이상) 별도	약 450만원 / 모델
소요 시간	약 9개월	약 8주

※ 냉장고 수출액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단위: 천불)

구분	'16	'17	'18
냉장고·냉동고 (HS 8418)	10,887	11,681	8,441

참고 2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상세 설명자료

□ 사업목적

-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자격 유지

⇒ 우리나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재시험 없이 해외에서 인정 가능('18년 235만건)

-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운영중
- ▷ 지속적인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 국제동등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MRA 자격 유지 가능

□ 중액 예산

- '20년에 실시 예정인 KOLAS 국제동등성평가(시험, 교정, 메디컬) 시정조치 대응, 각국 인정기구와의 협력·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필요
- 아울러, '22년 KAS(제품) 국제동등성평가가 예정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국제기준 부합화 및 수검 준비를 위한 예산 필요

<'20년 KOLAS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일정>
문서심사(~'20.5) → 현장평가('20.下) → 평가보고서 수령('20.下) → 시정조치(~'20.12)
→ 국제기구 Review(~'21.上) → 회원국 투표 실시(~'21.上) → 자격유지 최종결정('21.6)

- MRA협정 체결 분야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및 회원국 협력과 해당 분야 국내 운영체계 정비 시급

* KOLAS 인정분야 6개중(시험, 교정, 메디컬, 숙련도, 검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시험, 교정, 메디컬 분야만 MRA협정이 체결 → 추가 확대 시급

□ 국제적인 인정체계 확보의 중요성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국내 수출제품이 별도의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시간·비용 절감, 기술유출예방 등)

(예시) 에어컨, 냉장고의 파나마 수출시 파나마 정부가 국제공인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 → KOLAS 성적서로 수출통관 → 수출기업 부담경감

참고 3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상세 설명자료

□ 사업목적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로, 신뢰성이 핵심요소
-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①소비자 피해, ②성능 및 안전 미확보 등 문제가 있어, 부정행위 조사 등을 통해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 사례 >

- ◇ 시험인증기관 A는 발전소용 목재펠릿에 대해 데이터 조작 등 허위 시험 실시('17.3)
- ◇ 2년간('17~'18년) 전국 지자체(229개)에 제출된 2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중 211건의 위·변조 사례 확인(행정안전부, '19.8월)

□ 증액 예산

-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금지 및 조사 등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관리법」이 제정('20.4)되어 시행('21.4) 예정임
- 이에 조사대상이 200여개 ISO 인증기관에서 3,900여개 시험·인증·검사·교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

□ 사업내용

- 허위 발급, 성적서 위변조 등 부정 성적서에 대한 신고 처리, 사실관계 확인, 현장 방문, 자료조사 및 성적서 검토 등 조사 실시
- 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조사결과 자문 등 실시

< 전문기관 업무 >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성적서 검토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참고 4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상세 설명자료

□ 사업목적

- 기업의 신수요 시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상용화 지원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조기 시장 진출 도모

□ 중액 예산

- (유망 신산업 지원) 수요기업은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국내 시험기업을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한계
 - * (국내 K社 사례) 대형공기청정설비 시장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능 검증을 위한 국내 시험설비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놓침
- 시험서비스 산업은 제품출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기업수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

	그간 지원분야 ('14~'19)	향후 개발분야 ('20~'23)
건수	총 14개	총 40개
주요 분야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스마트 에코빌딩  모바일 무선충전	 전기차충전기 상호운용성  소형 드론 배터리 수명시험  무선청소기 성능시험

※ (해외업체) AI, 미래차 등 신성장 분야의 고부가가치 시험 인증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기관당 매년 1,500억이상 집중 투자

회사명	SGS Group (스위스)	Bureau Veritas SA (프랑스)	Intertek Group PLC (영국)	DEKRA SE (독일)	TUV SUD Group (독일)
신규 서비스	AI/빅데이터 미래차/스마트가전	스마트홈/사이버보안 미래차/바이오	스마트홈사이버보안 미래차/스마트가전	로봇/항공우주 VR/AR/클라우드	로봇/항공우주 에너지/바이오

- **(경쟁률 증가)** 최근 자유공모로 진행된 사업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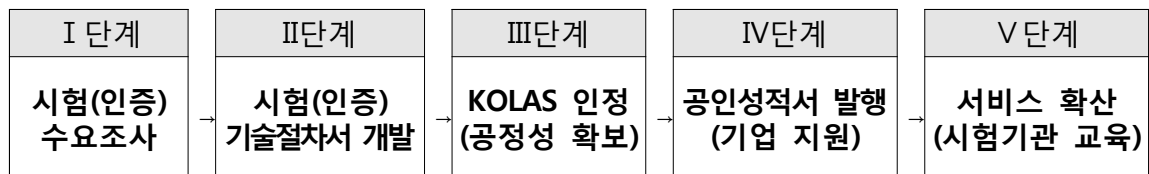
구분	공모 과제 수	지원기관 수	경쟁률
2018년	3	31	10.3:1
2019년	3	31	10.3:1

* 2020년의 경우 품목지정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수요조사에 35건 접수

- **(사업변경)** 기존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험서비스 개발 이외에 개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필요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개념도 >

- **(사업개요)** 신수요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시험기준·방법개발, KOLAS 인정획득, 공인성적서 발행 서비스, 유관기관 확산 등을 지원



□ 기대효과

- **(산업발전)** 新제품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고 제품 시험 평가후 성적서를 발행, 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와 유통을 촉진

- **(수출증대)** 국가간 상호인정으로 자국의 공인시험업체가 발행한 성적서를 상대국에서 수용, 수출관련 비용·시간 대폭 단축

※ 국내 수출업체(약 1,500개)는 KOLAS 공인성적서 이용으로 발급 비용 73% 절감, 발급 기간은 80일 감축 효과 (해외 125.7일 → 국내 39.4일) 분석

- **(일자리창출)** 성장률 및 고용효과가 높은 신 서비스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최근 5년간 전 산업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음

※ 시험인증산업 종사자 : 49천명('14) → 82천명('18)(매년 8.3천명증가)

제조업종사자 : 3,857천명('14) → 4,106천명('18)(매년 62천명증가)

통신기기종사자 : 87천명('14) → 64천명('18)(매년 5.8천명감소)

참고 5

「시험인증 산업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확보」 상세 설명자료

□ 사업목적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기초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시장규모 등 시험인증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

□ 증액 예산

< 시험인증 인력 확보 >

- (인력지원) 최근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시험인증기관에서는 정부의 역할로 '인력양성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원함

< 시험인증산업과 관련한 정부 역할(중복응답) >

표본수	인력양성지원	시설 장비 고도화/개발지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선진 시험기법 개발 및 이전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3,928개	58.6%	41.6%	24.9%	15.7%	3.4%

- (교육강화) 고교 2~3학년생 대상으로 학기 중 (온라인)이론교육, 방학 중 실습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학기 중 교육에 어려움 발생
 - 또한, 시험검사 분야 실습교육 이외에 교정 및 측정 분야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 필요

* 동 사업은 '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마이스터고 졸업생 253명 취업 알선

< 시험인증 산업 실태조사 >

- (산업통계) 국내 시험인증산업 분야 유일한 정부 통계로서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 조사 필요
- (품질제고) 통계품질 제고(신뢰도 90%→95%)하기 위해 표본수 증대 필요

* (현재) 조사 모집단 39,000개중 900개 조사 (개선) 2,100개 조사 필요

사 업 명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1,045	1,024	1,024	922	922	△102	△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45	1,045	1,045 [1,045]	-	-	1,024	1,024	1,024	1,023 [1,023]	-	1	922
· 인증산업발전 포럼	7	7	7 [7]	-	-	7	7	7	0 [0]	-	-	0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59	51.5	51.5 [51.5]	-	-	40	40	40	47 [47]	-	-	17.3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7.5	27.5 [27.5]	-	-	20	20	20	19 [19]	-	1	20
· 1381인증표준정보센 터 운영·개선	959	959	959 [959]	-	-	957	957	957	957 [957]	-	-	884.7
○ 비목별 분류(합계)	1,045	1,045	1,045 [1,045]	-	-	1,024	1,024	1,024	1,023 [1,023]	-	1	922
· 일반수용비(210-01)	141	133.5	133.5 [133.5]	-	-	120	120	125	125 [125]	-	-	70.7
· 임차료(210-07)	5	5	5 [5]	-	-	5	5	0	0 [0]	-	-	0
· 국내여비(220-01)	4	4	4 [4]	-	-	4	4	7	7 [7]	-	-	3.8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3]	-	-	3	3	0	0 [0]	-	-	0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3.5
· 일반연구비(260-01)	20	27.5	27.5 [27.5]	-	-	20	20	20	19 [19]	-	1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57	857	857 [857]	-	-	857	857	857	857 [857]	-	-	8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렴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부처 13개 법령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7.3백만원
 - (주요내용)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 (산출근거)
 - 인증제도 실태조사 : 3.8백만원
(‘20) 국외여비 1식 x 3백만원 + 국내여비 2명 x 0.1백만원 x 20회
→ (‘21) 국내여비 2명 x 0.1백만원 x 19회
 - 인증제도 혁신 회의(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 13.5백만원
(‘20) 25명 x 0.03백만원 x 20회 → (‘21) 25명 x 0.03백만원 x 18회
 - KC마크 활성화 : 0백만원
(‘20) 1개매체 x 18백만원 → (‘21) 0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주요내용)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근거) (‘20) 1개과제 x 20백만원 → (‘21) 1개과제 x 20백만원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884.7백만원
 - (주요내용)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제품별·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
 - (산출근거)
 - 인건비 보조 : 680백만원
(‘20) 17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1) 17명 × (3.33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35백만원
(‘20) 180회 × 0.25백만원 → (‘21) 14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시스템 개선 등 : 94백만원
(‘20) 12개월 × 10백만원 → (‘21) 12개월 × 7.83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 5백만원
(‘20) 6회 × 2백만원 → (‘21) 5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70.7백만원
(‘20) 4식 × 25백만원 → (‘21) 3회 × 23.6백만원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20) 7 → (‘21) 0백만원
 - (‘20) 1식 × 234백만원 → (‘21) 1식 × 23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58,625	62,896	66,040	68,021	64,120	센터개소 이후의 실적추이를 감안 하여 목표치 산출 ('17년 전안법으로 인한 상담 폭등 제 외 시 꾸준히 상승)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인증표준정 보센터 통계
	실적	68,556	57,268	60,241	-	-			
	달성도	116.9	91	9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① 1381인증표준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브로셔 제작, 신문, 케이블TV, SRT열차 내 영상광고 등 ② 1381인증표준콜센터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원 보강(전문상담 인원 9인 ⇒ 11인) ③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인증 수요자 입장 고려한 인증 방안 검토 - 소비자 단체, 업종 조합, 인증기관 등 85명 참석
2018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웹포스터/라디오 광고/카드 뉴스 제작 - 라디오 광고, 유관기관 배너 광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상담 서비스 개통('18.11.) - 전문가 대면상담서비스 개시 및 전문가 상담 홍보('18.3.) ③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해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증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발전 방안 검토 - 자원순환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107명 참석
2019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홍보 애니메이션, 인터넷 배너, 포스터, 브로셔 제작 - 라디오 광고, 지하철 스크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서비스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19.6.) - 전문가 대면상담서비스 활성화,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확대 ③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해 공공구매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에 대한 제도 이해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자원순환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2020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라디오, 지하철, 포털사이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승강기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콜시스템과 1381 홈페이지 연동 및 통합으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전문가 대면상담 서비스 상담 분야 확대 및 활성화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와 국내 시장진입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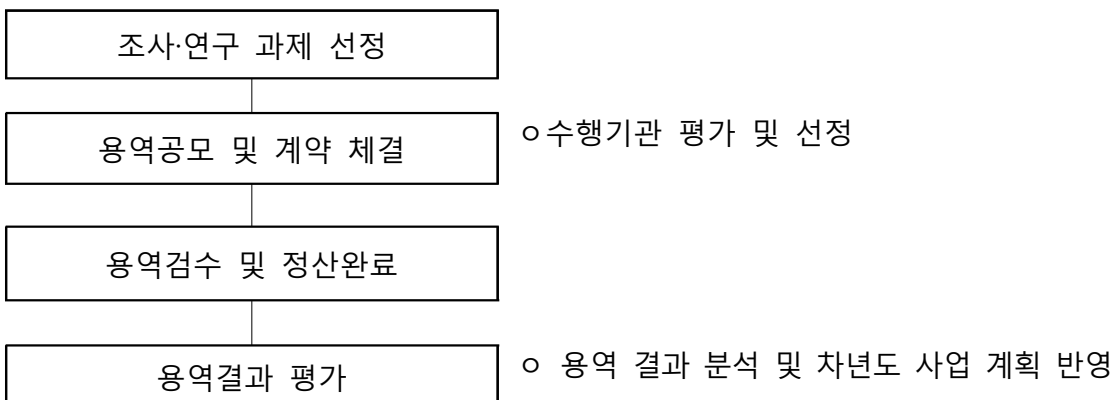
* '19년도 실적: 상담(전화·인터넷·전문가) 60,241건, 온라인 정보제공(페이지뷰) 102,874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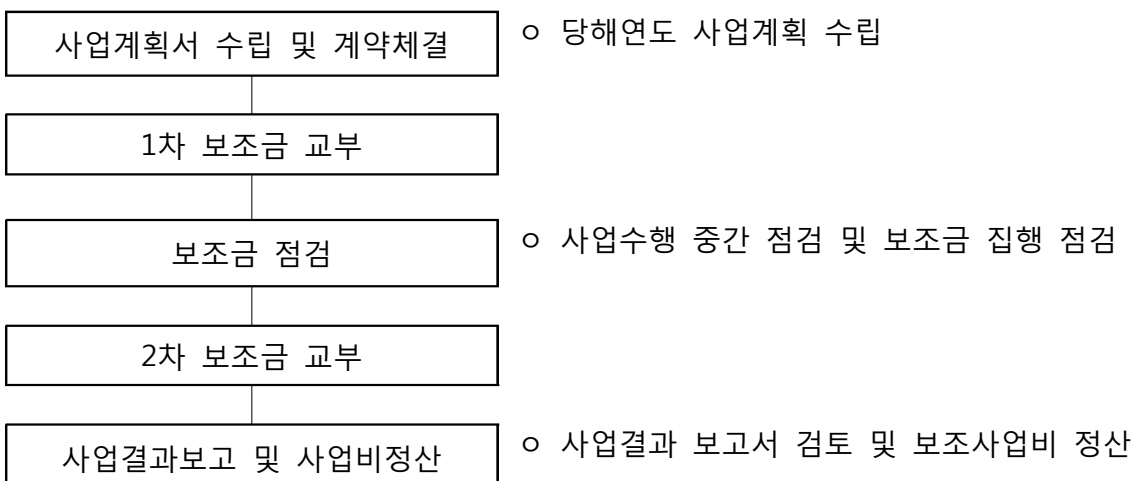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045	1,024	993	973	963	
20~ 24		1,024	1,075	1,128	1,184	1,2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업이 해외수출 및 시장출시 관련 인증표준 애로 발생시 1381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 기업 인지도 제고
 -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담 채널 및 온라인 정보제공 활성화
 - 인증 관련 복잡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층 상담
 - 콜백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이용 유도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19년)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84.6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 2) 보조사업 연장평가('18년)
 - (최종의견 및 점수) 지속수행 (사업방식변경, 10%감축)
 - (결과 요약)
 -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역사업의 다원화,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필요
 - (조치사항)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화상담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상담 및 온라인 정보제공 도입, 심층상담을 위하여 전문가 대면 상담 실시 등 서비스 고도화
 -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타겟 홍보 강화
 - 운영요령(산업부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등

12) 부처 전의사항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유일의 인증표준 관련 종합상담센터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외 인증 환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 * 중소기업의 41.7%가 인증 관련 정보탐색(품목, 종류,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음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 발표 (‘20.5.18., 중소기업중앙회))
- 국가별·분야별 상담원 확충 및 전문 교육 확대
 -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현재 17인(관리자, 1차 상담원, 2차 전문 상담원,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 국내인증 400여종, 해외인증 350여종에 대해 상담제공
- 전문가 심층 상담(협업기관 연계) 활성화
- 시스템 고도화(온라인 서비스 확대, 인프라 개선) 등 지속적인 예산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200	1,200	-	±10	-	-	1,200	1,198	99.8	99.8	-	2
2018	1,100	1,100	-	±7	-	-	1,100	1,100	100	100	-	-
2019	1,045	1,045	-	±7.5	-	-	1,045	1,045	100	100	-	-
2020	1,024	1,024	-	-	-	-	1,024	1,023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8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9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020. 12월기준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2018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2019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2020	- 불용 :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김종윤	-
		010-3897-9522	010-3405-822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174	1,103	1,103	1,400	1,400	297	26.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85	1,185	1,174 [1,174]		11	1,103	1,103	1,103	1084.7 [1084.7]		18.3	1,400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57	657	650 [650]		7	616.6	616.6	616.6	598.3 [598.3]			626.6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6	126	126 [126]		-	116	116	116	115.8 [115.8]			122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35	135	132 [132]		3	125	125	125	124.24 [124.24]			24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67	267	266 [266]		1	245.4	245.4	245.4	246.36 [246.36]			406.35
○ 비목별 분류(합계)	1,185	1,185	1,174 [1,174]		11	1,103	1,103	1,103	1084.7 [1084.7]		18.3	1,400
· 일반수용비(210-01)	114	114	108 [108]		-	17.4	17.4	17.4	13.5 [13.5]		-	27.1
· 임차료(210-07)	-	-	-		-	-	-	-	-	-	-	7.51
· 시험연구비(210-13)	223	223	229 [229]		-	213	213	213	217.86 [217.86]		-	375
· 일반용역비(210-14)	-	-	-		-	80	80	80	79.8 [79.8]		-	80
· 관리용역비(210-15)	80	80	77 [77]		3	80	80	80	79.24 [79.24]		-	200
· 국내여비(220-01)	20	20	19 [19]		1	15	15	15	15 [15]		-	14.25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7 [17]		2	19	19	19	4.3 [4.3]		14.7	17.1
·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	5.6	5.6	5.6	5.6 [5.6]		-	5.04
· 일반연구비(260-01)	90	90	85 [85]		5	90	90	90	86.4 [86.4]		3.6	120
· 민간경상보조(320-01)	633	633	633 [633]		-	583	583	583	583 [583]		-	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기 기술기준·지침 개발,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과 국제협력 등을 통한 법정계량제도 관리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2',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중 매체 모니터링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량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계량기 관련 정보(시험·검사·단속 등)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관리 계량기(13종)에 대한 사후관리(시판품 조사 및 사용 중 오차검사)과 정량표시상품(27종)에 대한 시장감독(내용량 및 단위 표시 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 6, 14, 41, 54, 57, 60, 61, 6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 사업규모 : '19년까지 기투입액(88.67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한국계량측정협회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계량측정협회	100	계량에관한법률 제65조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400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56.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조사 용역 (일반연구비) 	3.6건x25백만('20) →4건x30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 	280명x0.4백만('20) →260명x0.4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민간경상보조) 	37.5건x2.4백만('20) →37.5건x2.4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감시원 운영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71.5건x1.75백만('20) →161.7명x1.75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2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 (APLPMF) 등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17.1 6회x3.17백만('20) →5.4회x3.17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임차료) 	7.51 1회x7.51백만('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 	5.04 4회x0.15백만x10명('20) →3.36회x0.15백만x10명('21)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2
▪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 ² ',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90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SNS소통채널운영 및 공 모전 개최 등 (일반용역비)	5.3종x15백만('20) →6종x15백만('21)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32
-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계도 (민간경상보조)	30 20개사x1.5백만('20) →20개사x1.5백만('21)
- 언론사·소비자 등 협·단체 법정단위 확산 현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2 4회x0.15백만x10명('20) →1회x0.15백만x13명('21)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관리용역비)	200 1식x80백만('20) →1식x200백만('21)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민간경상보조)	45 9,000건x5천원('20) →9,000건x5천원('21)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406.35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279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279 33.2종x1.78백만x3개('20) →31종x3백만x3개('21)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1.1
- 전문가 수당 (일반수용비)	0.6 2명x0.15백만x1개기관x1일('21)
- 출장비 (국내여비)	0.5 2명x0.125백만x1개기관x1일('21)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30.25
- 전문가 수당 (일반수용비)	16.5 4개 권역x0.15백만x2.9명x10일('20) →4개 권역x0.15백만x3명x9.17일('21)
- 출장비 (국내여비)	13.75 4개 권역x0.125백만원x3명x10일('20) →4개 권역x0.125백만원x3명x9.17일('21)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96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96 600품목x5천원x3개+600품목x45천원 ('20) →1,600품목x5천원x3개+1,600품목x45 천원 ('2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이용건수(건)	목표	4,116	4,527	5,722	5,894	7,072	'20년 시스템 개선 이후 이용증가 예상, '20년목표(5,894건) 대비 120%으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이용건수 = 년 이용건수/365	계량정보 시스템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4,353	5,722	7,475	-	-			
	달성도	106%	126%	13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발 등 8개과제 수행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140%팬 증가, '16년 1,462명→'17년 3,523명) • SNS 광고 30회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오프라인 광고 2건(아파트미디어보드, 버스 등)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17종 85대)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13품목) • 계량기 실태조사(오차검사)실시 (전국 LPG미터 249건)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5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총 27회, 305명)
2018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충전기관 관련 제도 제·개정 추진(3건), 법정계량기 기술기준 개정(4건) 등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광고 39회(페이스북 23건, GDN 16건)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오프라인 광고 6건(버스 1건, 포스터 2건, 홍보물품 3건)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5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40건)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00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 실태조사(오차검사)실시 (전국 LPG미터 245건)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4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865명)
2019	<p>☐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명산출을 위한 가속수명시험 방법 및 기준개발 등 4과제 수행 <p>☐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페이스북 광고 42회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2회 개최, SNS 이벤트 2건 • 온/오프라인 광고 : 부동산 114 (노출수 2,327,270회, 유입수 1,782회)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78/74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수도미터 등 3개 품목 27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03개 제품) •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저울 등 573대)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4차 CIML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3회)
2020	<p>☐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터 제도화 실행방안 수립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20.3~11월) <p>☐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홍보 : 11건(공모전 안내, 카드뉴스 등) • 오프라인 광고 :2건(바른단위 ucc, 어린이 포스터)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72/74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온수미터, 가스미터 등 등 4개 품목 24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 27개 품목군 538개 제품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참석('20.2월)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교역 촉진

-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율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법정단위 사용률) : 77.4%('11)→82.9%('13)→85.7%('15)→85.6%('17)→ 87.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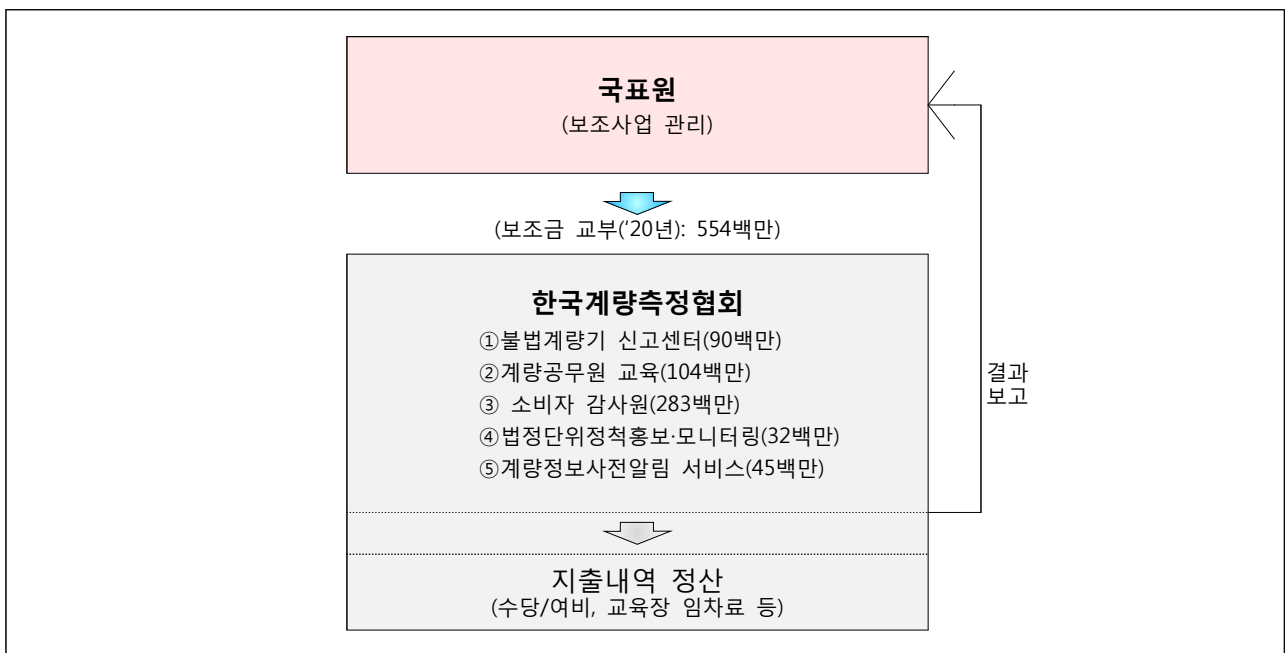
-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 (계량기 시판품 조사) : 1품목 10모델('18)→3품목 27모델('19)→4품목 24모델('20)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보조사업)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185	1,103	1,070	1,049	1,039	
20~ 24		1,103	1,158	1,216	1,277	1,34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18년 결산) 지적

- (지적) 법정단위 정착 모니터링·홍보 사업은 일반용역비(210-14) 비목을 통해 수행해야 함(일반수용비로 행사 용역 집행)
- (조치) '20예산에 일반용역비(210-14) 비목 신설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2016년 계량기 산업 실태조사 결과, 법정계량기를 사용한 거래규모는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며,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 * 비자동 저울 534.5조, 주유기 53.3조, 전력량계 55.6조, 가스미터 15.7조, LPG미터 4.7조 등

□ 계량체계의 디지털 전환 대응

- (추진내용) 계량법제도의 관리 범위 확대* 검토, 다양한 장치들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지침 마련 및 국제기준 대응 등 추진
- (관리 범위 검토) (현재)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시 오차(정확도) 관리 → (향후) 계량데이터 생성부터 교류·활용까지 데이터신뢰성(유효성) 관리
- (Top-down식 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를 분석 실시하여, 규제와 산업진흥 방향을 적극적으로 발굴
- (Bottom-up식 대응) 복잡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기술·산업 환경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력이 미흡하므로,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적시적소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 (국제시장 창출 기반 마련) 스마트미터링분야의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추진내용)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 계량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추진내용)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활용하여 240여개 시도공무원, 2,400여개 계량사업자 및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전환

* HW·SW 구매·유지 비용 절감, 데이터 입력·관리·활용의 용이성과 높은 데이터 접근성 등으로 향상된 업무효율이 가능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 (18년) : 지속지원(사업방식변경)

- (결과 요약) 74.1점, 보조사업으로서 다수의 내역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방식변경) ‘법정단위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내역사업 중 ‘저울 수입업자 사업장 방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감시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보다 명확한 내역사업 간 구분 추진
- (조치) ‘저울 수입업자 사업장 방문’사업은 ‘소비자감시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통합(19년)

13) 부처 건의사항

- 4차산업혁명 촉발로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 정확성과 함께 계량데이터의 유통·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관리를 위한 계량법제도 확대 및 지속적 지원 필요
- 신뢰성 있는 계량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민간 자율적인 계량품질관리 유도하고, 차세대 계량플랫폼에 대한 국제시장 선점 지원 필요

* 정확한 계량데이터의 공유·확산을 위한 신뢰성은 에너지전환의 기본요소

- 생활용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확대·강화 필요

* 계량기 시판품 조사는 연간 1,000여건의 형식승인 품목 중 3%미만으로 샘플조사되어 약 30%의 불합격율을 보이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332	1,332	29	-	-		1,361	1,345 (1,345)	101.0	98.8		16
2018	1,229	1,229		±13			1,229	1,221 (1,221)	99.3	99.3		8
2019	1,185	1,185		±6			1,185	1,174 (1,174)	99.1	99.1		11
2020	1,103	1,103		±5			1,085	1,085 (1,085)	98.4 (98.4)	98.4 (98.4)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619	619	619	619	-	619	619	-	-	100
2018	659	659	659	659	-	659	659	-	-	100
2019	633	633	633	633	-	633	633	-	-	100
2020. 12월기준	583	583	583	583		583	58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6백만원) - 전년('16) 이월 사유 : 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시스템 개발사업의 과업범위 확대 및 관세청 DB 연계강화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29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13백만원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 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8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요소수미터 실태조사)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6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0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5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 등→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잔액 및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8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①『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②계량정보시스템 개요 ③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참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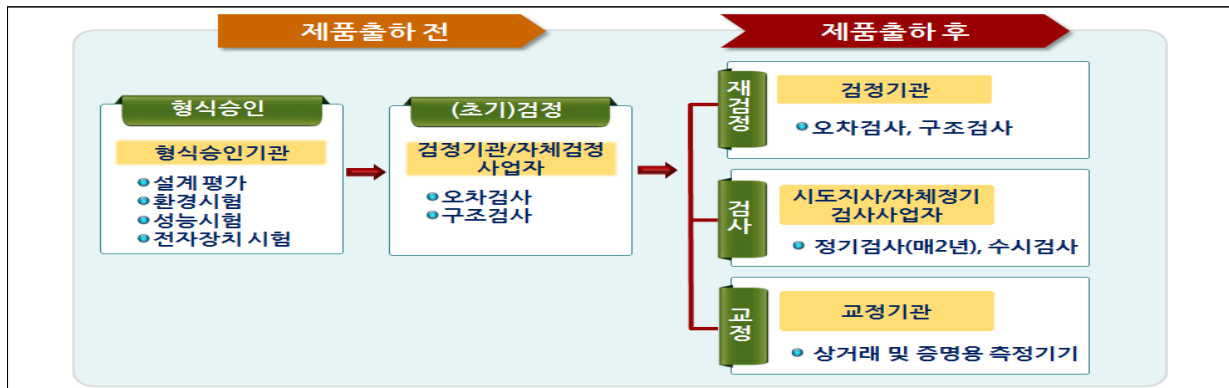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법정계량기 13종>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 법정계량기 현황

(’20.5.31.기준)

구 분	형식승인 (신규) (단위:건)			검정(제조,수입) (단위:대)		
	2018	2019	2020.5월	2018	2019	2020.5월
종 류						
판수동저울	0	0	0	620	851	154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0	0	0	154,717	149,932	37,217
전기식지시저울	63	74	7	296,833	292,773	74,430
분동	12	10	6	27,815	28,235	6,505
가스미터	71	141	52	2,929,196	2,744,844	729,578
수도미터	600	752	336	2,620,325	2,283,585	497,044
온수미터	35	50	26	466,676	372,340	102,158
오일미터	0	5	0	328	401	44
주유기	21	26	12	88,288	110,508	16,030
요소수미터	10	7	1	1,196	2,852	327
LPG미터	3	7	0	4,766	3,445	574
눈새김탱크	1	0	0	6,000	0	0
적산열량계	105	100	26	372,273	330,378	94,941
전력량계	268	137	27	3,185,777	1,594,562	223,959
전기차충전기	0	0	15	0	0	0
총 계	1,189	1,309	508	10,154,810	7,914,706	1,782,961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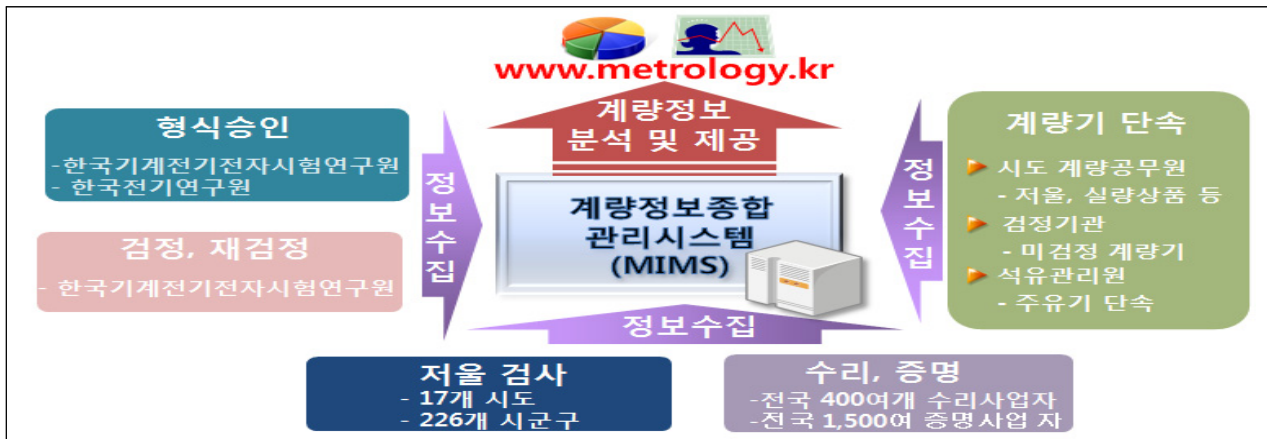
참고 2 계량정보시스템 개요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 “최초시험(형식승인) → 검정 → 정기검사(재검정) → 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하여, 계량정보 시스템(www.metrology.kr) 이용건수가 매년 17.5% 이상 증가

* 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 4,353건 ('17) → 5,722건 ('18) → 7,475건 ('19)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저울 2종을 우선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신규지정(관세청 고시, '15.7월) → 시스템 구축('16.9월~'17.2월) → 시험운영 후 시스템 개통('17.4월~)

* '18년 상반기 기준, 수입요건확인 56건, 수입요건확인 면제는 16건 처리

○ (사전알림)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림을 제공

참고 3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00) / (韓)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 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사 업 명						
(8)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표준정책국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전설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4,028	6,229	6,229	6,042	6,042	△187	△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54	4,054	4,028 [4,028]	-	26	6,229	6,229	6,229	6,199 [6,199]	-	30	6,042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70	1,088	1,063	-	25	1,015	1,015	1,147	1,145	-	2	1,117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594	1,594	1,594	-	-	2,952	2,952	2,952	2,952	-	-	3,036
· 표준화 실태조사	100	100	100	-	-	95	95	95	95	-	-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750	750	749	-	1	713	713	603	603	-	-	713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30	29	29	-	-	29	29	29	29	-	-	-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픽 기반구축	70	64	64	-	-	67	67	60	60	-	-	-
· 표준화 교육	140	129	129	-	-	133	133	118	118	-	-	-
· 국가표준화확산생태계조성	300	300	300	-	-	285	285	285	262	-	23	356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	-	-	-	940	940	940	935	-	5	750
○ 비목별 분류(합계)	4,054	4,054	4,028 [4,028]	-	26	6,229	6,229	6,229	6,199 [6,199]	-	30	6,042
· 일반수용비(210-01)	110	88	88	-	-	126	126	88	88	-	-	88
· 시험연구비(210-13)	1,117	1,117	1,116	-	1	1,061	1,061	1,061	1,061	-	-	1,061
· 일반용역비(210-14)	200	222	222	-	-	191	191	207	207	-	-	356
· 국내여비(220-01)	16	19	19	-	-	15	15	22	22	-	-	14
· 국외업무여비(220-02)	8	5	5	-	-	7	7	0	0	-	-	6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5	35	35	35	-	-	31
·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575	-	25	1,070	1,070	1,092	1,085	-	7	1,030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420	420	420	420	-	-	3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70	270	270	-	-	257	257	257	234	-	23	-
· 사업출연금(350-02)	1,694	1,694	1,694	-	-	3,047	3,047	3,047	3,047	-	-	3,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및 국가차원의 표준 전략 마련
 - 기술혁신·시장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영
 - 국제무역 규범에 대응하는 글로벌 표준인력을 양성하고,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화 활동 유공자 포상(초중고 교육,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시간·비용 등)을 완화하여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
-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개발, 전략분야 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 정책 연구(학술연구용역),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 표준화 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사업
 -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
 - ⑤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표준화 활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을 통한 노고 치하 및 대국민 표준 인식 제고
 - ⑥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도모
 - ⑦ **(표준화 교육)**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미래 국제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시범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 ⑧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정책패널 운영을 통한 표준 선점 기반마련
- * '21년 예산에서 ⑤(표준의 날), ⑥(올림피아드), ⑦(교육)이 ⑧(생태계조성)으로 흡수·통합
- ⑨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한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수 법정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및 창구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②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의 개선과제 발표
 -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 「300-60 프로젝트」 -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연) 한국표준협회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2, 제30조2
(보조)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1년도 조정안 : 6,042 백만원 >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0) 1,015백만원 → ('21) 1,117백만원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핵심·선도 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 수립 등
- 표준안 심의, 부처별 표준 중복성 검토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산출내역

- 국내여비 : ('20) 160회 × 9.5만원 = 15백만원 → ('21) 150회 × 9.5만원 = 14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20) 2회 × 3.5백만원 = 7백만원 → ('21) 2회 × 3백만원 = 6백만원
- 일반수용비(인쇄비, 발표수당, 회의비, 설명회 개최 등)
: ('20) 1식×40백만원 = 40백만원 → ('21) 1식×88백만원 = 88백만원
- 시험연구비(기술·전문위원회 수당) ('20년 동일)
: ('20) 204회×14만원×12명 = 348백만원 → ('21) 204회×14만원×12명 = 348백만원
- 사업추진비 : ('20) 1식×35백만원 = 35백만원 → ('21) 1식×31백만원 = 31백만원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
: ('20) 38과제 × 15백만원 = 570백만원 → ('21) 42과제 × 15백만원 = 630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3,036백만원(사업출연금)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07~)

▪ 산출내역 :

('20) 2,952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45종 × 20백만원) + 국제표준 부합화(230종 × 1백만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1,820종 × 0.75백만원) + 기관별 TC/SC 대응(325백만원 = 65개 기관 × 5백만원) + 대표기관 운영비(130백만원)
→ ('21) 3,036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50종 × 20백만원) + 국제표준 부합화(230종 × 1백만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1,800종 × 0.75백만원) + 기관별 TC/SC 대응(325백만원 = 65개 기관 × 5백만원) + 대표기관 운영비(130백만원)

○ 표준화 실태조사 : 70백만원(사업출연금)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산출내역 : ('20) 1,600개 업체 × 6만원 = 95백만원 → ('21) 1,200개 업체 × 6만원 = 70백만원

○ **KS제품 시판품조사 : 713백만원**(시험연구비) ('20년 동일)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중점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제품구매/현장채취 → 공인시험기관 의뢰 → 행정조치)

- 산출내역 : ('20) 500개 업체 × 1회 × 1.43백만원 = **713백만원**
→ ('21) 500개 업체 × 1회 × 1.43백만원 = **713백만원**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750백만원**

(일반연구비 4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50백만원)

-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양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과 부담 (시간·비용 등)을 완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
- 기업불만도 및 인증수요가 높은 산업분야에서 50개 품목을 5년간 발굴하고, 원스톱처리 창구를 통한 지원 추진

- 산출내역 : ('20) 조사·분석 및 처리방안 마련(일반연구비, 5개 품목 × 100만원 = 500백만원) + 창구운영(민간경상보조, 5개 품목 × 54백만원 = 270백만원) + 프로세스 종합설계(민간경상보조, 1건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설명회 개최 등 확산(일반수용비, 4회 × 5백만원 = 20백만원) = **940백만원**
→ ('21) 조사·분석 및 처리방안 마련(일반연구비, 4개 품목 × 100만원 = 400백만원) + 창구운영(민간경상보조, 5개 품목 × 40백만원 = 200백만원) + 프로세스 종합설계(민간경상보조, 1건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750백만원**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356백만원**(일반용역비)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정책패널 구성·운영
- 민간주도형 국가표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유공 포상

- 산출내역 : ('20) 국제표준포럼·국내정책패널 개최(1식 × 257백만원) + 인쇄비·회의비 등 28백만원 = 285백만원
→ ('21) 국제표준포럼·국내정책패널 개최(1식 × 150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행사대행 용역 1건 × 29백만원)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픽아드 개최 (행사대행 용역 1건 × 67백만원) + 표준화 교육(110백만원 = 시범학교 운영 30백만원 + 찾아가는 표준교육 40백만원 +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40백만원) = **356백만원**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29백만원**(일반용역비)

- 산출내역 : ('20) 운영비 20백만원 + 인쇄비 등 9백만원 = 29백만원
→ ('21)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사업으로 흡수·통합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피아드 : 67백만원**(일반용역비)

-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 표준화 교육 주도국으로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제대회로 개최('14~)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시 대표적인 표준교육 우수사례로 소개
- 산출내역 : ('20) 과제개발, 홍보, 심사 등(34백만원) + 대회진행 통역(5백만원) + 문화교류 활동(7백만원) + 임차료(20백만원) + 국내여비(1백만원) = 67백만원
→ ('21)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사업으로 흡수·통합

○ **표준화 교육 : 110백만원**(일반용역비)

-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국제·국가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표준교육 시범학교 : 지정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활동(포스터 그리기, 표준 신문만들기 등)을 통해 표준에 대한 교육
- 찾아가는 표준교육 : 표준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1시간동안 표준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1학교당 100여명내외 교육 실시)
- 산출내역 : ('20) 133백만원 → ('21)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사업으로 흡수·통합
- 시범학교 지정운영 : ('20) 4개교×100명×9.5만원 = 38백만원
→ ('21) 3개교×100명×9.5만원 = 30백만원
- 찾아가는 표준교육 : ('20) 50개교×100명×0.95만원 = 48백만원
→ ('21) 40개교×100명×0.95만원 = 40백만원
-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 ('20) 1식×47백만원 → ('21) 1식×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0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 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을 목표치 설정	Σ 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 Σ 국가표준 개발수 $\times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 부 통계자료, e-나 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3	75	76	집계중	-			
	달성도	104	100	101	집계중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7.12.31. 기준 KS 20,30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5,404종) : 제정 339종, 개정 1,406종, 확인 3,478종, 폐지 181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6개 기관 지정(KS 20,307종 중 15,313종(75%) 관리 이양)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7.11.22, 국회 헌정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 마련 (주최 :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김태년 의원, 산업부 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ISO 차기회장, IEC 사무총장, 독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이사,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등 300여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8.6월말 KS 20,39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810종) : 제정 195종, 개정 354종, 확인 216종, 폐지 45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2개 기관 지정(KS 20,396종 중 15,301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조사건수 287건, 표시정지/판매정지 50건, 인증취소 5건, 개선명령 17건)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18.8.8~10,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0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포럼 개최('18.6.20.~21,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180여명 참석) - 동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공동대응 및 지역표준을 통한 아시아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유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9.12월말 기준 KS 20,73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64종, 개정 1,356종, 확인 2,590종, 폐지 137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3개 기관 지정 : KS 20,734종 중 15,518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건수 382건, 표시/판매정지 37건, 인증취소 29건, 개선명령 13건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19.7.23.~25,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3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IEC 사무총장상에 이어 ISO 사무총장상이 추가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표준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표준정책 패널 운영위·분과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적용가이드 발간 등 표준정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 개최 (11월, 9개국 150여명) ▶ 수소경제 국제 표준포럼 개최 (6월, 6개국 200여명) ▶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포럼 개최 (6월, 11월, 국내외 200여명) ▶ 인공지능산업 표준포럼 개최 (12월, 국내외 100여명) ▶ 스마트헬스 표준포럼 개최 (6월, 12월, 국내 60여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20.12월 기준 KS 20,77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75종, 개정 344종, 확인 76종, 폐지 38종('20연말~'21연초 업데이트 예정) ○ 민간주도 표준개발체계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정보, 인쇄전자, 전자부품 조립기술 등 유망 신규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 확대 지정('2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3개 기관 지정 : KS 중 약 75%(약 15,000여종) 관리 이양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처리 플랫폼 설계 완료('21년 구축 예정), 기업상담·홍보(상담: 39건, 홍보: 약 300건), 통합 인증진행(9건) - 인증제도 조사·분석(189개), 다수인증 기업애로 품목 발굴 및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5개 제품군) 및 인증 원스톱처리 매뉴얼 개발 ○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주최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한국표준협회, 후원 ISO, IEC, NIS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청소년들이 표준화 과제를 해결하며 표준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국제대회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싱가포르, 한국 등 5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300명 참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예선(8.31.~10.8.) 및 본선(11.17.~11.19.) ○ 초중고 표준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동아리활동 확산(20개교에 시범학교 운영) - 생활 속 표준에 대해 일일 특강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표준교육' 진행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46개교, 고등학교 23개교 / 15,904명) - 표준교육생태계 조성 및 기술가정 교과 내 표준 단원의 인식확산을 위해 교원 및 관리자에게 직무연수(6회 / 118명) ○ 관계부처·민간 참여 포럼 및 표준정책 패널 구성·운영 등을 통해 표준화 기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20.09.29, 비대면 기술 표준 전문가 200여명(온·오프라인 병행)) - 스마트제조 표준화 포럼('20.10.16, 스마트제조 기술 표준 전문가 20여명(온·오프라인 병행)) -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 2020('20.11.03, 9개국 100여명(온·오프라인 병행)) - 디스플레이 국제 표준 포럼 2020('20.11.04, 디스플레이 기술 표준 전문가 300여명(온·오프라인 병행)) - 인공지능 산업표준화 포럼('20.11.19, 인공지능 표준 및 기술전문가 20여명(온·오프라인 병행)) - 스마트헬스 표준 포럼('20.12.7.~8, 바이오·헬스 전문가 45명(온라인))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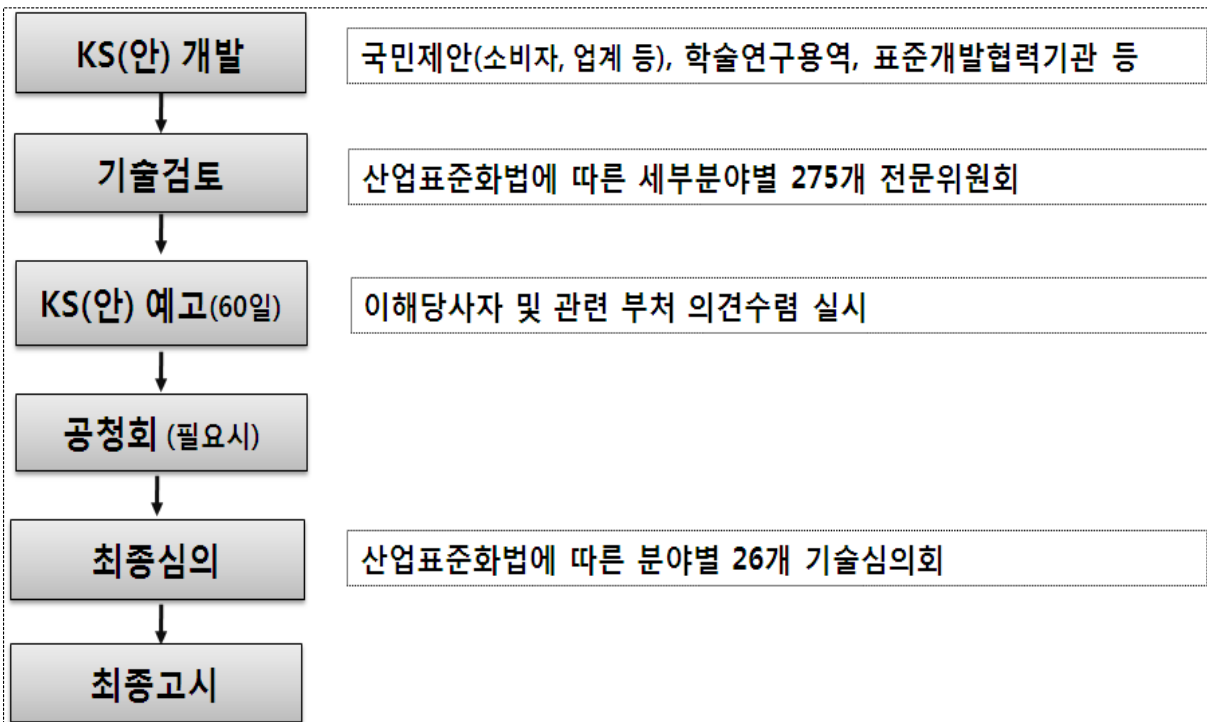
-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국제표준 추세 및 산업환경변화를 적기 반영하는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 국가표준 개발·정비(개정, 폐지 및 확인) 건수 : ('17) 3,700종 → ('18) 3,750종 → ('19) 4,447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장수요에 신속히 대응 및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 * 2017년 이후 전체 KS 중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KS가 75% 이상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피아드대회를 전 세계 청소년(12개국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행사로 정착시키고, 중·고 정규 교과과정(기술·가정)에 “표준” 단원 지속 및 확대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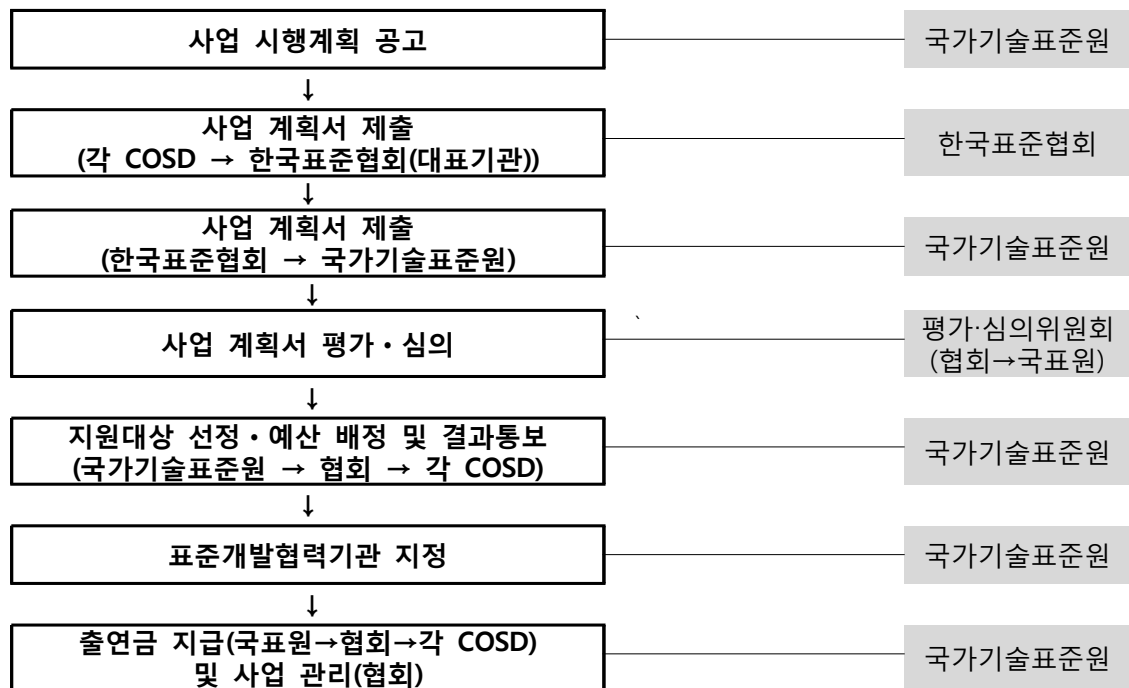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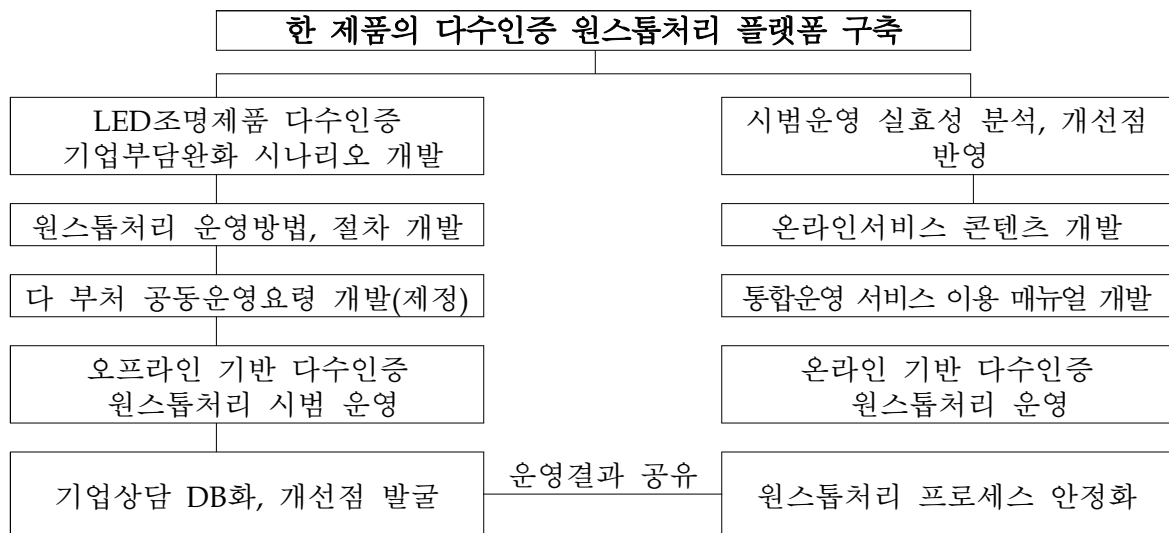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산업표준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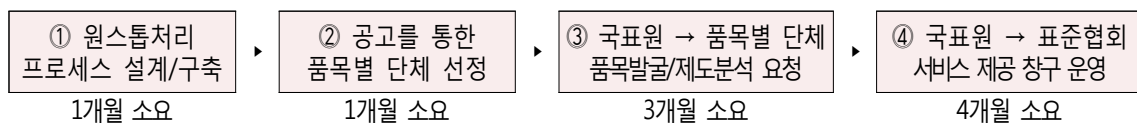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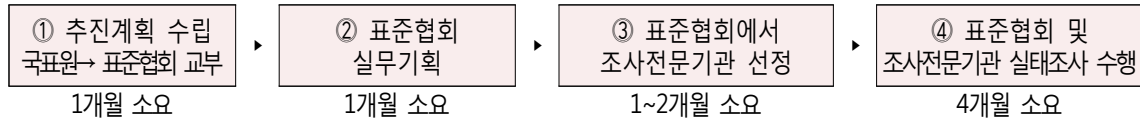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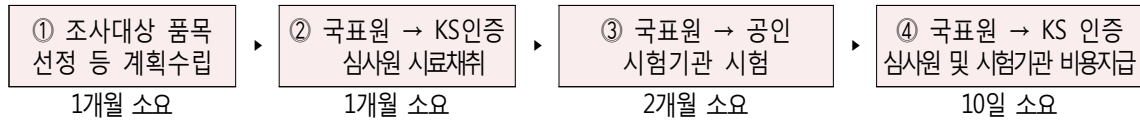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민간보조) >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출연)>



< KS 인증제품 시판품조사(직접집행)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4,054	6,229	6,042	5,921	5,862	
20~ 24		6,229	6,042	7,732	8,1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

- ('18년 산중위 결산, '18.10.) 사업의 목적에 맞는 표준화 교육 직무연수 운영 필요
→ (조치) 실질적인 직무연수 및 기능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중
- ('19년 예산편성 산중위, 예결위, '18.10.) LED조명 제품 등의 다양한 인증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처리창구 구축·운영에 세부사업 반영 필요(조배숙 의원)
→ (조치) '20년 예산 내역사업(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으로 반영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KS(한국산업표준) 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예산으로써,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할 예정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84.6점**
 - (결과 요약)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집행을 제고 노력을 인정함
 - * '18, '19년 산업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상의 '4차 산업혁명 10대 분야 KS 300종 개발'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운영 내역사업의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
- (참고) '23년까지(누적)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OSD 예산	1,594 백만원	2,952 백만원	3,036백만원	(목표) 4,005 백만원	(목표) 4,330 백만원
표준 개발	고유 20종 (부합화 120종)	고유 45종 (부합화 230종)	고유 65종 (부합화 260종)	고유 80종 (부합화 300종)	고유 90종 (부합화 350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3,919	3,919	-	±8	-	-	3,919	3,892	99.3	99.3	-	29
2018	4,058	4,058	-	-	-	-	4,058	4,031	99.3	99.3	-	27
2019	4,054	4,054	-	±25	-	-	4,054	4,028	99.4	99.4	-	26
2020	6,229	6,229	-	±117	-	-	6,229	6,199	99.5	99.5	-	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872	1,872	1,872	1,872	-	1,872	1,872	-	-	100
2018	1,897	1,897	1,897	1,897	-	1,897	1,897	-	-	100
2019	1,694	1,694	1,694	1,694	-	1,694	1,694	-	-	100
2020. 12월기준	3,467	3,467	3,467	3,467	-	3,467	3,46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세목조정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용역비 8백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2018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2019	- 세목조정 : 표준화 교육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40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용,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 3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용역 낙찰차액 (표준의날 1백만원, 올림 6백만원, 교육 11백만원)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6백만원
2020	- 세목조정 : 표준화 교육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38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용,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 7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용역 낙찰차액 (올림피아드 15백만원, 교육 7백만원)의 불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일반연구비로 전용,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판품조사 불용 최소화를 위해 110백만원을 표준개발 심의수당으로 전용 - 불용(예상)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3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산업발전과 법정 임의인증인 KS가 무슨 상관인가?

□ (배경) 선진국들은 이미 표준을 시장선점의 도구로 인식하고, 핵심 기술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국가 간 협력* 강화 중

- 현재 신산업 분야 표준화는 「先 시스템·플랫폼 표준화 → 後 제품·부품 표준화」의 하향식 표준방식*

* (예) 자율주행차 : (先) 교통시스템 - 위성정보시스템 표준 → (後) 부품 표준

□ (필요성)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술·제품의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도구인 '인증'과, 그 기준인 '표준'이 필수

○ (예시) 수소산업 관련 표준화 미비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 국내 A 업체가 실내운용 지게차용 배터리를 연료전지로 대체해 납품하려 하였으나, 관련업체(수요처, 보험사 등)에서 안전담보를 위해 KS 표준에 근거한 인증을 요구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

→ 즉,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미비로 판매가 지연

○ 기술발전·시장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이 필요

- KS 개발 및 제·개정, 시판품 조사를 통한 인증제품 품질 유지, 신산업 분야 국가·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협력 강화,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등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관련 유일 예산

참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3.)

□ 10대 표준화 분야 국가표준 300종 개발 추진

비전·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

▶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7)8.5% → (‘23)12%	▶ 신산업 1위 대비 기술수준 (‘17)80% → (‘23)84%
▶ GDP대비 기업R&D투자 비중 (‘17)3.6% → (‘23)4.3%	▶ 산업체 연구개발인력 비중 (‘17)9.4% → (‘23)12%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율 (‘17)38% → (‘23)43%	

추진전략

1.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성 강화

- ① 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투자전략 수립
- ② 데이터 기반의 분야별 투자 규모 및 가이드라인 선정

2.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 ③ 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도입
- ④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시간 단축·성과 극대화
- ⑤ 융합 기획 및 목표 중심 성과관리체계 추진

3.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 구축

- ⑥ 데이터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의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 ⑦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4. R&D 성과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⑧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구축
- ⑨ 권역별 특화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 ⑩ 신기술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

- 수립 배경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수립
- 기본 방향

- ① 투자 전략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 ② R&D 체계 :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 ③ 산업기술 인프라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④ 성과 창출형 생태계 :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표준화 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기 대응하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 추진(~’23)**
 - 기업의 국제표준 역량 강화 및 표준인력 양성, R&D 과제에 표준 특허 연계 시스템 구축, 국제표준화 기구 내 리더십 확보 등 병행

2.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장관회의, '19.3.)

□ (추진목표) '30년까지 충전소부품, 연료전지 제품 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

- '21년까지 국제표준 중 KS로 채택되지 않은 국제표준 18종을 KS로 채택하고, 기업의 활용을 통해 제품 국산화를 촉진
- '30년까지 충전소부품(밸브 등), 연료전지 제품(가정용, 지게차용 등) 30건을 KS인증 품목 지정,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제품의 성능·안전 확보

사 업 명
(9)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3731-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표준정책국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산업표준혁신과	김태완	조영삼	최은진 연구사
		043-870-5380	043-870-5386	043-870-547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신산업 단체표준화촉진	-	-	-	817	817	817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17
·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												200
·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482.4
·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134.6
○ 비목별 분류(합계)												817
· 국내여비(220-01)												0.4
· 일반연구비(260-01)												81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내 신산업 단체표준화 기관을 육성하고,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단체표준의 개발 위하여 이해관계자 합의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등 단체표준·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민간 인증제품의 품질확보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지원필요성)단체표준 증가에 따라 단체표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지원, 他 표준간 조화로운 운영, 불량 인증 제품유통 방지 등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지도·지원 필요
- (①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 동 내역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단체간 표준 개발 중복 분야 조정 등을 지원하는 것임
- (②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동 내역사업은 불량제품 시장유통 차단을 위하여 인증단체의 시판품조사를 지원하고, 인증표시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③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동 내역사업은 법제도 개선 연구 및 단체표준·인증심사 기준 열람·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체표준·인증 활성화를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31조(보조금)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 양성)

② 추진경위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년)의 12대 과제중 민간주도 표준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표준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단체표준 활성화 추진
 - * 단체표준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계약 시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해 KS 인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정비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3조제1항제6호('18.12.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가목 및 제22조제6호('19.6.25.)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연관
- 2020.1.30. 산업부장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담회 시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 의견 수렴 및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 발표

- 2020.4.9.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의 혁신성장지원 과제로 서비스 단체표준활성화 기반구축 발표(관계부처합동)
- * 기업애로해소: KS인증 서비스와 같이 우수단체표준인증서비스의 공공분야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우수중소업체 서비스 공급 활성화(관련 법률정비 추진 예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계속
- 사업규모 : 8.17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 수혜자 :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조합 및 협회,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우수단체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공수요자 등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1년 요구액 : +817백만원

-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 : +200백만원
 - (내용)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KS 등 기존표준과 중복성 해소 지원
 - (산출근거)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및 중복해소 지원 200백만원(40개×500만원) + 중복인증 부담해소 등 단체표준 민원 해소 200백만원(20개×500만원)
-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482.4백만원
 - (내용) 시판품조사, 인증표시 실태조사, 인증표시 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심사원 전문화 교육 등
 - (산출근거) 시판품조사 300백만원(200개×150만원) + 인증표시 실태조사 및 개선 174백만원(4,000개×3만원 + 2건×27백만원) + 심사원 전문화 교육 8백만원(20명×4회×10만원) + 여비 등 0.4백만원(1명×5회×8만원)

-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 +134.6백만원
 - (내용)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열람·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단체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및 지원, 단체표준·인증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
 - (산출근거) 열람·활용 시스템 운영 50백만원(1건×50백만원) + 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제도개선 연구용역 84.6백만원(3건×28.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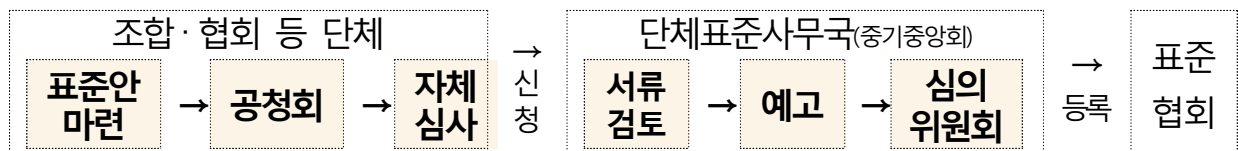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예상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 단체표준 제·개정 예고시 의견 제출 및 중복인증 해소 민원 접수(사무국)
 - ▷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충돌에 대한 합의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연구(협회)
 - ▷ 관련 연구 및 이견 조정·해소 방안 마련·지원
 - ▷ 단체표준심의회 및 등록절차 진행

【 참고: 단체표준 개발절차 】



-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예상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단체표준 인증제품 불량제품 모니터링(공공수요처, 소비자단체 등)
 - ▷ 시판품 조사 지원 선정 및 인증단체 협의, 지원계획 수립(중앙회)
 - ▷ 현장 합동점검(단체, 중앙회) ▷ 시료채취(단체) ▷ 시험의뢰(시험기관)
 - ▷ 검사결과 부적합 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부적합 처분(단체)

-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예상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열람·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 법제도 개선 연구
 - 단체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및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25년까지 인증 단체표준 20% 분쟁조정 등 민원해소 지원, 인증 5% 모니터링

중기지원 목표		2019	2021	2025
단체표준	지원비율	0	6.7%	20.0%
	인증표준수	286	300 ¹⁾	300 ¹⁾
	민원해소건수	0	20	60
시판품 (모니터링)	조사비율	0	2.5%	5%
	인증건수	8,015	8,000 ²⁾	8,000 ²⁾
	조사건수	0	200	400

1) '17~'19년 단체표준 제·개정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 제·개정 지원으로 증가 가능

2) '17~'19년 단체표준인증 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 표준 제·개정 증가에 따라 증가 가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3731-3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정해권	-	허아영 연구사
		043-870-5480	-	043-870-548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구축지원	-	-	-	4,850	4,850	4,85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4,850
· 항바이러스 시험평 가를 위한 시험인 프라 구축지원	-	-	-	-	-	-	-	-	-	-	-	4,850
· · ·												
○ 비목별 분류(합계)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4,800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코로나 19 등 감염병 주기적 발생 가능성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K-방역 생활
용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시험 기반 구축) 동 내역사업은 항바이러스 성능을 가진
생활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확보와 K-방역 생활용품의 글로벌 상품화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 8. (생략)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20.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KOLAS공인기관(주관기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KOLAS공인기관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4,850백만원 (순증)

- 국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성능·안전성 평가기반 마련을 위한
❶ 바이러스 بانک구축 및 **❷** 항바이러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❸** 국제공인성적서
 발급체계 마련을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 모니터링 연구 진행 (4,800백만원)

❶ 바이러스 보관운영 : 1,050백만원 (1,500백만원* × 국비보조율 70 %)

* 바이러스 종별 구매(100종 × 200만원), 숙주세포 종별 구매(100종 × 200만원), 초저온관리시스템
 (8 type × 1억), 바이러스 배양시스템(제반설비 3억)

❷ 항바이러스 평가시스템: 2,800백만원 (4,000백만원* × 국비보조율 70 %)

* 음압실 클린룸(12억), 바이러스 검출장비(15억), 유전체 분석장비(8억), 기타장비(5억)

❸ 시험평가 지원 : 950백만원 (9.5백만원/건 × 10건 × 10개월)

- 과제별 세부기획 및 진행단계 점검 등 사업 관리·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기관 설정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시험기반 구축 (단위: 여부)	목표	-	-	-	-	기반 구축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구축 정도	수행기관 평가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제공인성적서 발급체계 마련 (단위: 여부)	목표	-	-	-	-	발급체계 마련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수행기관의 KOLAS 인정 획득	수행기관 평가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관련 시험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전파·확산 으로부터 ❶국민안전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❷수출기업과 국내 시험 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국표원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 당해연도 및 중기계획 등
② 사업계획 공고 ↓	전담기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신청자격, 과제명 등)
③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국표원, 전담기관	사업성과 평가 등
수행 및 사업관리 ↓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0~ 24			4,8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장이 미성숙하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안전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 1.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참고 2: 신규 예산 반영 필요성 검토
- 참고 3: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및 주요 조문 내용

□ 검토배경

- 코로나 19로 항바이러스 성능을 가진 생활용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는 부재**한 상황

< *항바이러스 기능 제품 개발 현황 >

-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손소독제, 항균마스크, 항균필름 → 생활가전용품 및 벽지·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사용되는 제품군으로 확대 예상
 - 건축자재 : 페인트, 건축바닥재 등 / 섬유제품 : 의류, 가방, 장갑, 모자 등
 - UV장치 포함 가전제품 :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용품 등

** 항바이러스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기관: 화학연구원(백신개발 중심), KTR(생활용품 시험이 가능하나 보유 바이러스 종류(Corona Virus 229E 등 13종)가 적고 Lab단위 설비만 보유)

□ 추진방안 (신규 요구 예산 : 70억 → 48.5억 반영)

- K-방역 생활용품의 성능·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바이러스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으로,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기반 마련

* ① 바이러스 뱅크구축, ② 항바이러스 평가시스템, ③ 시험평가 지원

-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시험평가를 위해 다양한 바이러스 종 구비 및 안전한 바이러스 보관·관리 설비 필요
- 항바이러스성을 가진 다양한 제품개발 및 성능·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인프라 확충 및 국제공인성적서 발급체계 마련

□ 기대효과

- 항바이러스 기능 제품의 신속·정확한 성능·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 항바이러스 성능·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공인성적서 발급체계 마련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K-방역 생활용품 글로벌 상품화 추진

참고 2

신규 예산 반영 필요성 검토

□ (국내 현황) 항바이러스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표준은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시험인증서비스는 미흡한 실정

○ 바이러스 변이 및 생활용품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국제표준* 제·개정 활동은 활발히 진행

* ISO 18184(섬유재질 시험바이러스 3종, 2019년 개정), ISO 21702(필름플라스틱 재질 시험바이러스 2종, 2019년 개정), ASTM E1052(액상, 시험바이러스 12종, 2020년 개정) 등

○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성능·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부재한 상황

* 항바이러스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기관: 화학연구원(백신개발 중심), KTR(생활용품 시험은 가능하나 보유 바이러스 종류가 적고, 최소 설비만 보유)

□ (신규 예산 요구)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시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바이러스 종 구비 및 시험인프라 확충 필요

○ 범용 시험장비는 별도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나, 시장이 미성숙하거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안전 분야는 정부의 선제적 지원 필요

○ 또한,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항바이러스 시험평가 수준 및 시험가능 제품군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

⇒ 70억 요구액을 최대한 반영해 줄 필요

※ 생활용품 항바이러스 시험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구성

시설/장비	사용목적
음압실 클린룸	바이러스 외부유출 방지 및 바이러스 기초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필수 기반 시설
BSC	BioSafety Cabinet;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음압 작업대
이산화탄소 배양기	항바이러스 시험 목적의 바이러스 및 숙주세포 기초배양, 증폭, 조작 설비
초저온냉동고	단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역상현미경	주요 바이러스의 정확한 형태 확인 및 계수
냉장고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 및 시약 보관
원심분리기	세포배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질소탱크	동물세포 및 바이러스를 장기간 보관
고성능 원심분리기	바이러스를 숙주세포 등에서 원심분리하여 순수한 바이러스만을 분리

참고 3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및 주요 조문내용

1. 개요

- 적합성평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부정행위 방지, 공인기관 인정제도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20.4.7.)

* (‘19.3)발의 → (‘19.7)산중위 상정 → (‘20.2)산중위 의결 → (‘20.3)본회의 → (‘20.4)공포

2. 법안 주요내용

- (역량강화) 실태조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방안 등 마련(제16조~제20조)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 ③ (생략)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 ⑤ (생략)

제18조(국제협력) ① ~ ② (생략)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정행위 방지) 금지 대상 부정행위 유형 구체화, 조사방법 및 절차, 적합성평가기관이 보관할 자료 구체화 등 이행 방안 마련
- (인정제도) KOLAS, KAS, KAB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과징금, 경영체제 인정업무 위탁 등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

사 업 명
(11)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김태완	
		043-870-5340	043-870-534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47,879	56,664	58,464	62,235	62,235	3,771	6.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7,879	47,879	47,879 [47,879]	-	-	56,664	58,464	58,464	58,464 [58,464]	-	-	62,235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6,260	26,260	26,260 [26,260]	-	-	30,462	33,462	33,462	33,462 [33,462]	-	-	37,383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126	3,126	3,126 [3,126]	-	-	3,626	3,626	3,626	3,626 [3,626]	-	-	6,752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	-	- [-]	-	-	12,000	10,800	10,800	10,800 [10,800]	-	-	13,600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	-	- [-]	-	-	-	-	-	- [-]	-	-	2,500
· 소비자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	4,994	4,994	4,994 [4,994]	-	-	4,621	4,621	4,621	4,621 [4,621]	-	-	-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1,500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확충	735	735	735 [735]	-	-	735	735	735	735 [735]	-	-	-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9,485	9,485	9,485 [9,485]	-	-	1,660	1,660	1,660	1,660 [1,660]	-	-	-
· 기획평가관리비	1,779	1,779	1,779 [1,779]	-	-	2,060	2,060	2,060	2,060 [2,060]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47,879	47,879	47,879 [47,879]	-	-	56,664	58,464	58,464	58,464 [58,464]	-	-	62,235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8,234	38,234	38,234 [38,234]	-	-	54,844	56,644	56,644	56,644 [56,644]	-	-	62,235
· 장비시스템 구축비	9,645	9,645	9,645 [9,645]	-	-	1,820	1,820	1,820	1,820 [1,82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위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 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06년~'16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9.6월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
- '19.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② 추진경위

- '18.2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신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명시
- '19.1월 : 424개 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기업 동향조사(2018)' 선행연구를 통해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표준화 수요 등을 파악하며 본 예산 기획
- '19.6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3.) -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실증 환경 조성 명시
- '19.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 - 데이터 표준화 추진 명시
- '20.2월 : 산업부 BH 연두업무보고에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 명시
- '20.3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수록(데이터 표준화·인증제도 도입)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및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추진경위

- '11.4월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보고
- '12.9월 :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안전사고 다수 발생
- '12.12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총리실) 발표
- '13.5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3.6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공포
- '13.7월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 '14.4월 ~ '18.3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수행(1~4차년도)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24년(일몰관리혁신)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참조표준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생산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7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험인증기관 및 연구소 등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주요내용) 범부처 표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기자문회의, '19.3월)' 등에 따른 4차 산업 10대 분야*, '감염병 대응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중대본, '20.4월)'에 따른 K-방역모델 분야, 비대면 분야 국제표준개발 중점 추진

* 10대 분야 : ① 전기·자율차, ② 에너지(수소 등), ③ 지능형로봇, ④ 스마트제조, ⑤ 바이오·헬스, ⑥ 드론·해양구조물, ⑦ 스마트시티·홈, ⑧ 시스템반도체, ⑨ 디스플레이, ⑩ 스마트팜

- (산출근거) ('20) 30,462백만원 → ('21) 37,383백만원 (6,921백만원)

· (신규과제) 12,975백만원 = [(단상) 1개 x 1,500백만원 x 12/12 + (다상) 2개 x 1,000백만원 x 9/12 + 13개 x 400백만원 x 9/12 + 65개 x 120백만원 x 9/12 = 12,975백만원]

· (계속과제) 24,408백만원 [(기일치) 94개 x 153.91백만 x 12/12 + (종료) 61개 x 162.95백만 x 12/12 = 24,408백만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주요내용)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의 핵심인 국가참조표준데이터(빅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 빅데이터·AI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삼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

- (산출근거) ('20) 3,626백만원 → ('21) 6,752백만원 (3,126백만원)

· (신규과제) 6,752백만원 [(다/상) 1개x4,152백만x12/12 + 1개x600백만x12/12 + 8개x250백만x12/12 = 6,752백만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규제(對 일본) 등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에 대한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 중점 추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군수산업, 첨단세라믹 등

- (산출근거) ('20) 10,800백만원 → ('21) 13,600백만원 (2,800백만원)

· (신규과제) 1,600백만원 [(다/상) 1개×300백만x12/12 + 1개x800백만x12/12 + 1개x500백만x12/12 = 1,600백만원]

· (계속과제) 12,000백만원 [(종료) 40개×300백만x12/12=12,000백만원]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신규)

- (주요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창출 촉진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 (산출근거) ('20) '21년 신규 → ('21) 2,500백만원 (2,500백만원)

· (신규과제) 2,500백만원 [(다/상) 1개×800백만x9/12 + 1개x2,530백만x9/12 = 2,5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주요내용) 사업 추진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신규 사업 공고·설명회 개최, 신규·중간·최종평가 및 관리, 사업성과 분석 등

- (산출근거) ('20) 1,790백만원 → ('21) 2,000백만원 (2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 제안건수(건)	목표	45	46	47	48	49	1개 과제 평균 정부 출연금 6억원을 기준 으로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 총액을 나누어 성과목표를 설정	지원과제로 국제 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50	53	48	-	-			
	달성도	111.1	115.2	102.1	-	-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건)	목표	29	30	31	32	33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대비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률을 64% 수준 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산출	국제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 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46	47	40*	-	-			
	달성도	158.6	156.7	129.0	-	-			

* '20년도 성과는 예상실적으로 최종 실적치는 '21년 1월 성과조사 실시 예정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DB 활용도(%)	목표	18	17	16	16	16	참조표준센터 DB 접속건수를 종합적 으로 평가	(당해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100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실적	38.3	33.1	30.6	-	-			
	달성도	212.8	194.7	191.3	-	-			
참조표준 DB 활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목표	76	78	80	82	84	'20년 최종목표가 만족(82점)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상향	참조표준 DB 실제 사용자(수요자)를 대상으로 리커트5점 척도로 조사	제3자 기관을 통한 DB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77.4	78.3	80.1	-	-			
	달성도	101.8	100.4	100.1	-	-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표준물질개발	목표	-	-	-	70	95	표준물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각 생산표준물질 완 성도의 합)/지원 표 준물질의 수×100 *완성도 상용표준물질생산 완료 0.7 균질도 10% 이내 달성 0.8 6개월 안정성 확보 달성 0.9 특성값 및 불확도 산 출 완료 1.0	사업수행기관 보 고서 및 상용표 준물질 실물확인
	실적	-	-	-	-	-			
	달성도	-	-	-	-	-			
표준물질보급	목표	-	-	-	-	80	표준물질 보급이 가능한 단계로 산업현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평가	표준물질 인정완 료 수 /지원 표준물질 의 수×100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취득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호운용 데이터 표준제정 (단위: 종)	목표	-	-	-	-	4	시범 사업분야별 1개의 상호운용 관련 데이터 표준 제정 (내역사업 1)	매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를 통한 표준개발수	NTIS
	실적	-	-	-	-	-			
	달성도	-	-	-	-	-			
디지털 시험소 구축 및 지정 (단위: 건)	목표	-	-	-	-	1	디지털 시험소 구축 목표 (내역사업 2)	연말 기준 구축 완료 여부	연구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	목표	-	5	7	9	-	매년 30% 상향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소비자제품 안전 기준(안) 개발 건수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문서)
	실적	-	5	12	-	-			
	달성도	-	100	171.4	-	-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차세대계량기술 형식승인(안) 신청율	목표	-	30	33	37	-	'18년 30%를 목표치 로 설정하고, 매년 10% 상향하는 목표 치를 설정함	(형식승인 신청건수/ 기술개발 종료과제 수)×100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승인(안) 신청서)
	실적	-	30	40	-	-			
	달성도	-	100	121.2	-	-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국제인증(GLP) 획득율	목표	-	100	100	100	-	GLP인증 신청수 대비 100% 획득하 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함	(당해연도 GLP인증 획득수 /전년도 GLP 인증 대상 기 반구축 시험항목수) * 100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GLP 인증서)
	실적	-	100	100	-	-			
	달성도	-	100	100	-	-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시험능력 향상도(%)	목표	88	92	94	96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측정항목 국제 시험능력 KOLAS 성적서 발행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수행 시험연구기관 보고서
	실적	90.6	94.9	-	-	-			
	달성도	103.5	103.1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확산 기반구축사업 등 101개 ○ 신규과제 : 스키마 기반 비주얼 감성표현 시스템 표준 개발 등 43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자율주행차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동차-ITS-ICT 융합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08개 ○ 신규과제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국제표준 개발 등 66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실감형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43개 ○ 신규과제 : 전도성 섬유 기반 웨어러블 압력 스트레인 네트워크 센서 국제표준 개발 등 55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한독 표준협력 기반 조성 등 157개 ○ 신규과제 : 통신 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 실증 및 국제표준 개발 등 65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5개 신규지정 및 27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소재 미세조직 데이터북, 뇌MR영상 참조표준 활용 패키지 등 개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1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에너지손실 데이터북, 플라즈마 공정별 가스데이터 패키지 개발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4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건강지수,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대한민국 중력가속도 등 개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6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즈마 밀도 모니터링 분광 시스템, 발열자 선별용 적외선 열화상기기 등 개발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2020	○ 신규과제 : 나노급 질화물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30개
------	---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2018	○ 기업자율적 위해인자 확인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위해성 평가툴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5건 ○ 유아동용 완구류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2019	○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1건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2020	○ 위험수준 평가방법을 활용한 전기용품의 사고원인 분석체계 개발 : 10건 ○ 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9건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2018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기 계량관리를 위한 중량식검사기반 구축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1건
2019	○ 수소충전기 검교정 성능향상을 위한 질량계측 기반의 계량측정장치 기술 개발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0건
2020	○ IoT 기반 통신 모듈 착탈형 실측식 스마트 수도미터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1건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2018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2019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2020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임원수입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국제 표준분야에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R&D 중복연구 및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를 통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를 유지·향상을 국제동등성 확보
- 다양한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해외표준물질 수입 의존도 감소
- 산업계의 니즈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표준물질 활용 기대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기업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에 따른 신제품·서비스 창출 가속화로 기업매출 증가 및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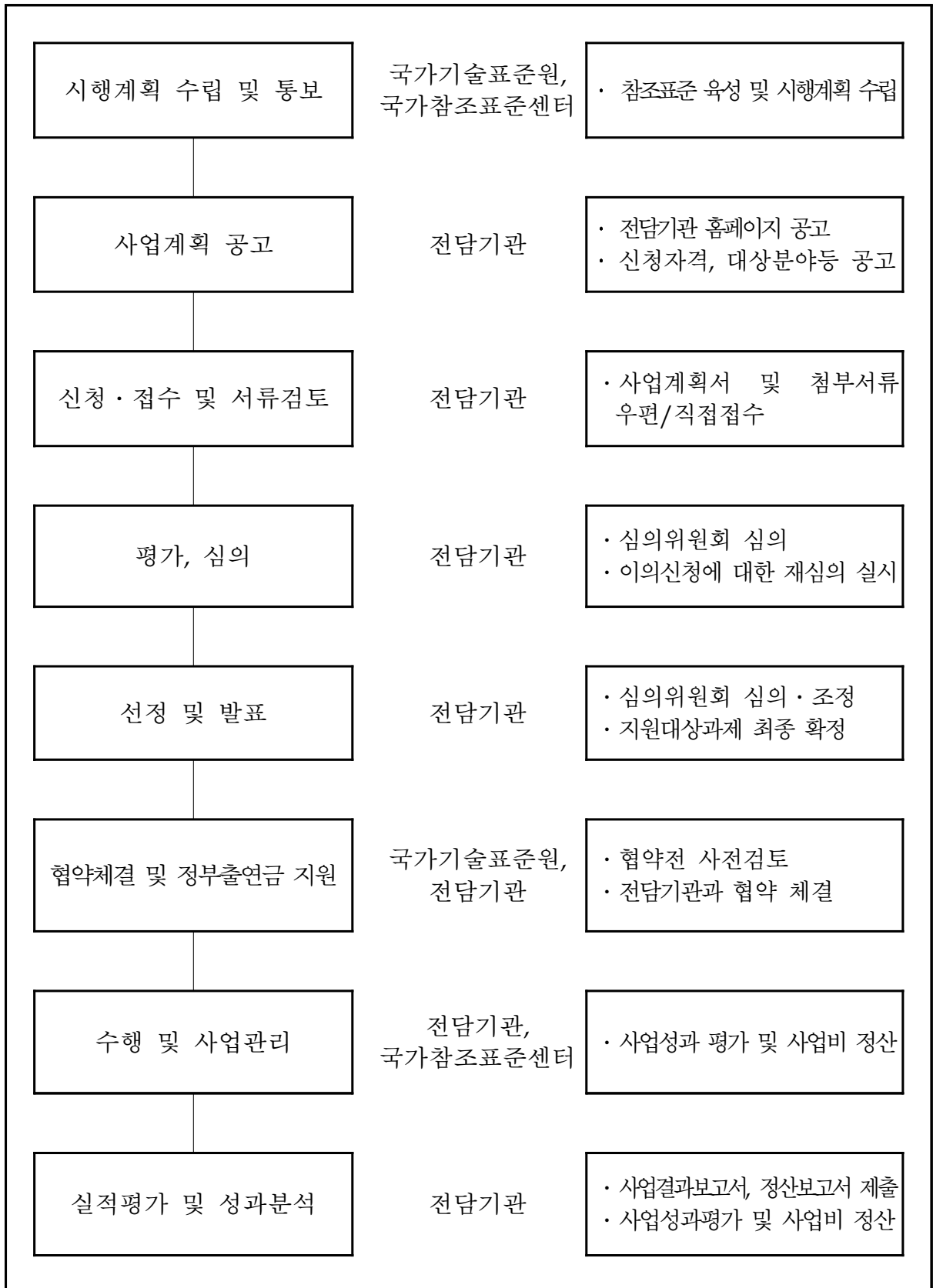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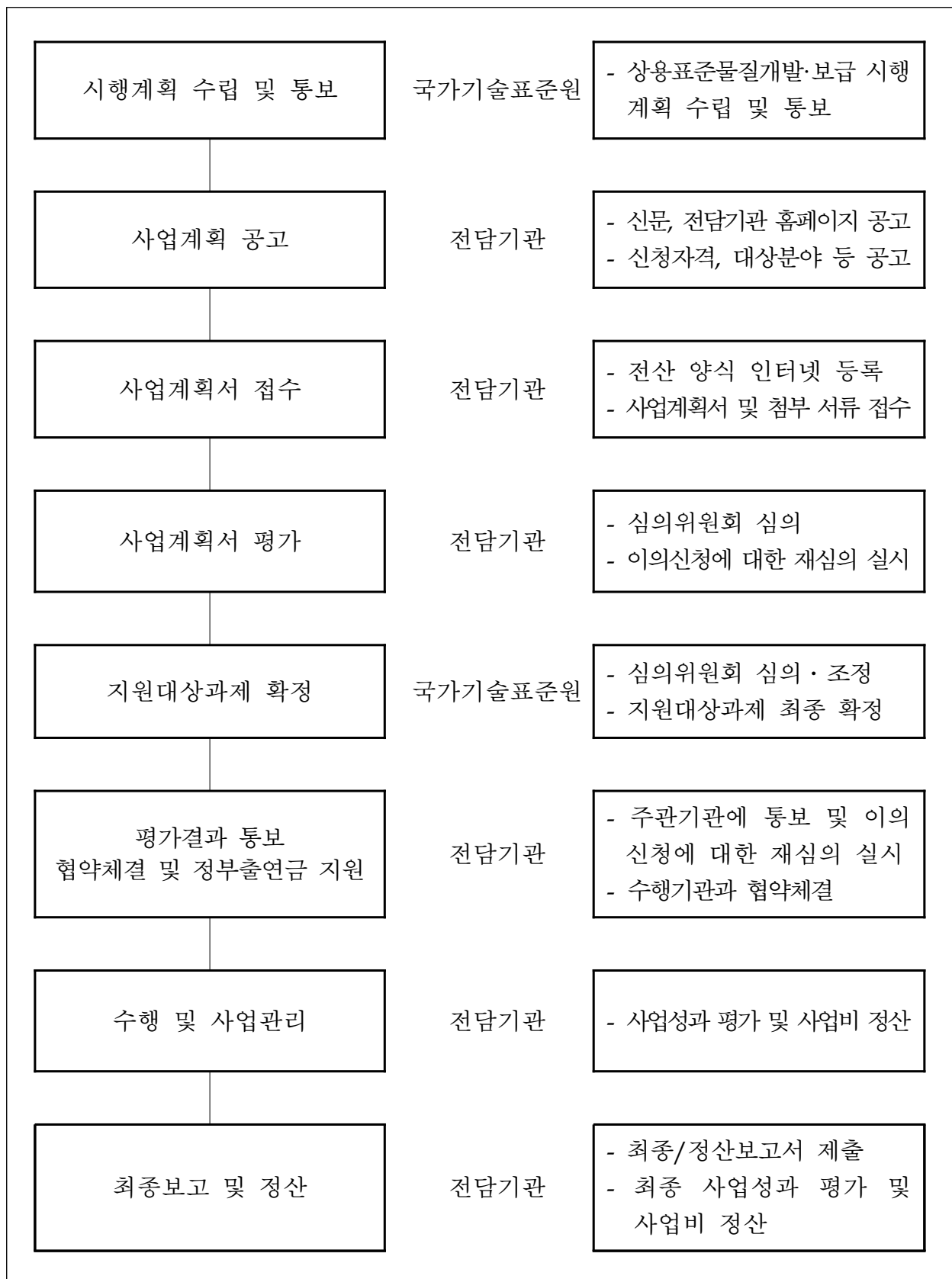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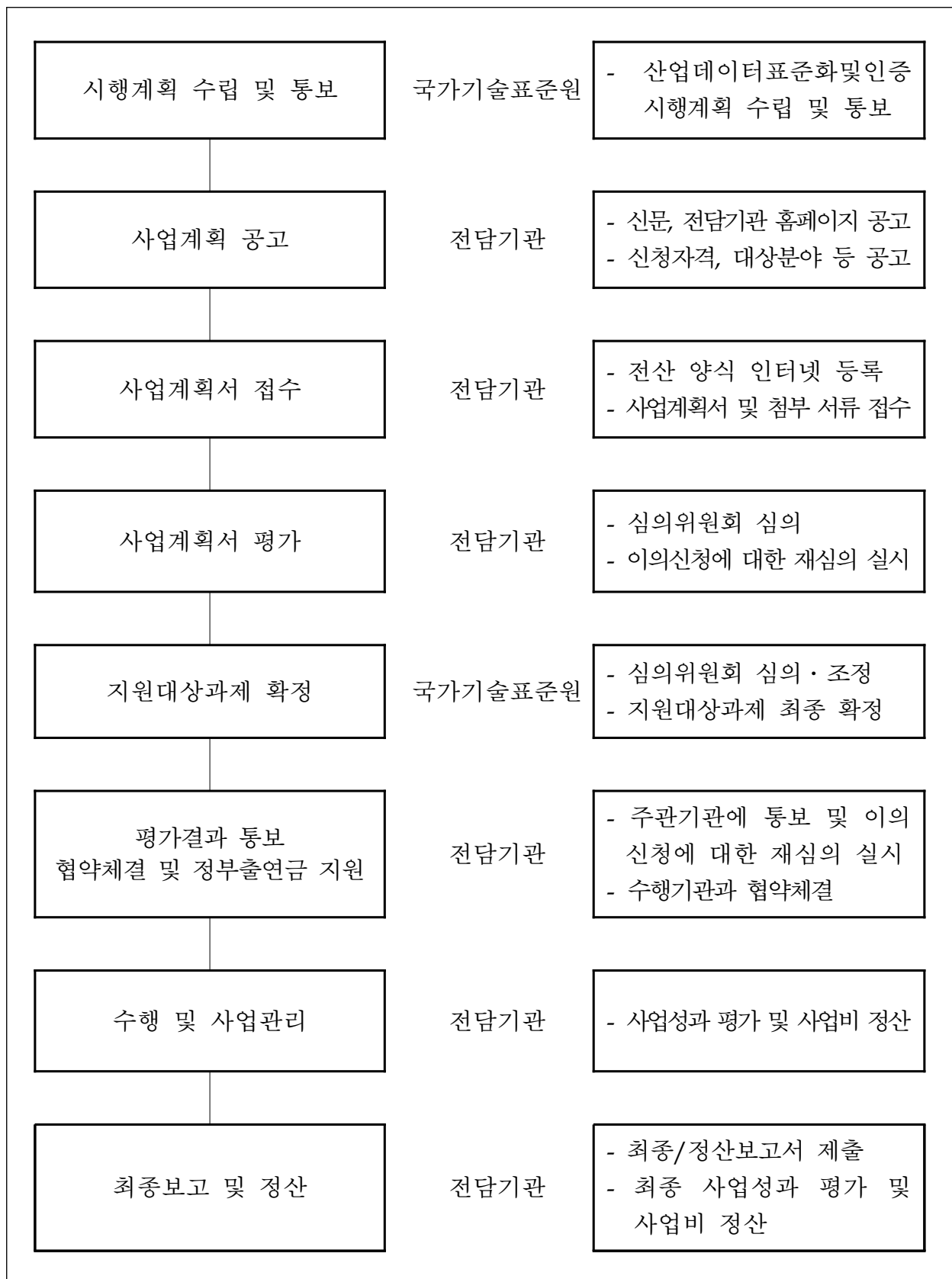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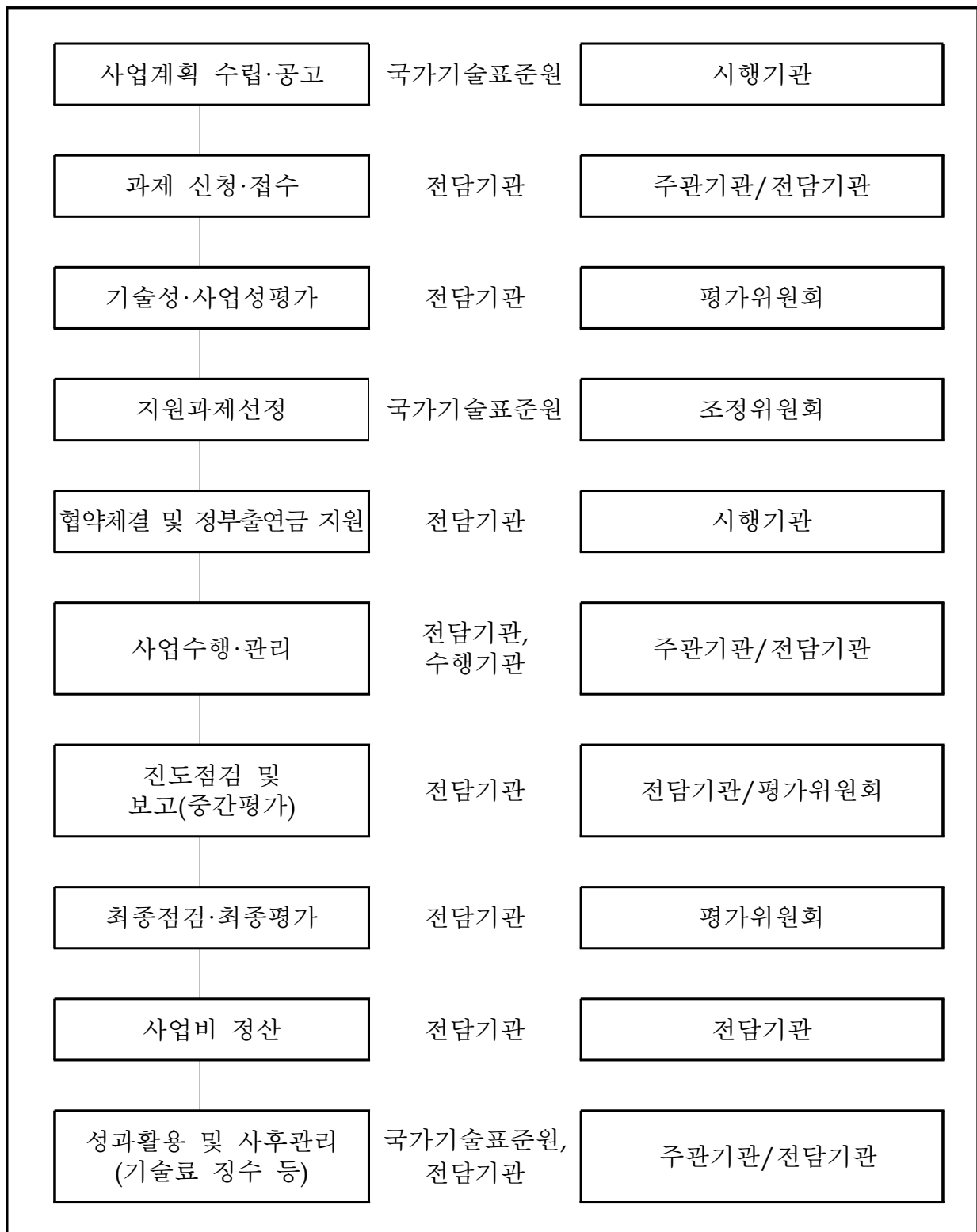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30,530	47,878	62,235	77,235	92,235	
20~ 24		47,878	62,235	77,235	92,235	107,2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FTA 체계 하에서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4차산업혁명 분야, K-방역 모델 분야, 비대면 분야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산업계 보급 및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에 등록

○ 세부추진 계획

- 국가측정대표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간의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평가 및 소급성 확보

④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 향후추진 방향

-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 및 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

○ 세부추진 계획

-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및 디지털 시험소 운영(수준진단·인증) 분야를 '21년 3대 시범분야*(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로 시작하여 확대할 예정

* 4차산업 기술 및 데이터 관련 기존 KS 간 분석을 통해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군 선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18) : 우수

12) 부처 건의사항

- WTO/TBT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국제표준이 필수 요소로 작용
 -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기술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여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신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처리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표준은 데이터 형식, 공유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룰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임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기술, 방역 장비 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지원 필요
- 표준화 추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표준은 즉각적 이익을 계량화 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54,128	54,128	-	-	-	-	54,128	54,128	100	100	-	
2018	49,278	49,278	-	-	-	-	49,278	49,278	100	100	-	
2019	47,879	47,879	-	-	-	-	47,879	47,879	100	100	-	
2020	56,664	58,464	-	-	-	1,800	58,464	58,464	100	100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54,128	54,128	54,128	54,128	-	54,128	54,128	-	-	100
2018	49,278	49,278	49,278	49,278	-	49,278	49,278	-	-	100
2019	47,879	47,879	47,879	47,879	-	47,879	47,879	-	-	100
2020. 12월기준	56,664	58,464	58,464	58,464	-	58,464	58,46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해당없음
2018	- 해당없음
2019	- 해당없음
2020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18억 증액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0억 증액,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12억 감액)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참고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업종별 단체/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4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 (표준화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등록까지 가능한 과제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과제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글로벌시장 선점) 4차 산업혁명 및 지속가능사회 실현 관련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국제사회 위상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수임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위상 강화

○ 주요 개발성과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 선점 대표사례) 로봇 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성능평가방법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견인{세계시장 점유율 '11년: 14% (0.8억불) → '15년: 19%(2.2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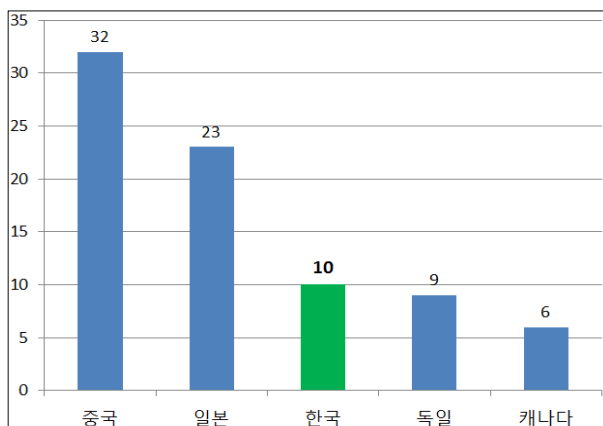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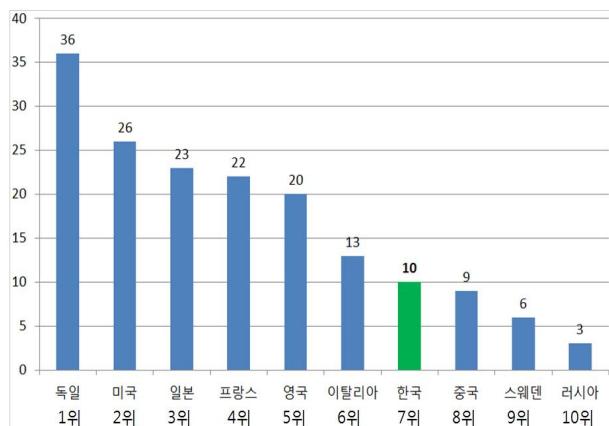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

관련 표준	표준 기여 효과	표준 기여도(%)	연간 경제가치 (추정기간)
고강도 철근(SD600)	생산확대, 신규 수출, 건축비 절감	5.7	672억원 ('15~'19)
파인세라믹스	생산확대, 수출확대, 무역수지 개선	11.8	2,952억원 ('15~'20)
건축용 창유리 필름	관련 시장 확대, 관련 장비 수출, 냉방에너지 소비량 감소	4.6	170억원 ('16~'25)
선체보호 도장(PSPC) 기준	IMO규제 사전대응, PSPC 비용절감	5.0	1,381억원 ('13~'17)
평판디스플레이 측정방법	OLED 세계시장점유 확대	1.8	886억원 ('10~'13)
BLU 광원성능 및 안전요구	부품(CCFL)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및 가격인하	5.1	1,089억원 ('11~'16)

* 출처: 국내외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산업연구원, '16.8월)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EC TC 신설 및 간사국 수임('17.2.8)

*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확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제안 순위 3위, 간사수임 7위('18년 IEC 통계)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가별 국제표준 제안 및 간사수임 순위 >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국가참조표준센터(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참조 표준화하여 기초연구자료 확충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 기반 마련
 - (참조표준 보급) 참조표준을 제품·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활용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참조표준 DB 구축·운영)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측정장비·시험방법 등을 검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은 세계 선도형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신산업 창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기대
 - (중복투자 방지) 중복 연구·개발 방지를 통한 R&D 생산성 증대
 - (삶의 질 향상) 한국인 고유특성이 반영된 의료분야 참조표준을 진단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 개발성과

①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DB 구축

- 동국대병원, KAIST, 표준과학연구원 등 34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4만 8천여건 참조표준을 개발

(단위 : 건, 누적)

분 야	'14년 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재료	4,794	88	86	128	148	5,244
물리	669	69	32	45	68	883
화공	1,802	3,700	3,585	3,537	0	12,624
생명과학	221	0	1	1	0	223
기계	76	0	30	22	0	128
보건의료	7,526	369	2,127	2,337	2,325	14,684
농림수산	0	40	0	0	0	40
에너지 자원	6,400	21	21	42	146	6,630
환경	25	26	78	115	78	322
항공우주천문해양	6,260	0	288	0	1,020	7,568
합 계	21,527	4,328	5,976	6,244	2,783	48,346

② 고품질 데이터를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 및 新 데이터산업 창출

구분	참조표준	내 용
기술개발·공정개선	내열구조강의 인장물성	- “K연구원”은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손상 예방을 위한 진단·예측에 활용
	냉매류의 기본물성	- “H사”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설계에 활용
	반도체 에칭 공정용 가스	- “S전자”는 반도체 장비 설계 및 신규 공정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가공데이터의 판매	강판의 동적 물성	- 자동차 강판의 고속인장물성 데이터를 자동차 충돌시험 및 시뮬레이터 등에 활용 - 유료회원제를 통한 데이터 국외 유출 방지
	인체 치수	- “K연구원”은 가구설계, 의자설계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참조표준데이터를 재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보급 확산
신제품의 사업화	플라즈마 발생가스	- “K테크”는 반도체 공정 설계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플라즈마 물성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53개 업체·연구소에서 사용 중에 있음
	한국인 목부위 동맥 두께	- “(주)R시스템”은 초음파장비에 한국인 경동맥 내막 중막의 혈관두께 참조표준을 탑재하여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 개발에 활용
	뇌MR 영상	- “(주)JLK-Inspection”은 뇌MR 영상 참조표준 기반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 개발 성공 (식약처 3등급 허가)

3.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 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 기반 마련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표준물질생산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상용표준물질 개발) 시제품 제작, 균질성·안전성평가 등을 통한 인증 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 표준물질 : 개발된 소재를 분석(성분 등) 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의 교정 및 개발된 소재의 완성도를 평가·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물질
- (상용표준물질 활용·보급)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활용·보급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

□ 기대효과·예상성과

- 기대효과
 -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를 유지·향상을 국제 동등성 확보 및 해외표준물질 수입 의존도 감소
 -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예상성과
 - (상용표준물질의 생산기반 확충) 소급성의 확보체계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상용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이 가능
 - (국제표준 체계확립) 상용표준물질의 생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균질성·안정성 확보 및 표준물질 생산절차서 개발

4.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산업분야 간 교환·응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인증을 통한 산업데이터의 거래·활용 확대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업종별 단체/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산업표준화법 제30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유망 기술분야 발굴 및 표준·인증 기준 개발
- (상호운용성 인증)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수준진단 및 인증을 위한 디지털 시험소 구축·운영

□ 기대효과·예상성과

- 기대효과
 - 산업데이터 표준 및 인증기준 마련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요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 생산·활용 기업의 상호운용성 실증 공간 제공(상호운용성 수준진단) 및 인증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 제고
- 예상성과
 - (표준 및 인증기준 개발) 민간 표준화 수요 발굴 등을 통해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인증기준 개발
 - (디지털 시험소 구축) 기업·기관 등의 데이터의 타 데이터와의 상호운용성 실증시험 및 수준진단·인증을 위한 SW/HW 장비 구축

사 업 명						
(12)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373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라정인	-
		043-870-5500	043-870-550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규제 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	-	4,260	4,260	6,348	6,348	2,088	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260	4,260	4,260	4,260 [4,260]	-	-	6,348
· 규제 샌드박스기술 기준개발	-	-	-	-	-	2,175	2,175	2,175	2,175 [2,175]	-	-	3,625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지원	-	-	-	-	-	1,998	1,998	1,998	1,998 [1,998]	-	-	2,52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87	87	87	87 [87]	-	-	20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260	4,260	4,260	4260 [4,260]	-	-	6,348
· 연구 개발 활동 비 (360-05)	-	-	-	-	-	4,173	4,173	4,173	4,173 [4,173]	-	-	6,145
· 기 획 평 가 관 리 비 (360-06)	-	-	-	-	-	87	87	87	87 [87]	-	-	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② 추진경위

- ('11.4) 산업융합촉진법 공포
- ('11.1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시행)
- ('11.12)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 ('12.8)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제 4-1-2)
- ('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국정-34, 복합·혁신-2)
- ('18.1)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VIP 주제)
- ('18.3) 규제혁신 5법 국회 발의(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 ('18.1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 ('18.12)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역점추진과제 2-3-2)
- ('19.4)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과제 2)
- ('19.4)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 ('19.7)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20.1)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2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27, 2019.8.8.)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table><tr><th rowspan="2">수행기관 유형</th><th>과제 유형</th></tr><tr><th>혁신제품형</th></tr><tr><td>대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td></tr><tr><td>중소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td></tr><tr><td>그 외</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td></tr></table>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과제) : ('20) 2,175백만원 → ('21) 3,625백만원 (1,45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 25개 과제 x 145백만원 = 3,625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과제) : ('20) 1,998백만원 → ('21) 2,520백만원 (552백만원)
 - 적합성인증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 1식 x 2,520백만원 = 2,520백만원
 -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검증 : 15개 품목x80백만원=1,200백만원
 -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20개 품목x60백만원=1,200백만원
 - └ 신규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 1식x120백만원=12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20) 87백만원 → ('21) 203백만원 (1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합신제품 제품개선 지원성과(건)	목표	-	-	-	12	11	규제샌드박스 제품 및 적합성 인증 신청제품 에 대해 수립된 기술 및 인증기 준을 기업에서 달성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사 업화 지연을 방 지하기 위해 산 출 근거로 설정	제품개선 지원 건수 x 55%	제품개선 대상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달성 및 인증획득 실적을 측정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개발타당성 검증 과제 발굴 및 지원 ○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기술기준(안)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신규과제 15개 발굴 및 지원
------	---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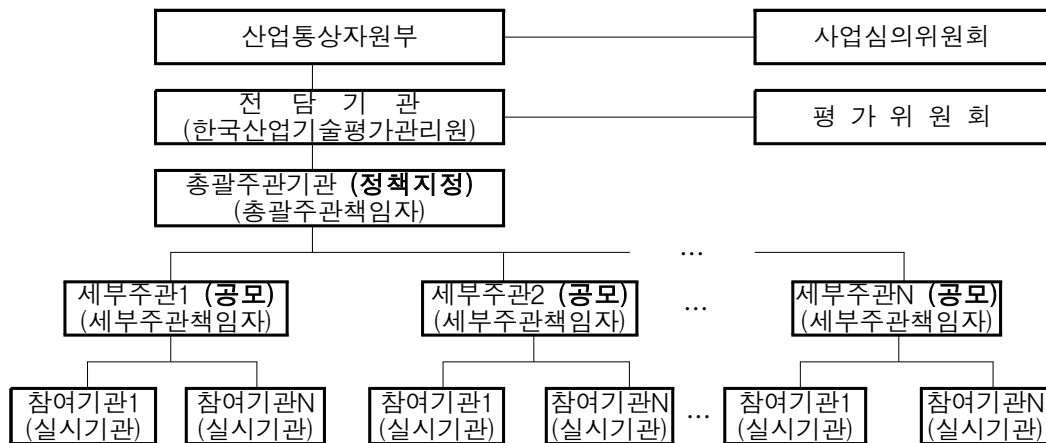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 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출시 및 수출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 추진절차(공모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	5,900	5,900	5,900	5,900	
20~ 24		4,260	6,348	4,049	4,009	3,9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지원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규제 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기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
- (적합성인증)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018												
2019												
2020	4,260	4,260	-	-	-	-	4,260	4,26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018										
2019										
2020. 12월기준	4,260	4,260	4,260	4,260	-	4,260	4,26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2018	
2019	
2020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별도 첨부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과기부, '19), 적합성인증제도(산업부, '14) 운영 중

* 목적: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규제애로 해소. (단, 적합성인증은 제품만 해당)

○ (규제 샌드박스) '先규제면제, 後정식허가'를 지원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 (개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
- (효력) 유효기간(2+2) 내 규제 적용 없이 실증, 사업화 가능, 부처는 법령정비 착수
- (특징) 유효기간 만료 시, 규제특례는 종료, 임시허가는 법령 미정비 시 계속 연장

○ (적합성인증)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 (개요) 전문가협의체가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제품을 인증
- (효력) 알맞은 기준이 없어 받지 못했던 기존인증(KS, KC등)을 받은 것과 동등
- (특징) 마련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고시 → 기존 인증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음

□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❶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❷제품개선 연구지원이 필수

○ (규제 샌드박스)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과 기준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인증기준 연구개발이 필수

○ (적합성인증)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 적합성인증 제도운영(보조금) 예산에서 회의 참석 전문가수당만 편성

〈기존 인증기준 개발 사업들의 한계 존재〉

- Q.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준 제·개정 예산들로 대응이 가능한지?
- A. 기존의 예산들은 다년도 계획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형성이 된 업계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융합신제품 즉시 대응 불가 → 본 사업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진입 적시성(규제 샌드박스, 적합성인증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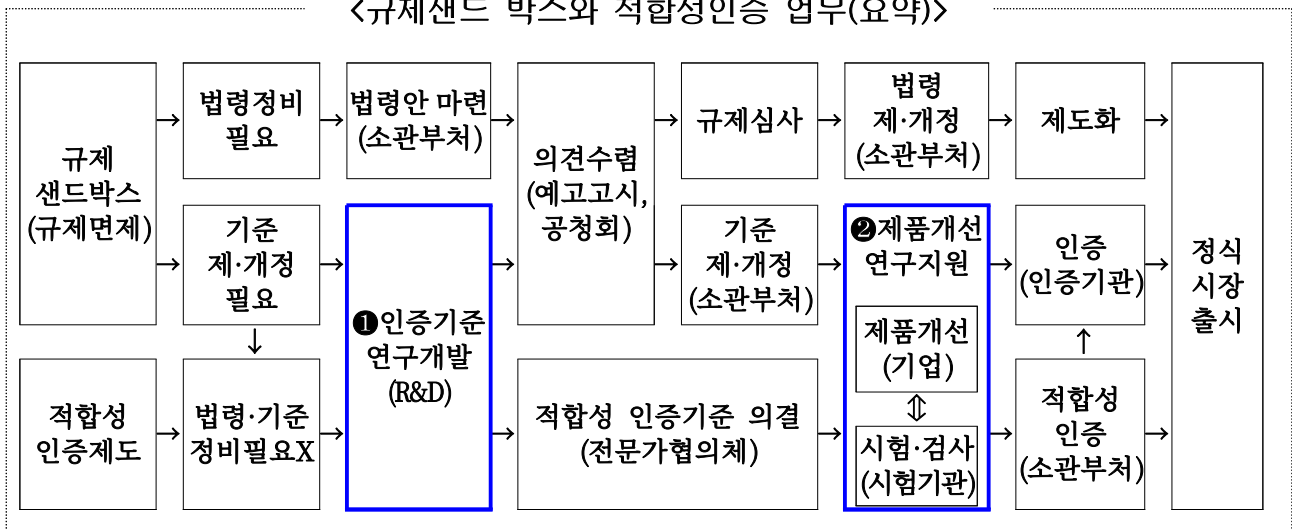
- (공통사항) 새롭게 제안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제품 개선이 필요 → 기업의 제품개선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국가의 행위(새로운 인증기준 개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제품개선) 발생하기 때문

** 적합성 인증 신청 42건 중 7건이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획득 실패

※ (사례) D社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16.9) → 협의체가 마련한 인증기준으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함('17.1) ☞ 내부 역량 부족으로 제품 개선에 1년 이상 소요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 업무(요약)〉



2. 사업내용

- (사업목표)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개발, 제품개선 연구 지원으로 융합신제품의 규제 애로 해소

- (세부내용)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과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기간 중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①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②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③신규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 ①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의결 가능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검증·개발 연구
- ② (제품개선 연구) 새롭게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③ (개발기준 타당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안)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품목 관련 근거 법령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 (차별성) 본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 인증신청 대상 품목만을 지원하며, 인증비용을 지원, 인증 관련 인프라를 구축, 인증 신뢰성 검증 등에 그치는 他사업과 달리 인증기준을 설계·개발(R&D)함

3.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측면)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불확실성 해소
 - (융합신제품 시장출시 지연 해소) 4차 산업혁명 등 시장변화 대응 융합신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국내 시험·인증 기술력 위상 강화 및 시장 출시 지연 해결
 - (융합신제품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성화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
- (과학·기술적 측면)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시장경쟁력 확보)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 및 시험 평가·항목 도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여 시장경쟁력 확보
 - (중소·중견기업 산업 융합 역량 강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있으나,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개선 R&D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역량 강화

붙임 1

융합 신제품 규제 샌드박스 개요

□ 추진 배경

- AICBM 등을 활용,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新제품·서비스 창출
→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 필요

□ 주요 내용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제도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③ 임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1회 연장, 법개정이 완료 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산업부 장관 위원장)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 사업자는 규제특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계부처는 필요시 즉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

붙임 2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적시 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기존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정*으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Fast-Track(6개월 내)**으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 애로해결
- *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
-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신청품목의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마련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며, 향후 유사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제정의 발판 마련

<적합성 인증제도 절차>



사 업 명
(13)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3731-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김종윤 연구관	
		043-870-5510	043-870-55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2,961	2,96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 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961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및기반조성	-	-	-	-	-	-	-	-	-	-	-	2,305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	-	-	-	-	-	-	-	-	-	562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94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2,961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2,867
· 기 획 평 가 관 리 비 (360-06)	-	-	-	-	-	-	-	-	-	-	-	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존 재래식계량기 기반 요금 부과 중심의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목적),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6조(혁신 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 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6.12월 : '18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역사업 일몰
- '18.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 종료
- '20.4월 :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본 사업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국정과제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 부합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및 친환경에너지(전기차, 수소차 등)를 정확하게 계량·측정하고, 상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 계량기에 대한 개발 지원이 필요
 - 또한, 실시간 계량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미래에 대비하여야 함
- **(정부R&D 투자방향)** '21년 10대 중점투자방향 중 ⑤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⑧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⑩국민건강 및 생활 편의 증진 분야와의 부합
 - 5G 등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계량기 개발 및 실시간 빅데이터 측정·처리·활용 기술개발 지원 통해 국내 계량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필요
 - 대면 검침에서 비대면 검침으로의 전환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가스·전력·수도 원격 검침 스마트 계량기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 및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
- **(산업기술혁신계획)**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03)」의 100대 핵심기술의 성공적인 확보를 위한 계량측정 기술 협력 지원 필요
 - 투자전략에 따른 100대 도출 핵심기술 중 '전기차 배터리 충전',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스마트 장비·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계량·측정 시스템의 연계·협력 지원 필요
- **내역사업별 지원필요성 및 산출근거**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2,305백만원(신규)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5종 법정계량기의 스마트미터화(AMI)*를 위한 4대 핵심분야(정보보안, 통신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관리)를 기술개발 지원 절실
 - * (산업부) '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2,250만호에 원격검침(AMI) 설치 및 스마트미터링 표준화 발표 / (국토부) '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 산출근거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다/상	12개	250백만원	9/12	2,305백만원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562백만원(신규)

스마트 제조공정에서 요구되는 산업용 측정기술(자동질량측정기, 3D 광학센싱, 초음파 유량 제어기)의 정밀도 제고를 통한 스마트공정 최적화 필요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00여종의 계량·측정기기 중 약 40여종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계량 측정기기임(예. 연속식 자동계중장치, 렌즈미터 등)

▪ 산출근거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다/상	3개	250백만원	9/12	562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94백만원(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스마트계량 기술고도화)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전국의 약 7,500만대의 법정계량기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

* (산업부) '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2,250만호에 원격검침(AMI)설치 및 스마트미터링 표준화 발표 / (국토부) '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아파트난방계량기 불법조작('19.4월, JTBC뉴스), 납 성분 검출 수도계량기 유통('19.8월, 머니투데이), 수도계량기 봉인 해제 무단 사용('19.11월, 경향신문)

- (신산업 근간 마련) 측정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기반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근간 마련

* 측정기기 시장규모(억원) : ('12)9,257 → ('13)9,729 → ('14)10,225 → ('15)10,746 → ('16)11,294(연평균 5.1% 성장)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기청, 2016]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2,961	5,000	5,000	
20~ 24			2,961	5,000	5,0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계량기 기술개발, 산업용 측정설비 및 부품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세부 추진계획
 - 실시간 계량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홈(HEMS)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계량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보안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및 법정 계량 관련 기술기준 등 신규 제도 개발
 - 데이터 기반 산업의 핵심기기(측정설비,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센서) 기술개발(국산화)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본 사업은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산업을 육성 지원토록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전기·가스 등 법정계량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SOC로 국민편익 제고 및 계량기의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법정계량기의 상거래 규모는 약 640조('15년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1% 오차 발생시 6.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계량기 내구성 및 신뢰성* 제고 및 비대면 검침으로 국민편의 제고 위한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018												
2019												
20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018										
2019										
2020. 12월기준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비 배정 사유 - 추경 편성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18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19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0	- 위와 동일하게 기술

라. 기타 추가자료

- ① 기존사업 종료에 따른 재기획
- ② 계량측정산업 육성 필요성
- ③ 국내 계량측정 산업 현황

붙임 1 기존사업 종료에 따른 재기획

- ① (사업 확대 개편) 법정계량기(13종) 성능향상 위주 사업에서 비대면 네트워크 실시간 스마트미터링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전환·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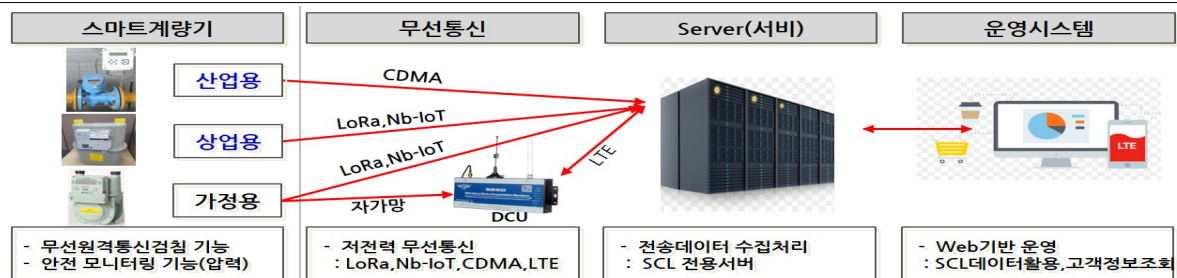
안전인증역량강화('18년~ '20년)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21년~'25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화학물질안전관리기술진흥		

■ (스마트미터링 추진)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5종 법정계량기의 스마트미터화(AMI)*를 위한 4대 핵심분야(정보보안, 통신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관리)를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함

* (산업부) '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2,250만호에 원격검침(AMI)설치 및 스마트미터링 표준화 발표 / (국토부) '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 (측정기기 정밀도 제고) 스마트 제조공정에서 요구되는 산업용 측정기술(자동질량측정기, 3D 광학센싱, 초음파 유량 제어기)의 정밀도 제고를 통한 스마트공장 최적화 필요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00여종의 계량·측정기기 중 약 40여종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계량 측정기기임(예, 연속식 자동계중장치, 렌즈미터 등)

- ② (기존사업과 차별) 신산업분야로의 지원범위 전환 및 중형사업으로의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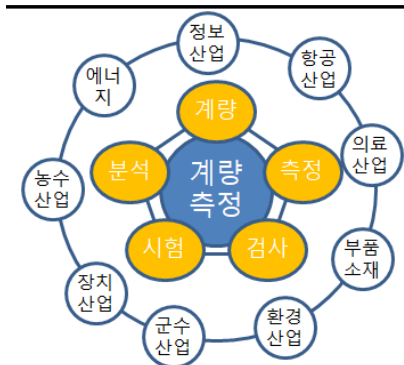
- 신재생 및 차세대 에너지 계량측정 분야 지원 등 신산업으로의 지원범위 전환을 통해 계량측정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기존 과제기간 1년·과제규모 1.5억원 내외 규모의 단기 소형사업에서 중형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계량기 사업화 촉진

구분	차세대계량기술개발('18~'20)	스마트계량측정기술개발('21~'25)
① 내역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확대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세부)의 내역사업으로 운영	·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간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이 상이하여 스마트계량측정기술개발(세부)로 분리하여 확대
② 사업내용 전환 및 확대	· 법정계량기 13종(가스, 전기, 수도 등)의 성능향상·불법조작 방지 등의 기술개발 위주	·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미터 개발, 계량정보 활용 등에 초점
	-	· (확대) 계량기 이외에 산업 제조공정에 쓰이는 센서 등 측정기기 기술개발, 측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붙임 2 계량측정산업 육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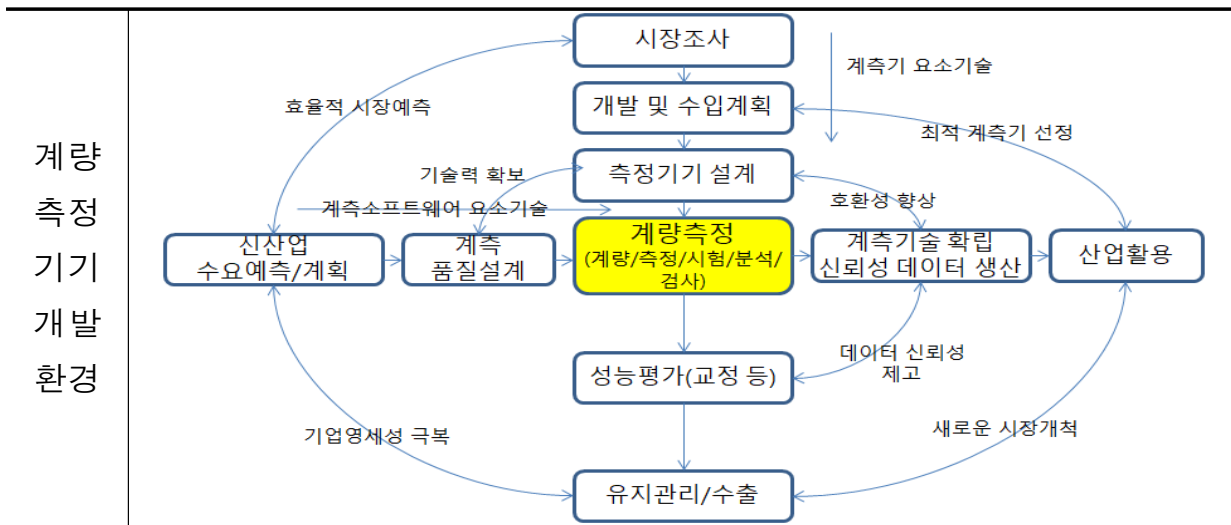
□ 계량측정산업 육성 필요성

- (新산업 육성의 근간) 계량·측정기술은 신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며,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 계량측정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중소기업형 업종으로서 기술집약적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임
- ☞ 반도체, 정보통신, 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측정기술도 고정밀화, 시스템화되고 정밀측정기의 역할이 증대됨
- ☞ 국내는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확보가 미흡하여 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태임(수입의존도 7~80%)

- (계량측정기 개발 환경 조성) 新산업의 예측과 기술개발(R&D)을 위한 고부가가치 계량측정기 개발 환경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 (측정분석기 국산화) 측정 및 분석기기 시장은 연평균 5.1% 성장이 예상되고 고정밀 측정기는 수입에 의존(국산제품 2~30% 수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화 절실히 요구됨

* 측정기기 시장규모(억원) : ('12)9,257 → ('13)9,729 → ('14)10,225 → ('15)10,746 → ('16)11,294(연평균 5.1% 성장)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기청, 2016]

* 계량기 제조기업 90%가 총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17년 계량산업 조사)

붙임 3 국내 계량측정 산업 현황

○ 국내 계량측정기기 품질경쟁력 비교

구 분	품질경쟁력 확보 품목	품질경쟁력 열위 품목
전자 계측기	법용 계측기(오실로스코프 등), RF측정기 등	고사양계측기(스펙트럼분석기 등), LTE통신계측기
기타 계측기	환경계측기, 디스플레이 검사기기	자동차 측정기, 반도체 검사기기, 분석시험기기
기타	유량계, 액면계, 온도계, 적산계기, 전력량계	전자식 유량계(대형 공정용)

* 품질경쟁력 비교(2014 산업경쟁력 조사 중 계측기기 산업)

○ 주요 계량측정기기 수입 현황

구 분	기업명	주요 계량측정기기	소재국
통신	로데슈바르츠코리아	고정밀계측기, 통신장비, 방송장비	독일
	안리쓰코퍼레이션	통신장비, 측정기, 계측기	일본
자동차	호리바코리아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 대기수질분석	일본
	코리아고꾸사이	자동차관련 시험기, 계측기 제조	일본
디스플레이	오보텍코리아	엘씨디, 평판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분석장비	이스라엘
반도체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의·광학·정밀기기	미국
	테라다인코리아	반도체 테스트장비	미국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반도체시험장비, 반도체제조장비	일본
	와이아이케이	반도체 제조	일본
환경	아나코코리아	수질 측정기기	일본
공정용	한국엔드레스하우저	자동측정제어장비	스위스
	한국나가노	공업용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일본
기타	텔레다인테크놀로지스	전기용계측장비(오실로스코프)	미국
	텍트로닉스	산업용계측기, 방송장비	미국
	한국내셔널인스트루먼트	전자계측기 등	미국
	한국플루크	전자계측, 정밀기기, 유량, 압력, 온도계 등	미국
	테스토코리아	계측기, 측량기	독일
	한국미쓰도요	삼차원측정기기, 화상측정기, 형상측정기	일본
	한국에머슨프로세스	제어계측기, 계량기	미국
	한국에이엔디	수분계, 인디게이터, 로드셀, 정밀전자저울, 스케일, 특수목적용 기계, 혈압계	일본

* 품질경쟁력 비교(2014 산업경쟁력 조사 중 계측기기 산업)

<div style="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14)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3731-320)</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박진서	강봉석	-
		043-870-5410	043-870-5419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	-	-	5,826	5,826	5,826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5,826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	-	-	-	-	-	-	-	-	-	4,146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	-	-	-	-	-	-	-	-	-	1,50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18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5,826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5,646
· 기 획 평 가 관 리 비 (360-06)	-	-	-	-	-	-	-	-	-	-	-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11.2.5)
- '11. 1월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병합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6. 1월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으로 재기획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7.17)
- '21. 4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종료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내역사업별 산출근거】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4,146백만원(신규)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에 따른 최신 안전기준 개발, 안전 취약계층 등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산출근거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단상	21개	200백만원	12/12	4,146백만원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1,500백만원(신규)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산출근거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다/상	4개	500백만원	9/12	1,5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80백만원(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 개발건수 (건)	목표	-	-	-	-	-	-	안전제품 및 미 래지향 첨단 제품 안전기준 (안) 개발 건수*	과제 제출자료 (성과분석, 통계 자료 또는 분석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신규사업으로 22년부터 성과발생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 신기술제품 등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 확보

※ 한국소비자원 안전위해 사례는 매년 20,000건 이상 발생

('17) 26,227건 → ('18) 24,013건 → ('19) 20,678건 → ('20. 11월까지) 18,717건

○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제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	-	-	-	-	
20~ 24		-	5,826	5,826	5,826	5,8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 증가 등 제품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비관리 제품 및 사고 다발·사고 우려 제품의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및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안전성 강화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현 시장 상황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선정·진행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의 융·복합화, 신기술 제품 출시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설명자료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후속사업) '20년 종료예정인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제품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필요
-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가속화·기술적 복잡성 증대로 국민의 위해제품 노출우려 증가, 안전사고는 매년 20,000건 이상 발생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1월
안전 사고 건 수	26,191	22,028	26,227	24,013	20,678	18,717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동향)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제품 등 제품안전기준 개발수요 증가
 - IoT, AI, VR, 신기술·신물질 등 제품 안전 위해 발생 우려 증가
 - 안전관리대상 제품 수입, 불법·불량제품, 해외직구 등 급증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제품위해우려 증가
 - 융·복합기술로 인한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복잡성 증대
- (미국) 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제품안전관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의 위해제품 선별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시스템(RAM)* 운영 등
 - * RAM(Risk Assessment Methodology) : 위해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한 IT시스템
- (독일) 소비자 포함 모든 대상 그룹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장·갱신하기 위해 제품 안전 포털 사이트 최적화 연구 시작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관련 사고위해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 (사업기간) '21~'25(5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20예산		'21예산안		
	본예산(A)	추경(+α)	본예산(A)	추경(+α)	예산요구	기재부	비고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 기술지원	-	-	-	-	5,826	5,826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	-	-	4,146 (21개×200백만× ×12개월)	4,146 (21개×200백만× ×12개월)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	-	-	1,500 (4개×500백만× 9/12개월)	1,500 (4개×500백만× 9/12개월)	
③ 기획평가관리비	-	-	-	-	180	180	

☐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①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 4차 산업 혁명 도래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 소비자 특성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②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비관리제품, 사고다발·우려 제품의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 비관리제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제공·전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영세소상공인 대상 R&D 컨설팅 등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사 업 명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조현훈	서상현	-
		043-870-5420	043-870-542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5,858	6,872	6,872	7,171	7,171	299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에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884	5,884	5,858	0	26	6,872	6,872	6,872	3,709 [2,927]	0	0	7,171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006	3,006	3,006	0	0	3,006	3,006	3,006	3,006 [3,006]	0	0	3,466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제품이행점 검	1,110	1,110	1,110	0	0	1,283	1,283	1,283	1,283 [1,283]	0	0	1,576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54	0	26	380	380	380	380 [378]	0	0	380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120	120	0	0	120	120	120	120 [120]	0	0	340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923	923	923	0	0	1,453	1,453	1,453	1,453 [1,453]	0	0	779
· 위해도평가	345	345	345	0	0	630	630	630	630 [630]	0	0	630
○ 비목별 분류(합계)	5,884	5,884	5,858	0	26	6,872	6,872	6,872	6,870	0	0	7,171
· 시험연구비(210-13)	2,980	2,980	2,980	0	0	2,982	2,982	2,982	2,982	0	0	3,444
· 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54	0	0	380	380	380	378	0	0	380
· 사업추진비(240-01)	26	26	26	0	26	24	24	24	24	0	0	22
· 민간경상보조(320-01)	2,498	2,498	2,498	0	0	3,486	3,486	3,486	3,486	0	0	3,3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제품이 납·카드뮴 등 유해 화학물질, 감전보호, 과열방지 등과 같은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

※ ('19년 실적) 조사 : 5,246건, 리콜 : 445건, 개선조치 권고 : 1,163건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 ① **불법·불량제품단속** :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접수된 KC 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 ② **리콜이행점검**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3~5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약 200명)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실시(적발된 제품을 행정조치 요청)

※ ('19년 실적) 모니터링건수 : 114,035건, 적발건수 : 6,474건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09년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중으로, 각 부처별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위해제품(리콜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동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17만개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유통차단

※ ('19년 실적) 누적 운영매장 수 173,708개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18.7)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되어 사후관리만 가능한 23개 품목에 대해, 시장현황조사, 안전기준 준수율 조사를 거쳐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제도·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19년 실태조사 결과, 가죽제품, 가정용 섬유제품,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지팡이, 장신구 등 다수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 사전규제가 완화된 안전기준 준수대상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필요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대상 제조·수입업체 수가 15.6만여개에 이르고 영세율(10인 이하)이 89.6%

- (위해도 평가)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품목 및 융복합 신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 위해특성 및 사고발생확률, 부상강도, 소비자 사용빈도 등 제품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소관부처 지정 및 안전 기준 확립

* 주요사례 : LED마스크, 3D펜, 저주파 안마기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리콜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대한상공회의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0) 3,006 → ('21) 3,466백만원

-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

-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 732백만원(6,100건×0.12백만원)
- 시험수수료 : 2,623백만원(6,100건×0.43백만원)
-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 국내여비 : 22백만원
- 사업추진비 : 22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20) 1,283 → ('21) 1,576백만원

- 국민신문고, 사이버 불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KC미인증, KC도용 등)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 사고 예방

- 산출내역

- 현장단속 및 점검 인력 인건비 : 1,350백만원(30명 × 45백만원)
- 출장비 : 75백만원(50회×30명×0.05백만원)
- 차량유지비 : 106백만원(10대×0.66백만원×12개월 + 10대×25,000km/年×108원/Km)
- 일반운영비 : 45백만원

③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운영 등 : ('20) 380 → ('21) 380백만원

-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여부 감시·차단

- 산출내역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120백만원(6개 분야×20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186명×20일×0.07백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20) 120 → ('21) 340백만원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판매차단

- 산출내역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180백만원

- 시스템 기능 고도화 : 70백만원
- 시스템 장비구축 : 80백만원
- 시스템확산 용역관리,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 10백만원(10백만원×100%)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20) 1,453 → ('21) 779백만원

- 전안법 개정('18.7.1)에 따라 신설되어 사전인증의무 등이 전혀 없는 관리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에 대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 산출내역

- 인건비 : 400백만원(8명 × 50백만원)
- 출장비 : 16백만원(8명×0.05백만원×40회)
- 시료구입비 : 73백만원
- 시험수수료 : 256백만원
- 부적합 방지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34백만원

⑥ 위해도평가 : 630백만원

-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품목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확보

-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 30백만원
- 시험수수료 : 510백만원
- 인건비 : 90백만원(2명 × 45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하향지표)	목표	15	15	15	15	삭제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개선조치 포함) 건수를 고려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 부적합건수 /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안전성조사 결과 보고서(내부자료)
	실적	14.9	15.0	15.4	-	삭제			
	달성도	100.6	100	97.4	-	삭제			
안전성 조사대상 제품수	목표	'21 신설				5,220	최근 3개년 안전성 조사대상 제품수 대비 5% 상향	최근 3개년 평균치 × 1.05	안전성조사 결과 보고서(내부자료)
	실적					-			
	달성도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80,000	95,000	102,000	175,000	180,000	중소유통매장 보급 추진에 따른 증가세 둔화 고려	Σ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부터 확인)
	실적	92,048	100,932	173,723	-	-			
	달성도	115.1	106.2	17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00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17년(4,800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조치 제품 : '15년(420개) → '16년(355개) → '17년(286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9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81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고발(526), 지자체 통보(489), 판매금지요청(731), 인증기관통보 등(67)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오프라인 81,437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3,770건을 모니터링하고, 7,684건에 대해 시정 권고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16.12 유통물류과로부터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92,048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6년(77,836개) → '17년(92,048개)
2018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73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82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48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고발(421), 지자체 통보(372), 판매금지요청(637), 인증기관통보 등(23)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24,617건 모니터링 실시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17년 90명 → '18년 120명)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00,932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7년(92,048개) → '18년(100,932개)

2019

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

□ 제품 유통시장 감시 강화

○ (조사대상 확대) 전가생활어린이용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수를 전년대비 373개(7.4% ↑)를 확대하여 총 5,246개 실시하는 한편,

- 특히, 사회적 유행제품, 위해 우려제품 등 이슈제품에 대한 수시 조사 횟수와 조사품목을 대폭 확대('18년 1회(971개) → '19년 6회(1,104개))

< '19년 수시 안전성조사 세부 현황 >

구분		시기	주요 조사대상 등	조사결과		조사 사유
				조사	리콜	
공기청정기(공동)		`19.8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85	0	사회적 유행(미세먼지)
배터리 내장제품	1차	`19.7	전동킥보드, 손선풍기 등	82	1	위해우려(폭발, 화재)
	2차	`19.10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366	4	위해우려(폭발, 화재)
액체괴물		`19.11	액체괴물	148	100	위해우려(안전기준 초과)
어린이제품 사각지대	1차	`19.11	할로윈 유행제품	52	2	사회적 유행
	2차	`19.11	테마파크 제품	371	17	위해우려(조사 사각지대)
계				1,104	124	-

○ (불법제품 시장 퇴출) 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을 전년 대비 120건(37% ↑) 추가 적발하여 총 445개 제품을 리콜조치

* 최근 3년간 리콜 건수: ('17) 286건 → ('18) 326건 → ('19) 445건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및 리콜 건수 및 조치율 >

분야	2017			2018			2019		
	조사	리콜	리콜율	조사	리콜	리콜율	조사	리콜	리콜율
어린이제품	2,418	136	5.6%	2,529	216	8.5%	2,668	291	12.4%
생활용품	950	22	2.3%	792	34	4.0%	690	61	9.0%
전기용품	1,432	129	8.9%	1,552	76	4.9%	1,875	94	5.7%
계	4,800	286	6.0%	4,873	326	6.7%	5,233	446	8.5%

주) 생활용품은 '18년 7월 전안법 개정이후 위해성이 낮은 가정용 섬유제품 등 22개 품목이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편입되면서, 계도기간 운영 등에 따라 조사규모가 축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콜비율 개선

○ (중점관리품목) 리콜비율이 높고, 사고 빈발 제품을 중점관리품목(30개)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관리한 결과, 20개품목의 리콜비율이 개선되었으며,

- 20개품목의 리콜비율은 전년대비 10.8 → 6.5%로 개선됨

< 리콜비율 개선된 20개 품목 안전성조사 결과 >

분야	부적합건수					
	'18			'19		
	조사(건)	리콜(건)	부적합률	조사(건)	리콜(건)	부적합률
어린이제품	696	66	9.5	697	44	6.3
생활용품	86	23	26.7	197	24	12.2
전기용품	358	34	9.5	534	25	4.7
계	1,140	123	10.8	1,428	93	6.5

○(위해우려품목 등) 부상·화재 우려도가 높은 품목 등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 결과, 다수 품목에서 **전년비 리콜비율이 개선***(14.0 →5.0%)되었으며,

- 특히, 휴대용예초기날(‘18, 26.3%), 스노보드(‘18,22.2%), 전기온수매트(‘18,15.4%)의 경우는 **금년도 리콜비율이 모두 0%***였음

* 조사건수는 휴대용예초기날과 스노보드는 전년과 동일, 전기온수매트는 13→81개로 확대 조사

< 2019년 주요 리콜비율 개선품목 >

분야	품목명	2018			2019		
		조사	리콜	리콜비율	조사	리콜명령	리콜비율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차	12	4	33.3%	30	5	16.7
	헬스기구	9	2	22.2%	34	2	5.9
	휴대용 예초기의 날	19	5	26.3%	19	0	0.0
	스노보드	9	2	22.2%	9	0	0.0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128	11	8.6%	280	15	5.4
	멀티콘센트	58	3	5.2%	77	1	1.3
	전기온수매트	13	2	15.4%	31	0	0.0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12	4	33.3%	13	1	7.7
	어린이용 물안경	18	4	22.2%	10	0	0.0
계		278	37	14.0%	503	24	5.0

□(시의적절성 확보) 신학기, 가정의 달 등의 수요 급증 예상품목을 맞춤형 조기 정기조사(년 4회)를 통해 소비자 구입전에 불법제품 유통 차단

< 최근 3년간, 정기 안전성조사 결과 언론 공표일자 >

구분	2017			2018			2019		
	조사	리콜	공표일자	조사	리콜	공표일자	조사	리콜	공표일자
신학기(개학일, 3.2일)	616	39	3월 15일	548	37	3월 8일	608	51	2월 28일
가정의 달(어린이날, 5.5일)	983	59	4월 26일	1,115	44	5월 4일	1,236	90	5월 1일
여름철(하계휴가, 7월 중순)	739	48	7월 17일	869	20	7월 10일	1,001	71	7월 11일
겨울철(성탄절, 12.25일)	1,130	82	12월 22일	1,366	135	12월 21일	1,271	103	12월 13일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023개 업체(소비자 모니터링 적발결과 포함)에 대해 신고건을 접수받아, 그 중 3,145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99), 지자체 통보(647), 판매금지요청(1,850), 인증기관통보 등(49)

□(불법조사 강화) 불법 신고조사 민원 처리업무를 관리원으로 이관(‘19.1. 당초 국표원)이후 5,248건(‘18년대비 37% ↑)을 집중 조사하여,

○ KC미인증 등 2,477건의 불법 제품을 적발(적발율 47.2%)하여 행정조치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불법신고 민원업무를 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처리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율이 감소(‘18)9.3%→(‘19) 7.1%)하고, 국표원의 업무부담도 완화

< 민원업무 이관 전후의 민원인 불만을 비교 >

구 분	'18.	'19년(11월말 기준)	증감
불법조사 민원	1,167	3,209	175%↑
불만(매우 불만 포함)	109	229	110%↑
불만을	9.3%	7.1%	2.2%↓

□(리콜회수율 제고) 관리원 리콜점검팀(4명) 신설·운영 및 점검 강화, 리콜공표문 개선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전년비 40.6 → 47.2%로 제고

○(점검 강화) 리콜 점검횟수를 ('18) 376회(241건) → ('19) 595회(439 건)로 확대

○(공표문 개선) 공표문상에 제품 사진 확대, 제품·사업자 정보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콜정보 인지도를 제고시켜 리콜참여 유도

* 년도별 리콜회수율 추이: ('17) 42.1% → ('18) 40.6% → ('19) 47.2%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14,035건 모니터링 실시
- KC마크 누락 등 불법이 의심되는 6,474개 제품에 대해 자율시정권고 등 실시

□ 온-오프라인상 전기·생활·어린이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제품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 (전체모니터링 실적) 114,035건, (불법·리콜 적발/조사요청 실적) 6,454건

○(관계부처 합동) 행안부, 교육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신학기(3월) 및 개학기(9월) 학교주변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어린이용품 합동점검을 실시

- 133개 매장 2,084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불법의심제품 74건을 적발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행정조치 요청

○(홍보제도) 우리원과 공동협력하여 위해성이 높은 특정제품(단전지 등)의 유통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및 위법성을 홍보·계도('19.10.)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73,708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된 445개 제품을 실시간 원천 차단조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8년(100,932개) → '19년(173,708개)

□(시스템 개선) 리콜조치된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산업부·식약처 등과 공동운영('09~)중이나, 운영·관리상 문제점으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①(SafetyKorea와 시스템 연계) SafetyKorea와 위해상품 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공유하도록 시스템 연동화 완료('19.12. 위해상품 정보입력 방식 일원화

②(시스템 도입 확대) 미가입 유통사, 온라인몰과 시스템 도입 논의 중

○(미도입 유통사) 최근 급성장 중인 쿠팡, 다이소(중저가제품 전문유통) 협의를 완료하였고, 차별로 내부 실정에 맞춰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추진 중

	<p>○(온라인몰) SSG, 11번가, G마켓, 옥션 등 13개사와 개별 실무회의를 통해 바코드 도입 필요성 논의 및 현장의견 수렴</p> <p>* 온라인몰 사들은 바코드를 활용한 제품 식별방식 도입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동의</p> <p>□(홍보 강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사업자 시스템 도입 유인 효과)를 위해 시스템 홍보 영상 제작·배포(지하철, 유튜브 등에 홍보 중)</p>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p>□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 시장현황 및 안전실태 조사('19.2.~7., 용역) 완료</p> <p>○(시장현황) 22개 품목, 1,285제품 취급업체는 제조 72,647개, 수입 82,991개, 도·소매는 233,542개 업체이며,</p> <p>- (주요 업체) 가죽섬유제품, 장신구 등 3개품목의 제조수입업체가 60%</p> <p>- (사업체 분포) 대부분이 서울경기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외 신발은 부산(51.7%), 안경은 대구(75.7%)에 주로 분포</p> <p>- (영세율,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체 7.2만개중 영세사업자 비율이 89.6%</p> <p>○(안전실태) 가죽섬유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약 5%내외인 반면, 장신구는 부적합률이 33%로 매우 미흡하였으며,</p> <p>- 그 외에도, 고령자용 지팡이(25%), 목욕의자(77.8%)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p> <p>☞ 부적합률 상위 품목을 우선 집중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제품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20년부터 부적합률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필요</p> <p>* 품목별 부적합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사업자 협의체 대상 교육 실시 등</p> <p>□ 전안법이후 변화된 제도에 대해 사업자 대상 홍보 강화</p> <p>○ 제도 이해가 부족한 사업자(소상공인, 관련단체, 온라인쇼핑몰판매자)와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제도용 카드뉴스 제작·배포 중</p> <p>* 관련업체가 집중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제조·판매업체 방문·교육 시행</p> <p>⑥ 위해도평가</p> <p>- 이어플러그, 발열조끼 등 비관리품목 11개 품목 253개 제품에 대해 물리·화학적 위해도 평가 실시 → 2개 품목(발열조끼, 휴대용 암밴드)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p> <p>- 전국 소비자 2,500명 대상 이용실태조사 실시</p>
2020	<p>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p> <p>□ 제품 유통시장 감시 강화</p> <p>○ (조사 확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전년비 횡수(전기4~5회, 수사 6~7회), 중점관리 품목(30~50개) 등을 확대하여 불법·유해제품 집중조사</p> <p>- 조사 결과, 334개 리콜(안전기준 위반), 1,163개 개선권고(표시 위반)</p> <p>< '20년도 안전성조사 및 행정조치 결과(정기수시) ></p>

구분	조사				행정조치							
					리콜				개선조치			
	어린이	전기	생활	소계	어린이	전기	생활	소계	어린이	전기	생활	소계
정기조사(5회)	2,511	1,488	595	4,594	156	78	46	280	433	252	237	922
수시조사(7회)	268	160	264	692	40	5	9	54	78	41	122	241
총계	2,779	1,648	859	5,286	196	83	55	334	511	293	359	1,163

- (사회적 이슈 대응) ㉠코로나19 수요급증 제품, ㉡온라인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유통 차단

* ① 마스크, 실내 여가용품 등 언택트용품을 3회에 걸쳐 618개 조사, 53개 리콜
 ② 인기 직구·구매대행품(48개)을 첫 조사 → 국내안전기준 부적합 23개를 적발, 차단 및 소비자주의 촉구(제품안전정보센터, 언론 등에 제품정보 공개)

- (어린이 안전 확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수량을 전년비 확대(2,688→2,779건, 전조사 수량의 53%), 유해제품의 시장 퇴출조치

* 조사/리콜(건) : ('18) 2,529/216 → ('19) 2,668/291 → ('20) 2,779/196

- (기관간 협력) ㉠환경부 조사결과 후속조치(적극행정), ㉡소비자원 공동조사, ㉢식약처-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공동 연계한 시장감시 역량 제고

* ① 환경부의 '20년 어린이제품유해성실태조사 결과를 우리원은 리콜조치/점검
 ② ('20.5.) 여름용품(구명조끼류)에 대해 우리원/소비자원 안전실태 역할분담 공동조사
 ③ ('20.6.) 우리원은 마스크제품 KC 불법표시 및 나노필터마스크 유통실태조사후, 공정위 고발(301개제품) 및 식약처에 나노필터마스크(480개) 관리강화 요청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적합률 개선

- (품목별) 지속적인 유통시장 조사·감시를 통해 전 품목분야의 부적합율이 전년비 개선(8.5→6.3%)되고,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감소(446→334건)

- (어린이용품) 어린이용품 인증건수의 75%이상을 차지하는 3대 품목(완구, 유아의류, 학용품)의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11.1→ 5%)

- (전기용품) 금년도 조사대상 53개 품목중 31개 품목에서 리콜 건수가 "0"건이었으며, 부적합율(5%)도 전체 평균이하 유지

- (중점관리품목) 부적합률이 높고, 사고빈발제품을 중점관리품목(50개)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관리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비 개선(10.5→ 6.8%)

- 특히, 부적합율이 개선된 학용품, 휴대용레이저용품, 전기매트 등 주요 30개 품목의 경우의 부적합율 개선효과가 더 큼(12.7 → 5.9%),

□ 조사 업무시스템 체계화

- (서류구입방식 개선) 관리원은 품목 세부 제품별(아동 섬유→신발류→운동화), 구입경로 등 구입 계획을 우리원에 사전 보고·협의하고, 승인 후 구입 개시

* (기존) 품목별 세부 제품군, 구입처 등은 관리원 담당자에 모두 일임

- (정기조사 확대/분리) 제품별 소비 수요에 맞춰 소비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각 조사별 주제를 명확히 하여 계절성/중점관리품목을 분리 조사

- 시기별 맞춤형 조사로 확대 개편(4→5회)하고, 최대한 신속히 조사후 리콜조치함으로써 소비자 구입·사용전에 위해제품을 조기 차단

- (시험신뢰도 확보) 새로운 안전기준 품목 조사 개시전에는 기관간 시험방법 사전협의, 시험시험* 등을 실시토록 하여 기관간 편차 최소화

※(예) LED마스크 안전기준 개발기관인 KTL에서 조사 참여시험기관 대상 시범교육 ('20.7)

- (시험수수료 지급방식 개선) 시험기관에 지급하는 연간 수수료의 80%(약55%)를 차지하면서도, 별도 기준이 없던 5대 유해성시험의 공통단가기준* 마련

- 또한, 그간 시험기관에 미지급했던 안전성조사 추가 업무수행(표시사항 검사, 공표문 작성 등)분에 대해서도 기관 인건비부담을 고려, 일정수준 현실화해 줌

* (기존) 시험기관은 품목 특성, 시험 항목수 등에 관계없이 건당 일괄 단가(50만원 내외)로 청구토록 하여 차수별/기관별 단가의 일관성 부재(※감사 지적 우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시료 구입(구입처, 세부품목군 등)에서 ②시험결과, ③처분·공표문, 통계까지 모든 정보를 표준 DB기반 관리시스템*으로 구축운영 中

* (기존) 기관별 개별 양식에 따라 DB정리하고, 이메일 기반 결과보고·공유

* (개선)①(관리원)시료정보 입력→②(시험기관) 결과 입력→③(우리원)행정조치, 통계관리

□ 사업자를 위한 KC표시사항 표준지침 마련/활용

- (표시기준 정립) 매년 사업자의 표시사항 위반을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278개 품목별^{390개 세부품목} 법적 표시기준을 종합 정리한 공통지침서 제작*

* 제작 방식: 우리원과 제품안전협회(전문가) 초안 → 인증기관 감수 → 완성('20.3~11.)

- (활용) 시험기관에서는 품목별 인증서 발급단계에서 반드시 해당사업자에게 지침서를 동시 배부토록 하고, 필요시 일관된 표시사항 교육도 병행 실시

②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사업자 리콜이행력 제고

□ 제품안전관리원, 「리콜이행점검지침」 제정/ 리콜점검체제 완비

- (전담책임제 운영) 관리원(리콜점검팀) 내 업체별 책임 조사원을 지정, 리콜계획-이행점검-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전담관리

- (점검 조기개시) 사업자의 리콜 이행상황을 단기간내에 점검·독려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점검 개시시점 단축(행정처분후 3개월 → 1개월)

*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미진한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및 독려

- (평가방식 개편) 점검 지속/완료 여부 결정 시, 홍보실적을 반영하던 기존 방식 대신, 회수율 실적 중심 평가제로 전환('20.8월부터 시행)

* (기존) 회수율과 홍보실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50점이상이면 점검 완료(1차 점검: 70%, 2차 점검: 30%가 점검이 완료)

- 기존 업체당 평균 1.5회 수준이던 점검횟수를 업체별 회수율에 따라 점검횟수를 3~5회까지 확대·차등화하는 한편,

- 책임 조사원의 보다 효율적인 조사·점검업무 이행과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면 점검과 수시 유선점검을 병행 시행 中

* 이행점검 실적(건) : ('19) 579(업체당1.5회) → ('20) 1,027건(업체당2.2회)

- (리콜 관리시스템) 사업자 보고부터 점검 차수별 점검실적까지 쏙 주기 통합관리 DB를 구축하고, 조사원의 모바일 점검방식*으로 전환

* (기존) 점검표 수기작성 후, 전산입력 등 별도 작업 필요

(개선)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시스템 즉시 접속하여 실시간 점검·관리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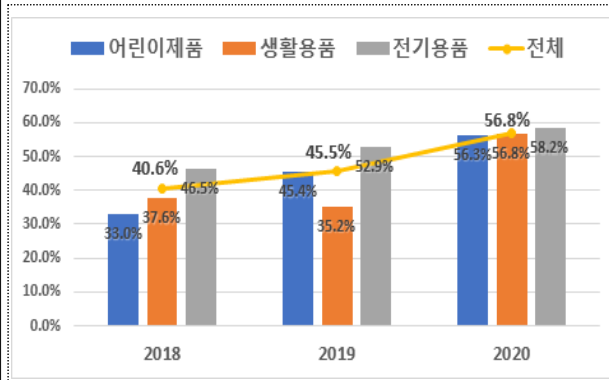
□ 사업자·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 (리콜이행 매뉴얼 제작) 사업자의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해 리콜계획서 작성, 리콜 절차, 소비자 대응방법 등 교육용 '리콜이행 매뉴얼'을 제작·배포*
 - '리콜이행 매뉴얼'을 사업자 교육용 영상으로도 제작, 행정처분시에 리콜 사업자에게 송부(이메일)하여 리콜이행에 참고토록 조치
- * '행정처분전 리콜가이드' 및 '리콜이행가이드북'을 각 2,000부씩 제작 배포 중('20.6~)
- (소비자 맞춤형 홍보)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를 위해 학부모 이용도가 높은 인기 알뜰 장앵, 맘카페 등을 활용, 리콜제품정보를 배너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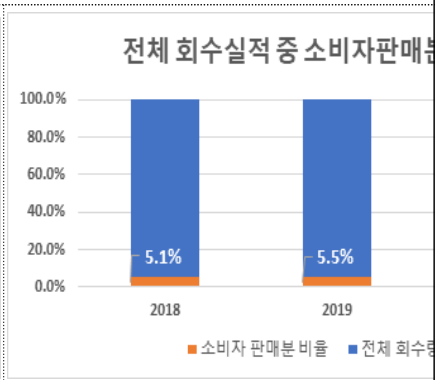
□ 리콜회수율 제고

- (회수율 향상) 전담책임제 도입(전주기 관리), 점검횟수* 확대, 상시점검제 등을 통해 리콜회수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45.4→ 56.8%)
 - * 차수별 평균 회수율 증가: (최초 점검) 40.4% → (2차) 43.1% → (3차) 45.2%
- (소비자 참여 확대) 그간, 사업자의 리콜 회수율 실적 중 소비자 구입·사용분 회수 비중이 5%대에 불과했으나 금년도에는 20%대까지 확대
 - * 전체 회수실적 중 소비자 판매분 비율: ('18) 5.1% → ('19) 5.5% → ('20.10) 20%

< 리콜 회수율 >



< 회수실적 중 소비자 판매분 >



③ 불법/리콜제품 유통 차단

□ 불법제품 조사·단속 강화(※관리원(조사/조치요청)→지자체·관할경찰서)(과태료/형사처벌 등)

- (조사건수 확대) KC 미인증, 인증 도용 등의 불법 단속을 강화하여 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30% 확대(6,549 → 8,453(예상), 1,904 ↑)
 - 조사결과, 4,216개의 불법제품 적발하여 해당 위반사업자를 관할경찰서, 지자체 등에 과태료,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 요청
- (직무분석/인력충원) 급증하는 불법조사 민원 해결을 위해 관리원 조직과 직무분석을 실시, 조직 운용/조사 방식 효율화(안)을 도출하였으며,
 - 소요예산을 확보, 년차적 조사인력 충원 中(기존 10명: ('20) 5명(完) → ('21) 3명)
- * 운영기간 및 수행기관: '20.7. ~ 12. / 수행기관: '집현'(컨설팅 기관)

□ 온/오프라인 시장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 차단조치 강화

- (연중 감시) 소시모 등 6개 소비자단체(모니터링단 약180명)와 공동·연계모니터링사업을 1월부터 조기 착수하여 연중 감시체제로 전환(기존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시장 전체 모니터링 실적이 전년비 16% 확대(114,035→132,575건) - 특히, 코로나19이후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온라인몰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 * 온라인 모니터링건(전체 중 비중) : ('19) 56,180(49%)→('20) 110,510(79%) ○ (리콜제품 차단) 온라인몰상 재유통 리콜제품만을 24시간 전담 감시하는 요원을 별도 운영 (인턴 4명), 日 단위로 실시간 차단조치*(‘20.7.~12, 총3,164건) * 전담요원(리콜제품 적발·통보)→우리원/관리원(차단 요청)→온라인중개업체(차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용 ○ (도입 확대) 리콜제품 시중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시스템 운영매장(('19)173,723→ ('20)180,891개)과 등록상품(('19)10,349→('20)11,709건)을 지속 확대 中 - 특히, 금년도는 중저가용품 전문유통업체인 다이소(매장수1,365개)와, 온라인 대형 유통사인 쿠팡, 네이버(‘21년초 도입 예정) 등이 시스템을 도입 ○ (고도화 추진) 시스템 노후화(‘09년 도입후 고도화 미실시)에 따른 과부하, 호환성 문제 등 해결을 위한 SW, HW 개선 예산(‘21년)을 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21.1/4) * 시스템 관련 사업예산: ('19) 1.2억 → ('20) 1.2억 → ('21) 3.4억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사업자 맞춤형 현장제도 및 교육/홍보 강화 □ (안전실태조사/제도) 제품안전 실태조사(‘20.5.~10.)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9개품목, 1,084건)된 해당 영세사업자 대상의 현장방문제도* 실시(‘20.8.~12.) * 조사대상(9개):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장신구, 우산 및 양산, 반사안전조끼, 텐트 등 * 현장제도 방법: 1,084개사중 주소 파악이 가능한 398개사에 대해 현장 제도 추진 (안전요건(68건)- 관리원 전담, 표시사항(330건) - 2개 소비자단체 전담) □ (가이드북/홍보) 제도 이해도가 낮은 사업자 대상으로 23개 품목별 법적 기준, 표시의무 등을 상세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배포(2만부)하는 한편, ○ 안전기준준수대상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내 지하철역사(동대문역, 회현역 등)를 중심으로 제도 홍보영상 송출(‘20.11~12월간)
--	--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을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15년부터 10개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취약 계층인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즉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위해우려 조기 불식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18.9.21)에 따른 사후관리 기능 확대**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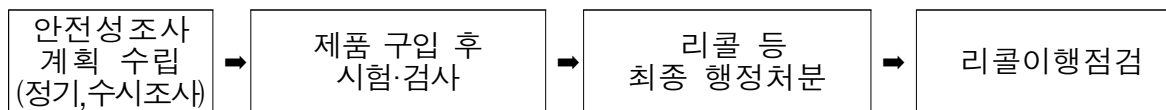
-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18.7.1 신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관리품목을 발굴하여 그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
-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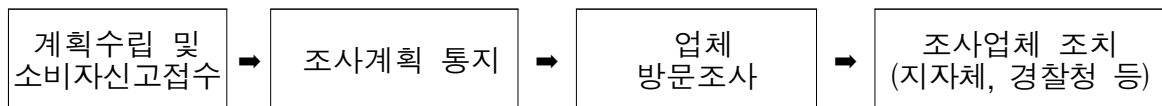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등)

가. 불법·불량제품 단속



- (신고접수) 주로 국민신문고, 협회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소비자단체 (분야별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판매중지, 시정권고 등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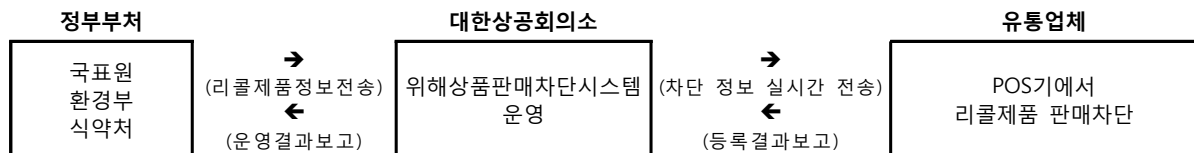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불법제품은 제품안전협회에 통보·확인 후 형사고발 조치/시·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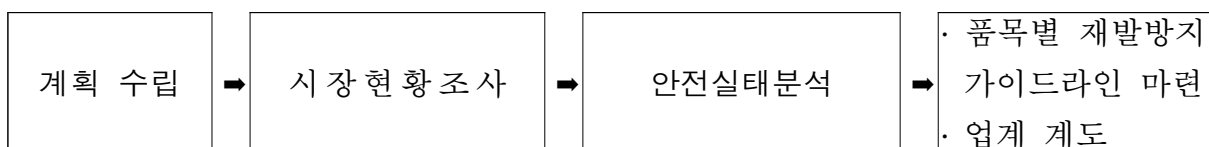
* 온라인의 경우, 모니터링단체에서 직접 자율시정권고(제품정보 수정, 삭제 등)

- 리콜제품은 리콜이행점검팀에 인계하여, 조사 실시 후 보완명령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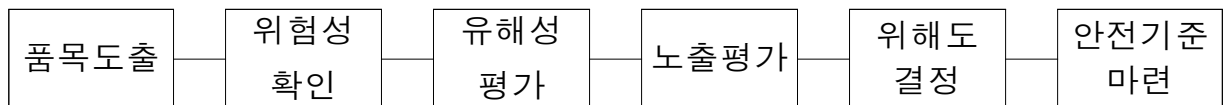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2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 (후속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부적합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자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⑥ 위해도 평가



- (품목도출) 시중 유통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비관리제품 및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신제품 출시 등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도출
- (위험성확인) 국내외 관련 표준,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정보, 사고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발생 가능성(확률)을 산정하여 위험성 확인
- (유해성평가) 위험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해요소의 함유량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표준에 따라 제품시험 실시
- (노출평가) 유해물질의 노출대상, 노출정도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체 유해성 등을 평가
- (위해도결정) 위험성확인,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를 근거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위해도 및 이에 따른 향후조치 사항 결정
- (안전기준 마련) 위해도평가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안전기준(안) 마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5,884	6,472	7,120	7,120	7,120	
20~ 24		6,872	7,216	7,816	8,416	9,1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예산 1.2억원)의 보조금 분할교부 원칙 준수 필요('19.8, 상임위)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 직후부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분할교부 원칙 준수('19.8~, 계속)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 *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소비자단체의 제품안전감시단을 통해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나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통해 시중유통제품 차단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 ('17) 보통, ('20) 미흡

평가지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7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 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	-	보통	
2020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 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	-	미흡	

○ '19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 정상추진(92.2/100)

- 사전규제완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후관리의 핵심은 부적합제품을 리콜하고 불법제품을 단속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여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평가지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2019년	보조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정상추진

※ 참고 : 동 사업은 2016년에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정상추진 판정

13) 부처 건의사항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의 '21년 정부예산안은 '20년 대비 299백만원(4.4%) 증액 편성되었음
- KC미인증제품 사고 빈발, 정부 관리소홀에 대한 외부지적, 리콜제품 회수율 저조 등에 대한 국민·언론 등의 우려가 지속 반복되고 있어,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적기 해소가 필요한 상황
- ⇒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에 대한 선제적 단속,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인력 확충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

< 참고 : 지적 상황 등 >

- ▶ (사고발생)
 - 전동킥보드류 : 최근 4년 화재 사고 총 36건 중 KC미인증 제품이 34건
- ▶ (언론보도)
 - KC미인증 불법마사지기 유통 사실 지적('18.11)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미인증제품 사용 사실 지적 등('19.5)
- ▶ (소비자원 지적)
 - 어린이제품 핑거페인트류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인물질 검출 보도('17.10)
- ▶ (국회 지적)
 - ('18.10, 김성환 의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액체괴물(완구) 제품이 리콜조치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 엄정한 조치 요구
 - ('18.10, 이철규 의원) 리콜조치된 아동용품의 회수율을 제고 필요
 - ('18.10, 백재현 의원)
 - 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요망
 - ② 리콜 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
 - ('19.11, 이훈, 송갑석 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후관리 인력 확충 시급

- 또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던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보다 엄정한 수행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18.9.21,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였으며,
 - 제품안전관리업무의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기존 협회 회비, 자체 수입 등을 정부재정으로 대체 지원(기존 협회 지원 예산대비 1,639백만원 증액이 불가피)
 - 다만 관리원은 법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착기임을 고려하여 종전 협회와 동등 수준의 규모로 운영 중
- 이에 따라, 리콜건수 및 소비자사고 지속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립 첫 해인 '19년은 인력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관정착에 주력한만큼,
 - * 리콜건수 : ('17) 285 → ('18) 321, 전기용품 사고건수 : ('15) 7,965 → ('18) 10,309
 - 각종 불법·위해제품 유통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규모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4,025	4,632	-	-	-	-	4,632	4,625	99.8	99.8	-	7
2018	4,025	4,025	-	-	-	-	4,025	3,991	99.2	99.2	-	34
2019	5,884	5,884	-	-	-	-	5,884	5,858	99.6	99.6	0	26
2020	6,872	6,872	-	-	-	-	6,872	6,870	99.9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756	756	756	756	0	756	756	0	0	100
2018	876	876	876	876	0	876	876	0	0	100
2019	2,498	2,498	2,498	2,498	0	2,498	2,498	0	0	100
2020. 12월기준	3,486	3,486	3,486	3,486	0	3,486	3,486	0	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특이사항 없음
2018	- 특이사항 없음
2019	- 특이사항 없음
2020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박진서	강봉석	-
		043-870-5410	043-870-5419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3,521	1,794	1,794	1,579	1,579	△ 215	△ 1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538	3,538	3,521	-	17	1,794	1,794	1,794	1,761 (1,761)	-	33	1,579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00	700	687	-	13	700	700	700	699 (699)	-	1	600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1,006	1,006	1,004	-	2	1,002	1,002	1,002	972 (972)	-	30	887
·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92	92	90	-	2	92	92	92	90 (90)	-	2	92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1,740	1,740	1,74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538	3,538	3,521	-	17	1,794	1,794	1,794	1,761 (1,761)	-	33	1,579
· 일반수용비(210-01)	366	366	365	-	1	367	367	395	395 (395)	-	-	295
· 임차료(210-07)	41	41	41	-	-	41	41	8	8 (8)	-	-	41
· 재료비(210-11)	30	30	29	-	1	30	30	35	35 (35)	-	-	30
· 관리용역비(210-15)	92	92	90	-	2	92	92	92	90 (90)	-	2	92
· 국내여비(220-01)	22	22	22	-	-	22	22	29	29 (29)	-	-	21
· 국외업무여비 (220-02)	37	37	37	-	-	37	37	30	0 (0)	-	30	33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	-	19	19	19	19 (19)	-	-	17
· 일반연구비(260-01)	700	700	687	-	13	700	700	700	699 (699)	-	1	600
· 민간경상보조 (320-01)	490	490	490	-	-	486	486	486	486 (486)	-	-	450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740	1,740	1,740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출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리콜, 사업자 사고조사 등 관련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제도 개선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홍보 : 제품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소비자·기업에 대한 홍보·교육 (보조사업)
 - 제품안전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 :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품안전 국제기구(OECD, ISO, CPSC 등)와의 교류·협력 채널 구축, 국민이 제품 안전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등 운영
- (제품안전정책·정보안내시스템 운영) 제품사고, 리콜, 안전인증 등 제품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04. 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12.23)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12.23)
- '07.12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12.21)
- '10. 1월 :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 ('11.2.5)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2.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5.23)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5. 1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8)
- '15.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5.18)
- '16.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1.27)
- '16. 3월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7.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1)
- '17.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12)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0)
- '19.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10)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7.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20) 700백만원 → ('21) 600백만원 (△14.3%)

- (산출) 50백만원(연구용역 평균단가) × 12종(1년 필요수요)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20) 1,002백만원 → ('21) 887백만원(△11.5%)

- (산출①) 제품안전 교육·홍보(민간보조) : ('20) 486백만원 → ('21) 450백만원(△7.4%)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홍보 : 227백만원
-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대상의 리콜제도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88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36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총 50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20)
-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 안전 참여·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79백만원
- * 정보관리 운영 및 지원 : 20백만원

- (산출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20) 516백만원 → ('21) 437백만원 (△15.3%)

- * 제품안전 관련 회의 개최, 자료제작, 국제협력 등(단위: 백만원): 수용비 295, 임차료 41, 재료비 30, 여비 54, 사업추진비 17

③ 대국민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 ('20) 92백만원 → ('21) 92백만원(0.0%)

- (산출) 제품안전 정책·정보제공 시스템(SafetyKorea.kr) 유지보수 : 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단위:건)	목표	22,000	22,000	24,000	35,700	35,700	최근 3년간 평균 접속건수와 외부 환경 변화 반영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건수 =년 방문건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SafetyKorea.kr)
	실적	25,463	35,397	34,592	29,865	33,717			
	달성도	116%	161%	144%	83%	94%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실적
2017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3개 과제 수행을 통해 ‘리콜 이행점검’,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운영’ 등 관련 제도 정비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대상 제품안전교육 : 14회 1,403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2회 99명 ○ “2017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COEX 컨퍼런스룸, 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BS, CJ) 및 라디오, 온라인 광고(네이버 해피빈), 지상좌담회 개최(4월, 11월, 국토원-S신문 공동주최)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유튜브 등)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운영(제도8회, 기술9회)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2월 : 미국 플로리다, 11월 : 일본 도쿄) - 일본 경산성 및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사고조사 벤치마킹(3월) - 제14, 15차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건수 대폭 증가 <p>* 1일 평균 접속건수 : ('15년) 15,788건 → ('16년) 20,374건 → ('17) 25,463건</p>

2018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위해도 평가방법 및 소비자정보 제공방안 연구” 등 25개 과제를 통해 ‘사업자 사고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전안법 추가 등 관련 제도 정비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22회 1,566명(소상공인 4회 306명) ○ “2018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COEX 컨퍼런스룸, 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TV 광고(11월, KBS, MBC, SBS 17회), 온라인 광고(5월), 지상좌담회 개최(5월, M경제지) - 카드뉴스(11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 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6월) 및 2018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11월) 개최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 미국 플로리다, 11월 : 벨기에 브루셀)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건수 대폭 증가 * 1일 평균 접속건수 : ('16년) 20,374건 → ('17) 25,463건 → ('18년) 35,398건
2019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유통 비관리 제품 조사·분석” 등 23개 과제를 통해 ‘LED 마스크 안전관리’ 등 관련 제도 정비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654명 ○ “2019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COEX 컨퍼런스룸, 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관리센터 SNS 개설 및 광고(8~12월) - 카드뉴스(12월),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영상 제작배포(유튜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개최(5월, 9월) - 제품안전혁신포럼(6월) 및 2019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11월) 개최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미 워싱턴, 11월 아일랜드 더블린)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p>* 1일 평균 접속건수 : ('17년) 25,463건 → ('18년) 35,398건 → ('19년) 34,592건</p>
2020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동향 분석” 등 18개 과제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2020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추진(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COEX 컨퍼런스룸)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광고(6월), 제품안전관리센터 SNS 광고(8~12월) - 카드뉴스(12월), 제4차 제품안전종합계획 안내영상 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2020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온라인)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온라인)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p>* 1일 평균 접속건수 : ('18년) 35,398건 → ('19년) 34,592건 → ('20년) 33,717건</p>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환경의 변화(제품의 융복합화, 다양한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신속한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홍보를 통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 제품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국민의 제품사고 예방 및 소비자·생산자의 제품 안전의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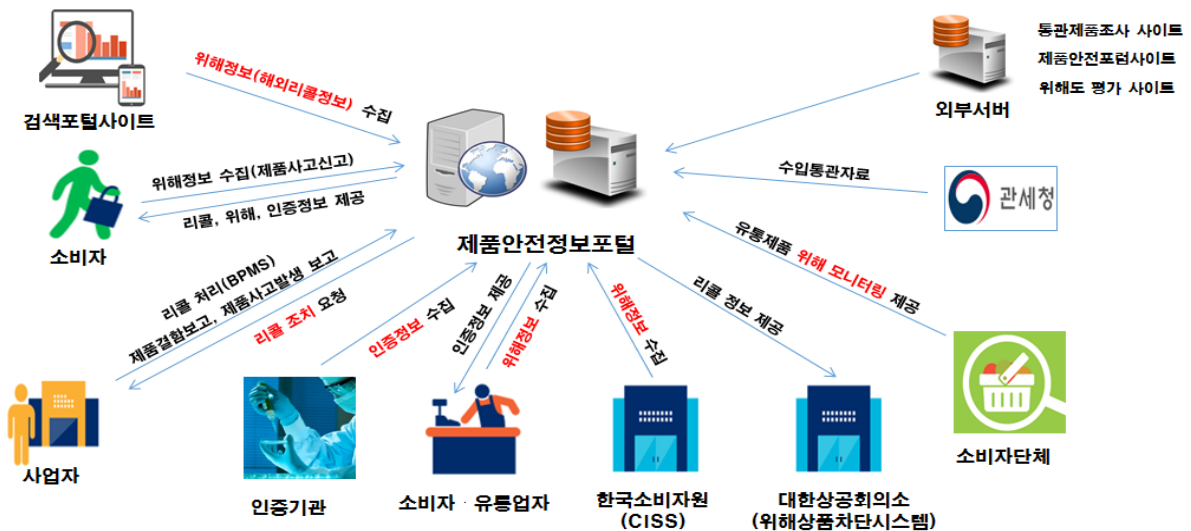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3,538	1,944	1,944	1,944	1,944	
'20~'24		1,794	1,794	1,794	1,794	1,7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총 14회의 제품안전교육 중 교육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단 1회에 그쳐 교육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미흡 ('17년 산중위 결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제품시험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공동 시험장비 조속히 구축 필요('18년 산중위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19년 산중위 예산)
- 성과지표가 '제품안전포털 방문자수' 단일항목이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 확인 어려움. 성과를 종합적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18년 예결위 결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공통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것과 시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비교 검토 필요('18년 예정처 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7년 산중위 결산

- 소상공인 지역별 순회 교육 확대: ('17년) 1회 63명 → ('18년) 4회 306명 → ('19년) 4회 374명

○ '18년 예정처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년간('18, '19) 추진 후 종료됨
- 영세소상공인 인증비용지원사업 기획 중('20)

○ '18년·'19년 산중위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년간('18, '19) 추진 후 종료됨
-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편직 57.9%, 염색 54.1%로 높아,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서울은 지자체 협의가 지연되어 미지원

○ '19년 산중위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년간('18, '19) 추진 후 종료됨

○ '18년 예결위 결산

-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0)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고 유발 등 제품위해가 염려되는 제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제품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적시 개발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SNS 홍보, 찾아가는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하고 불안정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
-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먼저 시행했던 선진국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68.5점)
- (결과 요약)
 - (집행)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인정되나, 집행률 제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예산집행 신속성보다 제품안전 정책과 연계 및 사업우선순위의 설정 등이 중요
 - (사업효과) 성과 목표 적극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목표 상향계획과 성과지표 달성 노력은 일부 인정됨
 - *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20)
 - (우수성)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은 인정되나, 학회발표, 언론 보도* 등 사업성과 우수성 다소 부족.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및 포럼 등의 노력은 일부 인정됨
 - * 안전기준개정 등에 대한 언론보도

순번	제목(2020)	일자
1	국표원, 시중유통 일반 일회용마스크 전수 안전성조사 결과발표	8/4 조간
2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7/27 조간
3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7/24 조간
4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7/17 조간
5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멍조끼 구입·사용, ‘각별히 주의해야’	7/15 조간
6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7/13 조간
7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6/30 조간
8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6/24 조간
9	산업부(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6/24 조간
10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6/23 조간
11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6/15 조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19.03)

-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81.2점)
- (결과 요약) 일부 내역사업 효과 불명확,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조치) 보조사업 평가지표 변경* 및 예산감축**
 - * 사업별 목표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정

제품안전혁신포럼	‘제품안전 Idea제안 건수’를 ‘제품안전 정책반영 건수’로 변경, (‘19) 2건
제품안전의 날	‘일간지 등 보도건 수’를 ‘중소기업 종사자 포상 참여율 및 수상률’로 변경, (‘19) 참여율 37.7%, 수상률 37.8%
지자체 협력관계구축	교육참여 인원’을 ‘지자체 업무 협조율(행정조치 의뢰 건에 대한 회신 건수)’로 변경, (‘19) 66.6%

** 보조사업 예산감축: (‘18년) 510백만원 → (‘19년) 490백만원 (△20, △3.9%)

13)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은 국민생활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강력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용품의 위해성분 검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사고 등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가 매년 20,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예산 지원 필요**
-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7년) 26,227건 → ('18년) 24,013건 → ('19년) 20,678건 → ('20년 상반기) 10,100건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899	1,899	-	-	-	-	1,899	1,862	98.0	98.0	-	37
2018	3,684	3,684	-	-	-	-	3,684	3,647	99.0	99.0	-	37
2019	3,538	3,538	-	-	-	-	3,538	3,521	99.5	99.5	-	17
2020	1,794	1,794	-	-	-	-	1,794	1,761	98.2	98.2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540	540	540	540	-	540	540	-	-	100
2018	2,250	2,250	2,250	2,250	-	2,250	2,250	-	-	100
2019	2,230	2,230	2,230	2,230	-	2,230	2,230	-	-	100
2020. 12월기준	486	486	486	486	-	486	48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37백만원 불용 (1.9%)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7백만원, 관리용역비 8백만원, 운영비 등 22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37백만원 불용 (1.0%)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3백만원, 관리용역비 12백만원, 운영비 등 12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17백만원 불용 (0.5%)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3백만원, 관리용역비 2백만원, 운영비 등 2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33백만원 불용 (1.8%)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백만원, 관리용역비 2백만원, 국외여비 3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이위로	김홍국 서기관	최용규 연구사
		043-870-5430	043-870-5431	043-870-543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852	820	820	862	862	42	5.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63	863	852 [852]	-	11	820	820	820	813 [813]	-	7	862
· 사고조사제도이행	180	180	178 [178]	-		171	171	171	170.4 [170.4]	-	0.6	198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분석·보급	236	236	228 [228]	-		224	224	224	217.6 [217.6]	-	6.4	218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47	447	446 [446]	-		425	425	425	425 [425]	-		446
○ 비목별 분류(합계)	863	863	852 [852]	-		820	820	820	813 [813]	-	7	862
· 일반수용비(210-01)	31	31	31 [31]	-		29.2	29.2	29.2	29.2 [29.2]	-		29.6
· 시험연구비(210-13)	60	60	60 [60]	-		57	57	57	57 [57]	-		65
· 관리용역비(210-15)	648	648	639 [639]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3.8	3.8	3.8	3.8 [3.8]	-		3.4
·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118 [118]	-		114	114	114	113.4 [113.4]	-	0.6	13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616	616	616	609.6 [609.6]	-	6.4	6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사고조사(사고조사 후 결함 제품 리콜), 소비자 위해정보·수집·분석·보급 및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제품사고·결함신고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결함 제품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보완 등의 전주기적 제품안전관리 수행
 -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은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 (소비자 위해정보 수입·분석·보급) 제품인증정보, 리콜정보, 사고·위해정보 등 각종 제품 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국민(소비자, 기업, 관련단체 등)에게 보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국표원·관세청간 정부3.0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선별·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제품안전관리 강화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19. 7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본부, 인천공항, 인천신항, 부산, 평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198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5백만원

1) 시험비 : 35백만원=70건*40만원(시험수수료) + 7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17건*4명*15만원

*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33백만원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4.3백만원 * 3개 제품

< '20년도 : 171백만원 >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57백만원

1) 시험비 : 27백만원=54건*40만원(시험수수료) + 54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17건*4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14백만원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8백만원 * 3개 제품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18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 81백만원

1) 콜센터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3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29.6백만원 = 7.4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 3.4백만원 = 20만원*17회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68백만원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68백만=17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20년도 : 224백만원 >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 81백만원
 - 1) 콜센터운영 : 48백만원 = 4백만*12월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3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29.2백만원 = 7.3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의 : 3.8백만원 = 24만원*16회
-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74백만원
 -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74백만=18.5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46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46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43백만원=28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6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272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6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 '20년도 : 425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25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22백만원=244건*40만원(시험수수료) + 244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272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6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취약 제품 심층조사 결과 조치 건수 (단위: 건)	목표	6	6	7	7	7	화재 등 사고 다발제품, 어린이 제품 등 안전 취약제품의 위해 사례가 계속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되어 목표치 설정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보완요청 등 조치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6	6	7	-	-			
	달성도	100	100	100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3000	3200	3300	3400	국민생활 개선 신 제품 출시, 국가간 교역확대 등으로 소비자 사용제품 중 수입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 설정	관세청과 합동으 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 의 선별조사 건 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	3846	4759	5,031	-			
	달성도	-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77건 접수, 리콜(9건), 불법조사의뢰(10건) 등 39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 6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미디어필러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0.17~11.27)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35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324건 적발(적발률 30.4%)
2018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83건 접수, 리콜(3건), 불법조사의뢰(11건) 등 20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 6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역 SRT 맞이방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1.14~12.13)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846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951건 적발(적발률 24.7%)

2019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74건 접수, 리콜(2건), 불법조사의뢰(10건) 등 15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 7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2호선 전동차 내부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1.13~12.12)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7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적발(25.1%)
2020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20.11월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51건 접수, 불법조사의뢰(12건) 등 17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2개 연구과제(사고다발 품목 등) 및 행정조치 5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2호선 스크린도어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0.26~11.25)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20.11월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031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47건 적발(22.8%)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제품사고조사: 60건 이상)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행정조치: 3건 이상)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선별·조사 : 3,400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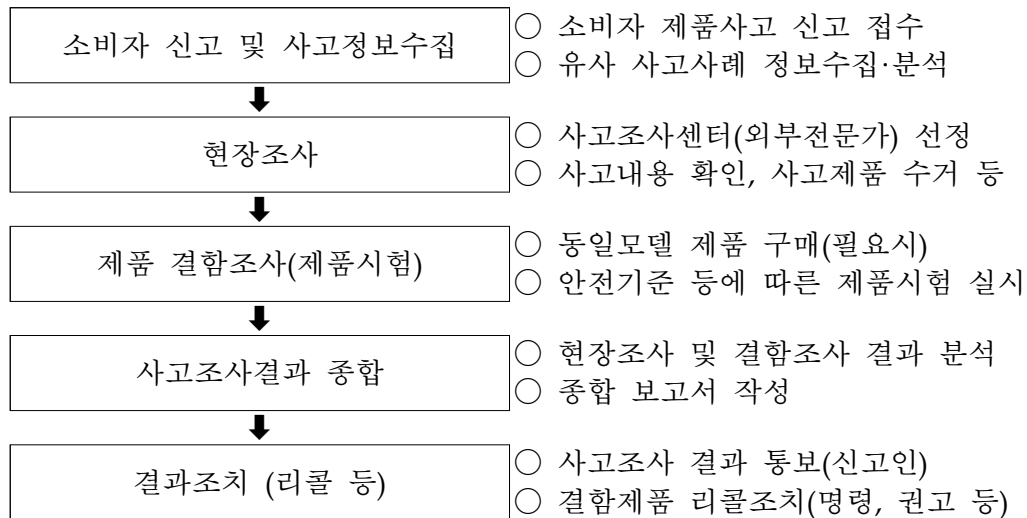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제품시험) 업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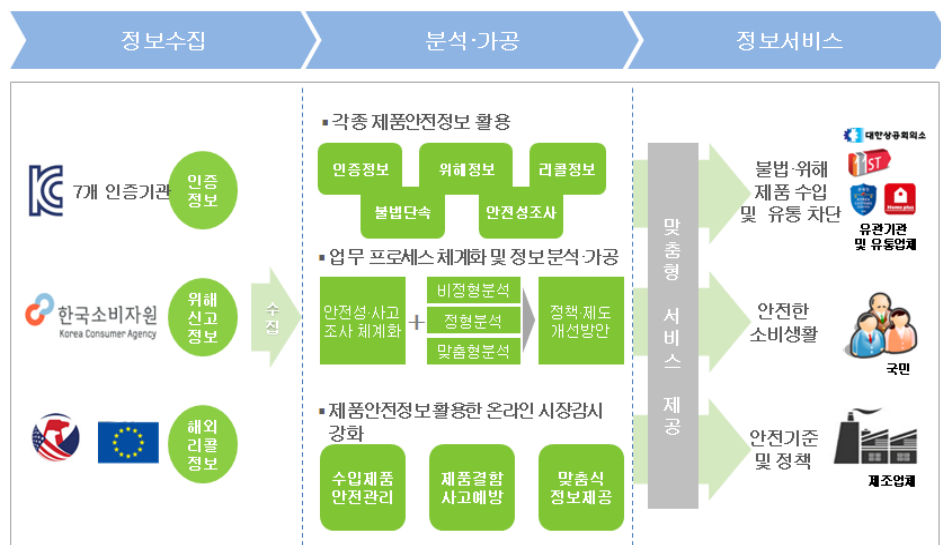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흐름도 >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 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863	921	941	961	981	
20~ 24		820	861	1,165	1,238	1,2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19.01)

- (지적) 연례적인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할 것 (예결위 이용주 위원, '18년 결산시 제도개선 사항)

* ('18년) 일반수용비(210-01) 4백만원, 관리용역비(210-15) 8백만원 등 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로 조정·집행 : 72백만원(예산 60백만원+세목 조정 12백만원)

- (조치) 세목간 조정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제품사고조사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향후 이러한 세목 조정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 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단위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68.5

- (결과 요약)

- (집행)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인정되나, 집행률 제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예산집행 신속성보다 제품안전 정책과 연계 및 사업우선순위의 설정 등이 중요
- (사업효과) 성과 목표 적극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목표 상향계획과 성과지표 달성 노력은 일부 인정됨
- (우수성)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은 인정되나, 학회발표, 언론 보도 등 사업성과 우수성 다소 부족.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및 포럼 등의 노력은 일부 인정됨

13) 부처 건의사항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제품사고 신고*가 매년 300건 이상이고, 융·복합 제품의 경우 사고 원인 분석에 많은 시험 비용**이 소요되나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신고(건) : ('17) 302 → ('18) 374 → ('19) 320 → ('20.6) 155 → ('21 필수소요) 332

**16년 갤럭시노트7(70백만원), 17년 아웃라스트 섬유제품(90백만원), 19년 ESS(1,350백만원) 등

***예산(백만원) : ('17) 180 → ('18) 220 → ('19) 180 → ('20) 171 → ('21, 조정액) 115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제공) 사고정보, 해외리콜, 인증정보 등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실시간 반응형 온라인 웹진)하여 선제적인 국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매년 감소 추세로 예산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포털 접속건수: ('17) 25,463 → ('18) 35,395 → ('19) 34,592 → ('20.6) 29,862 → ('21 필수소요) 31,816

**예산(백만원) : ('17) 275 → ('18) 254 → ('19) 236 → ('20) 224 → ('21, 조정액) 166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수입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불량·불법 제품 적기 차단, 통관 前 안전성 조사의 회피 수단인 우회 통관 방지를 위한 세관 파견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수입물량(천건) : ('17) 18,691 → ('18) 21,560 → ('19) 25,890 → ('20.6) 14,341 → ('21, 필수소요) 26,147

**예산(백만원) : ('17) 423 → ('18) 426 → ('19) 447 → ('20) 425 → ('21, 조정액) 416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878	878	0	±33	0	0	878	866	98.6	98.6	0	12
2018	900	900	0	±12	0	0	900	885	98.3	98.3	0	15
2019	863	863	0	-	0	0	863	852	98.7	98.7	0	11
2020	820	820	0	-	0	0	820	478.4	58.3	58.3	0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33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백만원, 관리용역비: 30백만원 → 시험연구비: 33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관리용역비 11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5백만원, 관리용역비: 8.15백만원 → 시험연구비: 11.65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9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1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2백만원, 관리용역비 9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으로 민간위탁사업비 등 7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박지성
		043-870-5450		043-870-545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생태계조성	989	990	990	1,070	1,070	80	8.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89]	-	-	990	990	990	989 [989]	-	-	1,070
· 어린이제품 안전확 보 역량강화	490	490	490 [490]	-	-	490	490	490	490 [490]	-	-	570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40	440	440 [440]	-	-	440	440	440	440 [440]	-	-	520
- 어린이제품 제조기 업 지원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기반조성	230	230	230 [229]	-	-	230	230	230	230 [230]	-	-	230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160	160	160 [159]	-	1	160	160	160	160 [159]	-	1	160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270]	-	-	270	270	270	270 [270]	-	-	270
-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찾아가는 안전교육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체 험관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89]	-	-	990	990	990	989 [989]	-	-	1,070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0	50	50	50 [49]	-	-	50
· 임차료(210-07)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139]	-	1	140	140	140	139 [139]	-	1	14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50	750	750 [750]	-	-	750	750	750	750 [750]	-	-	83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사전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민원, 리콜 다수 발생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제품안전정보 구축/보급 및 안전기준 개선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한 영세 제조/수입업자 대상 시험인증 상담, 시험비용 일부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하는 어린이용 안전교육 교재, 안전체험관용 콘텐츠 개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 대상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제품안전관리제도, 교육컨텐츠 활용법, 교수법 등을 교육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교육 선도학교: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안전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기획, 개발, 운영 등)을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선도학교 외 지방학교 중심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어린이의 제품 사용 관련 올바른 안전습관 함양 및 위험인지 형성 등을 위해 사고다발 품목 등의 직·간접형 체험 시설 구축
 - * 접근성 및 타 안전체험 연계를 위해 지자체 소속 안전체험관 내 제품안전분야 체험관 구축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관련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실천과제: 57-5.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② 법령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27조, 제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추진경위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19. 12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사업 : 1,070백만원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570백만원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 520백만원
11품목×40백만원(2020년) → 13품목×40백만원(2021년)
* 신·융복합 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 예산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 50백만원
10개사×5백만원(2020년) → 10개사×5백만원(2021년)
*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의 지원 수요는 증가(20년 1차 신청기업수 : 336 개사)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230백만원

- 안전교육 교재 등 콘텐츠 개발 : 160백만원
4종×40백만원(2020년) → 4종×30.5백만원(2021년)
*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을 위해 20년 예산 유지 필요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 70백만원
100명×0.7(2020년) → 100명×0.7백만원(2021년)

③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0백만원

-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100백만원
10개교×10백만원(2020년) → 10개교×10백만원(2021년)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은 미흡한 상태
- 찾아가는 안전교육 : 70백만원
20개교×3.5백만원(2020년) → 20개교×3.5백만원(2021년)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 (요구안)100백만원, (조정안)100백만원
2개소×50백만원(2020년) → 2개소×50백만원(2021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 (단위: 명)	목표	300	3,000	4,000	4,500	5,000	매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해왔으며,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11%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2,614	3,783	4965	-	-			
	달성도	871	126	12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10개교 1,116명)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20개교 1,498명) : 총 30개교 2,614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에 구축 '17.12월 ('16년도 송파교육관 : 약8만명, 전북체험관 약17만명 방문) -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안전성 검증·분석 : 10개 품목 어린이용 키보드, 물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6개 품목 - 성진하이텍 등 어린이제품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해물질발생 관리, 안전제품 설계, 안전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컨설팅 실시 : 10개 기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보행기 등 11개 품목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검토(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18개 중소기업 -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교 중·저학년용 맞춤형 교재 개발: 2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총 210명 수료 - 12개 유치원·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정규 커리큘럼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2,130명 수료 - 30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1,653명 수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재난안전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안전체험 시설 구축 : ①부천 119안전센터체험관, ②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등 2개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구 등에 대한 VOC 시험방법(챔버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가이드라인 개발(안) 등 시험 연구 및 검증·분석 - 초등학교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교구 구매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어린이제품 25개 중소기업 컨설팅 및 시험비 지원, 안전산업박람회 참여(9월) - 학년별 난이도를 고려한 카드·보드형 교재개발 및 구축된 체험관에 전시할 VR 및 와이드스크린 영상 제작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 총 210명 수료 - 15개(유치원7, 초등학교8) 「선도학교」지정을 통해, 학생·교사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2,982명 수료 - 40개(어린이집6, 유치원 10, 초등학교 24)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1,983명 수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시설 구축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1개소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학용품, 어린이용 안경테 등 10개 품목 및 유해원소 함유량 확인방법 개발 등 검증·분석 실시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 지원 사업 실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교보재 등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 - (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17개(유치원 8개, 초등학교 9개) 지정, 하반기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4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반기 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울산안전체험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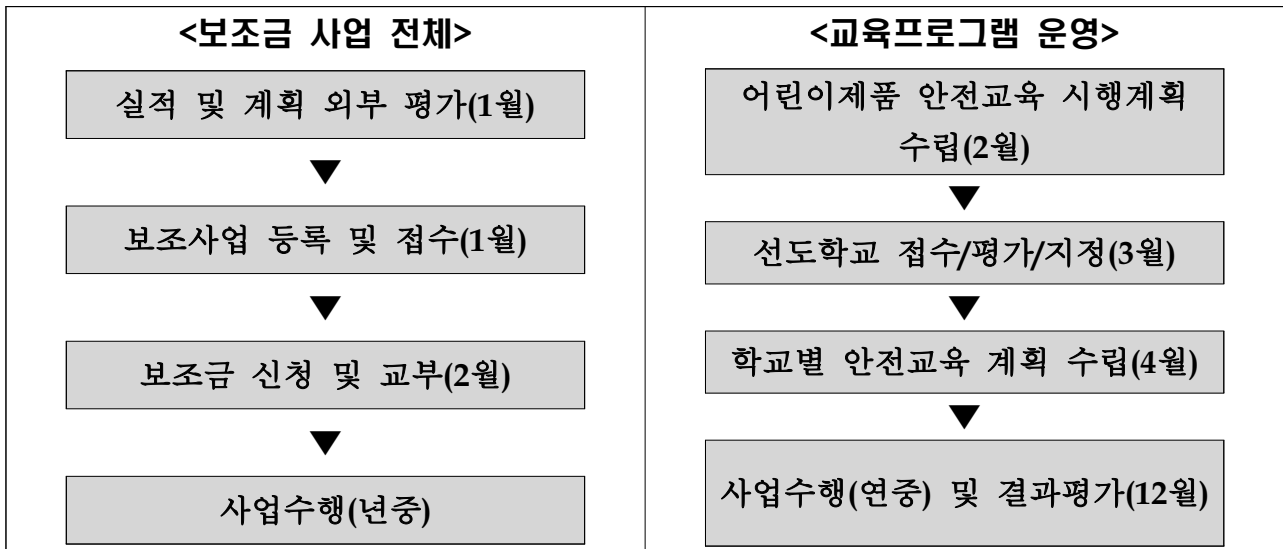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어린이제품 사업자 불법불량제품 단속 위반율 감소: ('18) 40.2% → ('21) 35.0%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감소: ('18) 8.5% → ('21) 7.0%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율 15% 감소: ('18) 5,994건 → ('21) 5,00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990	990	960	941	932	
20~ 24		990	1,040	1,200	1,200	1,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
- (전략 1)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전략 2)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전략 3)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전략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단위사업: 미흡)

13)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강화 >

- 신·융복합 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 예산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
- 현재 유럽, 미국 등 해외 기준 조사 수준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 실제 유해성 분석·연구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시행('15.6.4.)으로 만 13세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관리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안전성 검증강화 필요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강화 >

-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의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 어린이제품 제조업체 중 20인 미만 종사자 업체가 90%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
- * 20년 1차 신청기업수 : 336 개사, 하반기 2차 추가 공고 예정

➡ 어린이제품의 근본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업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제품의 안전 품질 향상이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 >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은 미흡한 상태
- 어린이제품 올바른 사용·구매법,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제품안전교육 선도학교 추가 지정 필요('20년 신청학교수 : 75 개교)

➡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어린이안전사고 현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필수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950	950	-	-	-	-	950	946	99.6	99.6	-	4
2018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2019	990	990	-	-	-	-	990	989	99.9	99.9	-	1
2020	990	990	-	-	-	-	990	989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710	710	710	710	-	710	710	-	-	100
2018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19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20. 12월기준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 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5.6.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19.12.공고)’을 수립·시행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어린이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위해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 대상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안전관리 필요

□ 추진전략

-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추진목표 실천을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추진

목표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		
추진전략	전략		15대 추진과제
	I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①안전관리 제도개선, ②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③위해도평가센터 설립, ④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II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⑤수입 위해제품 유통차단, ⑥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강화, ⑦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⑧유통단계 안전관리 합리화
	III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⑨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강화, ⑩시험·검사 비용 절감 지원, ⑪안전친화기업 활성화
	IV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⑫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⑬체험형 어린이교육 시설 확충, ⑭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⑮대국민 소통 강화

사 업 명
(19)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 기업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전민영	석경철	
		043-870-5520	043-870-552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4,257	4,942	4,942	6,970	6,970	2,028	4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288	4,288	4,257 [4,257]		31	4,942	4,942	4,942	4,795 [4,795]		147	6,970
·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3,019	3,019	3,006 [3,006]		13	3,510	3,510	3,510	3,486 [3,486]		24	4,426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14	314	299 [299]		15	314	314	314	208 [208]		106	314
·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250	250	250 [250]		-	230	230	230	220 [220]		10	230
· FTA TBT 종합지원 (중국, 신남방국)	705	705	702 [702]		3	888	888	888	881 [881]		7	1,400
· 한-아세안 표준 협력 및 기반조성 (신규내역)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4,288		4,257 [4,257]		31	4,942	4,942	4,942	4,795		147	6,970
· 일반수용비(210-01)	154		154 [154]		0	155	155	155	121		34	184.0
· 임차료(210-07)	50		43 [43]		7	50	50	50	48		2	50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260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132		124 [124]		8	132	132	132	28		104	118.8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0	12	12	12	12		-	12.8
· 일반연구비(260-01)	3,939		3,923 [3,923]		16	4,593	4,593	4,593	4,586		7	3,548.4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2,7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었고, 우리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WTO 통보 규제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는 기술규제 : ('17) 2,585건 → ('18) 3,065건→ ('19) 3,337건→ ('20) 3,372건(예상)**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규제당국의 업무가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통보건수가 감소되었음(5월, 8월), 그러나 백신개발, 접종에 따라 규제당국업무 재개시 통보건수가 증가예상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①규제정보를 수집·분석(기초/심층)전파하고, ②WTO/FTA TBT등 협상(양자/다자, 현지방문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③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초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21년부터는 기존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넘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신남방 주요국(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기술표준 분석 및 컨설팅, TBT 교육등 『**FTA TBT종합지원**』 내역사업 실시

- 또한 급성장하는 아세안 경제권에 우리표준을 확산하여 동 지역권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표준협력 사업(한-아세안표준협력 및 기반조성)을 '21년부터 추진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분석된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온(KnowTBT포털)/오프라인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의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TBT 컨소시엄을 통해서 정부/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의견수렴)

- **(내역사업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콜롬비아),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예: 對케냐 에너지 효율규제 해소)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내지 완화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 * 협상 전후시 상대국의 각종 기술규제 법령, 제도 등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TBT 협상/이행시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FTA TBT 종합지원*) (중국 및 新남방 주요국가로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新남방국가 수출 비중이 증가(우리 수출액의 35%이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등 필요
 - * '21년도부터 기존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중국 포함, 베트남, 인니 등 신남방주요 국가로 확대한 FTA TBT 종합지원내역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내역사업 ⑤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국내 표준을 아세안 지역에 확산하고 동 지역 국가들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유도하여, 상이한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협력사업 추진
 - * ('21) 건설자재, 지능형교통체계 분야 → ('22) 전기전자, 섬유, 스마트에너지분야 등 전방위 산업군으로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1항]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을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 국내의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 발효된 FTA 양자협정에서 규정(현재 15개*)

*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등

- (예시) **한-미 FTA 협정('07) 제9.6조(투명성)** 3항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②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에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계속적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을 전담 대응중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FTA 국내보완대책」중 한-중 FTA 종합지원사업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17.8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진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혁신(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 '18.6 범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국가표준기본법)
- '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표원, (참여) KTR, KTC, KCL, KTL, KOTICA, KEA, KSCIA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피출연)	미정	*출연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①(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 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국내외 협력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 사업 (6,970백만원)

* ('20년) 4,942백만원 → ('21년) 6,970백만원 (2,028백만원 증액)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4,426백만원

* ('20년) 3,510백만원 → ('21년) 4,426백만원 (916백만원 증액)

- WTO TBT 통보/미통보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3,696백만원

* ('20년) 기초 분석/심층 분석에 소요된 일반연구비 3,400백만원 → ('21년) 일반연구비 900백+ 사업출연금 2,796백만원 (TBT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으로 전환

▷ [350-02 사업출연금] 2,796백만원 (기초분석 296백만원 + 심층분석 2,500백만원)

① WTO TBT 기초분석 : 296백만원

* ('20년) 2,142건 × 0.07백만원 = 150백만원 → ('21년) 3,700건 × 0.08백만원 = **296백만원**

※ '21년에 기초분석비는 전부 사업출연금으로 전환('20년에는 일반연구비)

② WTO TBT 심층분석 : 2,500백만원

* ('20년) 650건 × 5백만원 = 3,250백만원 → ('21년) **심층분석 500건 × 5백만원 = 2,500백만원**

※ '21년에 심층분석(680건)중 500건은 사업출연금으로 전환, 나머지 180건은 일반 연구비로 사용

△ '21년 심층분석비는 680건 × 5백만원 = 3,400백만원

▷ [260-01 일반연구비] 900백만원

· WTO TBT 심층분석 : 900백만원

* ('20년) 650건 × 5백만원 = 3,250백만원 → ('21년) **심층분석 180건 × 5백만원 = 900백만원**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725.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0년) 105백만원 → ('21년) 725.5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70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0년) 2건 × 4백만원 = 80백만원 → ('21년) 10개국×20개 품목×3.5백만원=700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5.5백만원

* ('20년) 1건 × 25백만원 = 25백만원 → ('21년) 1건 × 25.5백만원 = 25.5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을 위한 대응 회의체 운영 : 4.5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20년) 5건 × 1백만원 = 5백만원 → ('21년) 10명×25천원×18회 = 4.5백만원

②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314백만원

* ('20년) 314백만원 → ('21년) 314백만원

- WTO/FTA TBT 협상 및 애로협상 여비 : 118.8백만원 [210-02 국외여비]

* ('20년) 18.86건 × 2명 × 3.5백만원 = 132백만원 → ('21년) 18건 × 2명 × 3.3백만원 = 118.8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 50백만원 [210-07 임차료]
* ('20년) 5회 × 10백만원= 50백만원 → ('21년) 5회 × 10백만원 = 50백만원
- TBT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 : 33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0년) 20회 × 1백만원= 20백만원 → ('21년) 33회 × 1백만원 = 33백만원
- TBT 대응 관련 외국 법률 자문 : 4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0년)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21년) 4건 × 10백만원 =40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등 인쇄 : 4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0년)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21년) 4건 × 10백만원 =40백만원
- 통역 및 번역 등 : 24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0년) 1건 × 24백만원 = 24백만원 → ('21년) 1건 × 24백만원 = 2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3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20년)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 ('21년) 8건 × 1.04백만원 = 8.3백만원

③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3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 ('20년) 230백만원 → ('21년) 230백만원
- FTA TBT 제도 분석 : 80백만원
* ('20년)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21년)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80백만원
* ('20년) 2건×40백만원 = 80백만원 → ('21년) 2건×40백만원 = 80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70백만원
* ('20년) 2건×35백만원 = 70백만원 → ('21년) 2건 × 35백만원 = 70백만원

④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新남방 주요국) : 1,400백만원**

- * ('20년) 888백만원 → ('21년) 1,400백만원 (612백만원 증액)
- 중국뿐만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新남방국가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 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등 필요
- 기술규정/표준 분석 : 80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0년) 106종×5백만원 = 530백만원 → ('21년) 161종× 5백만원=805백만원
- * 중국 표준 4차산업제품 등 101종, 베트남 표준 LED등기구 등 생활소비재 35종, 인도네시아 표준 디스플레이 가전 및 철강 등 25종)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80백만원 [210-14 일반 용역비]
* ('20년) 1건 × 80백만원= 80백만원 → ('21년) 1건 × 80백만원= 80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245백만원 [260-01 일반 연구비]
* ('20년) 55건×2백만원= 110백만원 → ('21년) 245백만원
맞춤형 컨설팅 65건×3백만원=195백만원 + 표준분석 규제맵 제작 10건×5백만원=50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 150백만원
* ('20년) 114백만원 → ('21년) 150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60백만원 [210-14 일반 용역비]
* ('20년) 교육 10건 × 5백만원 = 50백만원 → ('21년) 교육 12건 × 5백만원 = 60백만원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릿 인쇄 : 6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0년) 2건 × 15백만원 = 30백만원 → ('21년) 6건 × 10백만원 = 60백만원
- 키워드 광고 : 3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0년) 2건 × 12백만원 = 24백만원 → ('21년) 2건 × 15백만원 = 30백만원
-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120백만원 [210-14 일반 용역비]
* ('20년) 54백만원 → ('21년) 120백만원
- 현지 대응 상담실 운영 : 80백만원
* ('20년) 6개월×3곳 = 18백만원 → ('21년) 80백만원 (중국 30백만, 베트남 25백만, 인니 25백)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40백만원
* ('20년) 2회 × 18백만원 = 36백만원 → ('21년) 2회 × 20백만원 = 40백만원

⑤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신규내역) : 600백만원(순증)

- 국내 표준의 아세안 확산, 동 지역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무역기술장벽 사전해소를 위한 표준협력 방안 연구
- 건설자재 표준협력 : 25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아세안 국가 건설자재 표준분석 :
* ('21년) 10개국 × 15백만원 = 150백만원
- 아세안 건설자재 기술규정·행정규제 등 현황 분석
* ('21년) 84개 × 1백만원 = 84백만원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
* ('21년)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협력 : 25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아세안의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既마스터플랜 심층분석 : 30백만원
* ('21년) 3건(싱가폴, 태국, 말련) × 10백만원 = 30백만원

- 아세안 국가 교통현황 및 제도 분석
* ('21년) 10개국 × 2백만원 = 20백만원
- 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 : 180백만원
* ('21년) 2건 × 90백만원 = 180백만원
△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의 구현, 호환성 확보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밑그림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 : 16백만원
* ('21년)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 4백만원
* ('21년) 2회 × 2백만원 = 4백만원
- **신규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 : 10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1년) 3개 과제 × 333백만원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상건수(건)	목표	67	95	105	107	125	최근 3년 평균 (107.7건) 대비 20% 증가한 125 건으로 설정함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국외 협상 불가, 21년 국외 협상건수도 상반기 불가 예상)	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Σ(서면 대응 건수 + WTO TBT 다자 대응건수 + FTA TBT 양자 대응 건수 + 해당국 방문 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통계
	실적	91	112	120	-	-			
	달성도	136	109.5	114.3	-	-			
TBT 기업 만족도(%)	목표	73.6	77				* TBT 대응기업 만족도(%)는 '19 년 성과계획서 에서 제외한 이후 줄곤 제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실적	76.4	77.8			-			
	달성도	104	1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p>① WTO TBT 통보문 2,587건, 조사·번역 전파/ 숨은 해외 기술규제 306건 발굴·대응/ 심층분석 678건 분석 및 대응/현장방문 컨설팅 150건</p> <p>② 수출기업 애로 91건, 규제상대국과의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45건 해소</p> <p>③ TBT대응 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수립/TBT 민관협의회구성·운영/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TBT 대응체계 강화</p> <p>④ TBT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전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대, 연세대 3학점) 개설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으로 논문대회 실시(11월, 8개팀 14명 포상)/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및 유공자 포상 ○ 월간 뉴스레터(12편) 발행·배포/TBT 대응 보고서(5천부) 및 이슈리포트(5분야) 제작 배포 ○ TBT 대응활동 홍보(7회), TBT 애로창구 정보전달 등을 위한 신문사 기획홍보(10회) 게재 및 라디오 홍보실시(238회 방송) ○ TBT 설명회(35회)개최, TBT 홍보관 운영 등 상담실시(3회, 302건) <p>⑤ 중국 품질검사 검역 강화에 대응하여 「한·중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애로대응 컨설팅(64건)/ 단계별 TBT 교육(3회) /품목별 전문교육(14회) / 中 질검총국 등 15개 주요규제기관 일일 모니터링실시, 규제정보 수집(238건), TBT 뉴스 레터 제작·배포(12건) 및 CCC가이드북 발간 ○ 중국정부 중점관리대상 10대 소비재 관련 기술표준(GB) 분석(128건)
------	--

2017	<p>⑥ 한·중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이행협약 후속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KTR, KTL, KTC, 中-CQC)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확대 (KC 173개, CCC 104개 품목)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16.12.20.) ○ (한중 적합성소위) 전기용품 상호인정 이행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파, 공장심사 분야로 협력확대 논의('17.11.2. 서울) * (전자파) 상호인정 추진 공동작업반을 '18년 내 설치·운영하고, 실무협의를 연내 개시기로 합의 (공장심사) 국내 심사원이 중국 CCC 인증 공장심사 대행을 위한 교육·등록 방안 검토 <p>⑦ 거대시장 진출확대 및 선진기술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FTA TBT 협상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중국, 아세안 등 거대시장의 기술규제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4차례 협상 추진 (17차 '17.2. ~ 20차 '17.10.) * 기술규정 개발 정보 제공, 30일내 정보제공,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수용 등 ○ (한·이스라엘) 기술규제관련 협력 강화, 향후 MRA 추진 가능성 논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문 마련, '16.12월 협상 개시 후 4차 협상을 통해 TBT협정문 타결 ('17.4.) <p>⑧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 확대 추진) 인도 등 신흥수출국과 상호인정 확대 추진 * (한-EU) 제3차 규제대화체('17.6월/서울), 전기안전·무선기기 전문가회의('17.9월, 화상회의) - (아세안) 의약품 수출의 아세안지역 확대를 목표로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TBT분야 대화체 설립 및 향후 지속적 운영 - (인도) CEPA 개선협상을 계기 TBT/SPS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양국간 MRA 추진을 위한 국표원-인도표준청간 협력 MOU 논의 * (CEPA협상) 상품, 서비스, 원산지, TBT/SPS (경과) 1차 협상('16.10월/서울), 2차 협상('17.2월/뉴델리), 회기간 협상('17.5월/영상회의) - (EFTA) 양국 관심분야(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EFTA: 전기전자)에 대한 상호 인정 추진 방안 논의 ('17년 WTO TBT 양자회의) - (EU) 양국의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를 교환하고, EU 예코디자인, 무선기기지침 등 TBT 현안 및 무선기기분야 협력 논의
2018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통보문 조사) WTO TBT 통보문 3,065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10건 발굴·대응 * 규제당국 홈페이지 감시(139건), 국내외 온라인 규제정보포털(203건),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 감시(104건), 국표원-기업 네트워크 해외법인(26건) 등 ○ (심층분석) WTO 통보문과 미통보 규제 3,565건(3,065건+510건) 중 아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 550건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② 해외규제상대국과 다자 양자 협상을 통한 애로 해소 (104건 협상 49건 해소)

- (WTO TBT委) WTO TBT 총회(3,6,11월) 계기,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내지 완화
 - * △브라질 TV 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 35건(3월),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규제 등 29건(6월),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 규제 등 30건(11월)
- (규제당국 방문협의) TBT 애로관련 케냐, 이집트 등의 규제담당부서를 현지 방문하여 규제 완화 협상을 실시
 - * △케냐 에너지 성능 라벨규제 (5월), △이집트 가정용 전기기기 에너지효율규제1건
- (규제당국자 초청협의 등)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를 초청하거나 서면협의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내지 완화
 - * △GSO(UAE 등 6개국) 4건(5월), 인도 2건(9월) 인도네시아 1건(10월) 초청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인증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580회)하여 224건의 컨설팅*을 실시
 - * △ 중기청 설명회(55건), TBT컨소시엄 접수(90건), 전담창구(38건), 기타(41건)
- (중소/중견기업 지원)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TBT 설명회*(62회)개최, TBT 홍보관** 운영 및 상담 실시(2회 161건)
 - * ① 업종별 협·단체 연계 설명회(70회) ② 해외 TBT대응 설명회(4회, 中/상해, 심천 ; 베/호치민, 하노이)
 - ** 서울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21건 상담/18.9월), KEA 한국전자전(140건/18.10월)

④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 (TBT대응 지원센터) TB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추진('18.5 국표법 개정안(동 센터 설치/운영등을 다룬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
 - 해외 기술규제조사·분석, 수출기업 애로해소 컨설팅 등 통합적 TBT 대응·지원
- (TBT 민관협의회) TBT 관련 주요 부처, 전문기관, 업계가 공동 참여하여 TBT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특정 이슈에 다수부처가 관련되거나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집중 대응
 - * 中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부처와 대응 협의('18.7월)
 - * 무역기술장벽 협의회 관련 국가표준기본법(26조의2) 개정('18.6월)
- (기업간담회) 수출기업과 긴밀한 의사 소통망을 구축하여 외국 현지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관계자 등과 정기적 현안을 논의
 - * 상·하반기 대기업/중소기업 핫라인 간담회 추진(4회)
- (TBT 정책포럼)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TBT 정책자문, 여론수렴 등
 - * '중국의 정부조직·표준화법 변화와 표준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방안' 등 총5회
- (TBT 인력양성)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연세대학원, 숭실대 3학점) 개설, 특강*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 논문대회 실시(11월)
 - * 무역협회,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15회 추진

2018	<p>⑤ 중국發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TBT종합지원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집중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강제표준 분석(10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표준 요약본 108종을 통해 제품별 中표준 자료집 15건, 중국 TBT 가이드북 3건 개발 ○ 中 주요 규제기관(CNCA, CQC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국 기술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18건)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4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TBT 뉴스레터 10건, 中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및 동향보고서 작성·배포 (18건) ** 일반상담(전화·이메일)과 심층상담(해당 시험인증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 추진(43건) ○ 中 현지 TBT지원사무소 운영, 현지 우리기업 대상 규제설명회·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 및 상시 애로발굴 (현지 설명회, 간담회 각 2회 개최) ○ 중국 기술규제 분석 정보 제공 및 TBT 상시 애로 접수 등을 위해 모바일 시스템 구축('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웹 구축 및 콘텐츠 정비와 보강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中 TBT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17회, 설명회 10회) <p>⑥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FTA) 우리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EFTA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은 소관부처와 협의대응('18.5월) ○ (한·중 상호인정) 정부간 협력 채널(TBT위원회, 적합성소위)을 활용하여 양국간 상호인정 (MRA) 활성화 추진('18.11월) ○ (한·EU) 한·EU규제대화체 회의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를 교환하고, 에코디자인 등 EU측 기술규제 완화 추진('18.11월) ○ (한·아세안) FTA TBT 대화체 개최를 통해 협력과제* 협의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규제 현안 논의 등으로 상호 협력 강화 ('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관심분야: (韓) 의약품, 건설자재, (아세안) ITS, 의료기기, 화장품
2019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337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 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50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3,887건(3,337+550)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 720건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및 전략적 이행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3.6,11월)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내지 완화(120건 협상, 50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EU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등 8개국 15건(3월),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7개국 12건(6월),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등 7개국 15건(11월)

2019

- **(규제당국 방문협의)** TBT의 애로해소와 전략적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GSO(4월) 및 에콰도르(12월) 등의 규제 담당부서를 방문
- **거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TBT 협상 추진**
 - **(한-MERCOSUR)** 중남미(페루/콜롬비아/칠레)국가와의 既체결 FTA TBT 협정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 협상 추진
 - **(한-영국)** 한-영 FTA 정식 서명('19.8.22)을 완료하였으며, 영국 EU 탈퇴 시점에 FTA가 자동 발효토록 조치하고, 브렉시트 후 시험·인증 애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성명서('19.8.13)마련
 - **(한-인니)**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 新남방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CEPA협상을 추진했고, TBT 관련문안을 상품 챗터에 포함하여 최종 타결('19.11)
 - **(한-이스라엘)**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日, 中 등 경쟁국 대비 **이스라엘 시장의 선점 효과**를 기대, 11조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 TBT 협정문안 최종 타결('19.8)
- **FTA TBT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
 - **(한-EU)** FTA TBT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기/전자 분야 기업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양국간 무선분야의 적합성평가 상호 인정확대를 주제로 하는 **한-EU 공동 워크숍 개최**('19.9.)
 - **(한·중 FTA TBT 위원회)** 한·중은 제3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19.9)하고, **TBT 현안*** 논의 및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
 - * 전기차 GB 표준 및 의료기기 규제 등
 - **(한·미) 제4차 FTA TBT 쉐 개최**('19.11)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표준협력(한→미), 화학물질 관리체계/자원 재활용(미→한) 등 안전협의
 - **(한·베트남) 제 3차 FTA TBT 위원회**('19.10)를 통해,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등 규제정보 교환 및 시험인증 분야의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 **(한·아세안) 제2차 TBT 대화체**를 개최('19.11)하여, 표준·규제분야 협력* 및 향후 운영방안 등 협의
 - * (표준) 지능형 교통시스템(亞 요청), 건축자재·4차 산업혁명 표준화 협력(韓 제안)
-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방문(740여회)하여 기본 TBT교육 정책소개와 애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애로사항은 심층 상담(286건)을 실시
 -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교육(17회), 설명회(28건) 실시**
 - **(1381 콜센터 운영)** '19년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문의사항 (1,420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상담 등 세부사업으로 연계

2019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추진

- 중점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강제표준 분석(94종)**
 - * 中표준 요약본 90종 및 中 규제맵 자료집 24건 제작, 中 품목별 가이드북 4건 개발
- 규제기관 모니터링(78건)을 통한 기술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배포(18건)*** 및 **수출기업 애로 컨설팅** 실시(60건)**
 - * 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국 등 규제기관 모니터링(78건), 中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및 동향보고서 작성·배포 (18건), 中 기술규제 정보 월간 뉴스레터배포 (10건)
 - ** 애로에 대해 일반상담(전화·이메일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60건)
- TBT 지원사무소 운영을 통한 **현지 우리기업 설명회·간담회 개최**
 -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 및 상시 애로발굴 (현지 설명회 1회, 간담회 각 2회 개최)
- **(중국 맞춤형 교육, 설명회)** 중국 기술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 시험인증 절차, 품목별 규제 등 맞춤형 교육(17회) 및 설명회(28건) 실시
 - 중국 전기차 및 2차 전지 GB 신규제정 관련 기업 설명회('19.6월), 국내 완구기업 기업설명회('19.9월)등 실시

⑤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

- 민관 TBT 대응 컨소시엄(상시활동)과 정책연구회(4회)를 구성·운영하고, WTO TBT 대응 관련부처와 협의(5회이상)하는 상시채널 마련
- **(인력양성) 대학강좌**(서울·연세대학원, 명지대 3학점)와 **학부특강**(우석대, 연세대) 개설, **전공교재(1종) 개발** 및 **학생논문대회를 실시(11월)**하여 TBT 인력저변을 확대
- (전문교육) 교육대상별 TBT 전문교육 프로그램운영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고위과정	기업/단체 임원급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분쟁사례등
실무역량과정	관련공무원, 기업, 전문기관	TBT 협정문, 적합성 체계 등
사이버 과정	일반인	TBT 개념, 우수 대응 사례등

- **(인식제고)** TBT대응 성공사례와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 사항을 공유하여, TBT 대응 필요성 공감대 확산
 - * (유공자포상) TBT대응 전문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주요성과에 기여한 유공자에 산업부장관상(4명)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2명) 수여
 - * (홍보) 라디오(181회 노출), 전자전 홍보부스 운영('19.10월), 신문/인쇄 광고(3회), 포털 배너(Google, naver 등) 및 SNS, 검색 키워드 등 다양한 홍보 실시

2020
상반기

- **(무역기술장벽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강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자 WTO 기술규제 통보문 분석 및 WTO·FTA(다자·양자) 외교 채널을 통한 기술규제 애로 해소(완화) 협상
 - WTO TBT 사무국을 통해 통보문 1,694건 입수, 통보·미통보문의 기초조사 805건, 심층분석 366건 실시
 -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8개국 33건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자 협의(2.24. ~2.28. / 스위스 제네바), 4개국 5건 유럽의 에코디자인 규제, 사우디·UAE의 에너지효율규제3건 및 에콰도르의 건조기 에너지효율규제 해소
 - 제2차 WTO TBT 위원회 : 8개국 12건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자 협의(5월~6월, 서면회의로 대체), 1개국 1건 규제애로 해소(인도의 에어컨 및 부품 인증 제도 시행 유예)
 - 제5차 한·메르코수르 협상(2월)에서 TBT 협상문 일부 조항 합의 및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2월)에서 우리 기업 애로 논의
 - 코로나19 관련 해외 인증기관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 경주
 - * WTO/FTA TBT채널, 외교부/상무관, 현지 규제협력채널 등을 신속 대응하여 20개국 중 19개국(베네수엘라 제외)은 인증업무 재개
 - 제6차 한·메르코수르 협상(7월), 제1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미정) 및 중국 현지기업 간담회·TBT 설명회 개최(9·11월경)
 - 제5차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안전인증품목 축소 및 위험평가, 무선기기분야 협력 확대, EU수리규정 관련 한국 기업 애로 등 논의(2.5. / 주한EU대표부)
- **(TBT 대응 기업 지원)** TBT 통보문 분석 및 현장컨설팅 추진
 - * TBT대응전략 간담회(6.24, 원장), 업종별 협단체 TBT 설명회(7회), 품목별 협의회(10회), TBT 애로상담(171건),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90건) 등 실시
- **한·중 FTA TBT 종합지원내역사업 주요 성과**
 - (주요규제기관 모니터링) 중국 주요 정부기관 15개소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중국주요 정부기관의 품질인증 동향* 및 中 규제 발굴** 등 기업정보 제공(45건)
 - * 코로나 후 CCC 전자인증서 발급시스템의 도입, 현장심사업무 최소화, 인증서 유효기간 3개월 연장, 방역 제품 표준 플랫폼 구축 등 중국의 인허가 동향 발굴, 기업전파
 - ** CCC 목록조정공고, 전기자동차 강제표준(GB)의 확정 및 시행일 연기, 중국 제품품질검사 계획 의견수렴 등 신규도입 및 개정되는 중국규제정보 수집, 정보제공
 - (애로 컨설팅 지원) 중국 TBT 애로문의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기업의 중국수출 기술규제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30건)
 - *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중국수출을 준비/진행 중인 기업의 중국인증대상문의, GB문의 및 인증제도 현황에 대한 정보 확인 및 개별 컨설팅 제공
 - (기술규제 정보제공) 산업군별 중국최신기술규제 정보제공*(6건)
 - * 자동차 자율주행 등급의 GB표준 의견수렴, 무선기기 형식승인규정 의견수렴안, 중국 헬멧의 CCC 인증동향 등 사안에 따른 산업군별 개별 메일전파 등을 통한 정보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내용에 대한 신속한 입수*, 전파**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력 향상

* △ '21년 해외기술규제 입수 4,000여건 예상 (통보문 3,500건/미통보문 500여건)

△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는 기술규제 : ('17) 2,585건 → ('18) 3,065건→ ('19) 3,337건→ ('20) 3,372건(예상)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규제 당국의 업무가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통보건수가 감소되었음(5월, 8월), 그러나 백신개발, 접종에 따라 규제당국업무 재개시 통보건수가 증가예상

** 해외기술규제 분석 보고서(연례보고서등) 제공, KnowTBT 포털 등 온-오프라인으로 정보제공

- 기업·협단체·유관기관간 TBT 대응 소통*강화

* TBT 설명회(50회), 업종별 간담회(3회), 품목별/규제유형별 협의회(50회)

○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 WTO TBT 정례회의(3,6,11월 연3회) 및 FTA 공동위등 채널을 통한 협의
- 필요시 해외기술규제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실시

* '19년 방문협상 2건, '20년 WTO TBT 협상 3회(3월 출장 협상, 6월은 서면대체, 10월은 화상회의)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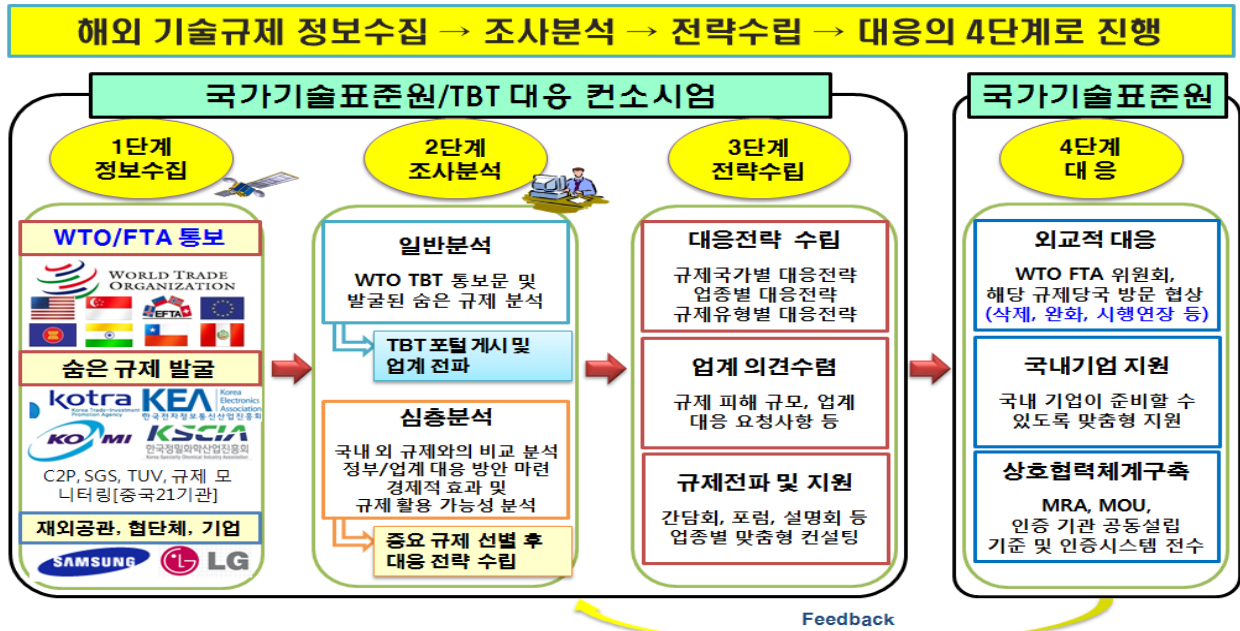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350여건/연), 컨설팅을 통해 他기관(중소기업부)의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과도 연계 지원

○ 아세안 역내 우리 표준의 확산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동 지역 진출 기반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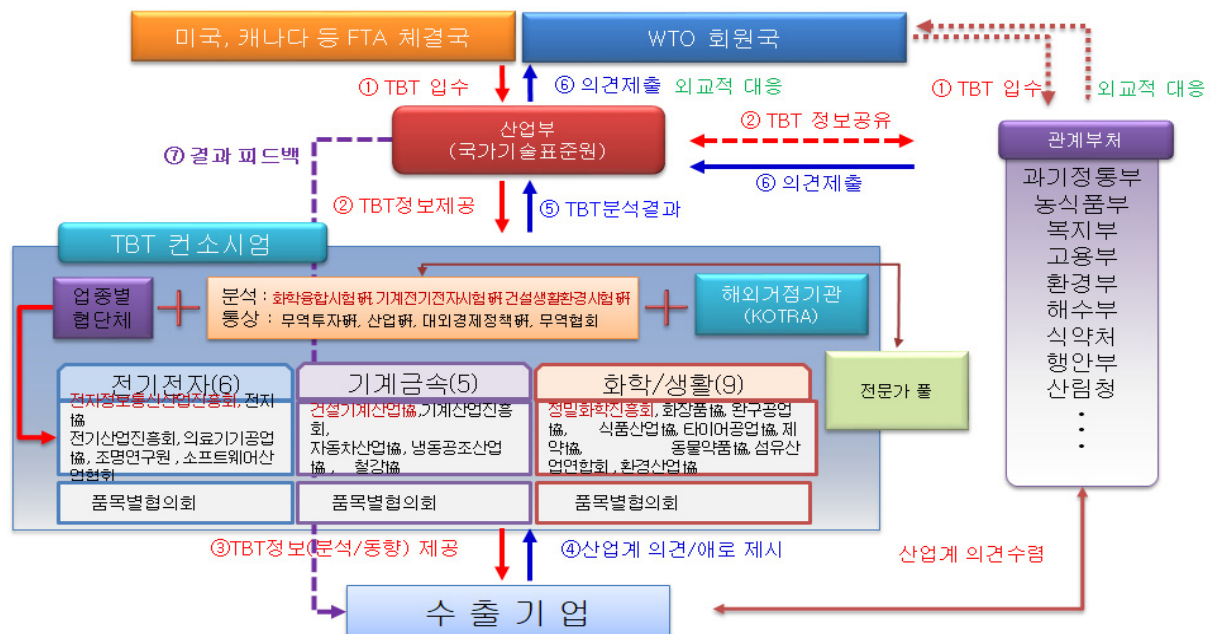
- 한국 표준과 아세안 회원국 표준간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상이한 표준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사전에 제거
- 표준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아세안 진출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산업분야에서 아세안 표준을 선점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현지 시장 진출, 판로 개척 등 미래 먹거리 창출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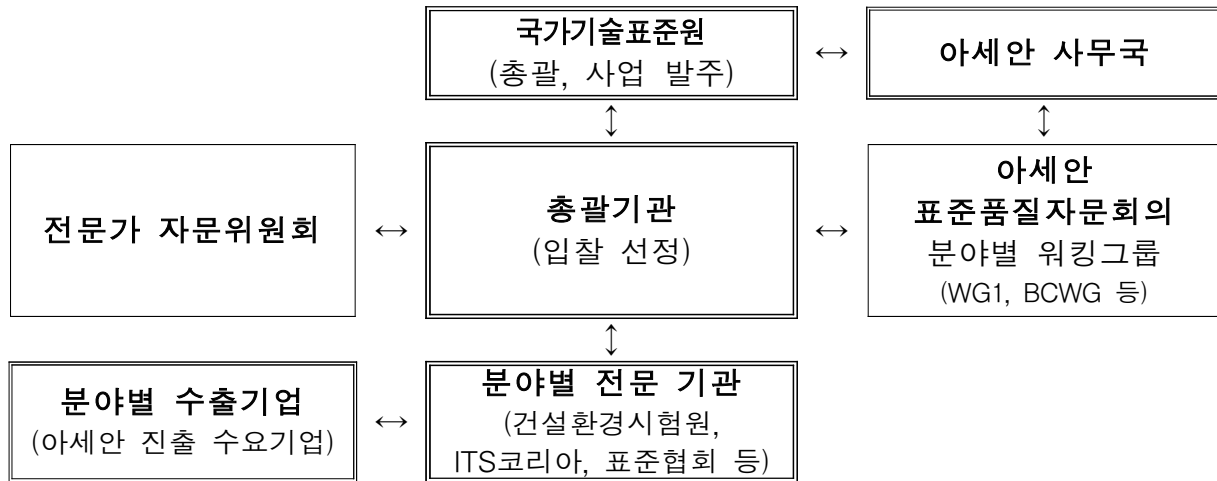
□ 무역기술장벽 대응 체계: TBT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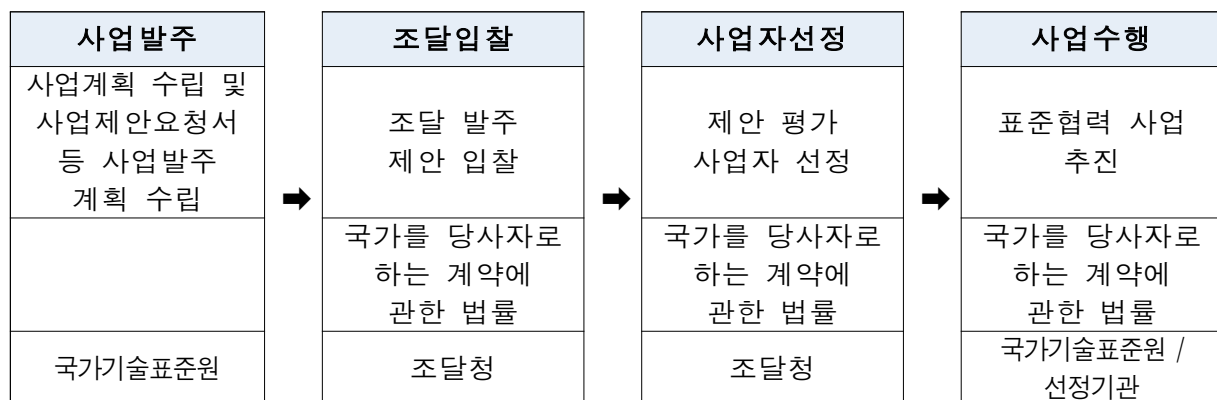
* TBT 통보문 조사/분석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정보통신, 화학/생활, 기계/금속 등 분야의 20개 업종별 협·단체, TBT 통보문 분석 3개 시험기관, 통상자문을 위한 5개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등), 해외 거점기관(KOTRA) 등 28개 기관으로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중('14년~)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신규내역) 추진 체계

○ 한-아세안 표준협력 추진 체계



○ 총괄기관 선정 추진체계(용역발주)



○ 표준협력 사업 추진 절차

- 1단계: 협력수요 조사 → 2단계: 현황분석 → 3단계: 협력전략수립 → 4단계: 협력제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4,288	4,674	5,099	5,549	6,049	
20~ 24		4,942	5,889	6,689	7,489	8,38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산업부 최고점수 91.8)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17~'18년)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정보 분석(기초/심층) 후, 업계 전파하여 애로를 사전에 해소 내지 완화
* WTO 통보규제 증가 : ('17) 2,585건 → ('18) 3,065건 → ('19) 3,337건 → ('20) 3,372건(예상)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최종안 심층분석도 실시) 확대 실시
- 중소·중견 기업은 TBT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내역)사업 추진

- (협력분야 발굴) 기간산업·시험인증분야 및 4차 산업분야 등 협력분야를 발굴('21.~)
- (핵심내용) “한-아세안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협력 강화('22.~)

< 한-아세안 표준협력 분야 확대 계획 >

(現)협력 분야('20.~'21)		→	향후 협력 분야 확장('22~)	
협력대상	아세안		아세안 (4차산업분야)	회원국별 및 회원국 군별 (기간산업, 시험인증분야)
협력 분야	 건설자재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22.)	 스마트제조	 기계·소재
	 ITS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에너지	 법정 계량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17년, ‘18년) : 우수
-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3)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 본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제/개정)내용을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즉시 전파하고
 - WTO 다자협상(3월, 6월, 11월), 양자 협상(필요시 현지규제당국 방문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사전에 **제거(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외국의 기술규제를 분석(기초/심층)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민관합동 TBT 컨소시엄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 TBT대응을 하고 있음
 - 21년 이후 무역기술장벽종합지원센터의 기술규제분석, WTO 대응, 기업의 애로해소(컨설팅/설명회/간담회등), 정보제공등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
 -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내역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반영해주시길 건의
 - 한-아세안 표준협력 사업의 중요성, 향후 예산 규모의 증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2년부터 신규 세부사업으로 사업 확장 필요
 -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아세안 진출 기반 조성,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표준의 아세안 확산 필요
 - 우리나라와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에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현지 진출 가능
 - 또한, 동 국가에 우리 기업 제품 시험성적서 인정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 지원
 - ‘22년도에는 “한-아세안 표준화 연구센터”를 설립(구축)하고 22년 이후 협력사업 추가 확대에 따라 예산 소요가 급격히 증가될 전망
 - (‘21.) 협력전략 수립 연구 2건 등 600백만원 → (‘22.)협력전략 수립 연구(신규) 2건 등 + 센터 운영 등 1,800백만원
- * 협력사업 1건당 전략수립 300백만원 소요되며, 센터 운영비 1,200백만원/연 소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4,380	4,380	-	3,432			4,380	4,330	98.9	98.9		50
2018	4,100	4,100	-	-			4,100	4,087	99.7	99.7		13
2019	4,288	4,288	-	-			4,288	4,257	99.3	99.3		31
2020	4,942	4,942	-	-			4,942	4,795	97.0	97.0		1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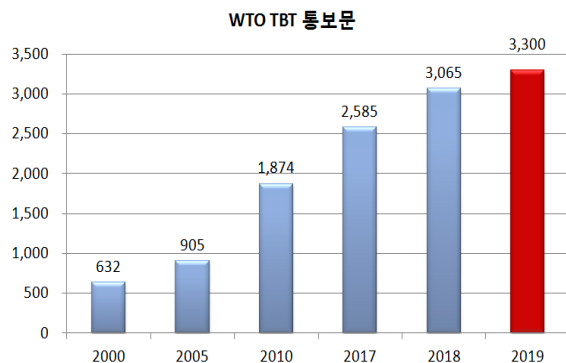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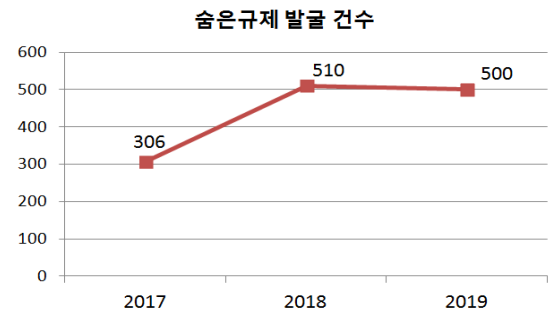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 3,432백만원 - 전용 내역 및 사유)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목(320-02)으로 3,4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탁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반연구비목(260-01)으로 3,432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었으며, 기재부 승인 받은 후 집행했음) * 이후 ‘18.6.12 법적근거 마련 완료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개정(안) 공고(‘16.3.24.), 국회접수(‘16.10.25), 상임위상정(‘16.12.22), 공포(‘18.6.12)]
	<p>국가표준기본법</p> <p>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p> <p>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p> <p>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 편성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18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19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0	- 위와 동일하게 기술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사업 일반 현황

- (통상환경)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따라 무역 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
 - 비관세장벽의 관세 환산치가 13.7%로 세계평균관세인 7.7%보다 높고, 그 중 무역기술장벽(TBT)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15, OECD)
 - '19年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3,337건에 달하여 WTO 출범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
 - * ('05) 905건 → ('10) 1,874건 → ('18) 3,065건 → ('19) 3,337건 → ('20) 3,372건(예상)



- (기업여건) 해외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지 규제를 기업이 자체 해결하는 데는 한계
 - 특히, 신설규제가 증가하는 개도국은 규제당국 접근자체가 어렵고 규제절차와 정보 입수가 쉽지 않아 민간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움
 - * 개도국 신설규제: ('08)852건/68% → ('12)1,146건/80% → ('18)1,725건/83% → ('19)1,750건/84%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해외 기술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
- (TBT 민관 합동대응) 해외기술규제 환경변화에 따른 TBT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지원 서비스 추진중
 - 국표원(주관), 시험분석기관(KTR, KTC, KTL, KCL) 및 협단체(전자정보통신, 정밀화학, 기계산업등), 기업, 유관기관(산업연구원, KOTRA)등이 현장 수요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

참고 2 기술규제 입수 분석 및 규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 해외 기술규제는 ① 규제입수 → ② 기초분석 → ③ 심층분석 및 정보전달 → ④ 정부 대응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 절차 모두 중요

- (1단계: 규제입수) WTO TBT 통보문 규제 및 미 통보 숨은 규제 발굴*

* WTO 등 TBT 통보문 조사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애로 발굴, △ 기업(해외지사),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은 해외규제 발굴

- (2단계: 기초분석) WTO 통보문 전체('19년 3,337건)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부처 및 관련기업의 의견 수렴

- (3단계: 심층분석, 업계전파 및 대응전략* 마련) 기업 의견조사시 수출금액 2억원 이상 품목 등에 적용되는 규제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하여 제품 설계 및 제조시 반영토록 하고,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TBT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국가별·업종별·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 규제 피해규모, 요청사항 등 업계 의견수렴, △ 업종별 컨설팅, 설명회 추진

- (4단계 : 불합리한 규제 정부대응) 업계 애로규제, 국제표준과 불일치되는 기술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해당 정부와 직접 협상(WTO 연 3회, FTA 양자협상, 현지규제당국방문협상)하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우리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애로를 겪는 양자·다자 협의의 TBT 애로 안전*은 지속적으로 증가

* ('15) 60건 → ('16) 81건 → ('17) 91건 → ('18) 112건 → ('19) 120건

○ 해외 기술규제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의 자체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 현 황

- 개별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다양한 국가·품목에 대한 정확한 해외기술규제 정보 습득은 사실상 불가능

□ 보완할 사항

- 그간 정부는 제·개정 동향 정보수준, 특정국에 한정된 정보 또는 완결성이 부족한 정보 등 기업이 실제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취약

< 기술규제 정보 제공 현황 >

- (KnowTBT포털) 해외 기술 규제(WTO TBT 통보·미통보) 제/개정사항에 대한 TBT 컨소시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중('08년 개통~)
- ⇒ 기술 규제 동향 정보 측면에선 유용하나, 기업들이 실제 수출에 필요한 **현행 기술 규제 정보 제공 기능은 부재함**
- (한·중 FTA TBT 정보) 품목에 적용되는 강제표준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나, **중국에 한정되고, 품목에 적용되는 인증절차, 인증수행기관 등 정보 부재**
- (Certinfo) '14년부터 149개국 457개 인증제도에 대해 대상품목(HS코드4단위), 인증 절차 및 인증 수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구체적인 품목(HS코드 6단위)에 대한 해외 기술기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더불어 국가와 품목으로 검색되지 않아서 실제 기업이 활용하는 데 미흡

□ 추진 계획

- (기업의 수요측면) 기업은 해외기술규제에 관련된 자사 수출제품이 보다 세분화(최소 HS6단위)된 품목으로 분류되어지고, 이와 관련된 현행의 TBT정보를 기술기준 수준의 아주 자세한 정보를 희망함
- 이에 기업이 원하는 실제 수출국에서 시행중인 인증제도, 기술 기준(제품안전기준등) 등, 현행의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기업에 제공추진

참고 3-1

국가/품목별 현행 규제/인증정보 서비스 제공

- (신규 서비스) 제·개정되는 TBT정보외에도 수출기업에 즉시 필요한 국가/품목별 현행 규제/인증정보에 대한 종합 서비스 신설
 - 중/남미, 신남방 등 신흥 개도국 및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우선 시범운영하되, 단계별로 대상국 확대 추진
 - * (1단계) 중남미, 신남방 → (2단계) 북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 (3단계) 아프리카,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되, 수출기업 니즈를 고려한 규제/인증정보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서비스 DB구축
 - * 현행 규제정보외에도 TBT통보문, 심층분석/규제동향 등 향후 제·개정되는 최근 규제정보도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① 수출국가, 대상품목(hscode) 검색기반 규제정보(법령/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종합DB설계 연구
- ② 1차년도 대상국가/품목 규제정보 수요 실태조사 및 대상DB구축
- ③ 사용자 친화형 규제맵 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참고 4 중국 및 新남방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표준분석 등

1. 중국, 베트남, 인니등 新남방 국가 기술표준분석

- 신남방지역 수출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 품목 중국 기술표준(GB)분석 확대 및 베트남, 인니의 기술표준 신규분석 필요
 - (중국) 표준(GB)*, 중국은 우리의 제1수출 시장(26.8%'18년 기준)이나,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 규제가 많고, 제도 운영이 불투명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 에너지라벨 기준변경(도로용 LED,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China RoHS(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 기기) 및 4차산업(전기차, 드론, 로봇)관련 표준 분석이 필요
 - (베트남) 전기전자·LED 등 제품 표준(QCVN)
 - (인도네시아) 디스플레이 가전, 등 제품 표준(SNI)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우선분석 대상 강제표준 (총 3,369종)

- (1) 베트남 : 강제표준(QCVN, TCVN) 12,000종 중
 - (CR마크인증(강제) 관련 기술규정 52종) + (대상제품 102개 × 표준 6종) = 664종
- (2) 인도네시아 : 강제표준(SNI) 12,000 종 중
 - (SNI인증(강제) 관련 기술규정 205종) + (대상제품 500개 × 표준 5종) = 2,705종

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표준/기술규정 현황

① 베트남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품질기술원(Directorate for Standards)과 기술표준원(STAMEQ,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은 베트남의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 담당
- **(표준개요)** 강제사항인 기술기준(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738건 및 국가표준(TCVN,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11,363건 등 총 12,000여 건의 표준을 운영 중임
 - * 관련법률 : 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
- **(표준분야)** 제품 및 상품(연료,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 EMC, 철강, 건축자재 등), 서비스 및 프로세스, 환경, 사회경제활동 등 총 5개 분야가 해당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베트남 강제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약 38%이고, 자국언어로 표준을 발행함에 따라 별도의 표준내용 확인 필수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CR Mark인증(안전 및 EMC)이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12개 품목군*임(인증기간 3년) 102종제품**에 해당

- *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EMC),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사료 등 12개 품목
- ** 102종 제품의 경우, 12개 품목군에 적용되는 TCVN(TCVN이 없는 경우 상위강제규정인 QCVN기준) 기준 제품군 수 산출
- *** 우선분석 대상 표준 : 강제표준(QCVN, TCVN) 12,000종 중 (CR마크인증(강제) 관련 기술 규정 52종) + (대상제품 102개 × 표준 6종) = 664종
- CR Mark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52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 표준 수는 1~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그 밖의 강제인증으로는 에너지효율(VNEEP), 통신(VNTA), 의료기기허가(MOH) 등이 존재
- **(주요 기업애로)** 인증제도의 복잡성*, 既 제공 중인 규제정보의 부정확함** 등 수출에 필요한 규제 정보 자체의 물리적 부족으로 기업애로 부상
 - * CR마크 인증 취득 형식이 제품별 1-8단계로 구분, 취득절차 상이
 - ** 규제도입 신흥국으로 에너지 효율, 무선통신, 유해물질제한(RoHS) 등 제품 별 다중분야 규제 적용 추세이며 매년 새로운 규제의 도입, 기존규제의 개정이 활발히 진행

② 인도네시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국가표준화기구(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는 대통령령(No. 12/1997)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
 - 인도네시아의 표준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계측, 표준, 시험 품질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규격을 개발
- **(표준개요)** 국가표준화기구(BSN)에 의해 국가표준(강제)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를 운영 중에 있고, 12,405건으로 집계('20.4월)¹⁾
- **(표준분야)** 일반, 서비스, 환경 및 안전, 산업(전기전자, 통신, 철도, 선박, 비행기, 건축자재, 화학, 의료 등), 제품 및 서비스, 시험방법 등 총 42개 분야 해당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SNI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16%(1,955건)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국가표준명과 동일한 SNI인증(Standar Nasional Indonesia)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205개 품목군*, 500개 제품 내외임(인증기간 3년)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정보사이트 : <http://sispk.bsn.go.id/RegulasiTeknis/SniWajib> 검색

- SNI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205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 표준은 1건~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 농업 및 식품, 철강, 비료, 화학, 신발, 가죽,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등 205개 품목
 - ** 우선 분석대상 표준 : 인도네시아 : 강제표준(SNI) 12,000 종 중 (SNI인증(강제) 관련 기술 규정 205종) + (대상제품 500개 × 표준 5종) = 2,705종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승인(SDPPI), 할랄인증(Hallal), 의료기기허가(DOH) 등이 존재
- (기업애로) 국제표준인증 미인정 및 국외 시험인증 진행 불가*등 인증취득 제약이 많아 기업 애로 부상
 - * 국제표준규격인증을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취득 대상이면 인도네시아 현지 LSPRO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 및 유통 가능, 비용·시간적 부담이 증가
 -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CB성적서 불인정으로 오로지 현지 시험성적서만 인정

참고 5 2019년 수출기업 TBT(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사례

No.	분야	국가	규제명	애로유형	해소유형
1	전기 전자	EU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3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에너지라벨 규제		
4			냉장고 에너지라벨 규제		
5		캐나다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6		우크라이나	청소기 에코디자인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7		GSO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8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 인증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9		아랍 에미리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0			ECAS 마크 라벨링 규정		
11		쿠웨이트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2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3		브라질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4		코스타리카	냉장고/냉동고 에너지효율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5		파나마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16		페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17		인도	에어컨 표준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8	중국	전기전자제품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9	정보 통신	인도	통신규칙 개정(안)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20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1	암호기술법				
22	타이어	베트남	타이어 품질기준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3		태국	타이어 TIS 인증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24	기계	GSO	기계장치, 안전부품 및 리프트 장비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참고 6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자료

1 한-아세안 표준협력 사업(개괄)

- (필요성) 국내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표준의 아세안 확산, 한-아세안 표준 공동연구 등 표준 협력 강화 필요
 - 아세안 역내는 국가 표준이 부재하고 일본 표준(JIS)이 일부 선점된 상황으로 주요국들도 對아세안 표준협력을 경쟁적으로 강화
 - * (국내 G社 사례) 아세안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했으나, 일본 표준(JIS) 인증 요구에 따라 일본 건설사들이 주요 업무를 하청 수행
 - 우리의 新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주력·신산업 분야의 표준협력 확대 추진
 - *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19.9월) - 16. 경제협력분야
: 우리는 (중략)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공동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 혁신기구' 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

□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 한-아세안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22년~) 등을 통해 '25년까지 주력·신산업 중 10대 분야에서 표준협력 사업 추진

① (추진계획) '25년까지 對아세안 수출 비중이 높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10개 분야에서 표준 협력사업 추진

- * 주요 협력 산업분야 : 건설자재, 전기전자, ITS, 섬유,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등
- ** 표준협력(누적) : ('21) 2건→ ('22) 4건→ ('23) 6건→ ('24) 8건→ ('25) 10건

② (소요) '21년 對아세안 표준협력방안 연구 2건(건설자재·ITS) 및 추가 표준협력사업 발굴비용 등 6억원

- 표준협력방안 연구 5억원 = 2개 분야 × 25백만원 × 10개국

- 신규 협력사업 발굴비용 1억원 = 3개 과제 × 333백만원

- * '21년도에는 사업 초기단계임을 감안, 협력사업 발굴비용을 표준협력 연구비용 (총 6억원)에서 일부 반영(1억원)하여 수행

- 한-아세안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분야를 전기전자, 섬유, 스마트제조등 10개 분야*로 확대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산업부)에 따른 4차 산업 10대 유망 분야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에너지 등) 및 기간산업·시험인증분야 등 전방위 산업군으로 확대

< 한-아세안 표준협력 강화 계획 >

협력대상	협력 분야('21)	→	향후 협력 분야 확장('22~)	
	아세안		아세안 (4차산업분야)	회원국별 및 회원국 군별 (기간산업, 시험인증분야)
협력 분야	 건설자재  ITS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22.)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기계·소재  법정 계량 등

□ 기대효과

- (TBT대응)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 해소
- (기업진출) 표준협력을 통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아세안 진출 및 신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판로 개척
- (수출시장 다변화) 신흥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美·中·日→ASEAN, 중앙아, 중남미 등)에 기여
- (우방국확보) 국제 표준화기구 내 아세안 회원국의지지 확보로 향후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시 유리한 입지 선점

□ 배경 및 현황

- (아세안 건설시장 동향) 아세안 건설시장 규모* 증가 추세

* 아세안 주요 5개국(인니, 필, 베, 싱, 말) 1,283억\$('12.) → 2,124억\$('19.) 약 65.5% 증가

- (기업진출 애로) 아세안 회원국의 건설자재 국가표준 혼재로 중복 시험인증 부담 및 기업 진출 장애

- ▶ 동남아 국가표준 부재(미얀마, 캄보디아)로 다양한 외국표준(JIS, ASTM, BS) 혼재, 특히 동남아 전역에 일본표준(JIS) 선점
- 이에 사업별/고객별 상이한 표준 적용 및 외국 건자재 표준 기반 프로젝트로 국내 업체의 진출 장애 발생
- *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프로젝트를 GS가 수주하였으나, 일본 현지 업체가 원자재 납품

□ 건설자재 표준협력 주요내용

- (아세안 표준 선진화) 아세안 표준 조화* 및 아세안 표준**의 KS 표준 체계 부합화

* 대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개발된 표준간 이질성, 충돌성을 해소하는 작업

* (표준 有 분야) → 표준 조화 및 통일 / (표준 無 분야) → KS 또는 KS 부합 IS 도입

- (시험·인증제도 전수) 우리 시험기관과 연계를 통해 표준의 실제 활용을 위한 시험인증제도 전수 및 필요시 건설자재 시험소 공동 구축

- (공동 활동) 한국, 아세안 표준 담당자 및 기업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 내 공동 TC/SC 활동

<연차별 협력사업 계획>

- ① ('21년도) 아세안 회원국별 건설자재 표준, 기술규정 분석 및 조화 대상 품목 선정 등 협력방안 마련('21.)

- 아세안 회원국 건설자재 품질관리체계(시험인증), 시방서, 세부 분야별 건설자재 표준 현황 조사 등으로 조화대상 품목 선정

② ('22~'25년도) 회원국별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아세안 역내
건설자재 표준 조화('22~'24)

③ (5차년도) 조화표준(안) 발표 및 제안, 성과공유, 시험인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 표준화기구 내 공동 활동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인증애로 해소) 상이한 표준·인증에 따른 중복 시험 부담 해소
- (아세안 진출) 아세안 회원국 건설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 (ISO 내 우방국 확보) 건설자재 관련 신기술 국제표준 제정 시
아세안의 지지 확보

참고 2-1 아세안 국가별 건설자재 표준 현황

구분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국가표준	9종	53종	777종	159종	1종	12종	154종	195종	17종	32종
기술규정 행정규제	4개	22개	3개	2개	1개	4개	-	42개	3개	3개
특이사항	기초적 표준 보유	기초 건자재 및 목재 위주	대부분 의 건자재 표준 보유(건 물에너지 포함)	콘크리트, 유리, 창문 등으로 한정	시멘트 외에는 미보유	기초적 표준 보유	콘크리트, 목재, 타일, 파이프, 마감재 등 중요 품목 보유	물품 별로 기술 규제가 존재, 콘크리트, 타일, 파이프 위주	콘크리트 표준 위주로 미완성 상태	콘크리트 위주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은 건설자재 분야 국가표준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건설자재 분야 국가표준의 기본 체계는 既 구축된 상황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체계적인 건설자재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분야에 대한 표준도 既 보유 상황

3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표준협력 사업

□ 배경 및 목적

- (아세안 동향)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시티에 주목*, 핵심 ITS*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 공유 요청**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지능형교통체계)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

** 한-아세안간 ITS 기술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19.7.17~18,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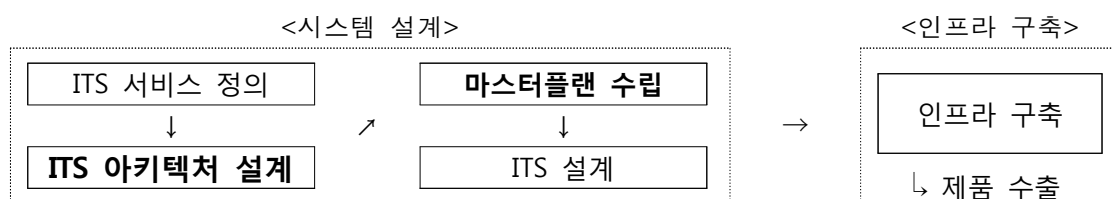
- (기반조성) 우리 기술이 바탕이 된 ITS 표준 협력을 통해 우리 ITS 기술의 아세안 진출 기반 조성 및 시장 개척

□ ITS 표준협력 주요 내용

- (ITS 아키텍처 설계) 아세안 회원국 통합 또는 회원국별 맞춤형 ITS 시스템 아키텍처*를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구축

* ITS 서비스의 구현, 호환성 확보 등 위한 사업 시행자가 따라야 하는 국가차원 밑그림

-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또는 도시별 ITS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공동개발



- (성능평가 역량강화) 아세안 역내 도입되는 ITS 장비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장비 시험소 공동 구축
- (표준 공동연구) ITS 시스템, 관리체계, 제품 사양에 대한 표준을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개발

<연차별 협력사업 계획>

① ('21년도) 한-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협력 방안 연구

- 아세안 회원국별 교통 현황 및 관련제도, ITS 마스터플랜, 아세안 수요 서비스* 등 분석 및 ITS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

* 전자지불, 교통관리, 대중교통 통합정보제공 등 교통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② ('22.~'25년도) 아세안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예산,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국가군(선진, 중진, 후진)을 분류하고 맞춤형 아키텍처 설계 전략 마련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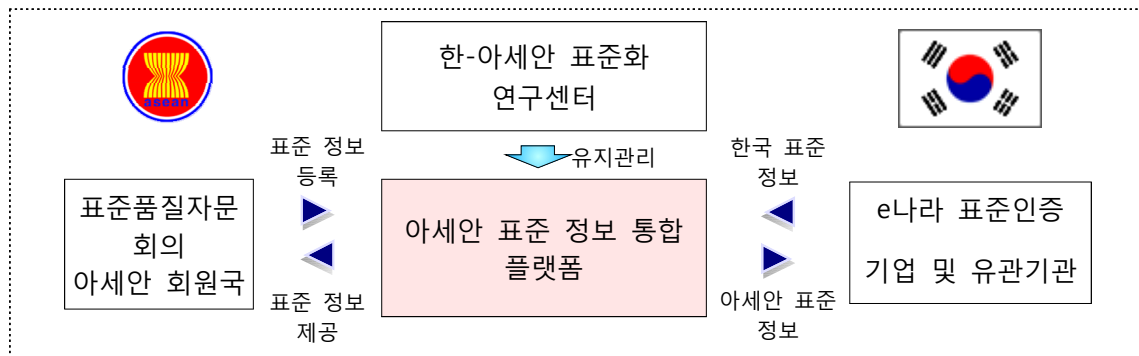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시장 진출) 아세안 역내 ITS 설계 기반 조성을 통한 우리 기업 제품의 아세안 수출 및 시장 개척

4 한-아세안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안)

- (센터 개요) 한-아세안 표준 협력 거점을 구축, 아세안 역내 통합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원활한 아세안 진출을 지원
 - (공동연구)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4차 산업 분야 표준 연구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지역 표준 이슈를 선점
 - (협력사업) 기간산업 분야에서 아세안 대상 다자협력/융합형 프로젝트 등 협력사업(시험·인증·검사) 발굴 및 추진
 - (역량강화) 표준 컨설팅, 표준 담당자 대상 교육, 표준인증체계 선진화 마스터플랜 작성 제도 전수 등으로 아세안 역량강화
 - (플랫폼 운영) 아세안 표준·인증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아세안 표준 정보 통합 플랫폼(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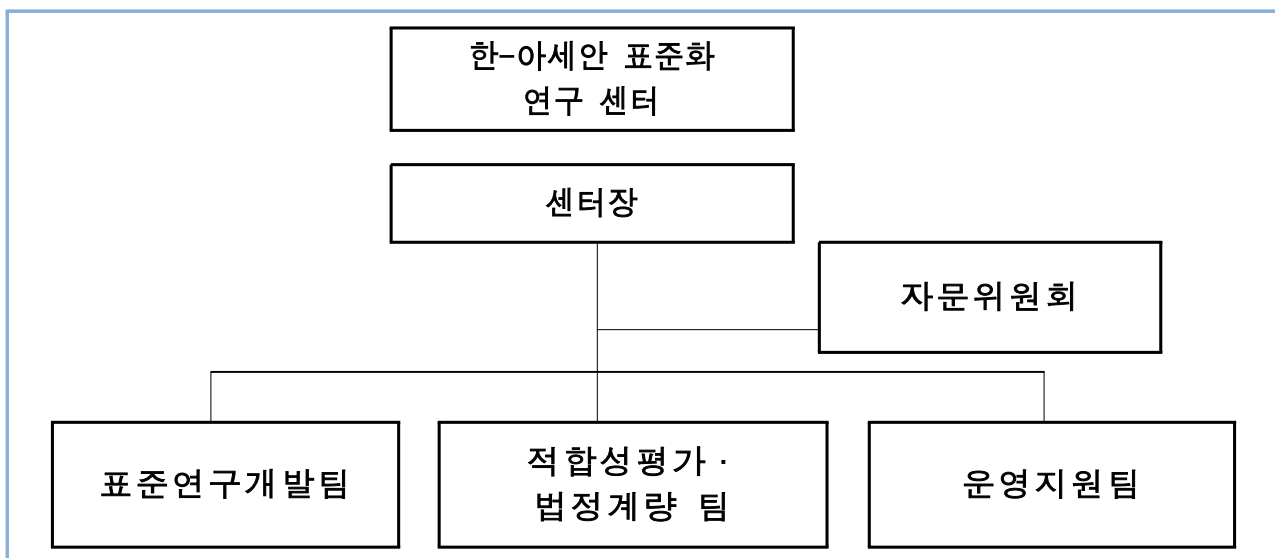


□ (조직(안)) 센터장 아래 실무 팀(3팀)을 두고 자문위원회와 연계

-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및 센터 인사 관리
- (실무 팀) 표준연구팀, 적합성·법정계량팀, 운영지원팀(플랫폼구축·운영 업무 포함) 설치
- (자문위원회)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자료 제공하며 10인 이내의 표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표준연구, 적합성평가, 법정계량 및 기타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 수요분야

《 조직 구성도(안) 》



□ (인력) 각 팀 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한국과 아세안에서 각각 파견

○ (대상) 한국어, 영어 가능하며 표준·인증 협력 有경험자 채용 추진

○ (급여) 현지 직원 및 파견 직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되, 소재지 물가 반영

《 조직 기능(안) 》

구 분	주요 업무
표준 연구 개발팀	▪ 표준, 신기술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수행
	▪ 한-아세안 공동 표준 개발 및 표준 교육·연수 등을 통한 역량강화
	▪ 다자협력 사업 기획·수행
적합성 평가· 법정 계량 팀	▪ 적합성, 법정 계량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수행
	▪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적합성평가, 법정계량 분야 역량 강화
운영지원팀	▪ 센터 행정·지출 등 제반 운영사항 지원
	▪ 아세안 표준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및 DB 관리

사 업 명
(20)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오경희	김영대	
		043-870-5550	043-870-554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190	1,127	1,127	1,127	1,127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10	1,210	1,190 [1,190]	-	20	1,127	1,127	1,127	1,122 [1,122]	-	5	1,127
· 기술규제영향평가	655	655	644 [644]	-	11	572	572	572	570 [570]	-	2	572
· 중소·중견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171	171	168 [168]	-	3	171	171	171	170 [170]	-	1	171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舊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384	384	378 [378]	-	6	384	384	384	382 [382]	-	2	384
○ 비목별 분류(합계)	1,210	1,210	1,190 [1,190]	-	20	1,127	1,127	1,127	1,122 [1,122]	-	-	1,127
· 일반수용비(210-01)	31	31	31 [31]	-	-	31.7	31.7	31.7	31.7	-	-	33.1
· 임차료(210-07)	10	10	10 [10]	-	-	10	10	10	10	-	-	10
· 국내여비(220-01)	5	5	5 [5]	-	-	5	5	5	2.5	-	-	4.7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11]	-	-	10.3	10.3	10.3	10.3	-	-	9.2
· 일반연구비(260-01)	1,153	1,153	1,133 [1,133]	-	20	1,070	1,070	1,070	1,067.5	-	-	1,0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방지, 기업 애로 발굴 해소,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한 기술규제 사후관리 실시 등 소주기적 기술규제 관리 추진
 -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 추진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舊,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범부처(24개 부·처·청)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통해 인증제도의 통합·폐지·개선사항 발굴,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 3년 주기, ('19년) 58개 제도, ('20년) 64개 제도, ('21년) 64개 제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18.12.24.)**
-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 국가표준기본법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01.0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개정(제730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572백만원

-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산출)
 -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 ('20년) $394\text{건} \times 1.43\text{백만원}^* = 564\text{백만원}$ → ('21년) $310\text{건} \times 1.82\text{백만원} = 564\text{백만원}$
 - * 1건당 : ('20년) ('18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백만원 x 3일)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 = 1.43백만원 → ('21년)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8백만원 x 4일*)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 = 1.82백만원
 - *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에 최소 5일 이상 소요되나,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4일로 조정
 - 간사기관 운영비 : ('20년) 4백만원 → ('21년) 4백만원
 - 사업추진비 : ('20년) 4백만원 → ('21년) 4백만원

②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171백만원

-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산출)
 -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 ('20년) $117\text{건} \times 1.08\text{백만원}^* = 126\text{백만원}$ → ('21년) $115\text{건} \times 1.1\text{백만원} = 126\text{백만원}$
 - * 1건당 : ('20년) '18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백만원 x 3일 = 1.08백만원 → ('21년)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8백만원 x 3일 = 1.1백만원
 -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기술규제정책포럼) 운영비 : ('20년) 5.7백만원 → ('21년) 6백만원
 -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기술규제정책포럼) 워크숍,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등 : ('20년) 10백만원 → ('21년) 10백만원
 -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 ('20년) $15\text{만원} \times 15\text{인} \times 10\text{회} = 22\text{백만원}$ → ('21년) $15\text{만원} \times 16\text{인} \times 10\text{회} = 23.1\text{백만원}$
 - 사업추진비 : ('20년) 3.3백만원 → ('21년) 2.2백만원
 - 국내여비 : ('20년) $100\text{회} \times 0.04\text{백만원} = 4\text{백만원}$ → ('21년) $93\text{회} \times 0.04\text{백만원} = 3.7\text{백만원}$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舊,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384백만원

- '21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대상으로 확정된 64개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분석을 통한 통합·폐지·개선사항 발굴,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산출)

-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전문가 분석 : ('20년) $62\text{건} \times 4.3\text{백만원}^* = 265\text{백만원}$ → ('21년) $60\text{건} \times 4.42\text{백만원} = 265\text{백만원}$

* 1건당 : ('20년) '18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백만원 x 12일 = 4.3백만원
→ ('21년)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8백만원 x 12일 = 4.42백만원

- .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 ('20년) $108\text{건} \times 1.07\text{백만원}^* = 115\text{백만원}$ → ('21년) $106\text{건} \times 1.08\text{백만원} = 115\text{백만원}$

* 1건당 : ('20년) ('18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백만원 x 2일)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 = 1.07백만원 → ('21년)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0.368백만원 x 2일)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 = 1.08백만원

- . 사업추진비 : ('20년) 3백만원 → ('21년) 3백만원

- . 국내여비 : ('20년) 25회 x 0.04백만원 = 1백만원 → ('21년) 25회 x 0.04백만원 = 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목표	67	69	70	71	72	최근 4개년 실적치의 평균(68.5%) 보다 105% 상향조정하여 72%로 설정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 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68	69	70	심사중	-			
	달성도	101%	100%	100%	심사중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68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101건 → 반영 69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96건·54건) → 개선(16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44건(검토 의견 제시 16건)
2018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73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53건 → 반영 37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5건·56건) → 개선(20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71건(검토 의견 제시 10건)
2019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87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43건 → 반영 31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5건·58건) → 개선(15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34건(검토 의견 제시 4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19년 신규) : 58개(개선 21개, 폐지 7개, 존속 30개)
2020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82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75건 → 규제심사 진행 중)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26건·89건) → 개선(36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97건(검토 의견 제시 19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검토 중,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예정)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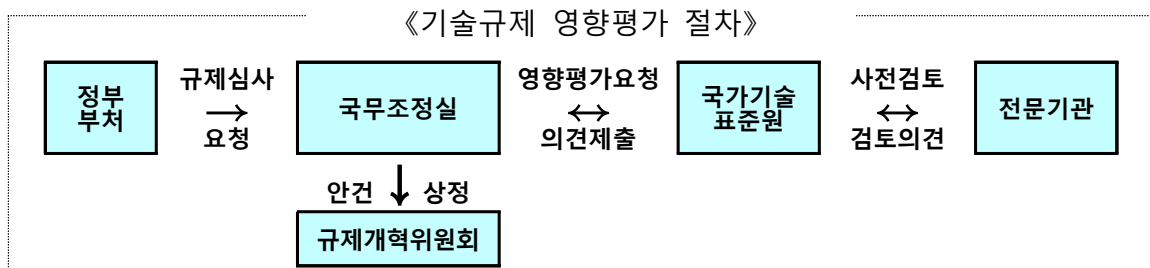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기술규제 사후관리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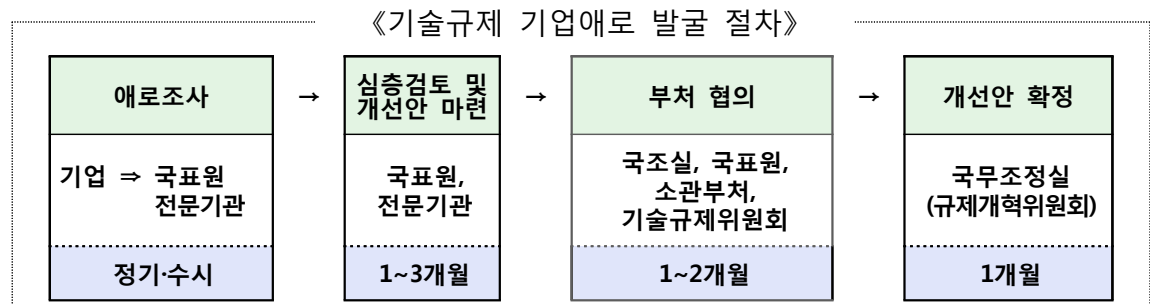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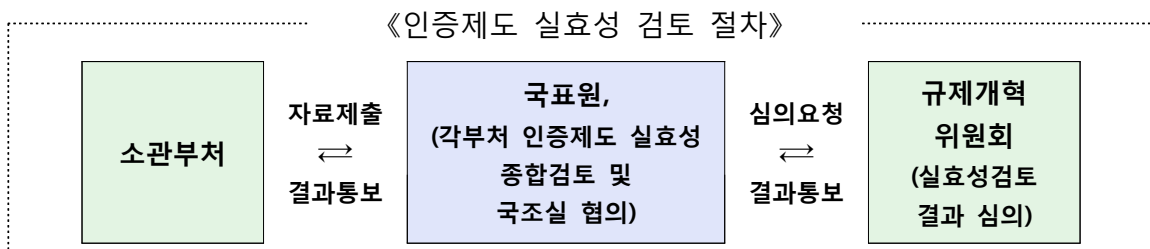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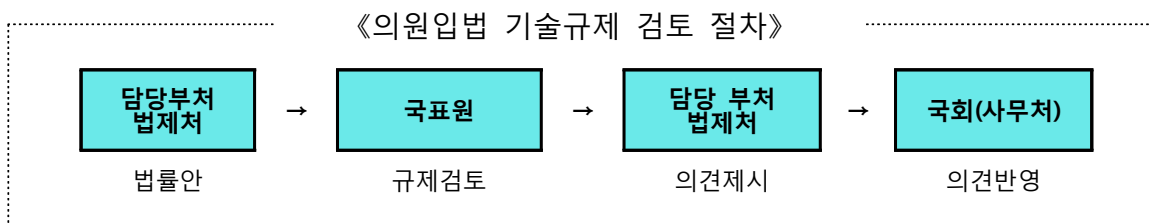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②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③ 미통보 규제 발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190	1,127	1,093	1,071	1,060	
20~ 24		1,127	1,183	1,278	1,380	1,4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세무 내역사업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평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파악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19회계연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9년부터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대상 판단기준(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매뉴얼)을 만들어 쏘부처(45개 부·처·청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검토대상 판단기준, 제도 시행 취지 등에 대하여 부처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18.12.13)하는 등 실효성 검토 대상 기준 안내 및 발굴 요청
-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검토대상 연도를 조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검토대상을 확정*(제431회 규개위, '19.4.26)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후 추진 중

* 검토대상 제도에 대한 검토연도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유사제도는 동일년도 검토, 시행 초기 제도는 '21년에 배정하는 등 배정기준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 및 검토연도 확정('19년 58개, '20년 및 '21년 각 64개 제도, 총 186개)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172	1,172	-	-	-	-	1,172	1,158	98.8	98.8	-	14
2018	1,063	1,063	-	-	-	-	1,063	1,048	98.6	98.6	-	15
2019	1,210	1,210	-	-	-	-	1,210	1,190	98.3	98.3	-	20
2020	1,127	1,127	-	-	-	-	1,127	1,122	99.6	99.6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0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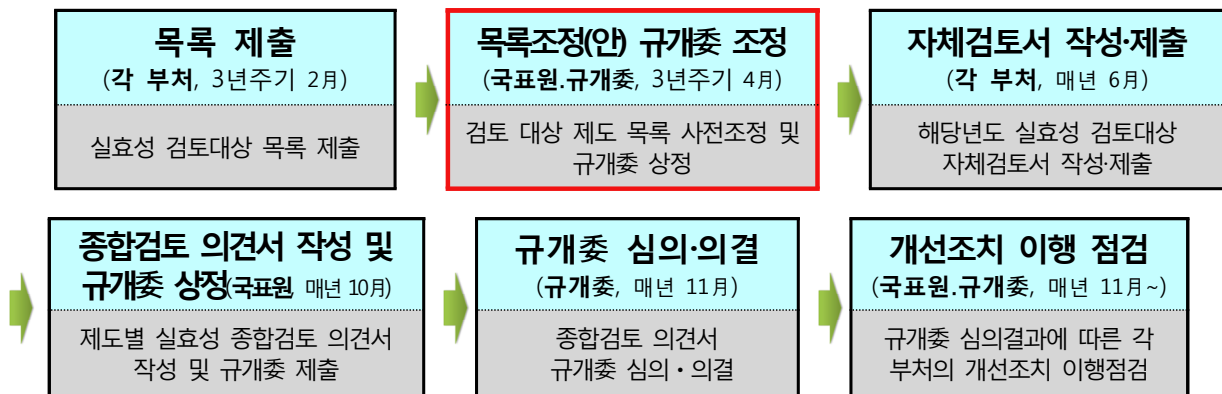
- 별첨 참조

1. 개요

- 불합리한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부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 본격 시행

* “범부처 적합성평가 제도 관리 방안” (제419회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8.8.24)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추진일정 >



- ① (각부처) 부처별로 검토대상 인증제도 목록 제출(3년주기, 2월) 및 해당년도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점검 자체검토서 작성 제출(매년6월)

* (예시) A부처가 15개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시, 3개년('19~'21) 검토 목록('19년 5개, '20년 5개, '21년 5개)과 해당년도('19년 5개) 존속 필요성 자체검토서 작성·제출

- ② (국표원) 검토 대상 목록 사전검토·조정, 종합검토 의견서* 작성(매년10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처협의, 기술규제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규개위 상정

- ③ (규개위) 인증제도 실효성 종합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조정하여 검토결과를 해당부처에 통보(매년11월)

☞ 금년부터 실효성 검토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3년간('19~ '21)의 연차별 검토 대상 목록을 부처에서 취합·사전조정하여 규개위에 보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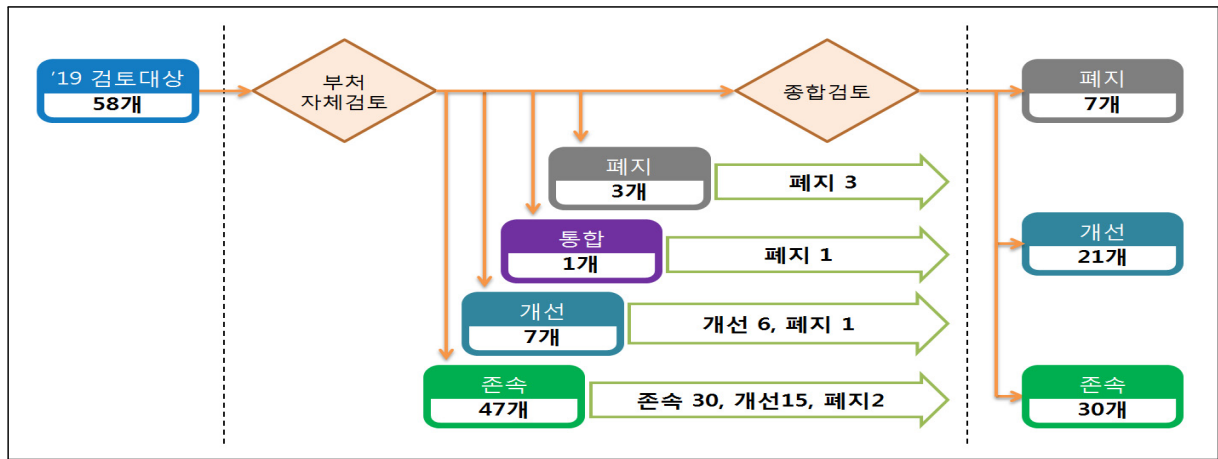
- ▶ 3년 주기로 적합성평가제도(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의무화, 연차별 검토 대상 목록은 규개위의 조정을 통해 확정

2. 2019년 성과

- (대상확정) 법률에 근거한 각 부처 시험·인증 등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대상* 확정 및 검토 실시(3년주기, 186개 제도)

* ('19년) 58개 제도, ('20년) 64개 제도, ('21년) 64개 제도 (제431회 규개위, '19.4.26.)

- (종합분석) 기술규제위원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부처 협의를 거쳐 '19년 검토대상 58개 제도에 대한 분석 수행



- (정비도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28개의 정비대상 과제를 도출하고 규개위를 통해 최종 확정

* 폐지 7, 개선 21, 현행유지 30 (제443회 규개위 심의 확정, '19.12.27.)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1	국토부	택시미터의 검정	의무	15	국토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의무
2	문체부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임의	16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제도	임의
3	국토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의무	17	국토부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임의
4	산업부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	18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임의
5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의무	19	산림청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임의
6	고용부	사회적기업	임의	20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인증	임의
7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의무	21	산림청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	임의
8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임의	22	과기부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임의
9	농림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임의	23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임의
10	해수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임의	24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임의
11	과기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임의	25	문체부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임의
12	과기부	ICT융합품질인증(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임의	26	농림부	술품질인증	임의
13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27	소방청	소방용품 형식승인	의무
14	국토부	공간정보품질인증	임의	28	소방청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임의

사 업 명
(21)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용재	-
		043-870-5560	043-870-556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710	959	959	895	895	△16	△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10	710	707 [707]	-	3	959	959	959	956 [956]	-	3	89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8 [478]	-	2	480	480	480	478 [478]	-	2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4 [184]	-	1	185	185	185	184 [184]	-	1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45	45	45 [45]	-	-	294	294	294	294 [2094]	-	-	230
○ 비목별 분류(합계)	710	710	707 [707]	-	3	959	959	959	956 [956]	-	3	895
· 관리용역비(210-15)	665	665	662 [662]	-	3	665	665	665	662 [662]	-	3	665
· 자산취득비(430-01)	45	45	45 [45]	-	-	294	294	294	294 [294]	-	-	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표준·인증 정보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10 OS 도입 등 HW 및 SW 최신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 : ('20) 480 → ('21요구) 480백만원**
 - (필요성)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포털) 관제 및 통합 DB 관리
 정부 28개기관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정보 등 총 5만여종의 통합검색 대국민 지원 서비스
 (원문포함) 제공(e-나라표준인증포털, <http://www.standard.go.kr>)
 * 포털 구축완료('17.1~) 이후 최근 3개년간 접속자수 누적 1.3억 페이지뷰 달성
 - (산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1건)

구분	금액	요율	유지보수비
범부처 표준인증 시스템 개발비	5,529,842,000원	7.7%	425,797,834원
상용SW 도입비	787,400,000원	6.9%	54,330,600원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480,000,000원

-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 : ('20) 185 → ('21요구) 185백만원**
 - (필요성) 국민안전(리콜, 제품안전) 및 기업지원과 직결된 정책·동향(해외표준, 안전기준, 기술규제 등), 공지사항(보도자료, 고시공고사항) 정보 등 신속지원 필요

- ① 홈페이지(www.kats.go.kr)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 및 업무지원
 ②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 : 제품리콜 정보, 제품안전 인증 정보 제공
 ③ 인체치수 포털(sizekorea.kr) : 한국인 평균 인체치수 참조표준 정보제공
 ④ TBT 통합포털(www.knowtbt.kr) : WTO/TBT(무역기술장벽) 통보문 정보 제공
 ⑤ 인정통합정보포털(www.knab.go.kr) : 공인시험기관 정보 및 공인평가사 업무지원

- (산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전문포털(5개) 통합 헬프데스크, 시스템 관제·장애관리·네트워크 관리 유지보수 사업(1건)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 PM	IT 시스템운영자	IT지원기술자
투입인력		6	8	12
노임단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참조)		362,780원	278,605원	183,743원
월평균일수		21일		
직접인건비합계		138,819,156원		
제경비	작업인건비×10%	13,881,916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5,270,107원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6,797,118원		
합 계(백만단위미만 반올림)		185,000,000원		

③ 전산장비 및 SW 구매(자산취득비 430-01) : ('20) 294 → ('21요구) 230백만원

- (필요성) 해킹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웹접근성·호환성·취약점 평가·보완 및 관제·기술지원 대응기반 마련
- (산출)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 SW 라이선스 비용, 노후장비 교체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단가	수량	금액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내PC지킴이)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5	5개	25
가상화 서버	40	1대	40
네트워크 스위치(백본)	45	1대	45
개인정보 모니터링 상용 SW	30	1대	30
방화벽	45	1대	4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23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184	444	488	537	639	최근 3년간 목표치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설정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404	573	594	599	-			
	달성도	219.6	129.1	121.7	11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400만건 이상 접속)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8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500만건 이상 접속)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홈페이지 개편('18.6)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9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594만건 접속),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표준용어DB연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20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600만건 이상 목표),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표준용어DB연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5만여종에 이르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원문정보와 메타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e-나라표준인증 포털 이용자수가 연간 6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정책정보(표준·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가 대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콘텐츠 최신화 및 가동률 99.9%이상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운영관리 수행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정보화 운영 대응체계 추진반 구성
(기술규제협력과 및 각 부서 표준정보화 담당)

정보화 운영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정보화 사업수행 및 정기점검 (매월)
(정보시스템 HW 및 SW 관제, 헬프데스크 운영 등)

정보화 사업수행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정보화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707	959	930	911	902	
20~ 24		959	6,499	3,909	2,205	1,557

*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 플랫폼 구축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없음
- '17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 시스템 ⇨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
 - 국내 표준인증 정보수요 충족, 해외 표준인증 정보수요 확대를 위해 신규 DB 구축
 - 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등 빅데이터 체제 구축
 - 부처간 표준인증 정보공유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 * 실시간 표준인증 상담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챗봇) 구축 추진
 - *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인증 맵 서비스 지원
 -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7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8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8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590	590	-	-	-	-	590	573	96.0	96.0	-	17
2018	627	627	-	-	-	-	627	620	98.9	98.9	-	7
2019	710	710	-	-	-	-	710	707	99.6	99.6	-	3
2020	959	959	-	-	-	-	959	956	99.7	99.7	-	3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8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9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0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참고 1

'21년 보안장비 도입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19.6.7)으로 개정된 기준에 부합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 개인정보 접속기록 항목 구체화 및 다운로드 시 사유기재 의무화
- 노후한 보안장비가 단종되어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안 취약점 상존(방화벽, 백본)
- 가상화 서버 및 백업 시스템 솔루션이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로, 해당 제품의 장애 및 보안취약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하므로 신규 버전의 업그레이드 솔루션 구매가 필요
 - * 현 가상화서버 : vSphere ESXi & vCenter 5.5(기술지원 종료)

□ 요구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품명	장비규격	도입연도	교체사유	단위	수량	가격
신규	웹보호 라이선스(SSL)	민간 SSL 도입 (G-SSL 종료)	-	G-SSL 지원종료	식	5	25
교체	방화벽 장치	안랩, Trus Guard 1000A	'14	내구연한경과(5년) 교체부품 단종	대	1	45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백본)	CN/C9410R	'06	내구연한경과(6년)	대	1	48
교체	가상화서버 솔루션 업그레이드	vSphere ESXi & vCenter 6.7	'13	내구연한경과(5년) 기술지원종료	식	1	50
교체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U-PRIVACY SAFER v3.0	'14	내구연한경과(5년) 법령기준변경	식	1	33
	합계						201

※ 방화벽(23055850), 네트워크 스위치(23329893), 개인정보모니터링(22227341), 가상화서버(견적가 참조), 웹보호라이선스(견적가 참조), ()는 조달물품번호

참고 2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시스템(e-나라표준인증) 개요

□ 사업목적

- 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중복규제 해소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e-나라표준인증 포털 구축 현황 》

◆ ('14년, 1차) 통합 DB 구축* 및 대국민 포털(e-나라표준인증) 서비스 개시

* KS 표준(2만여종, 8개부처), 기술기준(20개 부처 2천여종), 인증제도(22개 부처, 200여개)

◆ ('15년, 2차) 범부처 표준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① 범부처 KS 업무처리시스템 : KS 표준업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② 중복검증 시스템 : 통합 DB를 통해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여부를 비교검색하는 시스템

◆ ('16년, 3차) 통합 DB 확충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국내 단체표준(4천여종, 136개 협회·단체) 및 포털 모바일 웹 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성과

- 포털 시스템 구축완료('17.1) 이후 이용건수가 누적 1.3억 페이지뷰 돌파

* 이용건수 현황(페이지뷰 기준) : ('17) 4,072만건 → ('18) 4,519만건 → ('19) 4,582만건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우수 포털시스템으로 선정('17.11)

- 전문용역기관(정보화진흥원)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정보의 정확성·실효성 등 포털 종합 만족도 개선

* 포털 만족도 조사결과 : ('17) 76.6점 → ('18) 81.9점 → ('19) 82.9점

- 정부·공공 포털과 연계 확대로 스마트 행정기반 조성

*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정보시스템과 국가표준(KS) 데이터 정보연계 구축('18.3)

* 국가기술표준원-특허청과 포털 표준용어 10만건 공유 연계 업무협약 체결('19.6)

《 e나라표준인증 포털 메인 홈페이지 》

① 통합검색

② 조건검색

③ KS 인증 지원서비스

④ 단체표준 검색 ⑤ KS 용어검색

⑥ 표준·인증 정책 정보

⑦ 유관 웹사이트

- ① 통합검색 서비스 :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TBT 정보제공
- ② 조건검색 서비스 : 기간별, 부처별, 분야별 조건을 이용한 분야별 상세검색 정보제공
- ③ KS 인증 서비스 : 품목별 KS 인증기관 검색, 품목별 KS 인증업체 검색
- ④ 단체표준 서비스 : 13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의 단체표준 정보제공
- ⑤ KS 용어 서비스 : KS 표준 포함된 10만여종의 기술용어 정의(의미) 제공
- ⑥ 정책정보 서비스 : 범정부 표준·인증 정책 관련 동향 정보 제공
- ⑦ 유관 웹사이트 : 민원 웹사이트 연계(국민신문고, 1381 표준인증 상담 콜센터 등)

참고 3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운영성과

□ 정부 표준인증 통합 포털(e-나라표준인증) 이용자수는 시스템 구축 완료('17.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7년부터 연간 이용자가수가 4천만 페이지뷰를 넘어서, 최근 3개년간 누적 1.3억 페이지뷰를 돌파

* 이용건수(페이지뷰 기준) : ('17) 4,072만건 → ('18) 4,519만건 → ('19) 4,582만건

○ 연간 누적 가입회원수도 25만여명 수준이며 정보서비스 품질도 향상

* 만족도(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결과 참조) : ('17) 79.0점 → ('19) 82.9점

□ 국가표준, 정부 기술기준·인증제도 등 총 5만여종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현행화 체계 유지

○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신규 기술규제 DB 구축 및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 정보, 보도자료 등 최신 정보 서비스 제공

< 국가표준 DB 갱신 현황 >

구분	제정	개정	폐지	확인	소계
2020.3	49	43	5	35	132
2019	364	1,365	137	2,549	4,415

□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공유 확산으로 활용도 극대화

○ 특허시스템과 표준용어 DB(10만여종) 공유활용 업무협약('19.6)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의 해외인증·규격 정보링크 연계('19.8)

□ 홍보 확대 등 대외 인지도 개선 활동 강화

○ 전기전자학회 논문 게재('19.2),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영상 배포 등

참고 4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주요 운영성과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업무포털(www.kats.go.kr)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정책 포토뉴스, 카드뉴스 제작·보급, 각종사업 고시·공고 등 대국민 정책홍보·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 ('18) 382만건 → ('19) 395만건 → ('20, 예측치) 415 만건

< 카드뉴스 제작·보급 >



< 포토뉴스 제작·보급 >



< 유튜브 동영상 제작·보급 >



□ 무역기술장벽 포털(www.knowtb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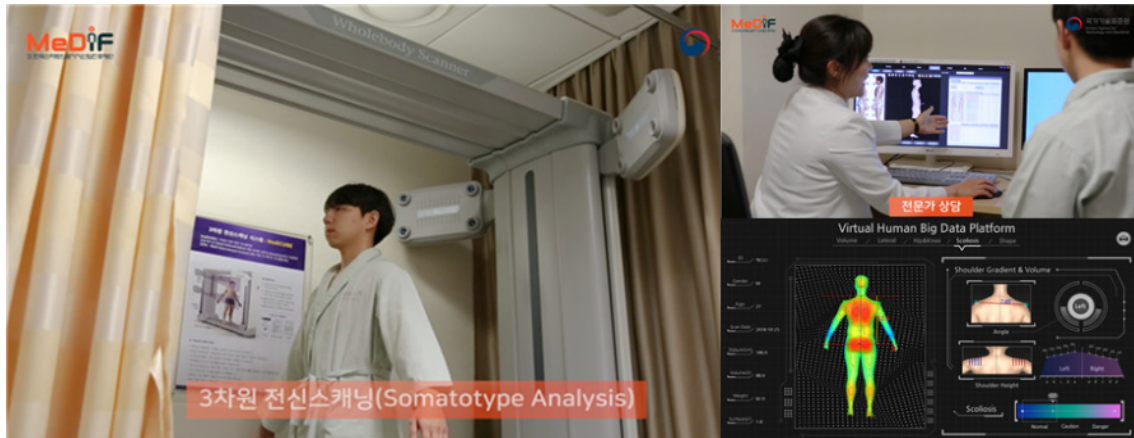
-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문(200여개국) 정보, 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GB 표준·인증 분석 정보 제공

*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 ('18) 3,015건 → ('19) 3,347건 → ('20.3) 947건

□ 인체치수 포털(sizekorea.kr)

- 인체치수 표준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가발, 안경, 장갑, 군복, 건강검진 등 5개 분야에 대한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패션·뷰티·가구 산업 등 개인 맞춤형 제품 서비스에 활용



< 전신 스캐너를 활용한 인체정보 분석, 분당서울대병원 검진센터 >

□ 인정통합 포털(www.knab.go.kr)

- 온라인 국제 공인기관(시험·교정·검사·의학분야) 인정평가 수행 및 평가사 자격심사·교육훈련 지원

* 공정한 인정평가를 위해 ‘자동 평가사 추천’ 기능 제공

** 새로운 국제공인기관 관리체계(ISO 국제표준 17011) 기준에 맞춰 시스템 개편

□ 제품안전정보 포털(www.safetykorea.kr)

- 소비자 리콜 정보, 제품 위해성 평가 정보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 안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 포털 접속 현황 : ('17) 929만건 → ('18) 1,292만건 → ('20) 1,262만건

《 제품안전 정보제공 현황, (단위 : 만건) 》

구분	인증 정보	리콜 정보	위해 정보	불법 단속	안전성 조사	사고 조사	통관 정보	합계
'17	50.15	1.21	10.62	60.44	1.62	0.03	42.57	166.64
'18	56.04	1.36	13.46	68.24	2.00	0.04	70.41	211.55
'19	63.16	1.64	16.23	77.68	2.40	0.04	107.34	268.49

참고 5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업무포털 현황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주요 업무기능	시스템 운영관리 장소
홈페이지 업무포털 (대국민용)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동향 정보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국가 기술 표준 원내 (충북 음성)
	무역기술장벽(TBT) 정보시스템 (www.knowtbt.kr)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 200여개국 TBT 통보문 원문제공	
	인정통합정보시스템 (www.knab.go.kr)	- 시험·검사·교정기관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 제품인정기관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 인정평가사 관리시스템 및 통계관리 시스템 - 인정기관 검색정보 포털 서비스	
	인체치수측정(Size Korea) 정보시스템 (sizekorea.kats.go.kr)	- 연간 한국인 평균 인체치수 데이터 제공 - 표준인체 측정방법, 인체치수 활용 전자 가이드 제공(기업지원용)	
	제품안전 포털 (www.safetykorea.kr)	- 제품안전 인증, 제품 리콜정보, 제품안전 정책동향, 제품안전기준 정보 종합 제공	
국표원 업무 지원 시스템 (공무원용)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지원시스템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 관련 자료 공유 및 업무처리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지·광고사항 연계 및 업무 게시판 운영 등	

참고 6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업무포털 지원 전산장비(HW)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서버 / 스토리지	통합가상화 서버(업무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서버(인터넷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MSA 2052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MSA 2042	1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e-KOLAS HMC	IBM X3550 M3	1
	사이즈코리아 웹서버	DELL R410	4
	사이즈코리아 DB서버	DELL R610	2
	사이즈코리아 파일서버	HP DL360 G5	2
	사이즈코리아 PSM	DELL 1950	1
	백업서버	Arcserve-9040V	1
	IP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IP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내부망)	INI MAX IPKeeper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인터넷망)	INI MAX IPKeeper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DELL PowerEdge R520	1
	PMS 및 PC 보안관리 서버	HP DL380 G6	1
	보안USB 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안USB 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웹키퍼 미러링 서버	CT-1000	1
	V3 배포서버(업무망)	AhnLab EMS 2000A	1
	V3 배포서버(인터넷망)	AhnLab EMS 2000A	1
	개발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en9	1
	개발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en9	1
	소계		35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 품 명 : BigIron RX-4 제 조 사 : BROCADE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 품 명 : OmniSwitch OS9700 제 조 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 품 명 : FWS 624 제 조 사 : BROCADE	35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 품 명 : OmniSwitch OS6700 제 조 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 품 명 : OmniSwitch OS6300 제 조 사 : Alcatel Lucent	7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 품 명 : OmniSwitch OS6400 제 조 사 : Alcatel Lucent	32
	업무망 L4 스위치	제 품 명 : PIOLINK 제 조 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인터넷망 광포트	제 품 명 : OS9-GNI-U24 제 조 사 : Alcatel Lucent	1
	소계		
보안장비	NAT 방화벽	제 품 명 : AhnLab TrusGuard 제 조 사 : 안랩	1
	업무망 방화벽	제 품 명 : ISG-1000 제 조 사 : 주니퍼	1
	인터넷망 방화벽	제 품 명 : WeGuardia XTM6000 제 조 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 품 명 : WAPPLES-2400 제 조 사 : 펜타시큐리티	1
	зом비PC방지용 방화벽	제 품 명 : AhnLab TrusWatcher 제 조 사 : 안랩	1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제 품 명 : VENUS 제 조 사 : 엑스큐어넷	1
	IP 관리 시스템	제 품 명 : IPKEEPER 제 조 사 : 아이앤아이맥스	2
	IPS(사이버안전센터 연동)	제 품 명 : Sniper IPS NE2000 제 조 사 : 원스	1
	소계		
총 합 계(서버 · 스토리비, 전송장비, 보안장비)			112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운영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관리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IP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DB 암호화)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보안)	1
제품명 : ChakraMax	제조사 : (주)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UBI SAFER-PSM MAST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보안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UBI SAFER-PSM MANAG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서버)	1
제품명 : UBI SAFER-PSM AGENT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에이전트)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주)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닥스테크(주)	보조기억매체 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PC 문서삭제 SW	1
제품명 : nProtect Enterpirse	제조사 : 잉카인터넷	PC 보안솔루션	1
제품명 : Backup Exec	제조사 : Symantec	백업SW	1
제품명 : BigLook WASS	제조사 : 이븐스타	웹취약점 점검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Window Server 2008	제조사 : Microsoft	서버 운영체제	2
제품명 : ContentWise CMS	제조사 : ContentWise	업무포털 CMS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WEB/WAS	1
제품명 : Tiberio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DBMS	1
합 계			30

사 업 명
(22)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김석무	김상걸	지재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기술표준원기 관운영	1,611	1,644	1,644	1,592	1,592	△52	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44	1,644	1,611 <1,611>	-	33	1,644	1,644	1,644	1,601	-	43	1,592
· 상용임금	-	-	-	-	-	508	508	442	410	-	32	777
· 운영비	1,575	1,575	1,559	-	16	919	919	919	919	-	-	599
· 업무추진비	-	-	-	-	-	9	9	9	9	-	-	8
· 보전금	2	2	2	-	-	2	2	2	2	-	-	2
· 민간이전	67	67	49	-	18	185	185	251	240	-	11	205
· 자산취득비	-	-	-	-	-	21	21	21	21	-	-	1
○ 비목별 분류(합계)	1,644	1,644	1,611	-	33	1,644	1,644	1,644	1,601	-	43	1,592
· 상용임금(110-03)	-	-	-	-	-	508	508	442	410	-	32	777
· 임차료(210-07)	400	400	397	-	3	400	400	432	432	-	-	455
· 유류비(210-08)	15	15	12	-	3	15	15	15	15	-	-	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3	153	153	-	-	154	154	122	122	-	-	118
· 복리후생비(210-12)	-	-	-	-	-	6	6	6	6	-	-	11
· 관리용역비(210-15)	1,007	1,007	997	-	10	344	344	344	344	-	-	0
· 업무추진비(240-02)	-	-	-	-	-	9	9	9	9	-	-	8
· 포상금 등(310-03)	2	2	2	-	-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320-01)	67	67	49	-	18	67	67	67	57	-	10	56
· 고용보험금(320-09)	-	-	-	-	-	118	118	184	183	-	1	149
· 자산취득비(430-01)	-	-	-	-	-	21	21	21	2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상용임금(777백만원)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8월×22명×2,875천원)

→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12월×22명×2,944천원)

○ 임차료(455백만원)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원)(2020년)

→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55천원)(2021년)

○ 차량유류비(15백만원)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6대)(2020년)

→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6대)(2021년)

○ 시설장비유지비(118백만원)

건물유지비(77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77백만원)(2020년)

→ 건물유지비(41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77백만원)(2021년)

○ 복리후생비(11백만원)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22명×0.27백만원)(2020년)

→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22명×0.5백만원)(2021년)

○ 관리용역비(0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 : 344백만원(2020년)

→ 청사관리용역비 : 0백만원(2021년)

* 20.4.30.용역계약 종료

○ 관서업무추진비(8백만원)

시설안전평가회의등(9백만원)(2020년) → 시설안전평가회의등(8백만원)(2021년)

○ 포상금 등(2백만원)

포상금 등(2백만원)(2020년) → 포상금 등(2백만원)(2021년)

○ 민간경상보조(56백만원)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천원×10명)(2020년)

→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5,600천원×10명)(2021년)

○ 고용부담금(149백만원)

시설관리직 5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금(8월×22명×0.67백만원)(2020년)

→ 시설관리직 고용부담금(12월×22명×0.57백만원)(2021년)

○ 자산취득비(1백만원)

관리용역 계약종료로 용역회사 투입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철수에 따른 물품 구입(21백만원×1식)(2020년)

→ 관리용역 계약종료로 용역회사 투입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철수에 따른 물품 구입(1백만원×1식)(2021년)

-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644	1,644	1,592	1,592	1,592	
20~ 24		1,644	1,592	1,764	1,802	1,822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매년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으로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지출
- 매년 시설장비유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출

-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 13)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444	1,444	-	6	-	-	1,450	1,444	100	99.6	-	6
2018	1,576	1,576	-	-	-	-	1,576	1,533	97	97	-	43
2019	1,644	1,644	-	-	-	-	1,644	1,611	98	98	-	33
2020	1,644	1,644	-	-	-	-	1,644	1,601	97	97	-	4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018										
2019										
2020. 12월기준										

2) 주요 결산사항

2017	- 해당사항 없음
2018	- 해당사항 없음
2019	- 해당사항 없음
2020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23) 기술표준정책 (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정해권	이수호	-
		043-870-5480	043-870-548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표준정책	1,566	724	724	711	711	△13	△1.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 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73	1,573	1,557	-	16	724	724	724	718	-	6	711
· 운영비	679	679	669	-	10	720	720	720	714	-	6	707
· 포상금 운영	5	5	5	-	-	4	4	4	4	-	-	4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789	889	883	-	6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473	1,573	1,557	-	16	724	724	724	718	-	6	711
· 상용임금(110-03)	444	444	434	-	10	481	481	481	476	-	5	491
· 일반수용비(210-01)	53	53	53	-	-	50	50	50	50	-	-	60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8	8	8	-	-	9
· 일반용역비(210-14)	98	98	98	-	-	90	90	90	90	-	-	53
· 포상금(310-03)	5	5	5	-	-	4	4	4	4	-	-	4
· 고용부담금(320-09)	76	76	76	-	-	91	91	91	90	-	1	94
· 국제부담금(340-02)	789	889	883	-	6	-	-	-	-	-	-	-

* '국제부담금'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소관 '국제부담금(1932-304)' 사업으로 이관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운영비) 전문관(무기계약직) 보수(상용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등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 업무지원하는 전문관 인건비
 - 품질경영 우수기업·유공자 포상 및 품질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심사비 및 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책을 개발한 부서 포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 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가품질경영대회 :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로 시작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수여 규모

종 류	'20년	'19년	'18년
훈장	3	3	3
포장	3	2	2
대통령 표창	18	20	20
국무총리 표창	13	11	11
소계	37	36	36

- 역대 주요 참석인사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관, 국가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및 수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1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운영비 : ('20) 720백만원 → ('21요구) 707백만원, △1.8%

< 운영지원(전문관 인건비) : ('20) 580백만원 → ('21요구) 594백만원, +2.4% >

- (요구) 최저임금 증가 등에 의해 전문관 인건비 증액

→ '20년 대비 2.4%(14백만원) 증액

- (산출) 상용임금 491백만원(16명x256만원x12개월) + 복리후생비 9백만원(16명x56만원) + 고용부담금 94백만원(16명x588만원) = 594백만원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20) 140 → ('21요구) 113백만원, △19.3% >

- (요구) 국가품질경영대회 우수기업·유공자 포상 및 품질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심사비 및 포상물 제작비

→ '20년 대비 △19.3%(27백만원) 감액

- (산출) 기업 심사수당(60백만원=0.3백만원(수당)×5개분야×2일×20명)
+ 시상품 제작 용역(1식 53백만원) = 113백만원

② 포상금 운영 : ('20) 4백만원 → ('21요구) 4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 운영을 통해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책을 개발한 우수부서 포상
- (산출) 4백만원 = 우수부서 1백만 × 4개과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직접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473	724	1,429	1,400	1,386	
20~ 24		724	711	2,131	2,185	2,2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매년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 업무지원하는 전문관 인건비 지출
- 매년 품질경영 및 품질혁신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위해 지출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529	1,529	-	130	-	-	1,659	1,642	107.4	99.0	-	17
2018	1,523	1,523	-	52	-	-	1,575	1,539	101.1	97.7	-	36
2019	1,473	1,473	-	100	-	-	1,573	1,566	106.3	99.6	-	7
2020	724	724	-	-	-	-	724	251	34.7	34.7	-	-

※ 2020년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으로 기입

2) 주요 결산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국가품질경영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 120백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 학술연구용역 예산 부족분 130백만원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 4백만원을 일반연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전용 - (불용)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포상금 집행잔액 등 17백만원 불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부담금으로 52백만원 전용 - (불용)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포상금 잔액 등 37백만원 불용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공공요금 및 제세(80백만원), 자산취득비(20백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100백만원 전용 - (불용) 포상금 집행잔액 1백만원,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6백만원 등 7백만원 불용
2020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4)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R&D) (5704-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기금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에너지및자원 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700	5704	317
명칭	에너지기술개발	전력수요기술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 구축(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혁조	김명곤	-
		043-870-5440	043-870-5441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연구개발출연금	-	14,950	13,750	16,150	16,150	2,400	17.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20.12월말)						2021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이차전지 화재 안전 검증센터 구축사업(계)	-	-	-	-	-	-	14,950	13,750	13,750	13,750 [13,750]	-	-	16,150
· 이차전지 화재 안전 검증센터 구축	-	-	-	-	-	-	14,397	13,197	13,197	13,197 [13,197]	-	-	15,575
· 기획평가관리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	-	553	553	553	553 [553]	-	-	553
○ 연구개발출연금(계)	-	-	-	-	-	-	14,950	13,750	13,750	13,750 [13,750]	-	-	16,15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14,397	13,197	13,197	13,197 [13,197]	-	-	15,775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	553	553	553	553 [553]	-	-	5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ESS 확대여건 마련 및 시험평가 지원을 통한 국내 이차전지의 수출 경쟁력 강화
- (목표) 에너지저장장치(이차전지 셀, 모듈, 팩 등)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ESS 확대 여건 마련 및 이차전지의 국제 규격의 안전성 평가·인증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국내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적기 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내용)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시험 장비 구축 및 시험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용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 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제2조 (정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6호

<별표 2> 대상 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ESS 가중치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ESS(태양광연계)	5.0	'16년~'17년
ESS(풍력연계)	5.5	'15년
	5.0	'16년
	4.5	'17년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전기공급약관 특례의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개정 2016.12.30.)

(특례의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개정 2016.12.30.>

가. 적용대상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 중략 -

마.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

경부하 시간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 비율	차등 적용
10% 이상	할인금액의 1.2배
5% ~ 10% 미만	할인금액의 1.0배
5% 미만	할인금액의 0.8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의무설치)

: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과 분산형·참여형 발전원 비중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ESS 기술 고부가가치화, 전력계통 연계 안정화, 차세대 非리튬계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21년도 산업부 투자전략)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집중 투자와 에너지효율 향상 극대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 * (투자방향) 에너지원(전력·열·가스 등) 사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에너지 기술간 융합, 에너지안전 실현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시스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데이터, 에너지저장**, 국민안전 및 주민 수용성의 5대 분야 투자 강화
 - ** (에너지저장) 전력계통 안정화 및 수요관리 기능 고도화 분야, 안전·표준화 등 공통기반기술 강화
- (추진경과)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발표(관계부처 합동, '19.6.11)
 - LiB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화재원인조사위원회는 충전율을 100%에서 80~90% 수준으로 제한
 - LiB의 수명 감소 현상 및 전기화학적 불안정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에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고객 및 시장 요구도 증가
 - 기존 태양광 연계용 LiB-ESS는 REC 보상을 최대로 받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충전량과 방전량을 최대치(DOD 100%)로 운전하려고 하여 배터리의 과충전과 과방전 발생으로 배터리 수명의 감소를 유발하고 있음

01 제조기준

◆ [KS] 세계 최초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 도입 [19.5월]

구성	①전기, ②기계, ③폭발, ④전자기장, ⑤화재,
내용	⑥온도, ⑦화학, ⑧오작동, ⑨환경

◆ [KC인증] 배터리, PCS 등 주요부품 인증 [19.8월]

• 배터리	단전지 : 제품시험 + 공장심사 배터리시스템 : 제품시험
• PCS	제품시험 확대 : 100kW → 2MW

◆ [단체표준] 배터리 보호장치 성능 및 통합 제어 프로토콜 규정 등 세부기준 마련

-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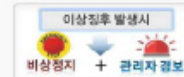
02 설치기준

◆ [설치장소] 옥내는 설치용량을 총 600kW로 제한, 옥외는 별도 전용건물 설치

◆ [안전장치] 과전류, 과전압 등 보호장치 의무화

- 1 과전류 보호장치
- 2 과전압 보호장치
- 3 지락(누전) 보호장치

◆ [모니터링] 이상징후 시 비상정지 및 관리자 통보, 운영 데이터 별도 저장 · 관리



03 운영 · 관리

◆ [충전율] 배터리 만충전 후 추가 충전 금지

◆ [운영환경] 제조사 권장범위 내 온 · 습도, 분진 관리



◆ [관리제도] 법정검사 주기단축(4년 → 1~2년), 임의 개보수시 제재조항 신설 등

04 소방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소방, 방화시설 의무화 등 [19.下, 소방시설법 개정]

◆ [화재안전기준] ESS에 특화된 소방기준 마련 [19.9월]



◆ [화재대응] 소화약제 최적 활용방안 마련, 화재 대응 표준작전 절차 제정 [19.下]

< 에너지저장 주요 정부 정책 >

구분	정부 정책	주요 내용
국정과제	현 정부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구조로 전환 ⇒ ESS 신수요처 대응·확대 적용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12)	·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 · 16대 중점 에너지기술 분야 이노베이션로드맵 수립('20.2월)
산업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19.4.29)	· 리튬이차전지 방식 이외 레독스플로 이차전지의 경우에도 에너지저장장치용 공급인증서(REC) 발급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19.6)	· 목적지향형 대형·장기 국가에너지 R&D 프로그램 확대 ②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 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 전통에너지 산업 혁신, 미래형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계부처 합동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19.6)	·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 점검 강화를 통한 운영·관리단계 안전성 제고 ·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기준 마련
관계부처 합동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TF('17.6)	· '30년까지 발전비율 2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연계 필요
관계부처 합동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16.8)	· 전력자원 효율화를 위한 대형 ESS 기술 개발 ·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 추진
관계부처 합동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	·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을 위한 ESS 기술확보(PCS, EMS, SI 등 기술경쟁력 강화) · 해외 실증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선점
산업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14.12)	· 신재생에너지연계 ESS 등 에너지수요관리설비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계획 마련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 완화
산업부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14.12)	· 전력피크 부하경감을 위한 중대형 ESS 개발 및 실증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불안정 개선 및 출력변동 대응
산업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14.1)	·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비중 증가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및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산업부	K-ESS 2020 ('11.5)	· 중대형 ESS 기술개발 및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법·제도) ESS용 대용량 이차전지 KC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19.5월)
- (배경) ESS 화재사고 원인으로부터 일부 배터리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 필요
- ESS용 이차전지 배터리 셀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 필요
- (법령) ESS용 이차전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입법예고('19.5.31~7.3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19.10월)]

< 개정안 주요내용 >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500V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 ESS용 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 비대상 → 300KW급 이하

- (안전기준) 이차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19.5.31~7.31.) 및 시행('19.10월)
 - ESS에 사용된 이차전지의 잦은 화재로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도입이 시급하여 우선 내부단락 시험으로 진행하고, 열폭주 시험은 시험평가 장비 구축 완료 이후 도입 예정
 - * 미국 등에서는 ESS 설치를 위해 열폭주 시험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서도 열폭주 시험 필요

< 제정안 주요내용 >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규정(IEC 국제표준 동일)
- 외부단락, 충돌, 낙하, 내부단락시험(내부단락 또는 열폭주)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9억원
- 사업기간 : '20 ~ '21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정부출연 및 민간 매칭(기관 성격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학·연 등 관계 기관	수행 형태에 따라 33~100% 이내	전기사업법 제 49조(기금의 사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3) '21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지원, 계속)

- ESS 관련 화재표준 연구 및 화재시험장 구축, 이차전지 셀 및 모듈단위 화재시험 평가 기반 구축 지원 등에 15,597백만원

▪ 산출내역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기일치(계속)	1개	15,597백만원	12/12	15,597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53백만원

4) 사업효과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17	'18	'19	'20	'21	
(1) 에너지기술 우수특허지수 (건)	목표	0.85	0.87	0.89	0.91	0.93	최근 3년간 특허의 SMART 분석결과 B이상 특허 / 최근 3년간 지원예산 합산액의 10억원당
	실적	0.96	1.05	0.86		-	
(2) 기술표준 개발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0.250	에너지기술 평가원, 에너지공단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성과지표 측정산식>

(1) 에너지기술 우수특허지수

- 측정산식 : 에너지기술우수특허지수 = 최근 3년간 특허의 SMART분석결과 B이상 특허/최근 3년간 지원예산 합산액의 10억원당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1.1.1~2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3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업수행자 NTIS 등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NTIS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중기사업계획(중기재정)의 성과지표 목표치와 일치하므로 합리적인 목표치임
- 동 사업의 3년치 평균값에 매년 2% 증가율을 설정한 상향지표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지표인 SMART 지수를 도입하여 단순 양적지표가 아닌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파악 및 관리 가능
- 특히, '19년 추진사업 중 5개 신규사업은 사업초기(1~2차년도) 특허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 시 도전적 목표치임

- 동 지표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사업파급효과가 우수한 질적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R&D 사업에서 통용되는 과학적 지표임
- 외부환경 대비
 - 분산전원(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청정 녹색기술)의 접목·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수특허 지표는 사업화 관련 적절 지표임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2) 기술표준 개발

○ 측정산식 : 기술표준 개발(건수/10억원) = Σ 최근 3년간 기술표준개발 건수/최근 3년간 지원예산 합산액(10억원당)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1.1.1~2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3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연도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동 지표는 신규지표로, 기존 실적치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목표대비 2% 상향하는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 ※'21년 목표치 : '20년 목표치 대비 2% 상향 목표치로 설정 : $0.245 \times 1.02 = 0.250$
 - ※'20년 목표치는 '19년 실적치'에 2%를 상향하여 설정
 - * '20년 목표치 = '19년 실적치 $\{ (17+24+23) / (83.3+94.55+88.83) \} \times 1.02 = 0.245$
- 외부환경 대비
 - 전력분야는 다양한 발전원과 수요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술간 상호 운용성에 기반하여 기술개발이 필요
 -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표준개발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준개발 건수는 기술적 성과 관련 적절 지표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20.1)」의 성과지표 유형 중 기술적 성과분야의 기술혁신유형, 질적지표에 해당함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이차전지에 대한 한국형 화재안전성 시험 운용 및 평가기술 확보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절차서 확립
- 이차전지 전용 화재안전성(열폭주) 국제표준(IEC62619 및 UL9540A)에 따른 시험 평가 인프라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7까지 기투자액	2018	2019	2020	2021	2021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	-	-	-	13,750	16,150	-	2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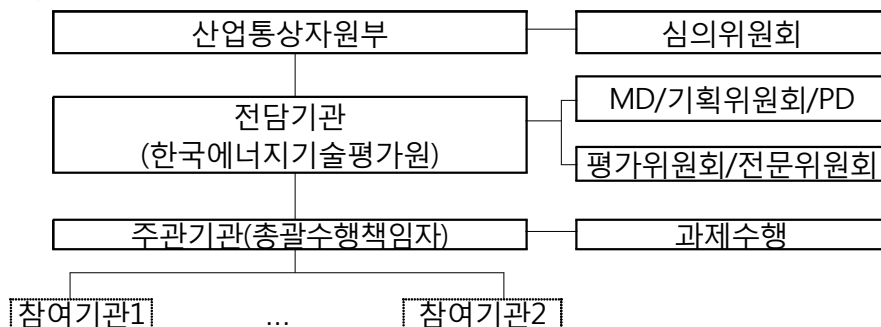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14,950	20	21	-
(1)차 변경	2020		13,750	20	20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
2021년도 요구			16,150	20	21	필수장비 및 기술개발 완료를 위한 20년 조정(1,200백만원) 증액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시행체계



○ 과제지원 절차



○ 공모 유형별

중장기과제(지정공모)		단기과제(지정 및 자유공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실시 (지정공모에 한함)	제출자→전담기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지정공모에 한함)	전담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PD	신규지원대상기술 및 예산(안) 심의·확정(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수행 (산업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신규 사업 공고	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기술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확정과제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중간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확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 23		14,950	14,950			
20~ 24		13,750	16,1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ESS의 KC(강제인증) 도입에 따른 한국형 화재안전성 시험평가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 (추진계획) ESS 관련 화재표준연구 및 화재시험장 구축, 이차전지 셀 및 모듈단위 화재시험평가 기반구축 지원

< 주요 추진내용 >

- ESS의 KC(강제인증) 도입에 따른 한국형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 화재안전성(열폭주) 전용시험장 구축, 방폭시설 등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열폭주) 시험운용 및 평가기술 개발
- 국내외 표준에 따라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 구축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및 해외시험소(UL 등) 지정 등을 통해 이차전지의 해외 수출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	-	-	-	-	-	-	-	-	-	-	-
2018	-	-	-	-	-	-	-	-	-	-	-	-
2019	-	-	-	-	-	-	-	-	-	-	-	-
2020	14,950	13,750	-	-	-	△1,200	13,750	13,75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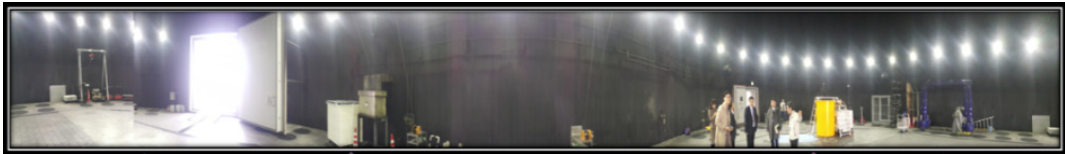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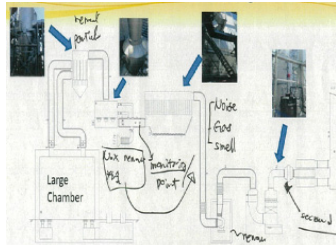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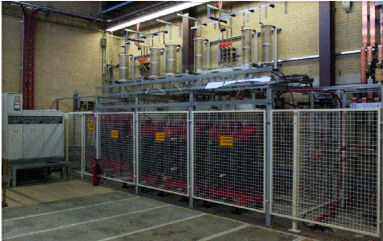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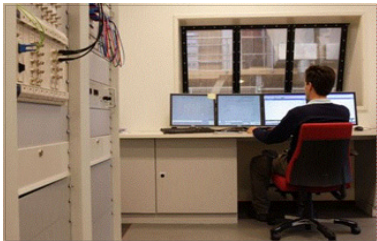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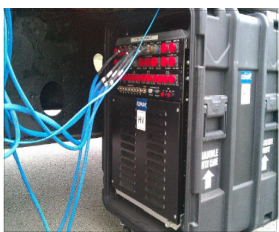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	-	-	-	-	-	-	-	-	-
2018	-	-	-	-	-	-	-	-	-	-
2019	-	-	-	-	-	-	-	-	-	-
2020. 12월기준	14,950	13,750	13,750	13,750	-	13,750	13,750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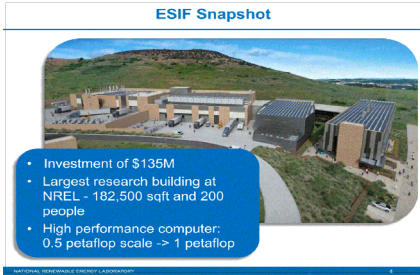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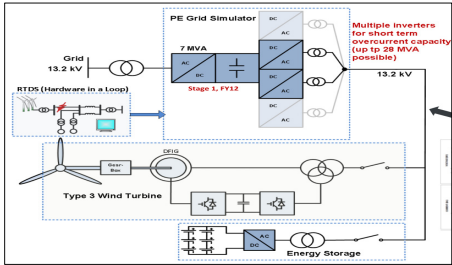
2) 주요 결산사항

2017	해당없음
2018	해당없음
2019	해당없음
2020	- 20년 8월, 협약체결 완료 후 100% 집행 완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외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일본	<div data-bbox="343 360 1428 638"> <p>○ (개요) 일본 NITE 배터리 시험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설비는 대형화재 방폭 챔버 외 8종 - (방폭구조) 화재시험장 [30M(길이) x 18M(폭) x 16M(높이)], 항상 25±5°C시험환경 조건 유지, 온도센서(4m, 8m, 12m 위치)에 의한 관리 <p>○ (평가) 일본 이차전지 전문시험 지원</p> </div> <div data-bbox="432 678 1310 1048">  <div data-bbox="1074 712 1310 985"> <p>시험동</p> <p>집진설비</p> <p>대형 화재 시험장</p> <p>전력 유닛(ESS)</p> </div> </div> <div data-bbox="352 1102 1422 1254">  </div> <div data-bbox="352 1285 603 1442">  </div> <div data-bbox="399 1447 539 1473" data-label="Caption"> <p>바닥면 냉난방장치</p> </div> <div data-bbox="625 1285 794 1442">  </div> <div data-bbox="614 1447 804 1491" data-label="Caption"> <p>3상 전원용 단자함 (시험시 하부에 단자연결)</p> </div> <div data-bbox="1002 1285 1171 1442">  </div> <div data-bbox="1024 1442 1142 1464" data-label="Caption"> <p>침수 시험 장비</p> </div> <div data-bbox="1203 1285 1406 1442">  </div> <div data-bbox="1217 1442 1393 1464" data-label="Caption"> <p>이동형 크레인 및 설비</p> </div> <div data-bbox="406 1516 742 1760">  </div> <div data-bbox="804 1516 1286 1550" data-label="Text"> <p>[집진설비: Wet Scrubber(스프링쿨러) 이용]</p> </div> <div data-bbox="815 1550 1442 175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가스 및 냄새 제거 기능 및 6가지 가스성분(CO, CO₂, SO_x, NO_x, HF, HCl) 분석 - 1시간에 내부공기 9회 순환기능, 10단계 통풍속도 조절 가능 - (유해가스 제거) 분진제거(1차) → 유해가스 측정(1차)→2차 분진제거(스프링쿨러 방식) → 2차 유해가스 측정 → 외부배출 </div> <div data-bbox="355 1767 794 1973">  </div> <div data-bbox="804 1774 1002 1805" data-label="Text"> <p>[전력공급 설비]</p> </div> <div data-bbox="804 1809 1439 196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MW급(500kw ESS 4개) 전원설비 보유 및 시험 활용 - 지중 PCS(1MW) 연결로 시험장 내부단자를 통하여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 </div>

국가/민간	사례내용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네덜란드(Arnhem) DNV KE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에 1MW급 전력계통시뮬레이터 및 측정시스템 구축, FPGL (Flexible Power Grid Lab) 준공 - 스마트그리드에 연계되는 분산전원의 PCS 계통연계시험으로 IGBT 방식의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구축, 전압/주파수 보호기능시험, 고조파시험, 상불평형시험, 순간전압 및 순간 전압강화시험 및 효율시험 등 ○ (시험규격) EN 50160(1990, Voltage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supplied by public distribution systems), IEEE Std 1547(2003, Standard for Interconnecting Distributed Resources with Electrical Power Systems), IEEE Std 1547.1(2005, IEEE Standard Conformance Test Procedures for Equipment Interconnecting Distributed Resources with Electrical Power Systems) ○ (DNV GL) 변전소단위의 변압기, 발전기 및 고압 케이블 시스템과 같은 구성요소에 대하여 On-Site에서 시운전 및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특수 시험용 이동형 시험장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변압기 (24kV 배전계통 연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계통 시뮬레이터 및 제어룸]</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전력설비 진단용 이동형 시험장치]</p> </div>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BLOOMY-DNV GL & NY B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ESS 시험테스트 및 상용화 센터(BEST T & CC)에서 는 On-site용 ESS 시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용도는 주로 단독운전방지용 시험장치 ○ (평가) BLOOMY-DNV GL & NY BEST에서 이동형 시험평가 설비보다 시험 용량이 제한되는 1MW급으로 Parallel조합으로 이동형 시험용량이 2MW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설비 설계 및 개발 예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ESS용 1MW급 이동형 단독운전방지 시험장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p>○ (개요) 덴버, NREL ESIF(Energy System Integration Facil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 산하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로 기존 200kW급의 DERTF(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est Facility)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1MW급의 ESIF(Energy Systems Integration Facility) 구축으로 태양광, EES 등 대용량 분산전원의 계통연계 연구 개발 수행. ○ (주요설비) 1MVA 전력계통시뮬레이터, DC Power supply, Hardware-in-the-Loop Simulator, Load bank, DERTF*(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est Facility) * 200kW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보유. 다양한 분산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해 IEEE 1547.1 규격개발 및 성능평가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 800kVA급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구축 중인 ESIF 조감도 ></p> </div> </div> <p>○ (개요) 덴버, NREL NWTC(National Wind Technology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 산하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로서 풍력발전 관련 연구개발 및 공인시험 수행. 최근 MW급 Utility-scale 대용량 분산전원(풍력, 태양광, EES 등)의 전력계통 연계관련 연구개발 및 공인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력용 반도체소자 (IGBT) 방식의 7MVA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구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 7MVA 전력계통시뮬레이터 (2012.11월 구축)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7MVA 전력계통시뮬레이터 구성도 ></p> </div> </div>
독일	<p>○ (개요) 프라이부르크, Fraunhof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시험기관으로 분산전원설비의 대용량화 및 계통연계 문제 부각에 따라 MW급 대용량 분산전원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2010년 1MW급 연구시험설비 구축 ○ (평가) 신재생에너지 강국답게 분산전원 발전설비의 MV 및 LV Grid Code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개발 공인시험 강제화로 후발 주자들과의 차별화 - (시험설비) Fraunhofer ISE 1MW급은 DC Power Supply(1,152kW), 전력계통 시뮬레이터(20kV, 배전계통 사용), 1MW급 LVRT 시험설비, 측정시스템으로 구성 - (MV Grid Code, 시험규격) BDEW(2008.06, Guideline for generating plans' connection to and parallel operation with the medium-voltage network) - (LV Grid Code, 시험규격) VDE-AR-N 4105(2011.08, Power generating systems connected to the low-voltage distribution network)

국가/민간	사례내용
독일	<p>○ 프라이부르크, Fraunhofer 시험설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시험소 내부> <1,152kW DC Power Supply> </div>
중국	<p>○ (개요) 난징, STATE GRID의 NESC(National Energy Solar Center) 시험소 - 중국전력기술연구원 남경분원이라고 하며, '10.6월에 시험설비 구축.</p> <p>○ (평가) MW급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연계형 전력변환장치에 대해 Grid Code에 따른 계통연계 관련 성능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으로서, 특히 LV 및 MV Grid Code 관련 국제규격에 따라, MW급의 대용량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및 ESS 등의 분산전원 설비의 송전 및 배전계통 연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시험을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V 및 MV Grid Code 시험규격)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Voltage/ Frequency Response Testing, Active/Reactive Control Testing, Power Quality Testing, Power Output Character Testing - (관련 시험규격) GB/T 19964-2012(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ng photovoltaic power station to power system), GB/T 29319-2012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eactive power compensation of PV power station), GB/T 29321-2012(Technical specification for reactive power compensation of PV Power station), Q/GDW 617-2011(Technical rule for photovoltaic power station connected to Power Grid), Q/GDW 480- 2010(Technical rule for distributed resources connected to power grid)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DC Power Supply 및 Grid Simulator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1MW RLC 수동부하장치> <LVRT 시험장치> </div>